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충청남도 종합계획 (2012~2020)



www.chungnam.net

충청남도 종합계획 (2012~2020)



공 고 문

충청남도 공고 제2012 - 217호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충청남도 종합
계획(2012~2020)의 요지를 국토기본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8일

충 청 남 도 지 사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요지)

I. 道계획의 의의와 필요성

① 계획근거(헌법, 국토기본법)

- 국토와 자연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헌법 제120조 제2항)
- 국토계획이라 함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국토기본법 제6조 제1항)
-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 도지사는 지역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지역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내 기능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내 자원 및 환경의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도종합계획을 수립(국토기본법 제13조 제1항)

② 계획의 배경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과 연계
- 시대적 변화, 국정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충남도정의 능동적 대응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도청이전 등에 따른 새로운 지역발전 구도 설정
- 지역 내·외의 여건변화를 지역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
- 민선 5기의 출범에 따른 새로운 도정이념과 운영전략 수용

II. 계획 목표와 추진전략

1] 계획의 기초 및 목표

- 최근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속에서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중심으로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본 계획의 기초로 설정
- 균형 있는 지역발전, 내실 있는 산업경제, 활력 있는 농어촌, 함께하는 교육·복지, 매력적인 문화·환경을 계획의 목표로 설정

2] 7대 추진전략

- 살기 좋은 도시·농촌 생활환경 조성
- 순환과 공생의 사회적경제 육성
-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매력적인 지역문화 창달
- 사통팔달의 교통·정보 인프라 구축
- 근심 없는 맞춤형복지·평생교육 실현
- 안정적·창조적인 지역자원의 활용 및 관리
- 지속가능한 자연 및 생활환경 관리

3 계획의 지표와 전망

주요지표	단위	당초(2008~2020)	변경(2012~2020)
총인구	천명	2,500	2,400
노령화율	%	17.8	19.2
지역총생산('05기준)	십억원	98,972	125,787
산업구조(1:2:3차)	%	8.3:34.5:57.2	3.8:61.6:34.6
1인당 GRDP	천원	39,588	52,411
자동차 대수	천대	1,078.0	1,149.9
고속도로	km	721	721
일반국도	km	1630	1,630
철도	km	717	717
주택보급률	%	103	112
(1천인당) 주택수	호	375	450
아동복지시설	개소	20	23
노인복지시설	개소	58	350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22	30
(10만인당) 의사수	인	288	288
(10만인당) 병상수	개소	640	1,200
상수도보급률	%	90	90
하수처리인구율	%	85	85

Ⅲ. 공간구조의 설정

① 국내외 교류·협력을 위한 개방형 지역발전축 구축

- 지역발전축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세계와 교류하는 개방형 국토축 형성 및 광역연계형 녹색국토 형성’전략을 근간으로 하고,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의 “田”자형 개발축 수용

구 분	축별 연계지역	개 발 방 향
북 부 축	태안-천안 (태안-서산-당진-아산-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륙 및 임해형 첨단신산업 복합지대 • 국제교류의 게이트웨이 및 서해안 개발의 거점
중 부 축	세종시-보령 (세종시-공주-청양-보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안과 중부내륙 연계 문화·관광·물류지대 • 해양과 내륙의 물류·산업·행정 연계
남 부 축	서천-대전 (서천-부여-논산-금산·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산업·바이오산업지대 • 복합적 생태연구·학습·산업 거점, 신녹색성장 산업 지대, 역사·문화·농촌관광 복합지대
서해안축	서산-서천 (서산-홍성-보령-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역·교류 거점, 해양관광·해양산업지대 • 연안개발·관리 및 산업구조 고도화지역
중부내륙축	당진-부여 (당진-예산-청양-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관광, 농산업 중심지대 • 첨단농축산업 연구·생산 및 그린투어리즘지대
동부내륙축	천안-금산 (천안-세종시-대전-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추행정, 국제과학비즈니스거점, 복합첨단산업, 내륙교통·물류지대 • 중부내륙의 행정·산업·R&D·물류·교통중심축

② 상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경영권 구상

- 지리적 여건과 산업·환경·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간 연계개발에 의한 지역개발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4대 개발경영권을 설정
- 권역별 기능특화 및 광역적 연계·협력개발을 통하여 개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략산업의 효과성을 제고, 권역간 균형발전 도모

권역별	대 상 지 역	발 전 방 향
북부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환황해경제권의 생산·교역거점, 광역도시권의 성장관리
서해안권	태안, 보령, 서천(서산, 홍성)	환황해권 교역 전진기지, 해양휴양·관광의 메카
내륙권	공주, 계룡, 연기, 홍성, 예산, 청양	국가·지방 중추행정 연계축, 지역균형발전 촉진지대
금강권	금산, 논산, 부여(청양, 공주, 서천)	역사·문화관광, 생명·정보산업, 도농복합생활공간 형성지대

주 : () 안은 행정구역의 일부가 포함됨을 의미

IV. 부문별 계획

① 살기 좋은 도시·농촌 생활환경 조성

- 사람중심의 혁신적 도시개발 및 정비
- 활력 있는 농산어촌 육성

② 순환과 공생의 지역경제 육성

- 경쟁력 있는 농·림·축·수산업 육성
- 신성장동력산업 및 강소기업 육성
- 서비스업의 지식기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③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매력적인 지역문화 창달

-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문화기반 조성
- 편리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특화자원 개발

④ 사통팔달의 교통·정보 인프라 구축

- 전방위 교류·교역 활성화를 위한 입체적 교통체계 구축
- 생산·물류 신중심권 구현을 위한 물류·유통기반 강화
- 디지털복지사회를 위한 유비쿼터스 충남 구현

⑤ 근심없는 주거·복지·평생교육실현

- 안정적인 에너지절약형 주거환경 조성
- 지속적인 공공복지·의료서비스체계 구축 및 확대
- 창의적 인적자원 육성 및 평생교육체계 강화

⑥ 안정적·창조적인 지역자원의 활용 및 관리

- 친환경적 토지이용과 관리
- 지역특성에 따른 매력적 지역경관 형성과 관리
-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효율적 수요관리
- 친환경 에너지·지하자원 개발 및 관리

⑦ 지속가능한 자연 및 생활환경 조성

- 지역생태망 구축과 자연환경 보전·관리
- 대기질 관리와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구축
-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물관리
-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기반 구축 및 지원
- 재해에 강한 안전충남 조성

V. 계획의 집행과 관리

① 행정계획

- 미래지향적 자치역량 확보
- 지역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협력적 지역개발
- 투자통상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

② 재정계획

- 재정건정성 확보와 신규전략산업을 위한 재원 확보
- 선택과 집주의 원리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 성과예산제도 등 재정성과관리제도 활용을 통한 재정효율성 향상
- 민간 협력적 재정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구현
- 도의 기능 및 행정서비스 공급방식의 재조정

③ 투자계획

- 투자 대상사업 선정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광역권개발 계획 등 중앙정부가 추진·지원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
 - 도 전체의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군 경계를 넘어서 개발과 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선정
 - 시·군이 요청한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도가 직접 추진하거나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
- 투자계획
 - 총사업비 : 67조 3,217억원
 - 제1단계(2012~2015) : 30조 5,158억원(45.3%)
 - 제2단계(2016~2020) : 36조 8,059억원(54.7%)
 - 재원별 사업비
 - 국 비 : 25조 3,859억원(37.7%)
 - 지방비 : 10조 9,709억원(16.3%)
 - 기 타 : 30조 9,649억원(46.0%)

VI. 시 · 군별 발전방향

- 천안시 :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천안
- 공주시 : 기업하기 좋은 5都2村 주말 · 관광 · SMART CITY
- 보령시 : 산 · 들 · 바다가 어우러진 관광과 휴양의 글로벌 보양도시
- 아산시 : 서해안시대 성장을 견인하는 세계속의 녹색 첨단도시
- 서산시 : 내포문화 · 해양생태자원 · 신산업이 어우러진 황해관문 도시
- 논산시 : 활력있는 경제도시, 자연과 문화가 하나되고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행복 도시
- 계룡시 :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있는 명품도시
- 당진시 : 동북아 물류 및 임해형 신산업 중심도시
- 금산군 : 자연과 생명산업이 공존하는 활력 있는 전원도시
- 연기군 :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세계명품 도시 세종시
- 부여군 :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古都 Greenomics 부여
- 서천군 : 세계최고의 생태도시! 어메니티 서천
- 청양군 : 충남의 중심, 청정자연생태낙원
- 홍성군 : 충남의 자랑, 서해안시대의 신중심 홍성
- 예산군 :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
- 태안군 : 아름다운 휴양도시, 희망 태안 !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충청남도지사 귀하

이 보고서를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3.

충남발전연구원장 원장 박진도

목 차

제 I 편 기본구상

제1장 계획의 개요	1
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1
2. 계획의 성격과 역할	3
3. 계획의 범위	4
4. 계획수립의 방법과 체계	7
제2장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11
1. 지역현황 및 특성 분석	11
2. 관련계획의 검토와 평가	32
3. 대·내외적 여건변화 분석	35
4. 지역주민 의식조사	43
5. 충남지역의 발전여건 분석: SWOT 분석	49
제3장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55
1. 계획의 기본이념	55
2.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56
3. 주요 계획지표의 전망	59
4. 공간구조의 설정	68

제 II 편 부문별 계획

제1장 살기 좋은 도시·농촌 정주기반 형성	75
1. 사람중심의 혁신적 도시개발 및 정비	75
2. 활력있는 농산어촌 육성	88
제2장 순환과 공생의 지역경제 육성	95
1. 경쟁력 있는 농·림·축·수산업 육성	95
2. 신성장동력산업 및 강소기업 육성	107
3. 서비스업의 지식기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118
제3장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매력적인 지역문화 창달	123
1.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문화기반 조성	123
2. 편리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특화자원 개발	129

제4장 사통팔달의 교통·정보 인프라 구축	141
1. 전방위 교류·교역 활성화를 위한 입체적 교통체계 구축	141
2. 생산·물류 신중심권 구현을 위한 물류·유통기반 강화	152
3. 디지털복지사회를 위한 유비쿼터스 충남 구현	157
제5장 근심없는 주거·복지·평생교육 실현	163
1. 안정적인 에너지절약형 주거환경 조성	163
2. 지속적인 공공복지·의료서비스체계 구축 및 확대	168
3. 창의적 인적자원 육성 및 평생교육체계 강화	176
제6장 안정적·창조적인 지역자원의 활용 및 관리	181
1. 친환경적 토지이용과 관리	181
2. 지역특성에 따른 매력적 지역경관 형성과 관리	189
3.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효율적 수요 관리	195
4. 친환경 에너지·지하자원 개발 및 관리	202
제7장 지속가능한 자연 및 생활환경 조성	209
1. 지역생태망 구축과 자연환경 보전·관리	209
2. 대기질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	216
3.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물관리	221
4.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기반 구축 및 지원	231
5. 재해에 강한 안전충남 조성	235

제Ⅲ 편 계획의 집행과 관리

제1장 행정계획	241
1. 미래지향적 자치역량 확보	241
2. 지역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협력적 지역개발	245
3. 국제교류 및 국제통상의 활성화	248
제2장 재정계획	253
제3장 투자계획 및 집행방안	267

제Ⅳ 편 시·군별 발전방향

287

- [부록] 1. 원계획과 수정계획의 비교 / 287
 2. 종합계획도 / 293
 3. 투자사업 총괄표 / 294

제 I 편

기 본 구 상

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제3장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제 1 장

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2. 계획의 성격과 역할

3. 계획의 범위

4. 계획수립의 방법과 체계

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가. 계획수립의 배경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과 연계

- 「국토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2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이 재수립·확정되었으며, 그 하위계획인 도종합계획 역시 이에 연계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함

■ 시대적 변화, 국정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충청도정의 능동적 대응

- FTA의 확대에 따라 지역산업구조의 혁신이 요구되며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또한 세계적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역의 대응방안이 요구됨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도청이전 등에 따른 새로운 지역발전구도 설정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도청이전에 따른 새로운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는 한편,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국가간선망 건설의 파급효과를 지역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기능지구 확정을 계기로 지역의 수용성 강화

- 천안과 연기군(세종시), 충북 청원지역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 결정됨에 따라 거점지구(대전 대덕)와의 기초과학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초연구성과를 생산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연계기능을 마련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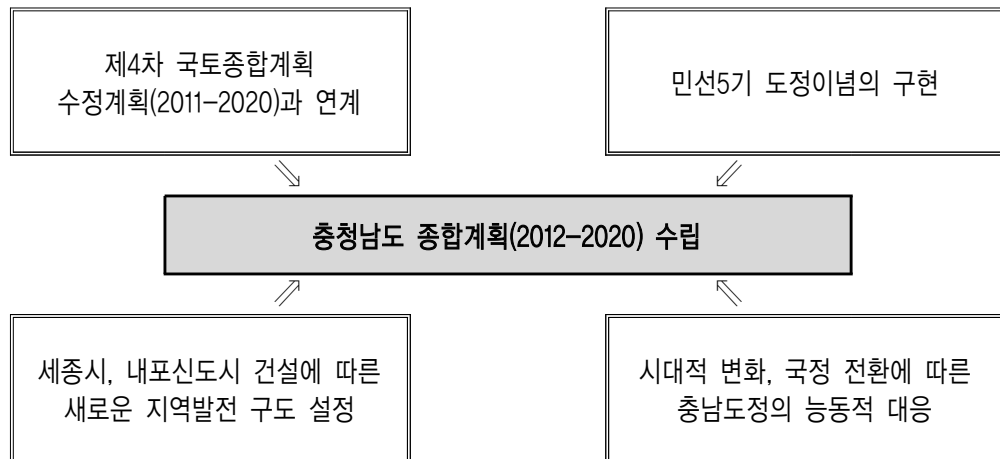
■ 지역 내·외의 여건변화를 지역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충남지역은 전통적인 농업 중심지역에서 첨단산업 중심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대전·충북·경기·전북 등 주변 시·도 간의 광역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향후 초광역 연계협력사업이 강조되고 네트워크형 도시체계의 발달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협력적인 지역개발 구도로의 전환이 필요함

■ 민선 5기의 출범에 따른 새로운 도정이념과 운영전략 수용

- 민선 5기의 출범에 따라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비전으로 새로운 도정목표를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그림 I-1〉 계획수립의 배경



나. 계획수립의 목적

- 도가 보유한 유무형의 인적, 물적 자원과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용·개발·보존하기 위하여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하고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달성함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등 상위계획의 기초와 정책을 충남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함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및 내포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환황해경제권시대의 대응체제를 구축함
-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써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함

2. 계획의 성격과 역할

가. 계획의 성격

■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

- 충남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국토기본법」 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립·시행되는 도단위 최상위 법정계획

■ 상위계획을 구체화한 계획

-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골격을 수렴하여 지역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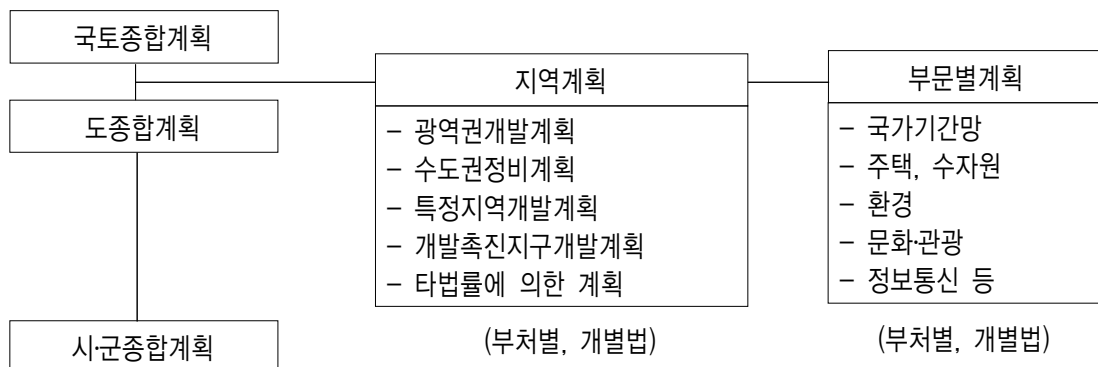
■ 국토종합계획에 부응한 지역·부문별 계획

- 국토종합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도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계획을 담는 계획

■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제공 계획

- 시·군종합계획¹⁾ 등 하위계획에 대한 기본이 되고 민간부문에 대해 개발방향과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유도하는 계획

〈그림 I-2〉 「국토기본법」 상 국토계획체계



1) 시·군종합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문화 분야 등의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으로 정의되어 있음(국토기본법 제6조).

나. 계획의 역할

■ 지역주민에게 지역발전에 대한 미래상 제시

- 도민에게 지역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상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북돋음

■ 도정 및 시·군에 지역발전의 부문별 정책방향과 가이드라인 제공

- 도 단위의 장기적 발전방향, 전략사업을 제시하여 도정과 시·군의 부문별 업무수행에 있어서 기본방향 및 방침을 제공

■ 중앙정부에 사업추진 및 지원요청 근거 제시

- 국가정책의 지역적 실현방안을 구체화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지역적 요구와 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앙정부의 지원과 상호협력을 강화

■ 민간부문 및 기업에 지역개발 정보 제공 및 투자방향 제시

-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정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방침과 시책 등 정보를 제공

3.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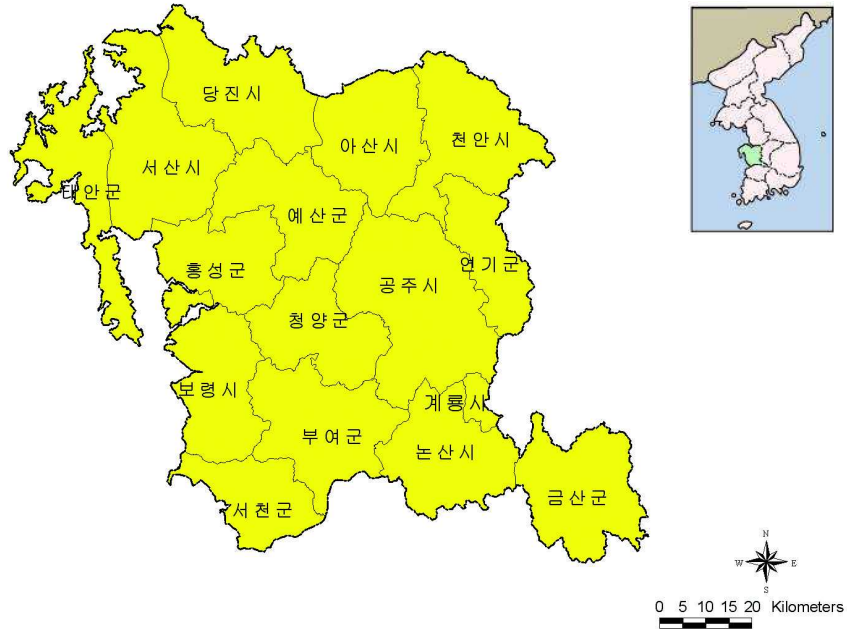
- 계획기간 : 2012~2020년(9년간)
- 기준년도 : 2010년(자료활용 기준년도 2009년 12월)

■ 공간적 범위

- 계획구역 : 충청남도 전역(16개 시·군, 총면적: 8,629km²)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²⁾(8개 시)
 -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8개 군)

2) 당진군은 2012년 1월1일부로 당진시로 승격되었으므로, 본 계획에서는 당진군을 당진시로 표기함

〈그림 I-3〉 계획의 공간적 범위



■ 내용적 범위

- 지역여건과 발전 잠재력 분석,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전략별 추진계획, 시·군별 발전방향, 계획의 집행과 관리를 포함

※ 도종합계획의 내용

① 『국토기본법』 제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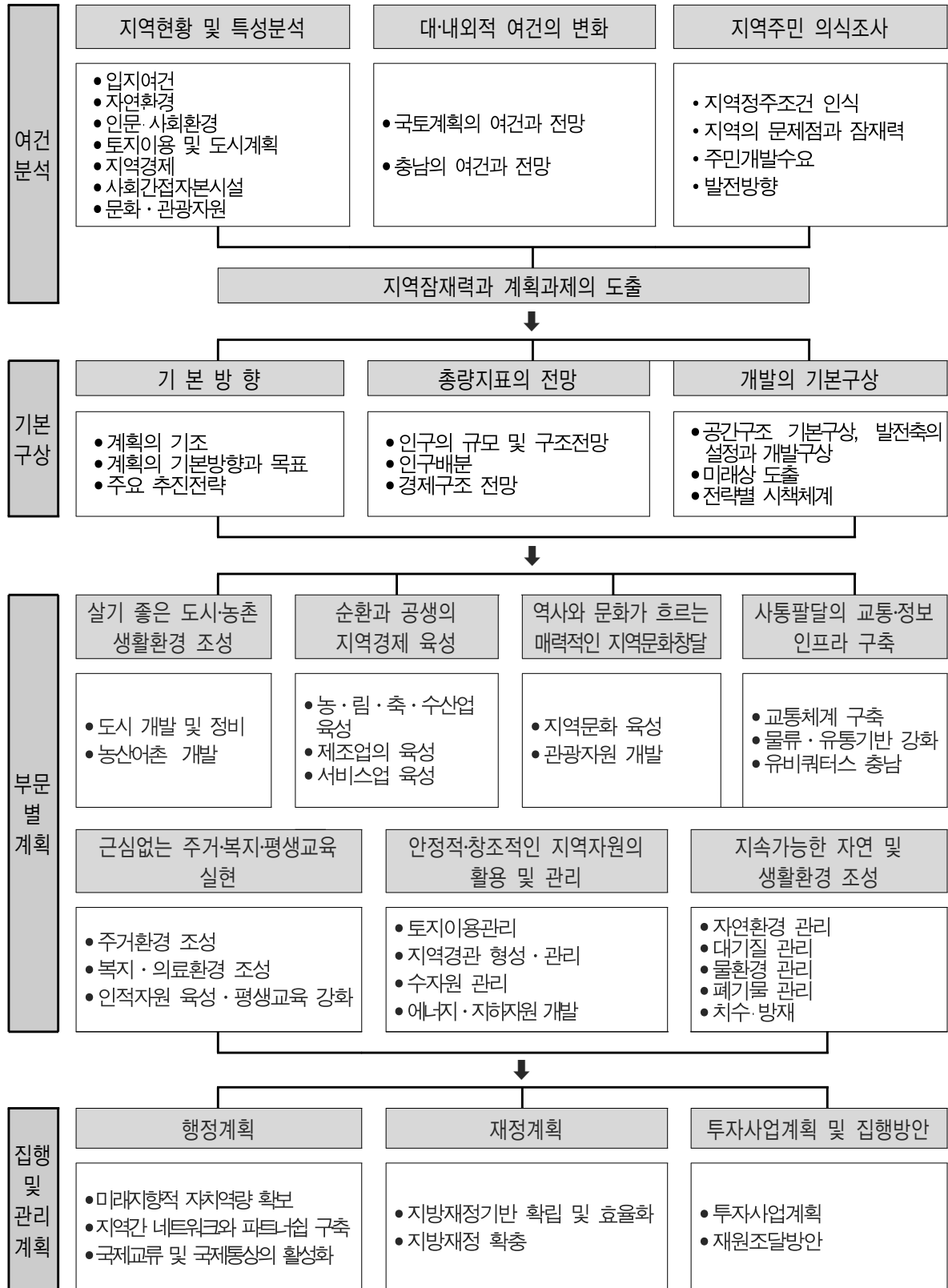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안으로 기능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내 자원 및 환경의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1. 주택, 상하수도, 공원, 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단계별 주요과업 내용〉



4. 계획수립의 방법과 체계

가. 계획수립의 방법

-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은 혁신적인 접근방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적·참여적인 계획과정을 통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그리고 실현수단의 마련을 중시하여 수립함
- 계획수립 참여주체
 - 도와 각 시·군의 공무원, 도민,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추진 도연구자문단, 전문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상향적(bottom-up) 과정을 통한 계획 수립

〈그림 I-4〉 계획수립 참여주체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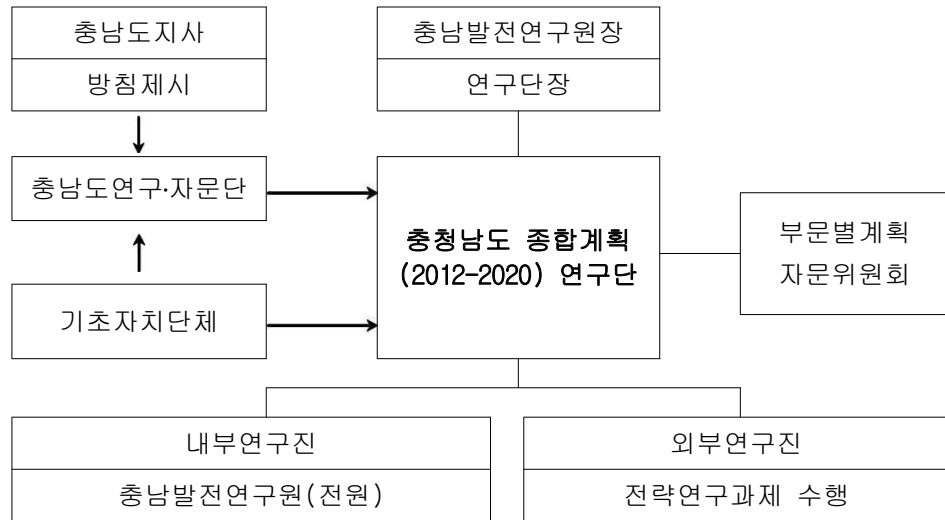


나. 계획수립체계

-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연구단
 - 단 장 : 충남발전연구원장
 - 총괄팀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진
 - 연구단원 : 충남발전연구원 및 분야별 전문가
-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연구·자문단

- 구성 : 9개 분과 75명(도 실국장·과장·담당, 전문교수, 시·군)
- 운영 : 연구자문단 회의 및 분야별 토론회 참석하여 아이디어 제시

〈그림 I-5〉 계획수립체계



다. 추진경위

■ 도 건설종합계획(1982-1991)

- 1982. 12 도 건설종합계획(1982-1991) 수립 공고

■ 제2차 도 건설종합계획(1992-2001)

- 1992. 12 제2차 도 건설종합계획(1992-2001) 수립 공고

■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01-2020)

- 2001. 8 건설교통부 승인

■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 2005.11~2007.4 계획수립
- 2007.12 건설교통부 승인

■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 2010. 4.15 착수보고회 개최 및 연구진 워크숍
- 2010. 4. 시·군별, 분야별 정책방향설정을 위한 의견 수렴
- 2010. 4~5 시·군별 「핵심·전략사업」 1차 취합(16개 시·군)
- 2010. 5.27 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안) 워크숍
- 2010. 6.21 부문별연구진 워크숍
- 2010. 7.23 분야별 관련부서 워크숍(충남도, 전문가, 연구단)
- 2010. 7~9 충청남도 도민의식 및 수요조사(2개월)
- 2010. 8 충청남도종합계획(2012-2020) 구상(안) 작성
- 2010.12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2-2020), 세종특별자치시시설치에관한법률 제정 및 고시
- 2011. 2 충청남도종합계획(2012-2020) 기본구상(안) 재작성
- 2011. 3 시·군별 「핵심·전략사업」 2차 취합(16개 시·군)
- 2011. 4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1개월)
- 2011. 5. 4 시·군 발전방안 워크숍(도 관계관, 16개 시·군)
- 2011. 7. 6 중간보고회 개최(자문위원, 도 관계관, 16개 시·군)
- 2011. 7.26 전략환경평가위원회 자문회의 개최
- 2011. 8.23 충청남도종합계획(2012-2020) 공청회 개최
- 2011. 8.26 충청남도 의회(행정자치위원회) 보고
- 2011. 9. 1 충청남도 의회 보고
- 2011. 9.5~9 2차 전략환경평가위원회 자문
- 2011. 10.26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1. 12.23 국토해양부 승인 신청
- 2012. 2. 28 국토해양부 승인

제 2 장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1. 지역현황 및 특성 분석

2. 관련계획의 검토와 평가

3. 대내외적 여건변화 분석

4. 지역주민 의식조사

5. 지역의 발전여건 분석 : SWOT 분석

1. 지역현황 및 특성 분석

가. 입지여건

■ 대외적 입지여건

- 환황해권 중심에 위치한 요충지역
 - 충남은 중국의 관문항인 대련항·청도항과 최단거리에 입지하고 있어 높은 교류잠재력을 보유
 - 해양과 내륙을 연계시킬 수 있는 항만개발 적지를 다수 보유하여 동북아 교류거점 구축이 용이

〈그림 I-6〉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충청남도의 위상



■ 대내적 입지여건

- 국토의 중심부이며 교통의 요충지
 -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호남을 연결하면서 수도권의 압출여력을 흡수하여 비수도권으로 확산시키는 역할 수행 가능
 - 고속도로, 철도 등이 충남지역을 동서·남북으로 통과하거나 계획되어 있어 지역내 도로망과 연계체계 구축이 용이

〈표 I-1〉 충청남도의 경위도상 위치

구 분	지 명	극 점	연장거리
동 단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북위 36° 01' 47" 동경 127° 38' 31"	동서간 187.7km
서 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북위 36° 36' 37" 동경 125° 32' 21"	
남 단	금산군 남일면 신동리	북위 35° 58' 30" 동경 127° 29' 15"	남북간 120.8km
북 단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북위 37° 03' 44" 동경 126° 25' 46"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10.

나. 자연환경

■ 지형·지세

- 충남지역은 전체적으로 저지대형 지형으로 차령산맥이 본 지역의 중앙 부를 북동쪽에서 서남향방향으로 가로질러서 서북부와 동남부로 분리됨
- 충남지역 전체면적의 65%가 표고 100m 이하의 평지이고, 평균표고는 전국 평균 482m보다 훨씬 낮은 100m로서 전국에서 가장 낮음

〈표 I-2〉 표고별 면적분포

구 분	면적(km ²)	구성비(%)
계	8,600.5	100.0
100m 이하	5,607.6	65.2
100~200m	1,664.6	19.3
200~500m	1,279.0	14.9
500m 이상	51.3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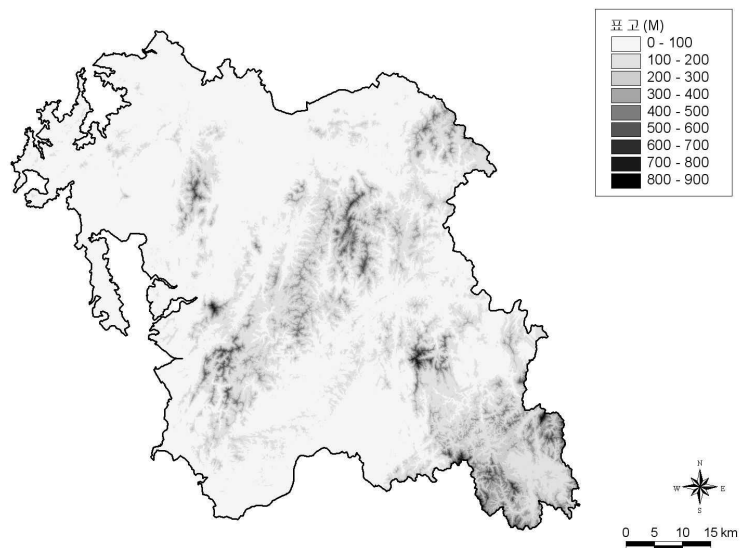
주: 1/25,000 지형도에서 Grid(20×20m) 단위로 구적

- 경사도 또한 5도 이하로 완만한 지역이 전체면적의 43.8%, 15도 이상의 경사지역은 전체 면적의 30.0%를 차지하고 있음
 - 중부 내륙지역과 남동부 산악지역은 비교적 경사도가 높으나 나머지 지역은 경사가 낮은 평지 또는 구릉지를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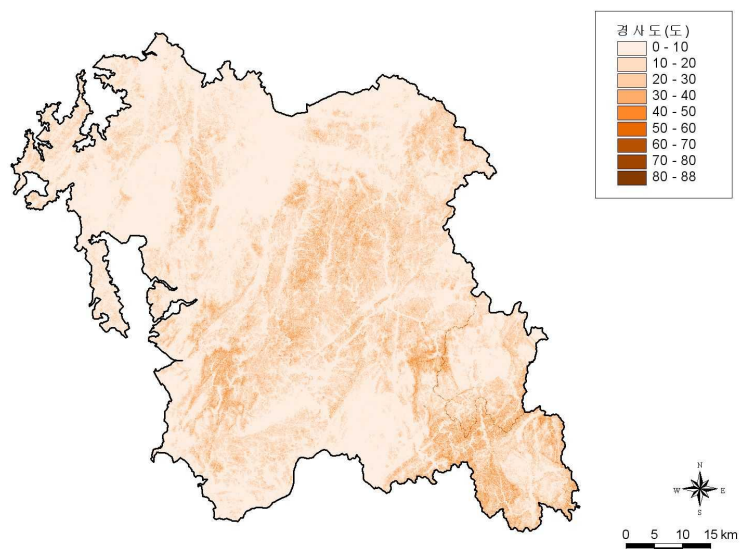
〈표 I-3〉 경사별 면적분포

구 분	면적(km ²)	구성비(%)
계	8,600.4	100.0
5도 이하	3,768.8	43.8
5~10도	1,138.3	13.2
10~15도	1,118.4	13.0
15~20도	973.5	11.3
20~25도	738.5	8.6
25도 이상	863.0	10.1

〈그림 I-7〉 표고분석도



〈그림 I-8〉 경사분석도



■ 해안 및 하천

- 충청남도의 해안선은 리아스식 해안(rias coast)이며, 도서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침수해안의 특색을 지니고 있음. 충청남도의 서북단에 돌출해 있는 태안반도가 도내에서 가장 큰 반도이며,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동북쪽에는 아산만과 가로림만이 있고, 동남쪽에는 천수만과 비인만 등이 있음
- 충청남도의 주요 도서로는 안면도·원산도·난지도·삽시도·가의도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많은 255개의 도서가 있음

〈표 I-4〉 해안선 및 도서현황

(단위: km, 개소, 인)

구 분	해안선(도서 포함)	도서현황			
		계	유인도	무인도	인 구
보령시	251.9	76	16	60	3,574
아산시	8.0	-	-	-	-
서산시	-	27	4	23	392
당진시	96.4	8	3	5	368
서천군	84.7	14	1	13	135
홍성군	22.9	11	1	10	71
태안군	468.9	119	9	110	10,788
소 계	932.8	255	34	221	15,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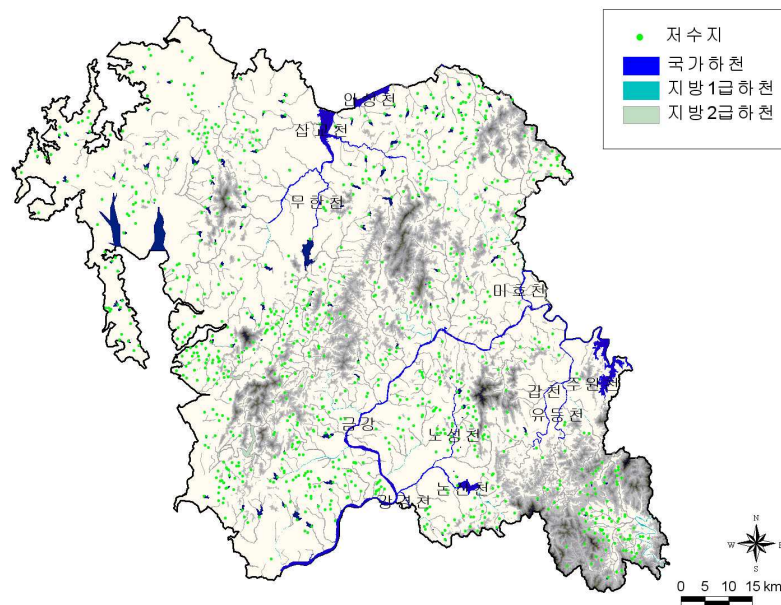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10.

- 충청남도의 대표적 하천은 금강·안성천·삽교천 등이며, 금강은 우리나라 3대 하천 중 하나이고 안성천·삽교천은 10대 하천에 포함됨. 본 지역의 하천수계는 차령산맥을 사이에 두고 동남부의 금강수계와 북서부의 삽교천 수계로 크게 양분됨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뜯봉샘에서 발원한 총길이 395.9km의 금강은 노령산맥과 차령산맥 사이에서 신탄진에 이르러 갑천·유등천·대전천 등 여러 소지류들을 합류시켜 곡류하고 있으나, 부여부터는 커다란 강폭을 나타내며 대체로 넓고 평탄한 충적평야를 지나 서해로 유입되고 있음

〈표 I-5〉 충청남도의 주요하천

하천명	유역면적(km ²)	유로연장(km)	발원지
금 강	9,915	395.9	전북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안성천	1,659	66.4	경기 안성군 삼죽면 옥사봉
삽교천	1,668	58.6	충남 홍성군 장곡면 오서산

〈그림 I-9〉 하천 및 수계도



다. 인문환경

■ 행정구역

- 충청남도의 총면적은 2009년 현재 8,629.2km²로 국토 전체면적(100,208km²)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7개 시와 9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역내 시·군의 평균면적은 539.3km²이며, 이 가운데 공주시가 940.4km²(10.9%)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계룡시가 60.8km²(0.7%)로 가장 작은 관할구역을 보유하고 있음

■ 총인구규모 및 시·군별 인구분포

- 충청남도의 총인구는 2009년 현재 2,075,249인으로 전국(50,643,781인)의 4.1%로 전국면적 대비 비율(8.6%)에 비해 절반가량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충남의 인구는 2005년 1,982천명에서 2009년 현재 2,075천명으로 연평균 1.17%씩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인구 대비 충남의 인구비중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약 4%대로 유지되고 있음

〈표 I-6〉 전국대비 충남인구비중 추이(200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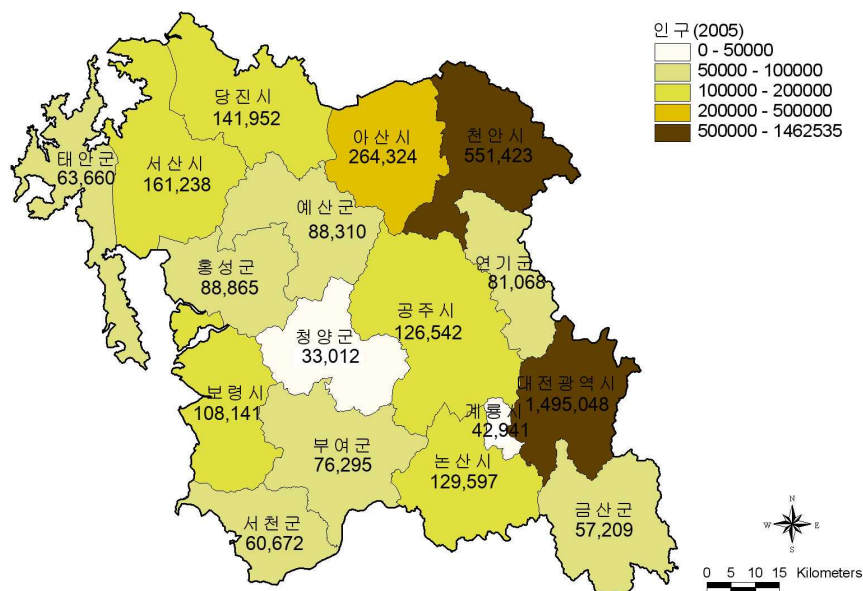
(단위: 천인, %)

구 분	2000년	2005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00-'05	'05-'09
전국인구	47,977	49,268	50,644	0.54	0.70
충남인구 (전국대비비중)	1,930 (4.0)	1,982 (4.0)	2,075 (4.1)	0.54	1.17

자료: 국가통계포털,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 해당년도.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해당년도.

- 시·군별 인구는 2009년 현재 천안시(26.6%), 아산시(12.7%), 서산시(7.8%) 순으로 많으며, 가장 인구비중이 낮은 지역은 계룡시와 청양군으로 각각 충청남도 전체인구의 2.1%, 1.6%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I-10〉 시군별 인구분포 현황(2009)



■ 인구변화추이

- 충청남도의 인구는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연평균 0.54% 증가하였으나,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연평균 1.17% 증가하였음
- 2000년 이후 천안시와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음. 아산시의 경우 2000년 이후 연평균 4.7% 증가하여 2009년 인구규모가 2000년 대비 1.3배 이상 성장한 반면, 청양군과 서천군 등은 동 기간 동안 각각 연평균 2.1%, 2.0% 감소하였음

〈표 I -7〉 시·군별 인구분포 현황(200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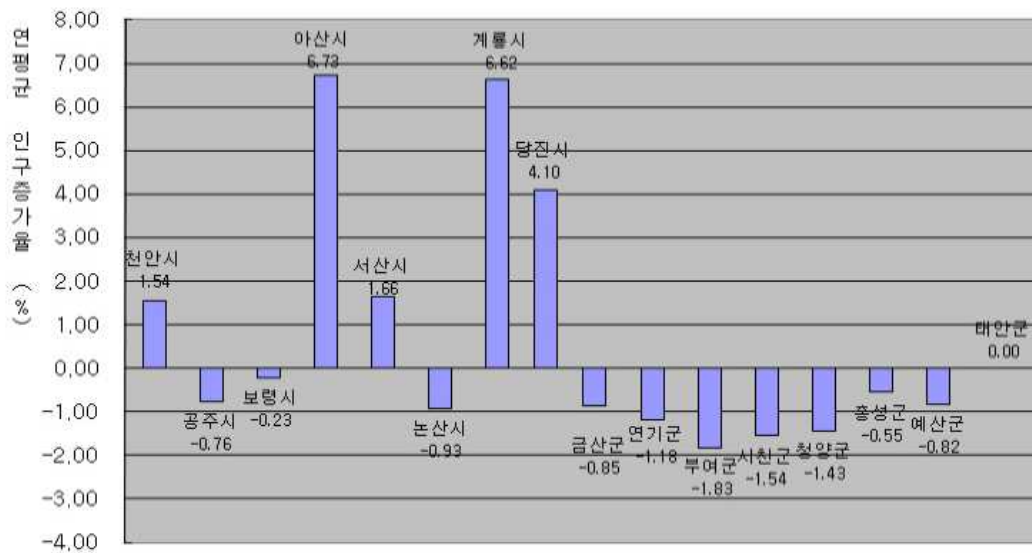
(단위: 천인, %)

구 분	2000년	2005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00-'05	'05-'09	'00-'09
충남 계	1,930(100.0)	1,982(100.0)	2,075(100.0)	0.54	1.17	0.83
천안시	425(22.0)	519(26.2)	551(26.6)	4.42	1.54	3.29
공주시	136(7.0)	131(6.6)	127(6.1)	-0.74	-0.76	-0.74
보령시	119(6.2)	109(5.5)	108(5.2)	-1.68	-0.23	-1.03
아산시	186(9.6)	208(10.5)	264(12.7)	2.37	6.73	4.66
서산시	150(7.8)	151(7.6)	161(7.8)	0.13	1.66	0.81
논산시	143(7.4)	135(6.8)	130(6.3)	-1.12	-0.93	-1.01
계룡시	28(1.5)	34(1.7)	43(2.1)	4.29	6.62	5.95
당진시	123(6.4)	122(6.2)	142(6.8)	-0.16	4.10	1.72
금산군	65(3.4)	59(3.0)	57(2.7)	-1.85	-0.85	-1.37
연기군	81(4.2)	85(4.3)	81(3.9)	0.99	-1.18	0.00
부여군	93(4.8)	82(4.1)	76(3.7)	-2.37	-1.83	-2.03
서천군	75(3.9)	65(3.3)	61(2.9)	-2.67	-1.54	-2.07
청양군	41(2.1)	35(1.8)	33(1.6)	-2.93	-1.43	-2.17
홍성군	95(4.9)	91(4.6)	89(4.3)	-0.84	-0.55	-0.70
예산군	101(5.2)	91(4.6)	88(4.2)	-1.98	-0.82	-1.43
태안군	69(3.6)	64(3.2)	64(3.1)	-1.45	0.00	-0.81

주: ()의 수치는 충남인구 대비 비중임

자료: 충청남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 해당년도.

〈그림 I -11〉 시·군별 인구성장률(2005~2009)



■ 도시인구

- 충청남도의 도시인구는 2009년 현재 2,075천인으로 2000년 이후 약 145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0.8%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충남의 도시화율은 2000년 56.2%에서 2009년 63.6%로 증가하였으나 2009년 전국 도시화율(90.8%)에 비해 낮은 편임

〈표 I -8〉 도시인구 변화추이(1995~2009)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95~'00	'00~'05	'05~'09
충남 전체(천인)	1,855	1,930	1,982	2,075	0.81	0.54	1.17
도시인구(천인)	970	1,085	1,198	1,320	2.37	2.08	2.55
농촌인구(천인)	885	845	784	775	-0.90	- 1.44	-0.29
충남 도시화율(%)	52.3	56.2	60.4	63.6	-	-	-

주: 1. 도시인구는 동부와 읍부의 합으로, 농촌인구는 면부의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함.

2. 농촌인구는 아산시 배방면이 배방읍(2009. 5. 1)으로 승격되어 감소됨

자료: 충청남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 해당년도.

■ 인구구조

- 충청남도의 인구구조(2009년)를 보면, 15세미만 인구는 16.8%로 전국의 16.6%와 비슷한 반면에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14.8%로 전국의 10.6%를 상회하고 있음

〈표 I-9〉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200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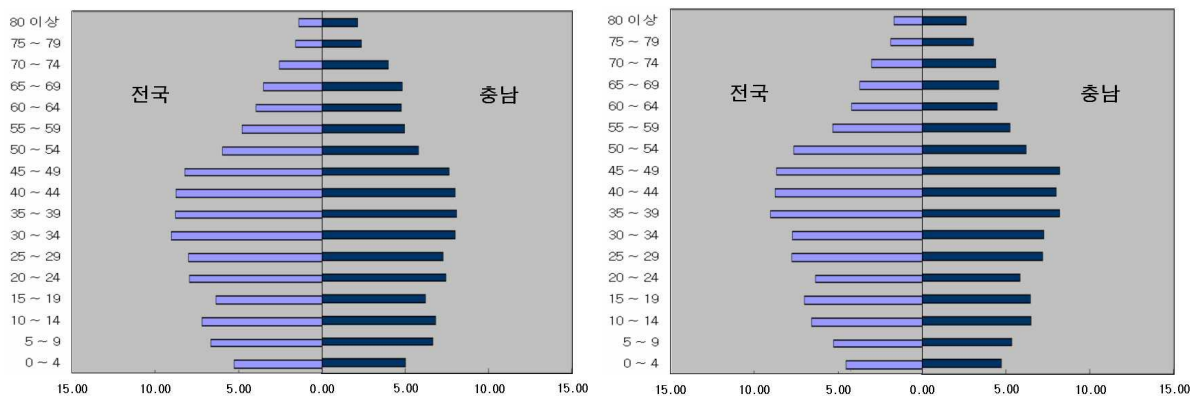
(단위: 인, %)

연령 ¹⁾	2000년		2005년		2009년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계	47,732,558 (100.0)	1,921,604 (100.0)	48,782,274 (100.0)	1,962,646 (100.0)	49,773,145 (100.0)	2,037,582 (100.0)
15세 미만	9,958,802 (20.9)	381,468 (19.9)	9,257,908 (19.0)	363,131 (18.5)	8,248,987 (16.6)	341,858 (16.8)
15~64세	34,418,140 (72.1)	1,325,077 (68.9)	35,199,778 (72.1)	1,337,715 (68.2)	36,256,450 (72.8)	1,394,476 (68.4)
65세 이상 ²⁾	3,355,616 (7.0)	215,059 (11.2)	4,324,588 (8.9)	261,800 (13.3)	5,267,708 (10.6)	301,248 (14.8)

주: 연령별 인구는 외국인수를 제외한 값임.

자료: 통계청,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 해당년도.

〈그림 I-12〉 전국대비 충남의 연령별 인구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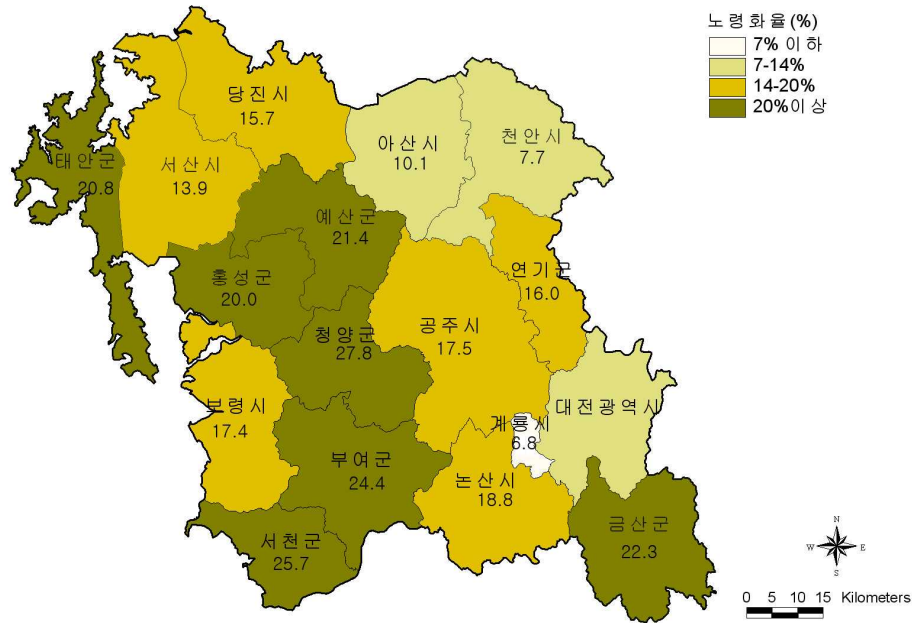
2005

2009

- 2009년 현재 도내 시·군별 노령인구 비율은 청양군, 서천군, 부여군, 금산군, 예산군, 태안군이 각각 27.8%, 25.7%, 24.4%, 22.3%, 21.4%, 20.8%에 달하여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

-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당진시, 연기군, 홍성군, 등 6개 시·군의 노령인구 비율은 15%~20%에 달하여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음

〈그림 I-13〉 시군별 노령화 현황(2009)



■ 인구이동

- 2005~2009년간 충남지역과 여타 지역간의 인구이동에서 충남은 전입 144,393명, 전출 135,836명으로 총 8,557명의 인구유입을 보여 2000~2005년까지의 인구유출지역에서 인구유입지역으로 전환됨
- 2000~2005년간 충남지역에서 유출되는 인구의 지역분포를 보면, 총 유출인구의 26%가 광역충청권 내에서 이동하였으며, 광역수도권으로의 유출비중은 2000~2005년간 55.5%에서 2005~2009년에는 55.3%로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I -10〉 충남지역 인구이동패턴(지역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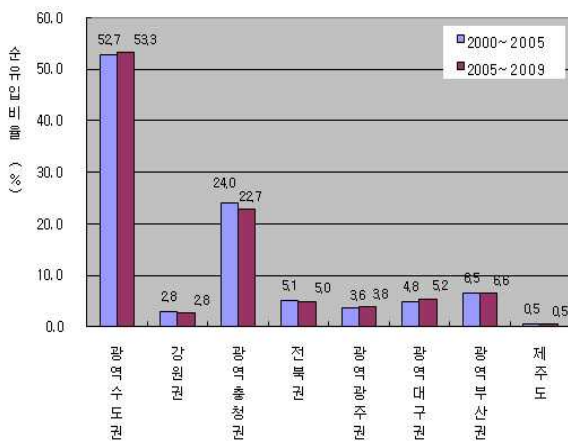
(단위: 인)

구분	2000~2005년			2005~2009년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충남 계	133,062	135,186	-2,124	144,393	135,836	8,557
광역수도권	70,083	75,023	-4,940	77,025	75,102	1,923
강원권	3,749	3,092	657	3,987	3,397	590
광역충청권	31,925	35,100	-3,175	32,846	33,050	-204
전북권	6,766	5,807	959	7,176	6,214	962
광역광주권	4,853	3,953	900	5,513	4,497	1,017
광역대구권	6,344	4,938	1,406	7,580	5,614	1,966
광역부산권	8,695	6,706	1,989	9,535	7,339	2,196
제주도	649	568	81	733	624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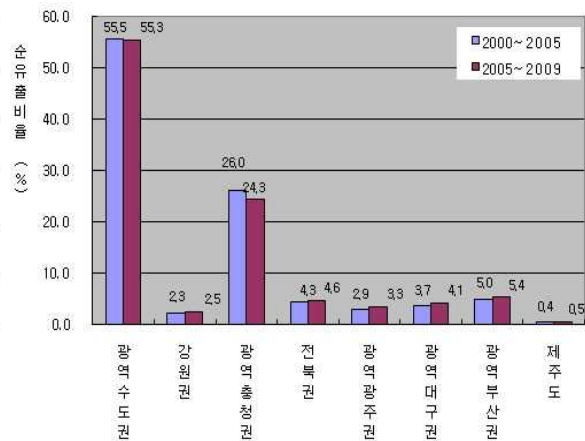
주: 광역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강원도), 광역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중 충남은 제외), 전북권(전북), 광역광주권(광주, 전남), 광역대구권(대구, 경북), 광역부산권(부산, 울산, 경남), 제주도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해당년도.

〈그림 I -14〉 충남지역 인구이동(유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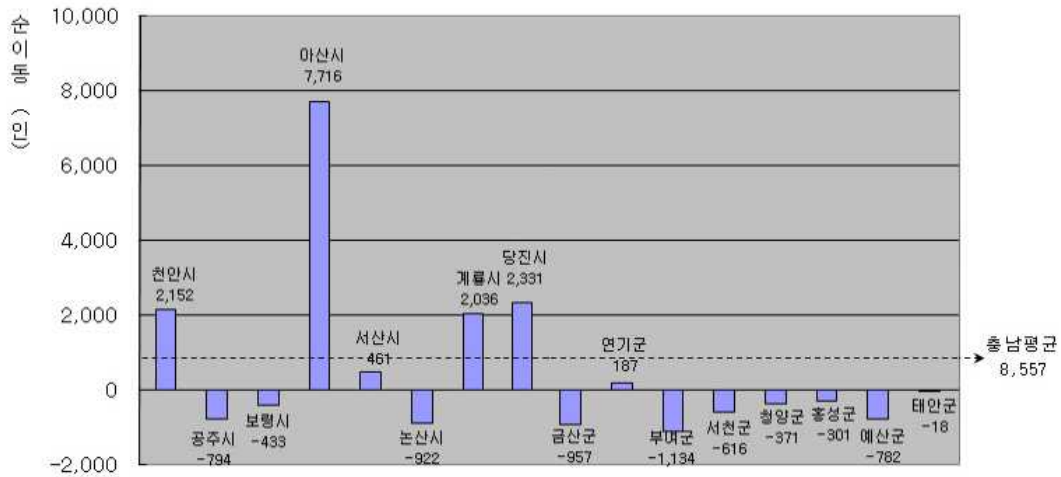


〈그림 I -15〉 충남지역 인구이동(유출)비중



- 2005~2009년 동안 시·군별 인구이동패턴에서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연기군의 경우 인구이동으로 인한 순증가가 이루어진 반면, 나머지 지역은 인구의 순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I -16〉 지역내 시·군별 순인구 이동패턴(2005~2009)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해당년도.

라. 토지이용

■ 지목별 토지이용

- 충남지역의 2009년 현재 지목별 토지이용실태를 보면, 도시용 토지가 전체면적의 7.2%, 농업용 토지 31.7%, 임야 51.5%, 기타 9.6%의 순으로 나타남
- 토지이용실태를 전국과 비교하면, 농업용 토지와 도시용 토지이용 면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임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농업 및 도시개발 부문의 잠재력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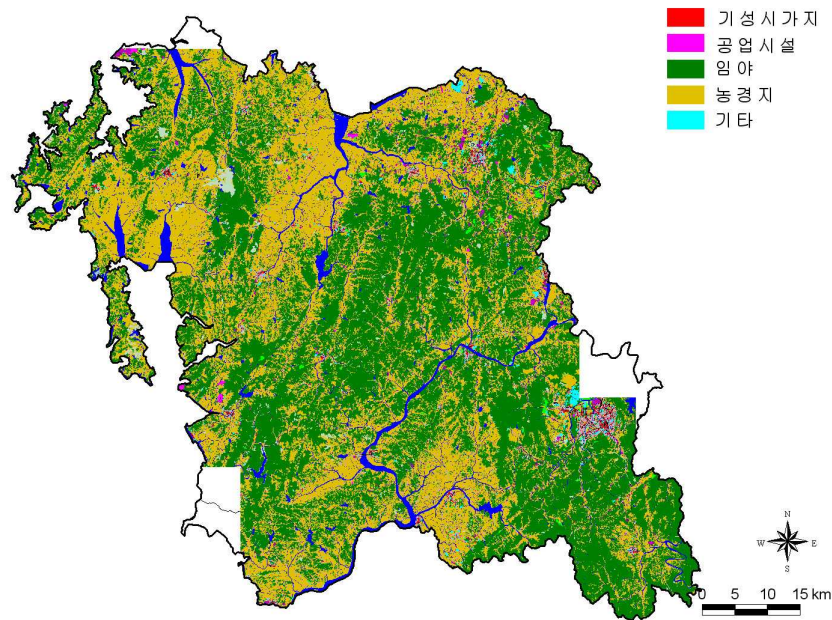
〈표 I -11〉 전국과 충남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2009)

(단위: km², %)

구 분	총면적	도시용 토지	농업용 토지	임 야	기 타
전국	99,897.4 (100.0)	6,802.9 (6.8)	20,844.6 (20.9)	64,472.0 (64.5)	7,778.0 (7.8)
충남	8,629.2 (100.0)	619.7 (7.2)	2,731.9 (31.7)	4,447.6 (51.5)	830.0 (9.6)

자료: 국토해양부, 2009 도시계획현황, 2010.

〈그림 I-17〉 토지이용 현황도



■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 충남지역의 도시지역 면적은 총 1,068.36km²로 충남 전체면적의 12.4%이며 전국의 17.4%에 비하여 낮은 편임
- 충남지역의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분포의 경우, 녹지지역이 6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13.7%, 미지정지역 10.6%, 공업지역 10.0%, 상업지역 1.9%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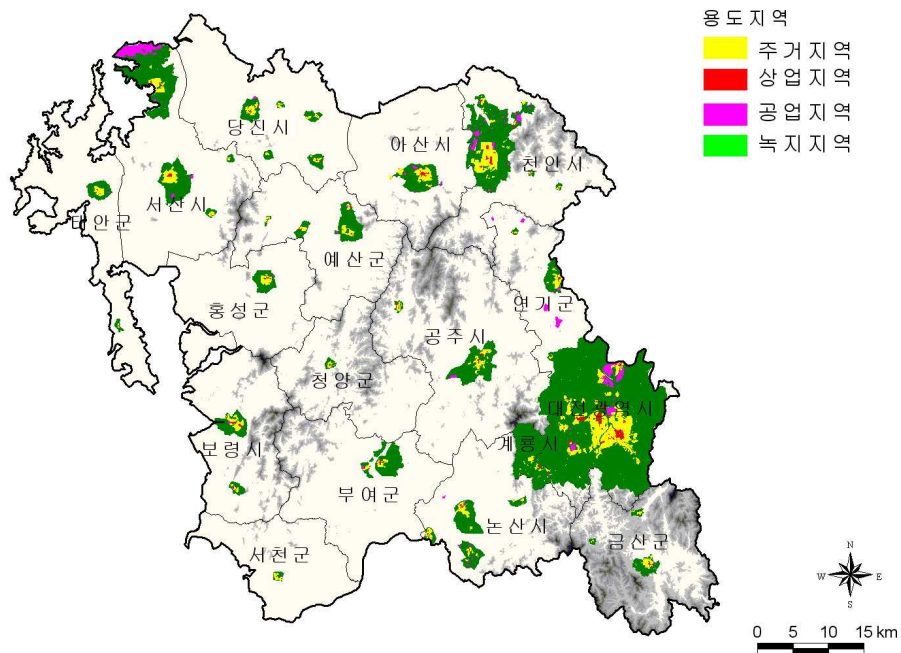
〈표 I-12〉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현황(2009)

(단위: km², %)

구분	도시지역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지역
전국	17,420.23 (100.0)	2,402.37 (13.8)	299.47 (1.7)	963.94 (5.5)	12,621.06 (72.5)	1,133.38 (6.5)
충남	1,068.36 (100.0)	146.79 (13.7)	20.11 (1.9)	106.56 (10.0)	681.63 (63.8)	113.28 (10.6)

자료: 국토해양부, 2009 도시계획현황, 2010.

〈그림 I-18〉 도시지역내 용도지역 현황도



■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 충남지역의 비도시지역내 용도지역 분포를 보면, 농림지역이 5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지역 38.2%, 자연환경보전지역 9.3%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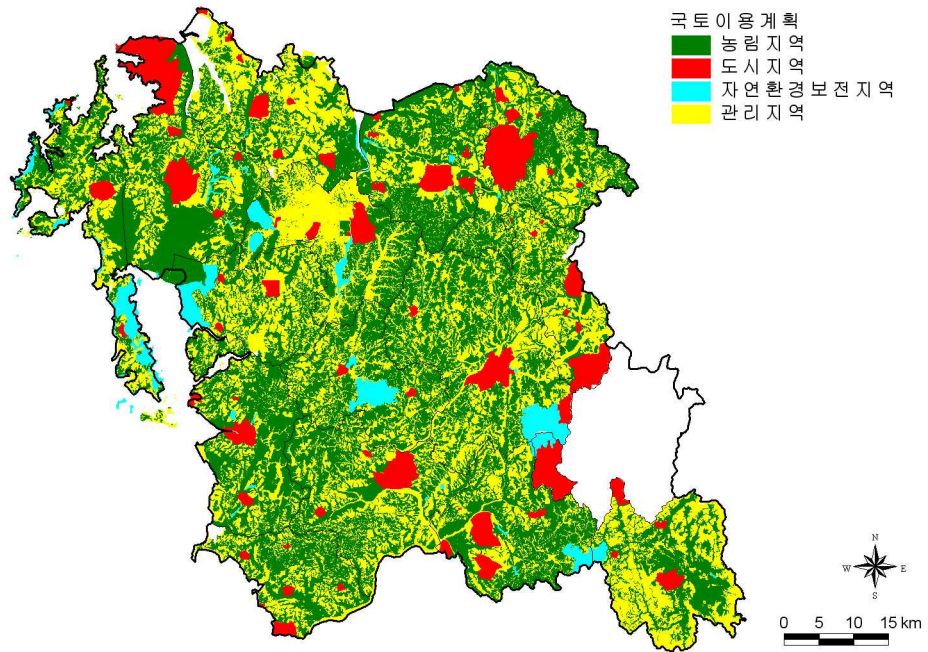
〈표 I-13〉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현황(2009)

(단위: km², %)

구분	비도시지역			
	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전국	88,173.77 (100.00)	25,283.39 (28.7)	51,019.12 (57.9)	11,871.26 (13.5)
충남	8,074.85 (100.00)	3,085.92 (38.2)	4,239.25 (52.5)	749.68 (9.3)

자료: 건설교통부, 2009 도시계획현황, 2010.

〈그림 I-19〉 비도시지역내 용도지역 현황도



마. 생활환경

■ 시·군 생활권의 구조와 특성

-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물품 및 서비스 구매형태의 경우, 고차(higher-order)의 상업·서비스기능일수록 대전광역시, 천안시의 영향권이 확대되고 있음
- 일용품구매의 경우 90.21%가 해당 시·군내에서 이루어지며, 5.14%가 타 시·도내에서 구매하고 있음
 - 시·군내에서 일용품 구입은 당진시가 99.0%로 가장 높고, 천안시, 서산시 순서임. 연기군이 66.67%로 가장 낮으며, 이는 주변에 대전시, 청주시, 천안시 등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임
- 가전제품은 78.99%가 해당 시·군내에서 구매가 되며, 12.49%가 타 시·도내에서 이루어짐
 - 가전제품의 시·군내 구입은 천안시가 98.76%로 가장 높고, 서산시, 당진시의 순서임. 청양군이 16.0%로 가장 낮음

- 일반병원 이용권의 경우 해당 시·군내 이용이 78.03%이며, 타 시·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11.44%임
 - 해당 시·군내에서의 일반병원 이용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98.98%의 천안시이며, 가장 적은 지자체는 31.25%로 계룡시임
- 종합병원 이용권은 시·군내 이용이 41.72%이며, 타 시·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37.48%임
 - 종합병원은 상위서비스로 해당 시·군내 이용이 낮은 상태임. 천안시가 93.31%로 가장 높고, 보령시와 서산시가 그 다음 순서임. 반면 계룡시, 청양군, 태안군 순서로 해당 지역내 종합병원 이용이 낮은 상태임

〈표 I-14〉 상품 및 서비스 유형별 시·군 점유율 분석(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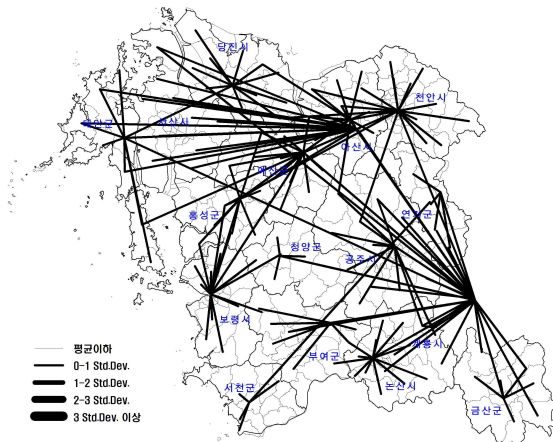
	일용품구매	가전제품	일반병원	종합병원
천안	98.98	98.76	98.98	93.31
공주	87.04	69.09	70.91	14.95
보령	91.36	88.31	87.18	58.44
아산	81.77	72.00	62.25	15.84
서산	96.85	91.20	81.06	32.79
논산	91.75	78.72	79.59	22.68
계룡	70.97	21.88	31.25	0.00
당진	99.00	90.91	81.73	13.59
금산	81.08	36.11	66.67	19.44
연기	66.67	47.37	50.00	6.78
부여	88.14	51.72	64.41	6.67
서천	84.78	91.67	93.10	10.53
청양	70.83	16.00	32.00	4.00
홍성	89.47	83.93	81.36	27.12
예산	93.59	75.68	64.94	24.00
태안	68.97	36.21	43.10	5.45
충남평균	90.21	78.99	78.03	41.72

자료: 충청남도, 지역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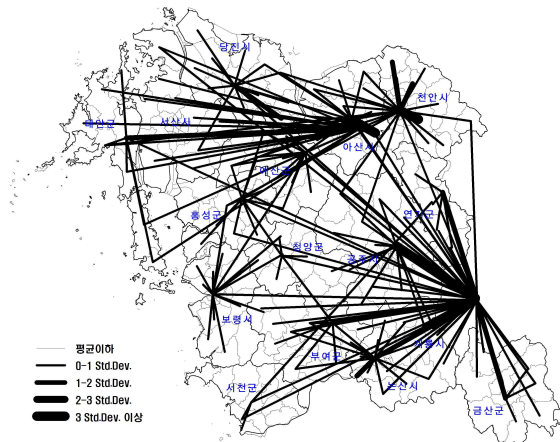
- 상품 및 서비스 계층별 생활권은 천안시와 아산시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권과 대전시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권으로 크게 구분됨

- 일상용품의 경우 장항선철도축을 중심으로 해당지역과 주변지역간의 구매권이 형성되어 있고, 특히 천안시와 아산시에 영향을 받고 있음. 대전시 주변도시는 해당지역과 대전시를 구매권으로 형성하고 있음
- 가전제품은 북부권의 일부 도시에서 대전시까지 구매권이 형성되어 있음
- 일반병원 및 종합병원 이용권은 천안시와 아산시 중심으로 북부이용권과 대전시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이용권으로 크게 구분됨
 - 북부이용권이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이용권으로 일부 흡수되는 추세에 있음
 - 이러한 경향은 도시의 규모에 따른 고차서비스 집중과 함께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 따른 접근성 향상이 주요 요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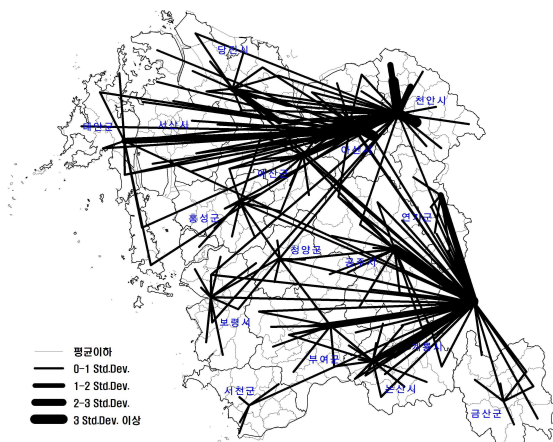
〈그림 I -20〉 일상용품 구매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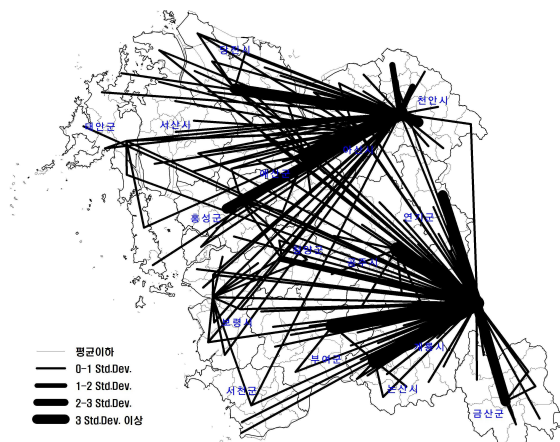
〈그림 I -21〉 가전제품 구매권



〈그림 I -22〉 일반병원 이용권



〈그림 I -23〉 종합병원 이용권



바. 지역경제

■ 지역총생산

- 충남지역의 지역총생산액은 2009년 현재 67조 2,136억원(2005년 기준년)으로 전국의 6.73%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GRDP는 33,706천원으로 전국 시·도 1인당 평균 GRDP의 154.1%에 달하여 여타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기반이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음
- 도내 1인당 평균 GRDP도 2005년 전국대비 137.1%에서 2009년 154.12%로 증가추이를 보임

〈표 I -15〉 지역총생산 및 1인당 지역총생산 추이(2000~2009)

(단위: 십억원,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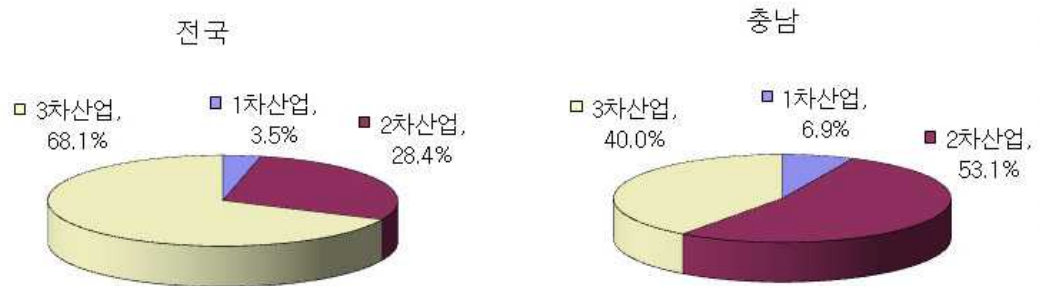
구분		2000년	2005년	2009년
지역 총생산	전국	691,467.8 (100.0)	869,304.6 (100.0)	999,219.5 (100.0)
	충남	30,963.3 (4.48)	47,497.3 (5.46)	67,213.6 (6.73)
1인당 GRDP	전국	12,046.9 (100.0)	18,059 (100.0)	21,870 (100.0)
	충남	15,004.8 (124.55)	24,758 (137.1)	33,706 (154.12)

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0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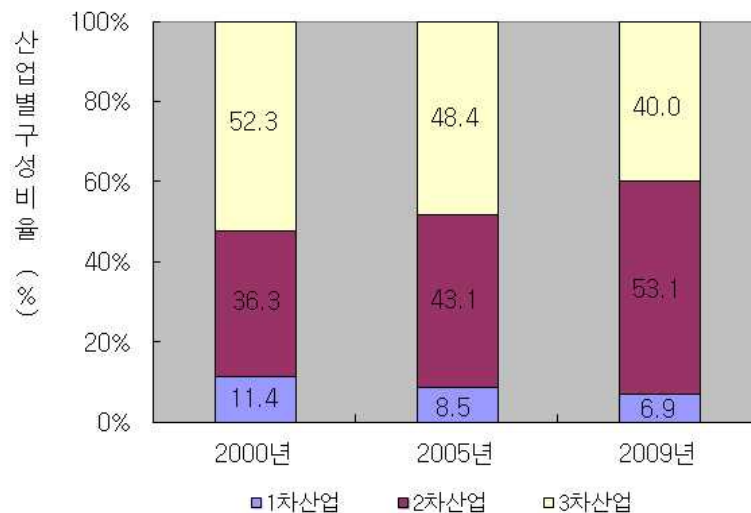
■ 산업구조

- 2009년 현재 생산액 기준 충남지역의 산업별 구성비는 농·림·어업 6.9%, 광공업 53.1%, 서비스 등 기타가 40.0%임. 이를 전국과 비교하면, 농림어업 비중이 전국 3.5%에 비하여 높은 반면, 서비스업 부문은 전국 평균치인 68.1%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충남의 산업구조는 2000년 이후 1차 산업의 비중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2차 산업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그림 I-24〉 전국과 충남의 산업구조 비교 2009년(생산액 기준)



〈그림 I-25〉 충남의 산업구조 변화추이(생산액 기준)



■ 취업구조

- 충남지역의 취업구조는 1차 산업 취업자가 2009년 현재 181천명으로 전체 산업별 취업자의 18.8%를 차지하여 전국평균 7.0%보다 크게 높고, 2차 산업은 164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7.1%를 차지하여 전국평균 16.4%보다 높으며, 3차 산업 취업자비율은 64.1%로 전국평균 76.6%보다 크게 낮음

〈표 I-16〉 전국과 충남의 취업구조 비교(2009, 취업자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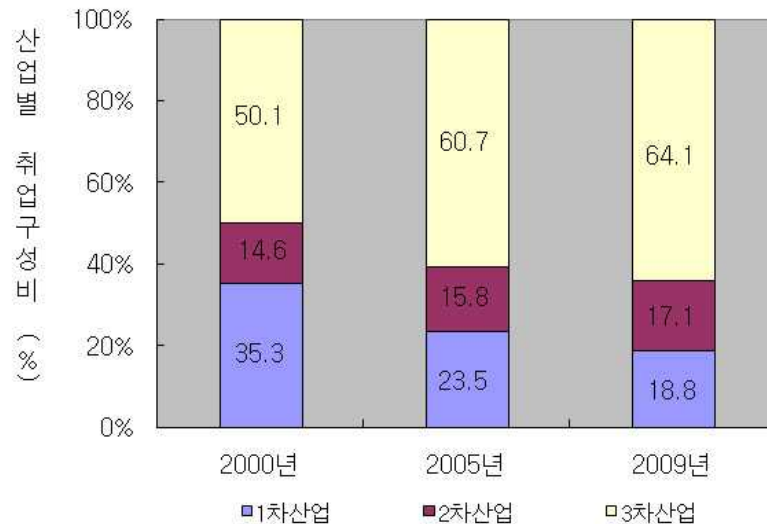
(단위: 천명)

구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계
전국	1,648 (7.0%)	3,859 (16.4%)	17,999 (76.6%)	23,506 (100.0%)
충남	181 (18.8%)	164 (17.1%)	616 (64.1%)	961 (100.0%)

자료: 충청남도, 2010 충남통계연보, 2011.

- 충남지역의 취업구조는 1차 산업 비중이 2000년 35.3%에서 2009년 18.8%로 크게 낮아졌으나, 2차 산업 및 3차 산업 비중은 증가추세에 있음. 특히, 지역내 산업단지 조성효과로 2차 산업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26〉 충남의 취업구조 변화추이(2000~2009)



사. 사회간접자본시설

- 충남지역의 도로연장은 2009년 현재 전국의 7.4%인 7,803km이며, 도로포장률은 75.9% 수준으로 전국평균 79.2%에 근접하고 있음
- 주택 및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수준 부문에서는 2009년 현재 주택보급률(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은 113.3%로 전국의 101.2%에 비해 높은 수준임
- 2008년 현재 상·하수도 보급률은 77.7% 및 59.0%(2007년)로 전국 평균인 94.1% 및 87.1%(2007년)에 비해서 낮은 수준임
- 충남지역의 생활환경 및 지역경제 여건을 나타내는 지역총생산, 1인당 GRDP는 전국평균에 비해 높은 반면, 도시화율, 도로수준 지표는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

아. 문화·관광자원

- 충남지역에는 2개소(계룡산, 태안해안)의 국립공원과 3개소(철갑산, 대둔산, 덕산)의 도립공원이 분포되어 있음

- 충남지역에는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이 지정되어 있고, 920점의 국가지방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이 분포됨
- 25개소의 지정관광지와 2개소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70건의 축제가 충남지역 내에서 해마다 개최되고 있음

〈표 I-17〉 관광자원 분포현황

구분		개소수	분포지역
자연자원	국·도·군립공원	6개소	•국립공원(2개소) : 계룡산, 태안해안 •도립공원(3개소) : 칠갑산, 덕산, 대둔산 •군립공원(1개소) : 연기 고북저수지
	온천	11개소	•온양, 도고, 아산, 덕산, 마곡, 홍성 등
역사문화자원	문화재	920점	•국가지정문화재(223점), 도지정문화재(390점), 문화재자료 307점 등
	향토문화축제	70건	•한산 모시문화제, 보령 머드축제, 금산 인삼축제, 강경 젓갈축제,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천안 흥타령 축제 등
관광자원	지정관광지	25개소	•삼교호, 구드래, 태조산, 신정호, 안면도 등
	관광특구	2개소	•보령해수욕장관광특구, 아산시 온천관광특구

자료: 충청남도, 도정백서, 2010.

사. 사회복지시설

- 2009년 현재 충남지역에 236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8,756명이 수용되어 있음
 - 유형별로는 노인복지시설이 72.9%, 장애인복지시설이 9.3%, 아동복지시설이 7.6%, 여성복지시설이 5.1%를 차지하고 있음
 - 수용인원으로는 노인 47.9%, 정신질환자 20.6%, 장애인 17.6% 등의 순임

〈표 I-18〉 사회복지시설 분포현황(2009)

(단위: 개소, 인, %)

구분	총계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부랑인시설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계	236 (100)	8,756 (100)	18 (7.6)	892 (10.2)	172 (72.9)	4,193 (47.9)	22 (9.3)	1,488 (17.0)	12 (5.1)	240 (2.7)	11 (4.7)	1,803 (20.6)	1 (0.4)	148 (1.7)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10.

2. 관련계획의 검토와 평가

가. 국가계획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지역발전 5개년계획(2009~2013),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0~2014),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 제4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08~2012) 등을 검토함

나. 관련계획

-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2008~2025),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2020 대전권광역도시계획 변경계획(2006~2020),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2007~2014),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1995~2011), 충남 환경보전 종합대책 기본계획(2003~2020), 장항·군산권 광역개발계획(1996~2011), 대전·청주권 광역개발계획(1996~2011), 4대권 개발경영구상(1997) 등을 검토함

※ 국가 및 관련계획 검토는 자료집 참조

다. 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의 평가(2005~2009년)

■ 인가지표

- 「제3차충청남도종합계획수정계획(2008-2020)」의 기준년도인 2005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충남의 인구는 연평균 1.17% 증가하였고, 도시화율도 2009년 현재 63.6%로 2005년에 비해 3.2% 증가하였음
- 1차 산업 중심의 내륙 및 서해안지역의 인구는 저출산, 이농현상으로 감소한 반면,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지역의 서북부와 경부축의 지역인구는 증가하였음.

■ 지역경제지표

- 지역내 총생산은 2005년 47조 4,970억원에서 2009년 현재 67조

0,550억원으로 1.4배 증가하였음

-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의 비중(생산액 기준)이 2005년 8.6%에서 2009년 6.9%로 낮아진 반면, 2차 산업의 비중은 크게 높아졌음.
- 이는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전자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부품산업, 철강, 석유화학 등 첨단산업 중심의 실물경제는 견실하게 성장한 반면, 1차 산업은 FTA 등의 영향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임

■ 사회기반시설지표

- 도로부문은 고속도로의 연장이 2005년 301.9km에서 2009년 448.5km로 약 1.4배 증가하였고, 국도의 연장은 2005년 1,315km에서 2009년 1,321km로 확충되었으며, 도로 포장률도 73.6%에서 75.9%로 개선되었음
- 이와 같은 국도 및 지방도의 확충으로 도시와 도시, 도시와 농촌간의 교통연계가 향상되었음

■ 생활환경지표

- 상수도 보급률은 광역상수도망의 확충으로 2005년 63.3%에서 2009년 77.7%로 크게 향상되었음
- 생활 및 복지시설은 교통망의 확충으로 주로 대전시와 천안·아산시 등 도시지역의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
- 주택보급률은 2009년 현재 113%에 달하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됨

■ 관광부문지표

- 2009년 관광객수는 89,633천명으로 2005년과 대비하여 약 1.08%가 증가하였음

〈표 I -19〉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의 추진 성과

부 문 별		단 위	추진성과		전망지표		비 고
			2005년 (현황)	2009년 (실적치)	2010년 (전망치)	2020년 (전망치)	
인구	인 구	천인	1,982	2,075	2,080	2,500	
	도 시 화 율	%	60.4	63.6	67.1	87.6	
경제	지역내총생산	10억원	47,497	67,055 ¹⁾	55,166 ²⁾	98,972 ²⁾	
	산 업 구 조	1차:2차:3차의 구성비	8.5:43.1:48.5	6.9:53.1:40.0	9.0:34.6:56.4	8.3:34.5:57.2	생산액 기준
교통	도로포장율	%	73.6	75.9 ³⁾	-	100.0	
	고 속 도 로	km	301.9	448.5 ³⁾	459 ⁴⁾	721 ⁴⁾	
	국 도	km	1,315	1,257.4 ³⁾	1,375	1,630	
	지 방 도	km	1,817	1,440.1 ³⁾	-	2,055	
생활 환경	주택보급률	%	129.1	113.0	98.7	103.3	
	상수도보급률	%	63.3	77.7 ⁵⁾	89	90.0	
복지	의료병상수	개	15,138	21,950	-	22,440	
	사회복지시설	개소	92	236 ⁶⁾	-	100	
관광	관광객수	천명	83,003	89,633	-	126,815	

- 1) 2005년 기준가격
- 2) 2000년 불변가격 기준
- 3) 실적치, 충남도 내부자료
- 4) 세종시(2005년 기준) 제외
- 5) 2008년 현재
- 6) 사회복지시설 중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부랑인시설 제외

자료: 충청남도,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2008.
 충청남도, 2010충남통계연보, 201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3. 대내·외적 여건변화 분석

가. 거시적 여건변화와 전망

■ 무역자유화에 따른 지역경영전략의 변화

- 무역·투자자유화, 초국적기업의 세계화 전략, 지식정보화 등으로 인하여, 과거의 선진국 중심, 제조업 중심의 지구촌경제가, 향후에는 교육, 문화·예술, 공공서비스 등을 포함한 전 산업,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 확산될 것임
- 한·미/한·EU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충남의 기술집약적 첨단제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1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2·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가 예상됨
 - 이에 따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된 지역경영전략을 추구하되, 경쟁력을 상실하는 부문에 대한 발전정책 수립이 요구됨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불안정

-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로 세계적 금융위기와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우리나라 경제도 저성장과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임
-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복지취약계층의 증가, 일자리 창출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고용없는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문제 대두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1980년대의 7.5%, 1990년대의 6.2%에서 5% 내외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정적 저성장 추세는 2020년까지 지속될 전망됨
- 5% 내외의 성장률은 경제성숙에 따른 자연적인 안정적 성장일 수도 있으나, 문제는 고용창출능력에 있음. 향후 고용창출과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잠재성장률 실현이 주요 경제현안으로 대두될 것임

■ 중국 성장에 따른 환황해권시대 전개

-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향후 중국은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환황해권은 아시아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할 것임
- 충남은 중국과 가장 근접한데다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지경학적 유리성을 지니고 있어, 충남은 새로운 국가성장의 선도지역이자 환황해경제권의 생산-물류기지로서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증가의 둔화

- 통계청의 예측에 의하면, 출산을 저하, 지속적인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충남은 2010년에 이미 고령사회³⁾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임.

〈표 I-20〉 충남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고령화율(%)	13.9	15.4	16.7	18.5	22.1

자료: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7.

- 저출산의 영향으로 충남의 유년인구(0~14세)의 비율은 2005년 18.7%에서 2010년 16.3%, 2015년 13.8%, 2020년 12.3%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표 I-21〉 충남의 유소년인구(0-14세) 구성비 추이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구성비(%)	18.7	16.3	13.8	12.3	11.4

자료: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7.

- 고령화는 노인복지의 문제와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 노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및 사회보장 등에 대한 수요의 증대, 복지 정책 및 제도의 질 개선 요구 증대 등이 예상됨.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3대 노인문제(빈곤, 질병, 소외)도 발생할 수 있음
 - 취업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생산성 둔화 등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임

3)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 고령사회는 14% 이상,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을 의미함

- 고령화로 인해 공공재원 조달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등에 따른 공공재원 조달 문제 및 국민부담 증가가 예상됨
 - 특히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노령인구(65세 이상)를 부양해야 할 부담은 가중될 것임
- 저출산·고령화는 충남지역에 장기적으로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위험성도 있지만, 이보다 먼저 이미 고령화되어 있는 농어촌지역을 더욱 공동화(空洞化) 할 것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다각적인 정주 촉진대책의 추진이 필요함

■ 지구 환경문제와 에너지·자원 위기의 도래

-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빈번한 자연재해, 황사현상의 심화, 오존층 파괴 등 국제환경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
-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수려한 경관 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가할 전망
- BRICs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 화석연료 등 자원 공급이 한계에 봉착하여 새로운 에너지원 발굴이 중요 과제로 대두될 것임

■ 친환경, “삶의 질” 문화의 정착

- 산업화에 따라 경제활동이 환경용량을 초과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가 등장하였음
- 삶의 질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양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 삶을 중시하는 웰빙 트렌드가 생활문화로 정착되고 여가와 문화관광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주5일 근무제에 따라 5都2村형 생활패턴이 확산될 것임
- ‘삶의 질’에 대한 가치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인간중심적 친환경·생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쾌적한 생활·정주환경 등 새로운 도시 및 지역개발 수요가 증대될 것임
- 도시, 농어촌의 삶의 질을 제고하면서 개발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시책 및 제도정비가 요구됨

나. 충남의 여건변화와 전망

■ 인구와 산업의 총량적 성장 지속

- 충남의 총인구는 1990년 201.4만명에서 1995년에는 185.5만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 193.0만명, 2009년 207.5만명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충남지역 내부적으로는 지역간 인구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이 큼
- 충남지역은 과거의 국가성장의 배후지역에서 국가성장의 선도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충남의 인구, GRDP, 1인당 GRDP, 제조업체수(5인 이상 제조업체 기준), 제조업 생산액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전국의 제조업 종사자수는 감소한 반면 충남의 제조업 종사자수는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충남지역 내부적으로는 천안·아산 지역은 수도권에 기능적으로 편입되어 계속 성장하겠지만, 충남 중부내륙 및 서해안축은 1차 산업 중심지역으로 상대적 저발전 상태에 있어 발전격차가 심화되어, 충남지역의 정체성, 안정성, 지속성, 유기적 발전 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결국, 충남 중부내륙 및 서해안 지역은 저성장지역으로, 세종시 인근 지역은 발전지역으로, 충남 서부-북부 지역은 광역수도권 영향권 등으로 충남이 공간적으로 분절될 우려가 있음

〈표 I-22〉 전국과 충남의 주요 인구·경제지표의 연평균 증가율(2005~2009)

(단위: %)

	인구	GRDP	1인당 GRDP	제조업체수	제조업 종사자	제조업 생산액
전국(A)	0.5	5.2	4.9	-1.5	-1.3	8.8
충남(B)	0.9	8.2	7.8	0.0	2.5	15.0
(B/A)	1.867	1.573	1.586	n.a.	n.a.	1.714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해당년도

■ 제조업 중심의 산업지역으로 전환

- 충남의 2차 산업 비중(생산액 기준)은 2005년 43.1%에서 2009년 53.1%로 증가하여, 충남은 전통적 농업지역에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지역으로 전환되고 기업의 입지잠재력도 더욱 향상될 것임

■ 세종시 건설과 연계 네트워크 강화

- 공주·연기지역에 2030년까지 중앙행정기관 9부2처2청의 이전, 인구 50만명의 세종시가 건설되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도시권은 중부 지역의 한 대도시권을 형성할 것임
- 세종시와 주변 도시간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와 주변 도시간 수평적, 호혜적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함
 - 주변 도시의 기능과 서비스수준을 제고하고, 주변도시의 잠재력에 기반한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세종시와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해야 함
 - 대전~세종시~천안·아산~충북 청원 등 경부축선상의 지역과 내륙 서해안지역과의 광역 차원에서의 기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가 대전에 건설됨에 따라, 기능지구(세종, 천안, 청원)와의 공간적·기능적 연계체계 형성이 요구됨
 - 세종시와의 기능 분담과 생활기반시설의 공동 활용을 통해 상호보완성을 강화해야 함

〈그림 I -27〉 세종시와 주변지역 연계체계



- 지역단위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세종시와 광역도시권과의 연계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함
 - 세종시와 백제문화권·내포문화권·충원문화권·기호유교문화권, 대전의 과학기반 문화관광 등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세종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함

■ 내포신도시 건설과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 2012년 홍성·예산지역으로의 도청이전을 계기로 내포신도시와 각 시·군간 교통체계가 정비되면, 충남은 대부분의 지역이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될 것임
- 도청이전에 따라 환황해권시대 거점지역으로서 서해안지역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고, 경부축을 중심으로 기능이 집적된 불균형적 지역구조에서 벗어나 충남 내륙, 북부, 서해안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임
- 국가균형발전의 중심권의 영향이 황해로 전파될 수 있도록 문화교육산업적 측면에서 기능적 상호보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내포신도시는 주변의 도시 및 주요 집적지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충남 서부지역의 발전을 견인함과 동시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선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막대한 재원투입으로 전략적 도정과제 수행을 어렵게 할 수도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역적 구현

-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전략임
 -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경제·산업구조와 삶의 양식은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이 확충될 것임
- 충남은 화력발전소가 위치하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음
 - 2006년 현재 충남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5.21탄소톤으로 전국평균인 3.34의 4.6배에 달하며, 소득대비 배출량은 0.51탄소톤/백만원으로 전국 평균(0.19)의 2.7배 수준임
 - 충남에서 생산된 전력 상당량이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공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8.66탄소톤에 달해 전국 평균보다 2.6배 높게 배출되고 있는 실정임
 - 충청남도의 온실가스배출량은 2001~2006년 기간중 전국 평균 2.70%의 약 2배인 연평균 5.49%씩 증가하였음. 지역적으로는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당진, 태안, 보령지역이 가장 높으며, 상대적으로 산업발전정도가 높은 천안, 아산, 서산지역의 순서임

- 충남은 인간의 ‘삶의 양식’ 까지 포괄하는 녹색성장을 분야별로 구현할 필요가 있음
 - 산업·경제부문에서는 녹색산업의 육성과 주력산업의 ‘녹색화’를 추진하고,
 - 도시·교통부문에서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지향하며,
 - 환경부문에서는 오염원을 관리하고 생태환경을 복원할 필요가 있음

■ 금강유역의 전략적 개발

-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홍수조절용량 확보,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등을 목적으로 금강유역에 노후제방 보강(117km), 다기능보(3개), 생태습지지구(6개), 생태림(80만 m²), 자전거도로(248km) 등이 건설될 것임
- 충남은 금강유역의 낙후성 개선을 위해 문화관광거점 조성, 금강 주변 농어촌개발 등 전략적 과제를 안고 있음

■ 새로운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지역수용성 강화

- 중앙정부의 서해안 신산업벨트, 5+2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3차원적 지역발전전략에 따라 지역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됨
- 서해안신산업벨트와 연계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외성을 강화하고, “5+2 광역경제권계획”에 따라 충남 선도전략산업 및 특화산업을 연계 발전하며, 기초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의 삶의 질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그림 I-28〉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자료 : 충청광역경제권위원회, 충청광역경제권 장기발전 구상 및 추진전략 연구, 2009.

다. 충남의 기능 및 역할 전망

■ 국가혁신의 선도지역

- 충남은 지식기반시대 혁신주도적 성장전략의 모범지역으로 국가혁신을 주도할 것임
- 충남은 세종시의 중앙행정기능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연구 성과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산업, 교육, 연구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지역 혁신을 창출하고, 나아가서 국가적 혁신을 촉진하는 촉매자의 역할을 할 것임

■ 중부권의 성장거점

- 금강유역의 개발을 통해 세종시~서천까지의 충남 남부지역 일대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중부권의 성장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임
- 공주·부여지역의 백제권은 과거와 미래가 융합된 새롭고 독창적인 문화권을 형성하여 금강르네상스 상징지역의 이미지를 구축할 것임

■ 교통의 중심지역

- 경부·호남고속철도가 통과하여 전국에서 2시간대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 서울~세종고속도로, 부여~평택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충청선(보령~세종), 서해선복선철도 등의 건설로 교류와 물류의 거점지로 거듭날 것임

■ 환황해권 서해안시대의 주역

- 서해안지역은 세종시와 내포신도시의 배후 관광·항만지역으로 중요한 대 중국권 교류지역으로 성장할 것임
- 아산만 주변지역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기능지구로서 환황해권시대 첨단산업지역으로 개발되어 충남은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할 것임

4. 지역주민 의식조사

가. 조사 개요

- 조사기간은 2010.7.19 - 9.11일까지 약 8주간이 소요되었으며, 인구 비례추출법에 의해 총 2,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시·군별로 할당하여 조사하였으며, 회수율은 94.9%(1,898부)였음
-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53.2%, 여자 46.8%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 18.1%, 30대 34.6%, 40대 28.1%, 50대 15.5%, 60대 1.8%, 60대 이상이 1.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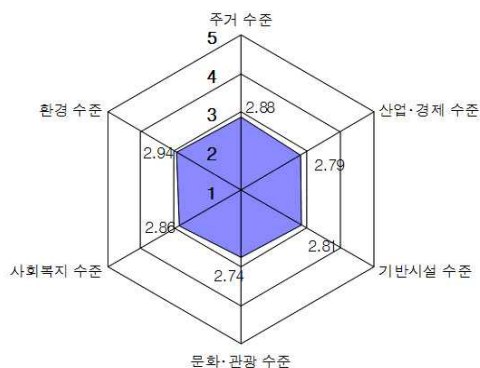
나. 분석결과

1) 지역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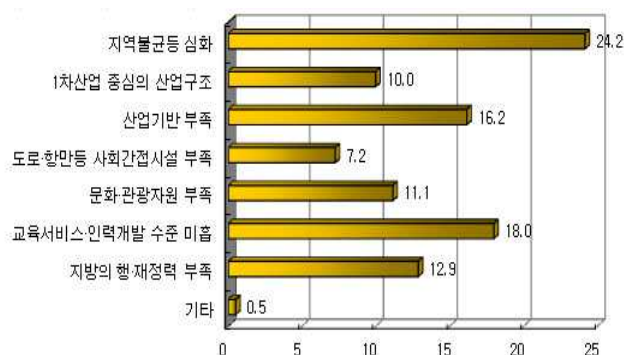
■ 발전수준 및 발전방향

- 충남의 발전수준은 2.8(5점 척도)로서 평균 수준을 약간 상회함
- 부문별로 주거부문, 산업·경제, 기반시설, 문화·관광, 사회복지, 환경부문은 다른 도에 비해 개발수준이 유사하거나 약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2.6점으로 평가되었음
- 발전 장애요인으로서는 지역간 불균형 심화(24.2%), 교육서비스·인력개발 수준의 미흡(18.0%), 산업기반 부족(16.2%) 순임

〈그림 I-29〉 충남의 상대적 발전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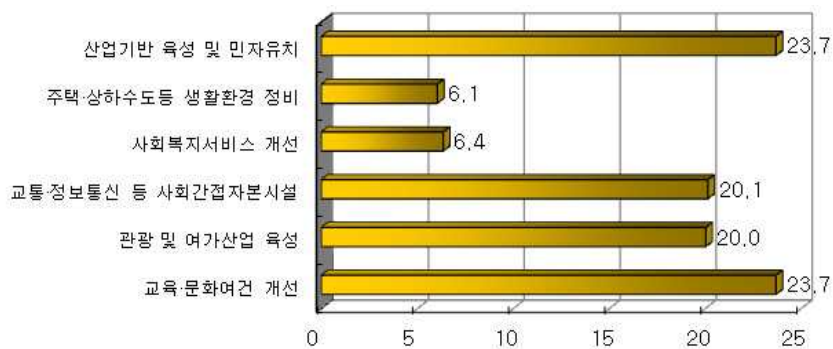
〈그림 I-30〉 발전 장애요인



■ 지역의 발전방향 및 우선적인 지역개발 추진 분야

- 지역의 발전방향으로는 첨단산업 중심지역(31.6%), 관광·여가산업 중심지역(28.3%), 교육·연구 중심지역(19.7%), 물류·유통 중심지역(8.6%), 국제교류도시(6.2%), 영농중심 전원지역(5.6%) 순서임
- 산업기반 육성 및 민자유치와 교육·문화여건 개선이 23.7%로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20.1%)과 관광 및 여가산업 육성(20.0%)등의 중점투자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사됨

〈그림 I -31〉 중점투자 및 개선이 필요한 분야



2) 도시개발 및 정주기반 정비

■ 시·군별 발전방향

구분	충남 도민이 바라는 발전방향	
	1순위	2순위
천안시	첨단산업도시(29.2%)	교육도시(19.6%)
공주시	역사·문화·예술도시(22.4%)	관광·휴양도시(19.4%)
보령시	관광·휴양도시(46.9%)	첨단산업도시(14.6%)
아산시	첨단산업도시(31.9%)	교육도시(23.4%)
서산시	첨단산업도시(32.3%)	관광·휴양도시(19.3%)
논산시	첨단산업도시(24.4%)	역사·문화·예술도시(18.1%)
계룡시	환경·생태도시(26.3%)	역사·문화·예술도시(23.7%)
당진시	첨단산업도시(19.1%)	교육도시, 관광·휴양도시(18.3%) ¹⁾
금산군	교육도시, 환경·생태도시(19.6%) ¹⁾	-
연기군	행정도시(45.9%)	첨단산업도시(17.6%)
부여군	역사·문화·예술도시(42.3%)	관광·휴양도시(21.2%)
서천군	환경·생태도시(40.4%)	관광·휴양도시(21.2%)
청양군	관광·휴양도시(36.4%)	환경·생태도시(21.2%)
홍성군	역사·문화·예술도시(41.4%)	첨단산업도시, 교육도시, 관광·휴양도시(12.9%) ¹⁾
예산군	관광·휴양도시(25.6%)	첨단산업도시(24.4%)
태안군	관광·휴양도시(53.5%)	첨단산업도시(14.1%)

주1: 순위가 같음

■ 지역별 투자 및 개선 요구사업

- 충남은 교육·문화·의료시설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조사됨

〈표 I-23〉 지역별 시급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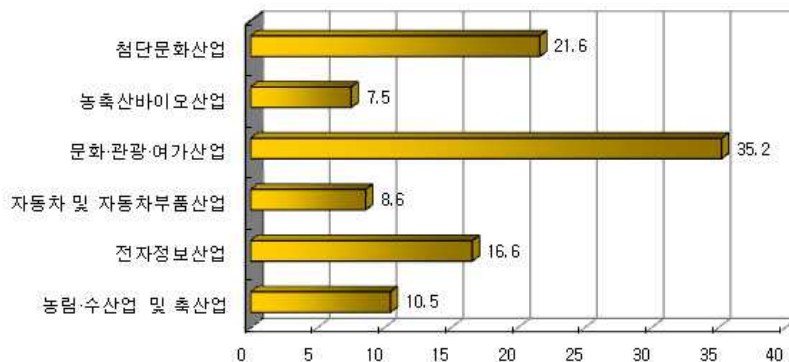
구분	자연환경 조성 및 복원	공원· 여가시설 확보	하천수질 개선 및 정비	교육·문화·의 료시설 확보	주거환경 개선	도로포장 및 확장	유통물류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전체 (명)
천안시	7.3	24.7	8.2	28.3	13.8	9.8	2.2	5.8	(551)
공주시	3.8	12.2	5.3	42.7	6.9	4.6	2.3	22.1	(131)
보령시	8.4	16.8	4.2	44.2	6.3	10.5	0.0	9.5	(95)
아산시	2.1	17.1	3.0	53.4	6.8	12.8	2.1	2.6	(234)
서산시	0.6	8.9	4.5	49.7	10.8	16.6	0.6	8.3	(157)
논산시	4.0	24.8	4.8	30.4	13.6	4.0	1.6	16.8	(125)
계룡시	5.3	13.2	2.6	63.2	5.3	2.6	0.0	7.9	(38)
당진시	3.7	11.2	3.7	64.9	3.0	9.7	3.7	0.0	(134)
금산군	10.2	4.1	4.1	38.8	14.3	14.3	4.1	10.2	(49)
연기군	1.3	14.5	3.9	55.3	7.9	5.3	1.3	10.5	(76)
부여군	5.6	5.6	4.2	49.3	15.5	1.4	2.8	15.5	(71)
서천군	3.7	3.7	3.7	63.0	5.6	1.9	5.6	13.0	(54)
청양군	3.3	3.3	6.7	40.0	3.3	13.3	10.0	20.0	(30)
홍성군	5.7	12.9	5.7	42.9	20.0	1.4	1.4	10.0	(70)
예산군	0.0	7.9	3.4	53.9	9.0	5.6	2.2	18.0	(89)
태안군	5.6	14.1	2.8	45.1	11.3	8.5	2.8	9.9	(71)
전체	4.49	12.3	4.62	48.1	9.89	8.02	3.11	11.7	(1,975)

2) 지역산업

■ 산업 부문

- 충청남도가 추진해야 할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역점사업은 문화·관광·여가산업(35.2%), 첨단 문화산업(21.6%)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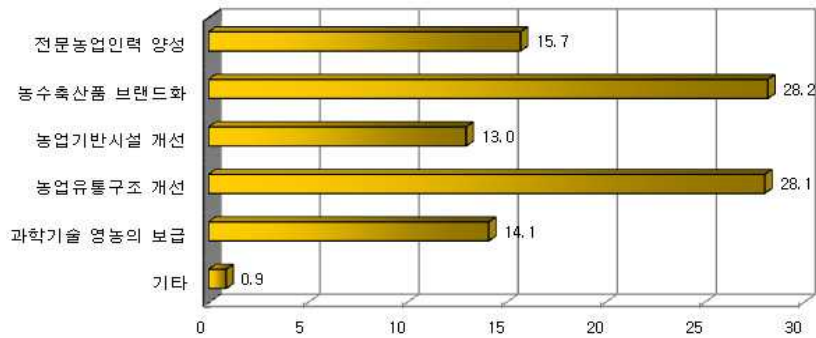
〈그림 I-32〉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역점사업



■ 농업 부문

-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농수축산물 브랜드화(28.2%), 농업유통구조 개선(28.1%), 전문농업인력 양성(15.7%), 과학영농기술 보급(14.1%), 농업기반시설 개선(13.1%) 등의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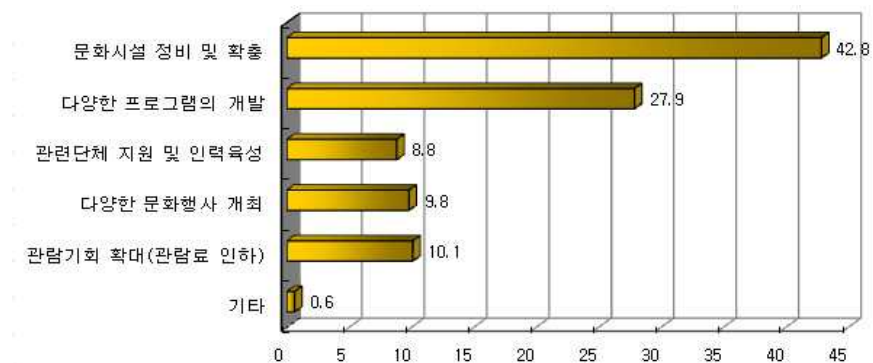
〈그림 I-33〉 농업발전 위한 추진시책



■ 문화 및 예술 진흥방안

-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문화시설 정비·확충(42.8%)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27.9%)이 시급하며, 개발 잠재력이 높은 관광자원으로는 자연경관 및 생태자원(39.8%), 역사유적 및 유물(15.8%)로 조사됨
-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벤트·관광코스·특산물 등의 관광상품 개발(25.1%), 관광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16.8%), 관광기반시설 확충(15.7%), 관광지 개발(14.5%), 관광정보 및 마케팅 활성화(10.6%)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I-3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우선시책



3) 환경·문화 및 복지서비스

- 전체적인 생활 만족도는 보통(49.8%), 만족(36.1%) 순으로, 주택·주거 여건 영역은 만족하나, 그 외 영역에서는 불만족이 높게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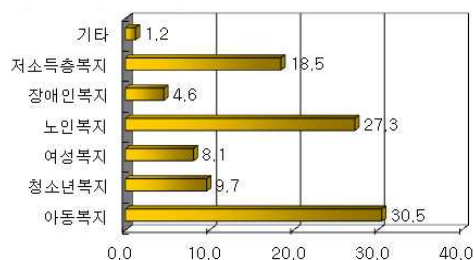
■ 삶의 질 개선

- 2020년 이후 거주하고 싶은 지역은 대도시 인근지역(38.5%), 중소도시(32.0%), 농어촌(17.0%)로 나타나 대도시보다는 편의시설과 복지혜택을 누리면서도 비교적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함
- 희망하는 주거유형으로는 전원주택(40.6%), 고층아파트(33.0%), 단독주택(21.2%)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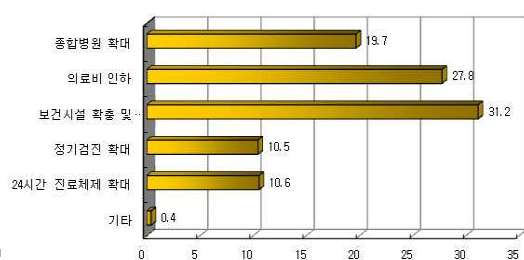
■ 사회복지정책

- 역점 추진 사회복지정책으로 아동복지(30.5%), 노인복지(27.3%)가 높게 나타나 자녀복지와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이 높음
- 노인복지정책으로는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저렴한 의료서비스 제공(44.7%), 취업기회 확대(31.0%)순으로 응답함
- 보건의료정책은 보건시설 확충과 의료인력 보강(31.2%), 의료비 인하(27.8%), 대학 및 종합병원 확대 설립(19.7%) 순으로 조사됨

〈그림 I-35〉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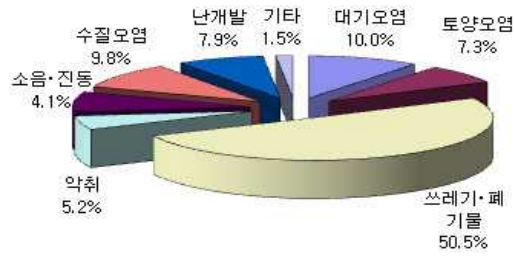
〈그림 I-36〉 보건의료정책



■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

-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64.2%)가 많았으며, 가장 심각한 문제로 쓰레기·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50.5%)을 들, 지역별로는 6개 시·군(천안, 보령, 아산, 서산, 홍성, 당진)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I -37〉 충남의 심각한 환경오염 유형



■ 지방자치 및 행정

-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는 인허가 서류 간소화(36.8%), 신속한 민원처리 (21.8%), 공정한 행정처리(20.0%)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남

5. 충남지역의 발전여건 분석: SWOT 분석 및 계획과제

가. SWOT분석

1) 강 점(Strengths)

■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교류의 중심지

- 충남도는 전국으로부터 2시간 교통시간거리에 위치한 국토의 중심지에 위치한 교통·교류의 중심지임
-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의 「개방형 녹색국토」에서 환황해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서해안 신산업벨트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임

■ 개성이 있는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 보유

- 백제라는 독특한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보하여 이와 관련된 많은 역사·문화·관광자원이 분포됨
- 서민 중심의 내포문화권과 선비정신을 담은 유교문화권의 문화·관광자원, 천주교·불교 전래지역으로서의 종교·문화자원은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을 나타냄

■ 보전가치가 높은 다양한 생태자원 보유

- 서해안에는 산업화속에서 그 경제가치가 높은 갯벌자원과 철새 등 많은 생태자원이 보전되어 있음
- 친환경 웰빙의 가치가 증대되고, 주5일근무제가 일상화되면서 도시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산악·휴양자원이 차령산맥과 금북·금남정맥의 주변에 산재되어 있음

■ 첨단산업의 입지적 우수성과 광역적 연계성이 용이

- 해양과 수도권과 연접해 첨단 제조업이 유치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연접하여 수도권기업의 지역내로의 이전이 지속되고 있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오송생명과학단지와의 첨단산업의 광역적 연계가 용이함

2) 약 점(Weaknesses)

■ 발전지역과 낙후지역과의 발전격차 심화

- 지역의 북부권은 전자·철강·석유화학 등 제조업중심의 산업집적지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1차 산업 중심지역은 인구감소와 더불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북부권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낙후지역의 내발적 발전구조는 취약한 실정임

■ 미약한 내발적 발전구조

- 농수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농어촌지역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해짐
- 대기업에 의한 지역생산구조로 지역 중소기업이 취약하고, 발전성과의 역외유출이 이루어짐

■ 동서간 연계교통체계 미비로 공간통합성 결여

- 지역의 남북간 연계교통체계 형성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중심의 서해안권, 경부고속도로 중심의 북부권, 대전광역권의 기능적 통합은 형성되었으나, 동서간 연계교통망이 미비하여 동서지역간 기능적 연계는 미흡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포함한 세종시와 서해안권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미비하여, 경부축과 서해안축의 연계가 부족함

■ 취약한 기술기반과 인적 자본

- 지역의 취약한 연구기반과 기술개발환경으로 원천기술개발이 미흡하고, 산·학·연 협력네트워크도 미약함
-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발전전략으로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인적 인프라가 미흡

3) 기회요인(Opportunities)

■ 세종시건설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 2012년 7월 출범을 계기로 세종시는 국가중추행정기능을 담당하여, 국

토와 충청 중부권 지역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성장할 것임

- 세종시와의 기능적 연계를 통해 충남의 세종시 연접지역은 세종시와 더불어 중부권의 성장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임

■ 내포신도시건설로 서해안·중부내륙 성장거점 기반 마련

- 내포신도시건설로 중부내륙과 서해안권 발전이 촉진되어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것임
- 내포신도시는 장기적으로는 환황해경제권시대에 개방형 국토개발을 위한 성장거점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이 예상됨

■ 서해안·내륙지역 접근성 개선

- 대산~당진/당진~천안/부여~평택/서울~세종고속도로의 건설과, 서해선 복선전철, 충청선(보령-세종) 건설 등으로 충남도내 지역간 접근성이 개선될 것임
- 고속도로·철도건설은 충남도내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내륙권과 금강권의 발전을 촉진하여 지역내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임

■ 중국의 성장으로 환황해권 생산·교류거점으로 성장 가능

-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중국이 성장하여 충남은 환황해권의 생산거점 뿐만 아니라 교류거점으로 발전할 것임
- 충남도의 북부권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로 기초과학의 연구성과를 산업화하는 중추 첨단과학산업지역으로 발전할 것임

4) 위협요인(Threats)

■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발전의 모멘텀 약화

-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수도권 소재기업과 기능이 충남 서북부지역으로의 이전이 제한되어, 지역의 발전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음.
-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을 확대하여 지역발전의 선순환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음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확대

-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지역인 농어촌지역의 공동화와 고령화를 가속화할 수 있음
-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를 유발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수 있음

■ FTA확대에 따른 1차 산업(지역) 약화

- 한·미/한·EU FTA 등이 체결되면 농·축·수산업 등 지역의 1차산업은 더욱 위축될 것임
- 농어촌 지역도 경쟁력 약화로 인구유출이 가속될 수 있음

■ 환경·생태계 파괴로 인한 삶의 질 악화

- 내포신도시·기업도시건설, 금강살리기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생태자원의 파괴가 우려됨
-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생태계 혼란, 자연재해 등 재난으로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음

강 점 (Strengths)	약 점 (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교류중심지로서의 입지잠재력 ▪ 다양한 생태자원 보유 ▪ 풍부한 문화·역사·관광자원 보유 ▪ 용이한 첨단산업의 광역적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동서지역간 공간 통합성 미약 ▪ 지역간 발전격차 심화 ▪ 미약한 내발적 발전구조 ▪ 취약한 기술기반과 인적 자본
기 회 (Opportunities)	위 협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건설과 수도권기능 이전 ▪ 홍성·예산지역 내포신도시 건설 ▪ 서해안·내륙지역의 접근성 개선 ▪ 환황해권 생산·교류거점으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규제완화 가능성 상존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 FTA확대로 1차 산업(지역) 약화 ▪ 환경·생태계 파괴로 인한 삶의 질 악화



지역균형, 내발적 발전, 복지, 환경을 핵심주제로 설정하여
지역균형발전, 내발적 산업경제,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성 확보에 역점

나. 계획과제

1) 지역거점도시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추구

- 세종시, 내포신도시와 주변도시간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 낙후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SOC 확충방안 마련
- 환황해권 생산·교류거점 구축

2) 지역의 내발적 발전기반 구축

- 경제적, 사회적, 친환경적인 통합발전 추구
- 지역자원의 성장동력화, 개발성과의 지역내 순환체계 확립
- 도·농간 공생의 선순환구조 확립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반 마련

- 저출산 극복 및 생애주기별 복지대책 강구
- 고령화사회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 고용·교육복지 등 생산적 복지 방안 실현

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 산·강·바다를 잇는 통합적 생태네트워크 구축
- ‘푸른 충남’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 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어메니티 확충

제 3 장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1. 계획의 기본이념
2.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3. 주요 계획지표의 전망
4. 공간구조의 설정

1. 계획의 기본이념

■ 개방·미래지향성(globalization and future-oriented)

- 21세기 세계화된 경제체제에서 독자적 경쟁력을 지닌 지역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의 내발적 발전, 문화·전통의 국제화 등 개방성을 추구함

■ 창조·실천성(creativity and practice)

- 충남지역이 새롭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이루도록 능동적이고 실천력 있게 추진함

■ 쾌적·지속가능성(amenity and sustainability)

- 지역 고유의 생태·경관자원 보호 및 환경의 쾌적성을 증진하고,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함

■ 문화·정주성(culture and livability)

- 지역고유의 전통과 문화의 고양, 개발의 질적 탁월성 증진, 교육·의료·사회서비스 등 종합적인 주거복지환경 조성 등 살 맛 나는 지역정주기반을 구축함

■ 참여·협력성(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 지역발전 추진에 있어서 지역의 주민, 대학, 기업 등 다양한 개발주체의 자발적, 민주적 참여를 증진하고, 지역간 경쟁과 협력, 제휴를 통한 지역중심 발전체계를 구축함

2.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가. 계획의 기초

기 조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 기초설정의 배경

- 최근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속에서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중심으로서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본 계획의 기초로 설정함

■ 행복한 변화

- “행복한 변화”는 세계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 사람중심의 도시·농어촌마을을 만들고, 지역내 순환과 공생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확립하고
- 고령화시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수요복지, 인간중심의 교육·투자로서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고,
-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여 친환경 자연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나타냄

■ 새로운 충남

- “새로운 충남”은 원칙과 신뢰에 기반을 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도정 발전을 추구하고,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달성하며,
- 수도권과 대기업에 편중된 一極중심의 집중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하며,
- 도민의 참여와 창의행정을 통해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민자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의미함

나. 계획의 목표

■ 균형 있는 지역발전

- 내포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그 성과와 혜택을 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산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룩함
- 충청권 선도산업과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모든 지역이 자생력 있고 특화된 발전기반을 구축함

■ 내실있는 산업경제

- 지역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함
- 지역 산업연계에 기반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고용인프라를 확충해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함
-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주도의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성과를 지역주민이 누릴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함

■ 활력있는 농어촌

- 지역경제의 순환, 생산과 소비의 순환, 도시와 농촌의 공생 등 ‘순환과 공생’의 원리에 기초하여 농어업을 활성화
- ‘사람’의 실질적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농어촌지역」을 실현

■ 함께하는 교육·복지

- 고령화와 양극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사회적 소외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충남을 구현
-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하여 지역혁신을 도모하고 지역의 발전잠재력을 강화

■ 매력적인 문화·환경

- 개성있는 지역문화권을 형성하고, 특색있는 관광기반을 구축
-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통해 인간과 상생하는 건강한 녹색환경을 창출

다. 추진전략

추진전략	주요과제
살기 좋은 도시농촌 생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중심의 혁신적 도시개발 및 정비 • 활력 있는 농산어촌 육성
순환과 공생의 지역경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 있는 농·림·축·수산업 육성 • 신성장동력산업 및 강소기업 육성 • 서비스업의 지식기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매력적인 지역문화 창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문화기반 조성 • 편리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특화자원 개발
사통팔달의 교통·정보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위 교류·교역 활성화를 위한 입체적 교통체계 구축 • 생산·물류 신중심권 구현을 위한 물류·유통기반 강화 • 디지털복지사회를 위한 유비쿼터스 충남 구현
근심없는 주거·복지·평생교육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에너지 절약형 주거환경 조성 • 지속적인 공공복지·의료 서비스체계 구축 및 확대 • 창의적 인적자원 육성 및 평생교육체계 강화
안정적·창조적인 지역자원의 활용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적 토지이용과 관리 • 지역특성을 따른 매력적 지역경관 형성과 관리 •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효율적 수요관리 • 친환경 에너지·지하자원 개발 및 관리
지속가능한 자연 및 생활환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생태망 구축과 자연환경 보전·관리 • 대기질 관리와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구축 •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물관리 •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기반 구축 및 지원 • 재해에 강한 안전충남 조성

3. 주요 계획지표의 전망⁴⁾

가. 인구지표 전망

1) 인구지표 설정

■ 인구지표 설정의 전제

- 계획지표는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의 표현보다는 실천가능성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인 환경과 국가정책의 추진 등 충남지역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변화전망을 전제로 하여 설정하였음
- 특히, 인구지표의 설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국가발전 및 성장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이나 시책의 계획적인 추진을 전제하였음
- 다만,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연기군 전체지역(361.4km²)과 공주시 일부지역(장기, 의당, 반포면 일부지역 76.6km²)이 충청남도 행정구역에서 제외되어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하게 되므로, 2020년 계획인구는 연기군(세종시) 인구를 제외하여 추정함

■ 인구지표 전망

- 인구지표가 미래상으로서 당위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지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석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였음. 즉, 인구지표 설정은 상한치와 하한치를 제시함으로써 미래변화와 불확실성을 감안토록 하였음
 - 상한치는 기존 국가정책과 사업추진이 모두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하였고, 하한치는 기존의 정책추진이 부진한 경우로서 현재의 인구증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를 상정하였음
 - 이와 함께 적정치는 지역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전제로 추정하였음. 이와 같은 계획인구 대안 가운데 부문별 계획수요 전망은 안정성장치를 활용하였음

4) 계획지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들을 기준으로 하고, 충남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설정하였음

■ 안정성장 시나리오: 1,969천명(2010년) → 2,400천명(2020년)

- 안정성장치는 수도권이전기업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정책효과를 토대로 추정하였음. 안정성장치 시나리오에 의한 계획인구는 자연증가분과 신성장거점도시 조성 및 계획입지 조성에 따른 유발인구를 토대로 한 사회적 증가분의 구분에 의한 추정방법을 사용하였음
 - 자연증가분의 추정은 생산모형에 의한 조성법을 사용하되, 인구의 전출입을 가감하지 않고 인구의 출생률 및 사망률만 고려하여 순수한 자연증가분만 계상함
 - 사회적 증가분은 ①도청이전신도시, 아산만권 신도시, 태안기업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 인주지구) 등 신도시 개발⁵⁾과 ②계획입지 전망수요를 토대로 외부 유입인구를 추정하여 합산함
 - 이 중에서 계획입지 전망수요에 따른 인구증가분은 목표연도의 계획입지 면적⁶⁾을 기준으로 고용인구⁷⁾와 유발인구⁸⁾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외부유입률을 감안한 외부유입인구⁹⁾로 산정하였음. 이 중에서 충청남도의 제3세대형 산업단지 조성시책으로 인해 신도시(내포신도시, 아산만권 신도시)에서 산업단지 외부유입인구의 일정비율¹⁰⁾을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신도시 조성에 따른 유발인구와 계획입지 조성에 따른 유발인구 간 중복산정(double counting)을 배제함. 최종 산정된 외부 유입인구는 144천명으로 50:50으로 단계별로 배분하였음
-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①자연증가분은 2005년 약 1,873천명(연기군 제외)에서 2020년에 2,125천명으로 전망되고, ②사회적증가분은 ②-1. 신도시(내포신도시, 태안기업도시, 아산만권 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의한 인구증가분 107천명과 ②-2. 계획입지 전망수요에 의한 외부 유입인구(144천명)를 합산하여 약 251천명으로 추

5) 내포신도시 60천명(계획인구 100천명에 외부유입률 60% 적용), 아산만권 신도시 17천명(1단계 계획인구 28천명에 한정해 외부유입률 60% 적용), 태안기업도시 5천명(계획인구 15천명에 외부유입률 35% 적용), 황해경제자유구역 25천명(송악지구 35천명, 인주지구 7천명, 지곡지구 해제로 경제자유구역의 총 계획인구 42천명에 외부유입률 60% 적용)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유발인구는 107천명으로 산정

6) 충청남도 산업입지 중장기기본계획(2006)에 의하면, 2020년까지 산업단지 조성규모를 49.94km²로 제시

7) 고용인구는 계획입지 규모(49.94km²)를 기준으로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건교부·산자부·한국토지공사, 1998)에서 제시된 종사자당 부지면적 원단위 전망에서 제조업 평균치인 182.3m²/인을 적용하여 273,944명으로 추계

8) 유발인구는 고용인구(273,944명)에 2009년 현재 기혼률 66.0%를 적용하고, 통계청이 예측한 2020년 충청남도 가구당 인구수 2.51인을 반영하면 453,815명으로 추계

9) 외부유입인구는 유발인구(453,815명)에 외부유입률(외지인비율 39.8%)을 반영하여 180,618명으로 산정. 즉, 충남넷 산업입지정보(2011년 6월 20일 기준)에서 충청남도 내 산업단지 기업에 종사하는 외지인 비율은 39.8%로 조사되어 있어 이를 외부유입률로 반영. 참고로 2007년 고용보험통계연보 상 지역간 경력직 노동력 이동현황에서는 충청남도 외부유입률을 41.8%로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

10) 신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유발인구 간 중복산정을 배제하기 위해 2011년 현재 충청남도 산업단지의 고용인구 중에서 사회적 증가분에 반영된 신도시 개발지역이 위치한 시·군(아산, 당진, 홍성, 예산)에 종사하는 고용인구의 비율인 20.4%(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고용된 인구를 기준)를 적용하여 외부 유입인구(143,772명)를 산정. 이러한 외부 유입인구는 인구추정 시나리오에서는 백명 단위로 반올림하여 144,000명으로 적용

계됨

- 따라서, 안정성장 시나리오에 의한 목표연도의 계획인구는 약 2,400천 명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최저성장 시나리오: 1,959천명(2010년) → 2,130천명(2020년)

- 최저성장치는 과거 인구변화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미래 인구를 추정한 값이며, 다양한 모형으로 추정이 가능하나 7개 추세연장법¹¹⁾ 중 모형적합도가 높은 추정방법의 산출평균치를 적용하였음

〈표 I-24〉 충남인구 인가지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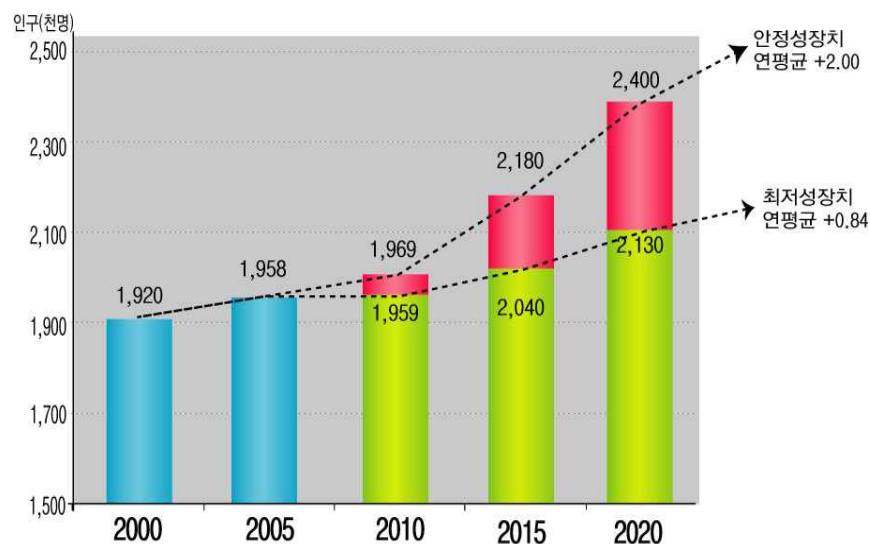
(단위: 천명, %)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10~'20	'15~'20
전국인구 ¹⁾			48,875	49,277	49,326	0.09	0.02
충남	목표 인구	안정치	1,969	2,180	2,400	2.00	1.94
		최저치 ²⁾	1,959	2,040	2,130	0.84	0.87

주1: 전국인구는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2007.5)」에 제시된 수치이고, 사회적 인구인 전·출입 인구를 반영한 수치

주2: 모형에 의한 추정방법(7개 추세연장법)에 의한 추계치

〈그림 I-38〉 충남인구 인가지표 전망



11) 7개 추세연장법에 대하여 함수들과 시계열기간에 대하여 적합도 검증(평균절대오차법 활용)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가 비교적 높은 추정방법(MAPE 1 미만)은 지수함수법, 최소자승법, 콤퍼트츠법으로 나타남. 추세연장법에 의한 목표연도 계획인구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상위 3개의 함수식에 의한 추계치를 산출평균하여 2,126,120명으로 산정됨

- 충남의 노령화율은 2010년 현재 14.8%에서 2020년에는 19.2%로 높아져 전국의 노령화율(15.6%)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충남의 노령화율은 향후 5년 동안 2010년 14.8%에서 2015년 17.8%로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10〉 연도별 노령화율 전망

년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5년	2020년
노령화율	13.2	13.5	14.0	14.4	14.6	14.8	17.8	19.2

나. 지역경제 전망

■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

- 충청남도의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은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995년 22조 596십억원에서 2009년 67조 055십억원으로, 이 기간 연평균 8.1% 성장하였음
- 충청남도의 지역내총생산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3.9%에서 2009년 9.0%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충청남도의 연평균 지역경제 성장률은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 4.0%에 비해 높은 수준임
- 특히 충청남도의 경제성장률은 전국평균과 다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I-26〉 지역내총생산(GRDP) 변화(2005년 불변가격)

(단위: 십억원, %)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연평균 성장률 ('95~'09)
		GRDP	연평균 성장률 ('95~'00)	GRDP	연평균 성장률 ('00~'05)	GRDP	연평균 성장률 ('05~'09)	
충청남도 (구성비)	22,596 (3.9)	30,963 (4.5)	6.5%	47,497 (5.5)	8.9%	67,055 (6.7)	9.0%	8.1%
전국 (구성비)	573,504 (100.0)	691,468 (100.0)	3.8%	869,305 (100.0)	4.7%	999,311 (100.0)	3.5%	4.0%

자료: 통계청(<http://kosis.nso.go.kr/>).

■ 1인당 GRDP 추이

- 앞에서 제시된 지역내총생산과 인구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지역의 1인당 GRDP 변화는 다음과 같음
- 충청남도의 1인당 GRDP는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995년 12,179천원에서 2009년 현재 32,312천원으로 이 기간 연평균 7.2%씩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충청남도의 1인당 GRDP 성장은 같은 기간 전국 평균 1인당 GRDP의 연평균 성장률 3.3%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높은 것임
 - 이러한 추세에 따라 충청남도의 1인당 GRDP와 전국평균 1인당 GRDP 성장률의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국 평균 1인당 GRDP에 대한 충청남도 1인당 GRDP의 비'는 2000년 1.113, 그리고 2005년 1.358, 2009년 1.63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표 I-27〉 1인당 지역내총생산 변화추이(2005년 불변가격)

(단위: 만원, %)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연평균 성장률 (95~09)
		1인당 GRDP	연평균 성장률 (95~00)	1인당 GRDP	연평균 성장률 (95~09)	1인당 GRDP	연평균 성장률 (05~09)	
충청남도(A)	1,218	1,604	5.7%	2,396	8.4%	3,231	7.8%	7.2%
전국(B)	1,247	1,441	2.9%	1,764	4.1%	1,973	2.8%	3.3%
A/B	0.976	1.113	-	1.358	-	1.638	-	-

자료: 통계청(<http://kosis.nso.go.kr>).

■ 지역내총생산 전망

- 신고전적 지역성장(Neoclassical Regional Economic Growth)¹²⁾ 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지역별 지역내총생산 변화는 아래 표와 같음
- 충청남도의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2005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2009년 67조 055십억원에서 목표년도인 2020년에는 125조 787십억원으로 연평균 5.9%씩 성장이 예측됨

12) 신고전적 지역성장 이론은 지역의 경제성장을 지역내 생산성과 자본 및 노동 등 지역내 생산요소의 성장과 축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는 주로 지역간 노동 등의 생산요소 이동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 및 인구 규모가 예측되며, 이를 토대로 지역의 일인당 소득수준의 변화가 추정됨

- 반면, 충남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지역내총생산 및 전국의 국내총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같은 기간 각각 4.5%와 4.6%로 충남의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됨
- 여기서 충청남도과 기타 지역의 성장률 격차가 <표 I-26>에 비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적용된 예측수단인 신고전적 지역성장 이론의 특성에 기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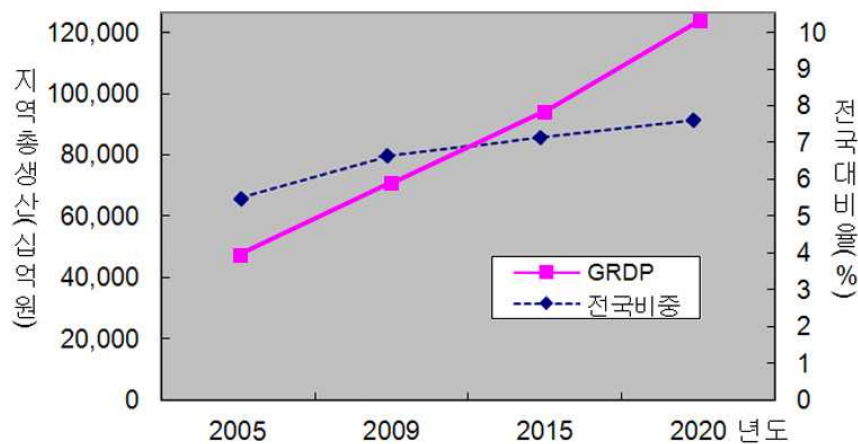
〈표 I-28〉 지역별 지역내총생산 변화 예측(2005년 불변가격)

(단위: 십억원, %)

구분		2009년		2015년		2020년		연평균 성장률 ('09~'20)
		GRDP	비율	GRDP	비율	GRDP	비율	
GRDP	충청남도	67,055	6.7%	94,558	7.3%	125,787	7.7%	5.9%
	기타지역	932,257	93.3%	1,196,773	92.7%	1,506,022	92.3%	4.5%
	전국	999,311	100.0%	1,291,333	100.0%	1,631,809	100.0%	4.6%

자료: 통계청(<http://kosis.nso.go.kr>).

〈그림 I-39〉 충청남도의 지역내총생산액 및 전국비중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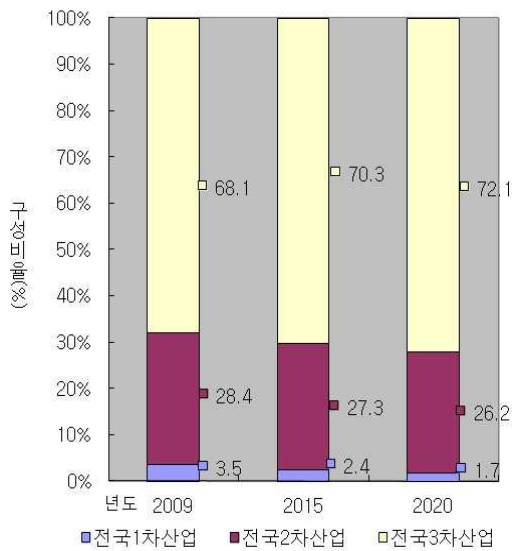


■ 지역산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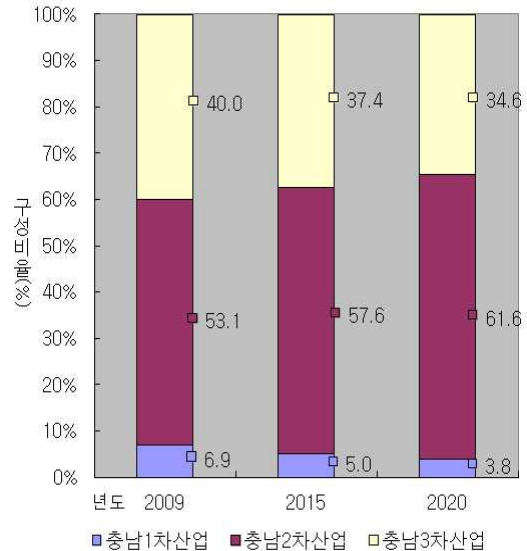
- 생산액 기준 충청남도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은 2009년에는 6.9%, 2020년에는 3.8%로 감소하고, 3차 산업 역시 2009년 40.0%에서 2020년에는 34.6%로 줄어드는 반면, 2차 산업은 2009년 53.1%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61.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충청남도 지역경제가 지금까지 추세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고속 성장이 이루어질 것임을 가리키는 것임

〈그림 I-40〉 산업구조 전망
전 국



충 남



다. 주요 사회지표 전망

■ 도시화

- 2020년까지 세종시와 내포신도시가 건설됨에 따라 2,400천명으로 증가하는 충남 인구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흡수됨에 따라 도시인구는 증가할 것이나, 전국의 도시화율 보다는 다소 낮을 것임

■ 사회간접시설

- 자동차 보유대수는 연평균 4.4%씩 증가하여 2009년의 796.9천대에서 2020년에는 1,149.9천대로 증가할 것임
- 고속도로와 국도는 2020년까지 꾸준히 확충되어 2009년 대비 각각 1.7배와 1.2배로 증가하고, 철도 연장은 2.7배, 항만 시설능력은 1.6배로 확충되어 국제적 교역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주택

- 2020년까지 주택보급률은 112%로 제고되고,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450호 이상으로 확보될 것임

■ 사회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시설 기준과 국제화·정보화·문화화 추세 반영, 아동인구 및 사회복지 수요증대 등을 고려하여 23개소로 계획함
-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설 기준으로 생활수준 향상과 평균수명 연장 등에 따른 노인복지수요 급증을 고려하여 350개소로 설정함
-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향후 장애인 증가 추이, 사회복지 수준,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총 30개소 확충을 계획함

■ 보건·의료

- 목표연도에는 병상률(인구 10만인당 병상수) 1200개소, 의사율(인구 10만인당 의사수) 288인으로 설정하여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확충계획을 수립함

■ 생활환경

- 상수도보급률은 충청남도 계획인구 대비 급수인구를 고려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전망하되, 장래인구와 정부 및 충청남도의 정책의지를 고려하여 2020년의 상수도 보급률 목표를 90%로 계획함
- 충남도 하수도보급률은 연도별 충청남도 계획인구 대비 하수처리인구를 고려하고, 광역자치단체의 하수처리인구율을 비교하여 목표연도에는 하수처리인구율 85%로 계획함

〈표 I-29〉 2020년의 주요 사회지표 전망

구 분			단 위	총 남			전 국
				2009년	2015년	2020년	2020년
인 구	총 인 구 ¹⁾		천명	2,075 ²⁾	2,200 ³⁾	2,400 ³⁾	49,956
	노령화율 ¹⁾		%	14.8 ²⁾	17.8	19.2	15.6
지역 경제	지역총생산 (2005년 불변가격 기준)		십억원	67,055	94,558	125,787	1,631,809
	산업구조(1차:2차:3차)		%	6.9:53.1:40.0	5.0:57.6:37.4	3.8:61.6:34.6	1.7:26.2:72.1
	1인당 GRDP		천원	32,312	43,375	52,411	33,082
사회 간접 시설	자동차 대수		천대	796.9	989.2	1,149.9	20,327
	도로	고속도로	km	449	575	721	5,470
		일반국도	km	1,321	1,476	1,630	14,384
	철도	연장	km	268	268	717	4,955
	항만 ⁴⁾	시설능력	천RT/년	104,295 ⁵⁾	133,972	163,648	1,304,239
주택	주택보급률		%	113	112	112	—
	인구 1,000명당 주택수		호	391	430	450	370
사회 복지 시설 ⁶⁾	아동복지시설		개소	18	20	23	328
	노인복지시설		개소	172	250	350	5,500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22	24	30	600
보건 의료	(10만인당) 의사수		인	159	200	288	326
	(10만인당) 병상수		개소	1,058	1,100	1,200	870
생활 환경	상수도보급률		%	77.7 ⁷⁾	85	90	97 ⁸⁾
	하수처리인구율 ⁹⁾		%	63.5	77	85	90
	폐기물발생량		kg/인·일	0.89	0.92	0.95	1.00

주1: 통계청의 「 시도별 장애인구 특별추계 결과(2007.5) 」에 제시된 수치

2: 충청남도, 「2010년 충남통계연보」, 2011.

3: 세종시출범(2011.7)에 따른 연기군(세종시) 인구 제외

4: 항만지표중 평택·당진항은 경기도지역을 포함한 하역능력임,
제3차전국항만기본계획(2011-2020), 국토해양부

5: 2010년 기준

6: 사회복지시설 중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부랑인시설은 제외

7: 2008년 기준

8: 농어촌지역은 85% 수준으로 향상

9: 하수처리인구 ÷ 총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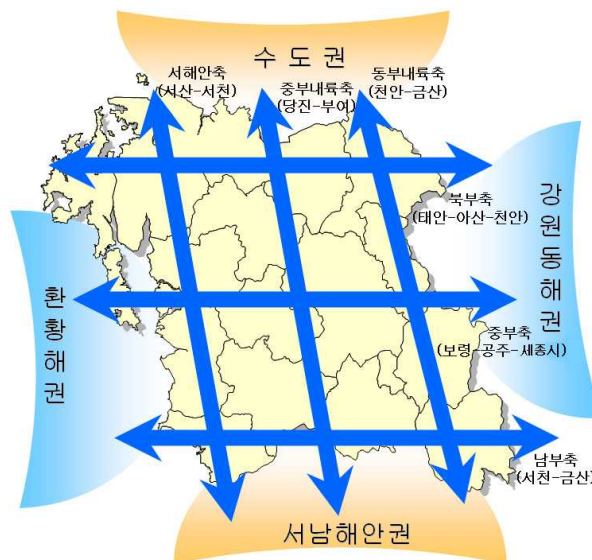
4. 공간구조의 설정

가. 국내외 교류·협력을 위한 개방형 지역발전축 구축

■ 발전축의 설정

- 지역발전축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세계와 교류하는 개방형 국토축 형성 및 광역연계형 녹색국토 형성’ 전략을 근간으로 하고,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의 “田” 자형 개발축 설정 내용을 수용함
- 충남지역 외부로부터의 발전 파급효과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권역별 특성과 자원 잠재력 활용을 극대화 하며,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적 역할 강화 및 충청광역경제권의 통합성 증진을 위한 발전축을 설정함
 - － 대외적으로는 중국, 유럽대륙, 동남아시아와 연계될 수 있는 교류축을 구상함
 - － 대내적으로는 경기도 및 충청북도, 전라북도와의 연결축을 구축하여 지역간 연계·제휴를 도모함
 - － 충청광역경제권의 통합적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동서축의 조기 구축을 도모하며, 이를 위해 권역내 사·도간 광역적 연계·협력을 촉진함
- 충청남도 내부적으로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거점간 연계망을 구축하고 발전축별 특화기능을 부여함

〈그림 I-41〉 충청남도의 발전축



■ 발전축별 개발방향

- 동서2축과 남북2축을 설정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개발형 녹색국토축’ 전략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주변 광역시·도와의 연계성 제고 및 도내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형의 2축을 추가함
- 내륙의 성장거점권과 연안의 항만·임해산업지대 및 중추행정거점(세종시-내포신도시)간 연계성 제고를 위해 당진-대전고속도로에 의해 연결되는 남동~북서1축, 서천-공주간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남서~북동1축의 “>”형 보조발전축을 설정함
- 발전축별로 특화기능에 따라 지역별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을 육성함
 - － 북부축은 국제교류첨단산업복합지대로, 중부축은 문화관광·물류산업연계지대로, 남부축은 친환경·바이오·복합생태산업·관광지대로, 서해안축은 해양관광·국제교역지대로, 중부내륙축은 역사문화첨단농축산업지대로, 동부내륙축은 중추행정·R&D중심지대로 육성함

〈표 I -30〉 발전축별 연계지역과 개발방향

구 분	축별 연계지역	개 발 방 향
북 부 축	태안-천안 (태안-서산-당진-아산-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륙 및 임해형 첨단산업 복합지대 • 국제교류의 게이트웨이 및 서해안 개발의 거점
중 부 축	세종시-보령 (세종시-공주-청양-보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안과 중부내륙 연계 문화·관광·물류지대 • 해양과 내륙의 물류·산업·행정 연계
남 부 축	서천-대전 (서천-부여-논산-금산-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산업·바이오산업지대 • 복합적 생태연구·학습·산업 거점, 신녹색성장산업지대, 역사·문화·농촌관광 복합지대
서해안축	서산-서천 (서산-홍성-보령-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역·교류 거점, 해양관광·해양산업지대 • 연안개발·관리 및 산업구조 고도화지역
중부내륙축	당진-부여 (당진-예산-청양-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관광, 농산업 중심지대 • 첨단농축산업 연구·생산 및 그린투어리즘지대
동부내륙축	천안-금산 (천안-세종시-대전-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추행정, 국제과학비즈니스거점, 복합첨단산업, 내륙교통·물류지대 • 중부내륙의 행정·산업·R&D·물류·교통중심축

나. 상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경영권 구상

1) 개발경영권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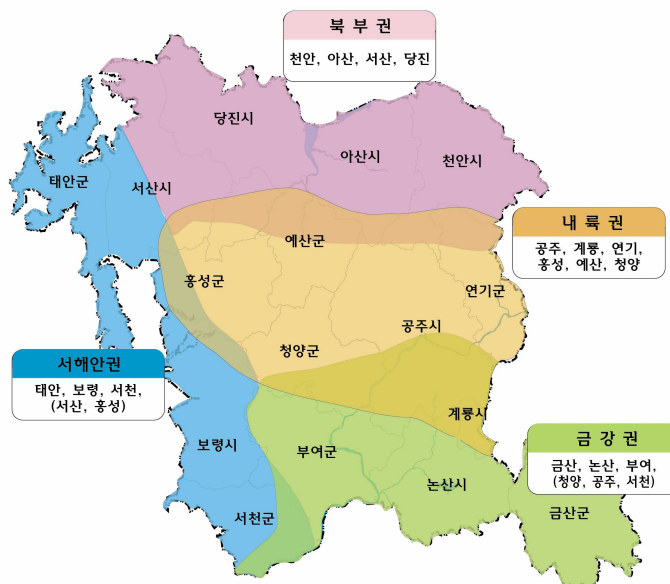
- 지리적 여건과 산업·환경·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간 연계개발에 의한 지역 개발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4대 개발경영권을 설정함
- 본 계획에서의 개발경영권은 기존 개발경영권의 설정·운영 원칙을 수용 하되,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시·군간 광역적 연계체계의 재 편 필요성을 반영하여 내륙권(중앙과 지방의 중추행정도시 연계권)을 설정함
- 권역별 기능특화 및 광역적 연계·협력 개발을 통하여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광범위하게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전략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권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개발을 추진함

〈표 I-31〉 4대 개발경영권 설정

권역별	대상지역
북부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서해안권	태안, 보령, 서천, (서산, 홍성)
내륙권	공주, 계룡, 연기, 홍성, 예산, 청양
금강권	금산, 논산, 부여, (청양, 공주, 서천)

주 : () 안은 행정구역의 일부가 포함됨을 의미

〈그림 I-42〉 4대 개발경영권의 구분



2) 권역별 발전방향

■ 북부권 : 환황해경제권의 생산·교역거점, 광역도시권의 성장관리

- 국내외적 교류·교역의 거점으로서 항만·철도망·도로망의 입체적 구축과 물류·유통 거점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함
- 내륙지역은 정보·기술집약적 첨단산업, 연안지역은 임해산업을 중심으로 배치하되, 산업단지간·지역간 산업협력 네트워크를 고도화 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대덕R&D특구 등과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함
 -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환황해권시대 성장을 견인하는 국제적 교류·교역거점지역으로 성장을 유도함
 - 아산만권 주변으로 전자정보기기, 자동차, 정밀화학, 바이오, 철강 등 전략산업의 생산 및 R&D 기능 중심의 첨단산업 집적지를 조성하는 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를 활성화함
- 도시간 및 도시와 산업단지간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담도시권의 성장관리와 도시재생을 선도적으로 추진함

■ 서해안권 : 환황해권 교역 전진기지, 해양휴양·관광의 메카

- 거점항만 및 항공물류기지 확충으로 국제적 교역·교류의 거점으로 특화 육성함
- 항만 배후지 및 서해안고속도로 IC 연접부를 중심으로 신산업집적지·물류유통거점 등을 조성하여 무역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함
- 우리나라 서해안 해양관광벨트의 중핵기능을 담당하고, 통합적 연안환경 관리, 풍부한 어족자원 육성, 미래형 해양산업의 거점지대로 개발함
 - 태안관광레저 기업도시를 국제적 관광지 수준의 종합레저·스포츠시설을 갖춘 가족휴양지로 개발하여 서해안 레저관광활동 중심지역으로 육성함

■ 내륙권 : 국가·지방 중추행정 연계축, 지역균형발전 촉진지대

- 충남의 중서부지역에 인구 10만의 다기능 내포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거점을 형성하여 주변지역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충청도내 지역간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함
- 내포신도시와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대덕R&D특구를 긴밀히 연계하면서 관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국가·지방 중추행

정 연계축을 구축함

-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을 연계하여 역사·문화·녹색관광벨트를 구축함

■ 금강권 : 역사·문화관광, 생명·정보산업, 도농복합생활공간 형성지대

- 금강의 수자원, 역사·문화자원, 경관·환경자원, 토지자원, 다양한 농촌 어메니티자원 등을 활용하여 복합적인 녹색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충남 남부지역의 발전을 견인함
 -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 개발수요를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고, 금강권역을 특성화·브랜드화 함
 - 자연생태환경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관광명소의 발굴·육성 및 테마형 광역관광벨트를 구축함
- 중부권의 물류·유통 거점 육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대덕R&D특구와 연계한 첨단생명산업 및 정보산업 육성, 근교·관광농업 활성화와 다양한 형태의 도시근교형 전원주거지 개발, 수자원·관광개발 및 도시근교형 산림·수변생태공원 조성 등을 추진함

다. 협력과 제휴의 지역생활권 형성

■ 지역생활권의 설정

- 지역생활권은 네트워크형 도시체계의 형성을 전제로 하되, 세종시와 내포신도시를 중요한 거점으로 고려하였음
- 지역생활권은 기존 생활권체계, 생활권 내부의 지역간 기능적 연계성 및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확보, 지역생활권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로 구분함
 - 북부내륙권은 천안·아산 연담도시권 전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도시 기능을 적절히 분담시키면서 해당 도시들의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동일생활권으로 구분함
 - 서해안권은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 지형적 특성과 기존 시·군지역들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2개의 광역적 지역생활권(북부해안권, 서남부권)으로 구분함
 - 특히, 중부권(홍성, 청양, 예산)과 세종시근교권(공주, 연기)은 각각 내포신도시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도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나의 생활권으로 구분함

- 대전근교권은 대전 대도시권과 논산을 중심으로 계룡, 금산의 기존 중심지들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도시들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성을 강화하되, 충남지역의 도시기능이 대전광역시에 일방적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 생활권으로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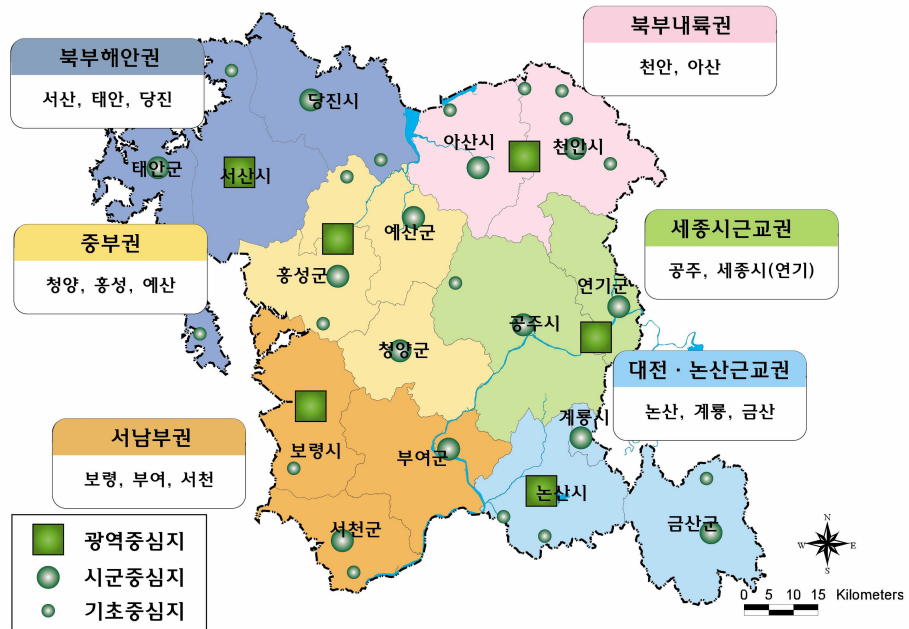
■ 지역생활권 내·외의 도시간, 도·농간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광역중심지는 권역내 생활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해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광역중심지와 배후지역간 교통·정보통신 연계를 강화하여 네트워크형 도시체계를 구축함
- 시·군중심지 및 기초중심지는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전원도시화를 추진하되, 지역실정에 맞도록 농촌중심형·대도시주변형·특수기능형으로 발전전략을 차별적으로 적용함
- 지역생활권에 포함된 시·군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와 공동이용체계 구축으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함

〈표 I-32〉 지역생활권 및 중심지체계

지역생활권	중심지체계			대상지역
	광역중심지	시군중심지	기초중심지	
북부내륙권	천안(아산신도시)	아산	성환, 성거, 인주	천안, 아산
북부해안권	서산	당진, 태안	대산, 합덕, 안면	서산, 당진, 태안
서남부권	보령	부여, 서천	웅천, 장항	보령, 부여, 서천
중부권	내포신도시	홍성, 예산, 청양	광천, 삽교	홍성, 청양, 예산
세종시 근교권	공주(세종시)	조치원(세종시)	유구	공주, 연기
대전논산 근교권	논산(대전)	계룡, 금산	강경, 연무, 추부	논산, 계룡, 금산

〈그림 I -43〉 지역생활권과 중심지 계층



제 II 편

부 문 별 계 획

- 제1장 살기 좋은
도시·농촌 생활환경 조성
- 제2장 순환과 공생의 지역경제 육성
- 제3장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매력적인 지역문화 창달
- 제4장 사통팔달의
교통·정보 인프라 구축
- 제5장 근심없는 주거·복지
·평생교육 실현
- 제6장 안정적·창조적인
지역자원의 활용 및 관리
- 제7장 지속가능한
자연 및 생활환경 조성

제1장

살기 좋은 도시·농촌 생활환경 조성

1. 사람중심의 혁신적 도시개발 및 정비
2. 활력 있는 농산어촌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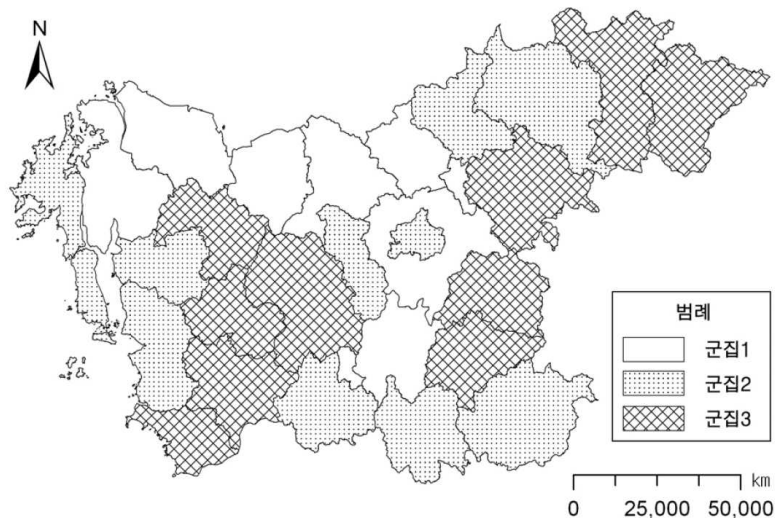
1. 사람중심의 혁신적 도시개발 및 정비

가. 현황과 문제점

■ 불균형적 도시성장

- 서북부권 도시의 성장과 전통도시의 침체로 지역·도시간 불균형이 심화됨
- 경부축선상을 따라 지역이 개발되어 전통산업 중심의 내륙 및 서해안 지역의 도시가 침체됨

〈그림 II-1〉 충청권의 시군별 도시쇠퇴의 유형



주: 군집 1(성장도시: 천안, 아산, 서산, 당진), 군집 2(보령, 논산, 금산, 연기, 홍성, 태안), 군집 3 (도시 전체가 침체·쇠퇴하는 도시: 공주, 부여, 서천, 청양, 예산)

자료: 충남발전연구원, 2009, 충청권 도시쇠퇴 특성과 재생방향에 관한 연구

■ 중소도시의 중심지 기능 및 상권의 약화

- 교통·정보통신체계 개선에 따른 지역생활권의 광역화와 지역주민의 대도시 지향성이 강화됨. 이에 따른 중심기능의 상향이동(Upward Shift)으로 중소도시의 중심지기능이 약화됨
-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권, 생활권이 형성됨에 따라 전통 농촌지역에서의 중견도시의 발전거점 역할이 미흡함
- 대도시의 대형마트 입점으로 대도시 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의 상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왜곡된 상권구조를 형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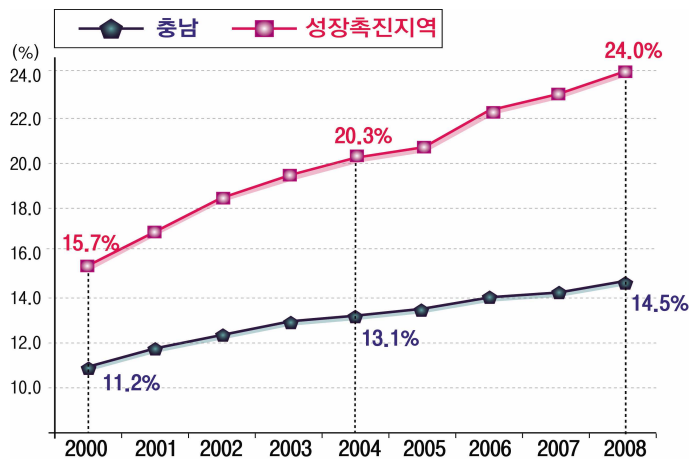
■ 인구감소 및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미흡

- 충남의 총인구는 연평균 0.62% 증가(2000~2008년)하고 있으나, 65

세 이상의 비율이 14.5%(2008년)에 달하여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그 중에서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남부지역(성장촉진지역의 고령화율 24.0%)은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

- 충남 내륙지역은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 악화, 생활편의시설 부족, 사회적 약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도시가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개발사업과 차원이 다른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함

〈그림 Ⅱ-2〉 충남전체와 낙후지역간 고령화율 추이비교



■ 도시별 기능특화 미흡 및 비정형·비계획적 도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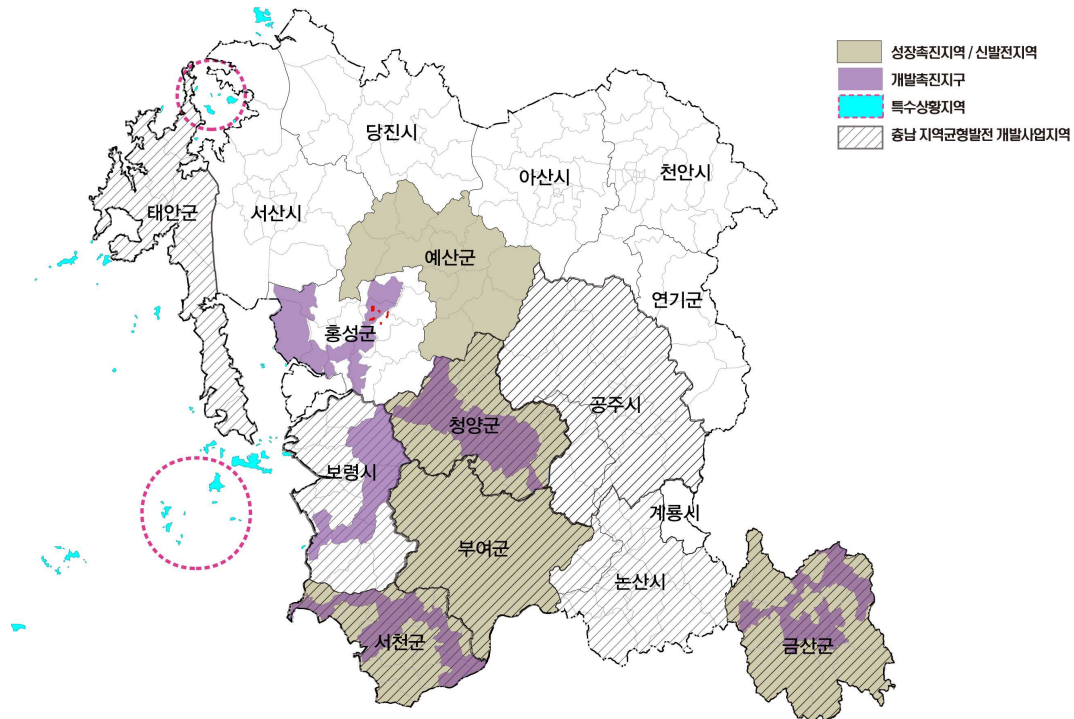
- 지역의 다양한 지역자산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개성이 있는 도시기능 창출이 미흡함
- 대부분의 도시가 지역간 간선도로 및 철도역 중심의 비정형적인 도시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도시외곽 개발에 따른 기존시가지의 노후화와 공동화가 야기됨

나. 여건변화와 전망

■ 3차원 입체개발 및 광역도시권의 형성

- 정부는 전국을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다원화하여 특화발전을 추진하는 국토의 3차원 입체개발전략을 추진 중임

〈그림 II-3〉 낙후지역의 지역개발관련 지역·지구 분포



- 천안·아산 광역도시권과 세종시, 내포신도시 건설로 새로운 형태의 광역도시권이 형성될 전망이다
- 세종시를 중심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를 조성하여 대덕 R&D 특구, 오송·오창, 천안·아산 등의 기능지구와 연계하는 기초과학의 핵심축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됨
- 광역도시권의 형성과정에서 개발압력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도시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신성장거점도시 개발에 따른 네트워크 도시체계로의 전환

- 세종시, 내포신도시, 아산만권신도시 등이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지만, 주변도시 특히, 구시가지의 침체·쇠퇴를 야기할 가능성이 병존함
- 광역교통망의 정비로 지역간 구분이 모호하게 됨에 따라 도시간의 관계는 과거 종속적, 계층적 관계에서 서로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네트워크체로 전환될 것임
- 세종시, 내포신도시건설을 계기로 신도시와 주변도시간, 거점도시와 주변도시간 공동발전을 위한 연계네트워크가 요구됨

■ 도시 및 지역재생의 수요 확대

- 권역별로는 수도권 외연적 확장의 영향으로 과개발, 난개발 등 지속 가능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제조업이나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발전이 미약한 나머지 남부권 시·군인구의 외부유출 경향이 지속될 수 있음
- 향후에는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해 신개발수요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의 도시정책은 계층별 수요에 부합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중심시가지 재활성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생산기반 중심에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시정책으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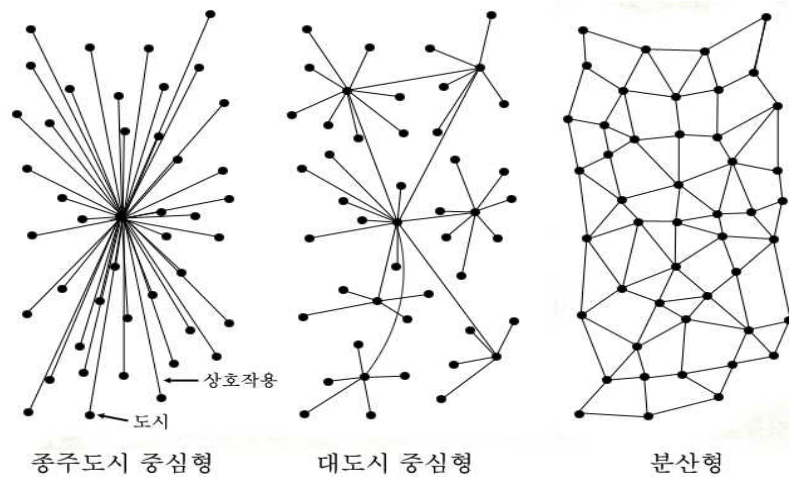
- 미래사회가 성장위주의 다축적 구조에서 복지중심의 다소비구조로 전환되면서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한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정책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됨
- 5都2村의 생활패턴이 정착됨에 따라 도농공생형·도농교류형 개발방식이 확대되며, 물리적 기반구축 중심의 도시정책으로부터 생활환경 중심의 도시정책으로 변화되고 있음
-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구조로 바꾸기 위해 주거, 공원·녹지, 공공, 교통, 건축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저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도시정책이 필요로 될 것임

다. 계획의 기본방향

1) 광역도시권 성장관리와 네트워크 도시체계 강화

- 천안·아산 광역도시권과 세종시 건설에 따른 세종시 광역도시권,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내포신도시 연합도시권의 성장을 관리
 - 성장관리정책을 스마트 성장의 원칙과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통합된 토지이용계획과 친환경성 및 미래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
- 지역발전을 선도할 중핵도시, 중소도시간의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창조적인 네트워크 도시체계 형성을 유도
 - 중핵도시는 광역 및 지역생활권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육성하며, 인접한 중소도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공간적, 기능적으로 특화하여 충남 전체를 유기적인 네트워크 도시체계로 형성
 - 도시와 주변 농어촌지역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중심지의 서비스기능을 강화

〈그림 II-4〉 도시네트워크 체계



2) 지역발전의 혁신거점 육성과 지역별 특성화발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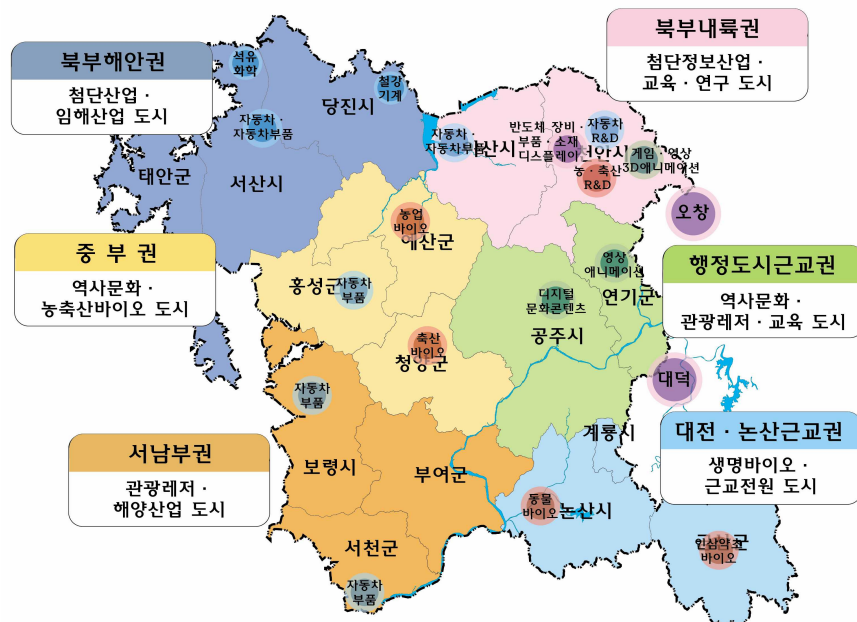
- 세종시, 내포신도시, 아산신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 개발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발전의 혁신거점으로 형성하고, 주변 도시와의 상생발전 도모함
 - 신성장거점도시는 에너지 절약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공간계획, 도시 건설, 건축물, 에너지, 교통)을 수립,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로 개발
- 세종시, 내포신도시, 기업도시 개발 등에서 소외되어 상대적인 침체가 예상되는 중소도시는 지역 잠재력과 고유의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도모
 -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지리적·공간적 장점을 살려 개발사업을 발굴·추진함
 - 교통결절점인 IC연접부 등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개발을 유도
- 충남의 발전방향과 전략산업에 부합하고, 권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거점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
 - 지역혁신 거점과 지역의 전략산업 및 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전문기능을 갖춘 도시를 육성
- 중소도시는 역사문화, 입지적 특성 등 지역자산을 살려 전문기능도시로 육성하고, 주변도시와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
 - 동북아시아의 도래, 접근성 강화, 문화관광의 중요성 부각 등의 변화요인을 적극 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 활성화와 연계
 - 고속도로IC와 연계된 지역이나 접근성이 높은 주요 국도 주변지역을 물류·유통,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문 기능공간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면서 개발압력을 흡수하는 특화공간으로 육성

〈표 Ⅱ-1〉 특화산업 및 전문기능도시 육성 방향

구 분	대상 지역	전문기능도시 육성방향	주요 특화산업
북부내륙권	천안, 아산	첨단정보산업·교육·연구 도시	반도체·디스플레이, 게임·영상
북부해안권	서산, 당진, 태안	첨단산업·임해산업 도시	석유화학, 자동차융복합, 기계, 관광
서남부권	보령, 부여, 서천	관광레저·해양산업 도시	자동차, 통신기기, 해양, 영상문화
중 부 권	홍성, 예산, 청양	역사문화·농축산바이오 도시	축산바이오, 첨단농업
세종시 근교권	공주, 연기	역사문화·관광레저·교육 도시	역사문화, 관광, 레저, 문화콘텐츠, 애니메이션, 첨단농업
대전·논산 근교권	논산, 계룡, 금산	생명바이오·근교전원 도시	軍 관련산업, 생명바이오, 실버바이오

〈그림 Ⅱ-5〉 권역별 특화산업 및 기능 육성 방향



3) 지역특성을 살린 중소도시 재생과 문화도시 육성

- 도시 특성과 잠재력을 살려 중소도시를 재활성화하고, 살고 싶은 인본적 도시환경으로 정비
 - 중소도시의 중심시가지와 주변지역을 기능적으로 특화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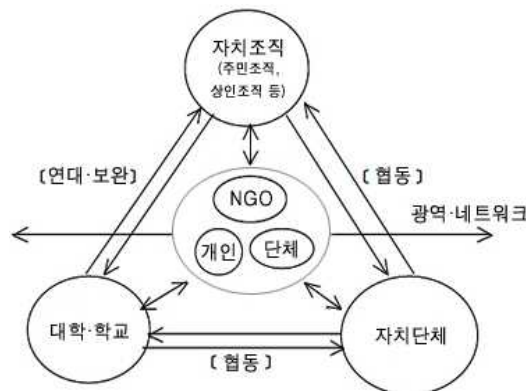
상생적인 발전을 도모함

- 기존의 재래시장 및 상가환경 정비, 소도읍육성, 고도옛모습가꾸기사업 등과 고도보존사업 및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책 등을 연계 추진하여,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이미지를 창출
 - 특히, 중심시가지는 인간성, 독창성을 강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상권활성화를 촉진

4) 참여와 협력의 도시계획·개발체계 구축

- 도시계획·개발과정에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행정과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는 주민참여형 세포단위 도시계획체계를 구축
 - 주민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의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함. 주민주도형 참여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이를 계획행정에 반영토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
- 도시계획 결정권한의 지방 이양에 부응하여 도 및 시·군 차원에서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조례, 시책·사업을 개발

〈그림 II-6〉 지역발전 참여 시스템



라. 세부추진시책

1) 광역도시권 성장관리 및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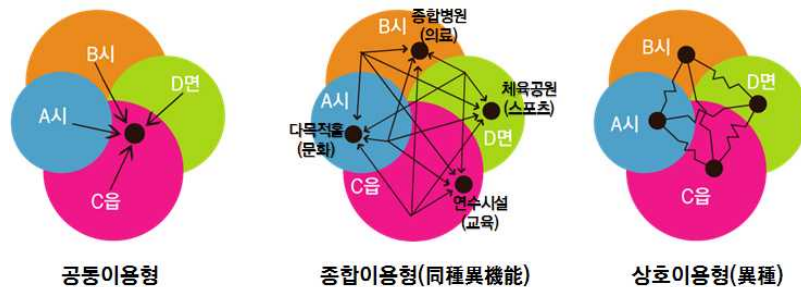
■ 광역경제권 대도시권 발전

- 세종시 광역도시권, 아산만 연담도시권 등이 광역경제권의 성장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고, KTX, 서해안 초고속 스마트하이웨이(초고속 고속국도) 등 타 도시권과의 초고속 광역교통망을 구비
 - 대도시권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KTX역세권(천안·아산)을 지역성장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세종시와 백제문화권 관문거점으로 공주역세권을 개발

■ 광역도시권 관리

- 도시성장에 따라 연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천안·아산 연담도시권,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권,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소도시 연합도시권을 체계적으로 관리
 - 최근 수도권 효과 등에 따라 빠른 성장과 연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천안·아산 광역도시권은 성장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난개발을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관리
 -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은 난개발을 억제하면서 개발효과를 주변지역에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계
- 광역도시권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간 광역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성장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광역시설의 상호이용체계 및 광역조정기능을 강화
 - 스마트 성장을 위해 무분별한 교외개발을 억제하고, 광역조정기능을 강화하며 광역적 토지이용시스템을 구축
 - 지역주민의 편리성 향상과 활발한 역내 교류, 역외 인구유출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종합병원, 운동공원 등 광역시설의 상호이용 방식을 도입

〈그림 II-7〉 광역적 도시시설의 상호이용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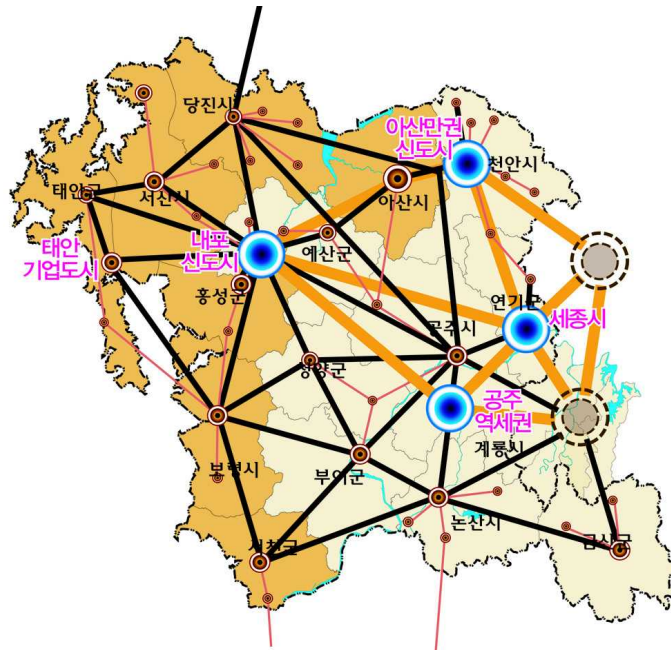
■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 대도시와 주변도시, 중소도시간, 도시와 주변 농촌, 신도시와 기존 도시간의 협력적 네트워크체계를 구축
- 세종시, 내포신도시, 아산신도시, 태안기업도시 등 신도시와 주변도시와의 광역 네트워크도시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적, 국가적, 광역적 기능을 수행
 - 세종시 광역도시권내의 지역들은 행정도시의 주요 기능인 행정·연구기능, 문화·국제교류기능, 첨단 지식기반·교육기능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기능 설정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

- 내포신도시와 주변도시는 중소도시 연합 네트워크 도시체계를 구축하여 동북아 시대에 대비한 서해안 거점 도시권으로 육성
- 대덕연구개발특구, 세종시, 천안·아산, 오송·오창 등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조성하여 동북아 첨단과학기술산업의 허브로 육성

〈그림 II-8〉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 신성장거점도시와 주변도시간 상생발전

- 신성장거점도시와 주변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별 기능을 특화하고 분담
 - 세종시 및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간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고 협력적 관리를 위해 권역내 광역거점시설 및 주변지역간 광역교통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발전거점도시의 기술과 정보 등 고차서비스와 도시인프라를 주변지역까지 확대
 - 세종시 및 내포신도시와 기존도시의 역할을 분담하고 연계지역(중간완충지역)에 도매물류기능, 산업단지 조성 등 신기능을 도입하여 상생발전의 토대를 강화

2) 거점 도시 및 지구 개발

■ 신성장 거점도시 육성

- 신성장거점도시(세종시, 내포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아산신도시, 태안기업도시 등)에 대해 Zero Energy Development 개념과 U-Eco City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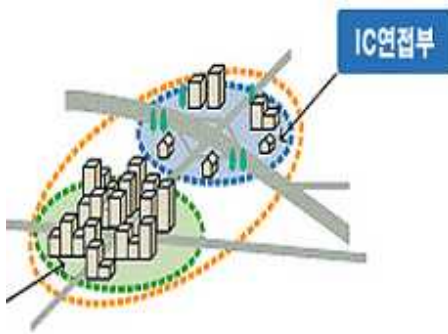
- 세종시 건설이 충남의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핵심지역으로 육성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적·공간적으로 연계하여 세종시를 기초원천연구·비즈니스·국제적 정주환경을 갖춘 과학도시로 조성하고, 인접지역은 세종시의 기능과 연계토록 발굴·육성하며 세종시 버금가는 수준으로 정비
- 내포신도시는 충남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충남의 경쟁력 제고 및 도민통합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
 -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소도시 연합체계를 구축하여 서해안 거점 도시권을 형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충남의 다른 지역과 연계성을 강화
- 공주역 역세권 개발을 통해 세종시와 백제문화권의 관문혁신 거점으로 조성
 - 공주역 신설에 따른 역세권 개발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주변지역 연계관광과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논산~계룡~대전)와 연계한 산업을 육성
- 관광레저형 태안기업도시를 안면도 관광지와 연계 개발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서해안 관광산업벨트를 구축
 - 태안기업도시의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발전을 도모
 -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통해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 모색하고, 태안기업도시 개발에 따라 공동화 현상 등이 우려되는 태안읍 등 기존 지역과의 연계 발전 전략 모색
- 당진항의 항만 배후지역인 내항지역을 동북아 최고의 자유무역 선호지역으로 조기에 개발함으로써 아산만권 경제를 활성화(충남+경기 상생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제고

■ 지역활성화 거점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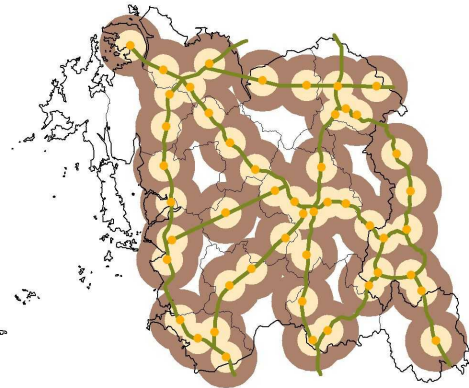
- 세종시 등 신개발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인 침체가 예상되는 중소도시는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
 - 지역 스스로 지역자산을 발굴하고 지역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토록 유도
- 고속도로의 직접영향권내에 있는 IC연접부 또는 고속도로 접근성이 높은 자원집적지, 도시·산업적 토지이용적지 등을 복합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테마형 단지로 개발하여 수도권 및 충청권 대도시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지역의 중심지로 육성
 - 복합단지형 :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이나, 수도권 이용인구가 많은 지역을 Outlet, Shopping Park, 물류유통단지 등이 복합된 특화공간으로 개발

- 산업단지형 : 제조업 및 첨단산업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산업단지로 개발
- 관광단지형 : 충남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세종시·(대전)광역도시권 및 수도권 전원주택 수요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관광단지를 개발하며,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된 관광단지를 개발

〈그림 II-9〉 IC연접부 개발의 개념



〈그림 II-10〉 충남의 고속도로 IC영향권(10km)



3) 기존도시 활성화

■ 내발적 발전전략을 통한 낙후지역 성장

- 내발적 발전을 위해 지역의 자원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분산화된 지역개발사업(서해안 초광역개발권, 내륙첨단벨트,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외부역량(외래자본이나 보조금 등)이 지역의 주체적인 계획 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함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로 세분) 지정으로 민간투자의 문턱을 낮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
- 기 추진중인 지역균형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지역의 어메니티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연계·협력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 중소도시 재생

- 신시가지와 기성시가지(중심시가지)의 균형발전, 기성시가지의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을 중소도시 특성에 맞게 적극 활용함
-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주거지 정비와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이를 위해 “도시재정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한편, “재정비촉진

- 계획” 수립 및 중심시가지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
-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 건축규제완화 및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유도
- 중심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과 주변지역을 일체화하여 정비
-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권과 문화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함
- 교육·문화 여건을 개선하고, 친수공간정비 등의 환경정비를 통해 살기 좋은 도시로 육성,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는 도로혼잡, 주차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
- 중심시가지 활성화 과정에 주민, 상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타운매니지먼트(도시관리자) 육성사업을 추진
- 중심시가지내 오픈스페이스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공원 조성, 담장 허물기, 도시숲 조성, 녹지활용 계약제 등과 연계한 그린 파크(Green Park) 조성사업을 추진함
- 「소도읍종합육성계획」 등 기존의 중소도시 관련 계획 및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함

■ 역사·문화자산 활용

-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지리적 장점 등 지역특성을 활용하여 기존 도시를 활성화
- 기존도시 내에 분포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정비하여 중소도시의 어메니티를 제고, 근대문화유산 집적지인 아산, 예산, 서천, 강경 등을 대상으로 근대문화유산의 보전과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과 연계
- 백제고도 복원 및 육성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창조

4)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와 주민참여 확대

- 주민이 존중받고 주민들의 삶의 가치가 다양한 주체에 의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으로 구현되도록 사람 중심의 도시형 마을만들기 운동과 사업을 추진
-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의 정책과제(운동으로서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서의 마을만들기, 계획수법으로서의 마을만들기)를 바탕으로 추진전략(마을만들기 지원

- 제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을 마련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을만들기 교실 운영 및 주민제안형 사업을 전개
 - 마을만들기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교실을 운영
 - 법정계획뿐만 아니라 비법정계획에서도 주민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과 시·군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 도시계획 수립시 주민참여방안을 다양화하고 이를 계획행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주민참여형 녹색도시계획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

〈표 II-2〉 도시개발 및 정비 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광역도시권 성장관리 및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광역도시권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시설 상호이용체계 구축 · 자치단체간 광역협력체계 구축 ·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 · 도시성장관리체계 구축
거점 도시 및 지구 개발	신성장 거점도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및 내포신도시 건설 · 아산신도시, 공주역세권 개발 · 태안기업도시 건설
	지역활성화 거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연접부 개발(5개소 : 복합단지형, 산업단지형, 관광단지형 등) · 호남고속철도 남공주역 역세권개발 · 택지·도시개발사업 등(26개 지구)
기존 도시 활성화	역사·문화자산 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보존사업 연계 환경정비사업(2개 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정비 가이드라인 작성 ·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등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도읍종합육성사업(22개 소도읍) · 주변지역 연계 시장재개발사업 · 타운매니지먼트 육성사업 등
	Green Park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공원 조성, 담장 허물기, 도시숲 조성(363개소)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와 주민참여 확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중심의 도시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주민참여 확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만들기 교실 운영, 전문인력 육성 지원, 주민제안형·공모형사업 등

2. 활력있는 농산어촌 육성

가. 현황과 문제점

■ 농가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화 진전

- 충남 농가인구의 고령층 인구 구성비가 크게 증가하고, 젊은 층이 감소하는 역삼각형 인구피라미드로 변함

■ 귀농·귀촌인구 및 다문화가정 증가

■ 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한 농촌여건의 개선

-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수도권·대전권과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신선농산물 중심의 근교 농업형성이 예상됨
- 도시민의 농산어촌 체험마을 중심의 관광객이 증가할 것임

■ 지역간 생활기반 여건의 불균형

- 농촌지역에 대한 사회적, 환경적 인식변화와 대도시 주변 농촌의 근교 농업지대로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오지·도서를 비롯한 대부분 농산어촌지역의 상대적 낙후가 지속되고 있음

■ 농어촌의 삶의 질 상대적 낙후

- 농어촌의 기초생활 여건이 도시에 비해 크게 취약한 실정임
 - 도로포장률(09년): 농어촌도로 48.4%, 시·군도 72.0%, 지방도 79.4%
 - 광역상수도보급률(08년): 면 36.0%, 읍 82.8%, 도시 95.7%
 - 하수도보급률(08년): 군지역 46.8%, 시지역 69.4%

나. 여건변화와 전망

■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의 동시적 진행

- 충남의 농가인구는 2007년 434천명에서 2020년에는 226~310천명 수준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¹³⁾

■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확대

- 농어업·농어촌이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대될 것임

13) 충청남도, 충남의 농어가인구 및 농어업인력 전망과 정책과제, 2010

- 농정의 이념이 생산중심에서 농산물의 품질,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환경적 역할 제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 농촌공간에 대한 수요의 복합화와 다양화

- 도시민의 농촌공간에 대한 체제·정주 수요 증대와 최근의 국내·외 농업·농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촌을 종합적, 복합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음
- 충남은 이러한 정부정책과 사회적 여건변화 속에서 세종시 건설과 같은 대규모 개발과 교통망의 발달로 농촌지역 변화의 속도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빠를 것으로 전망됨

다. 계획의 기본방향

■ 농어업인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

- 누구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와 복지혜택을 누리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를 구현

■ 경쟁력 있는 농어촌산업 활성화

- 기존 농어업의 혁신과 관련산업의 융·복합화로 21세기형 고부가 농산업 다각화를 실현

■ 지속가능한 농어촌환경·경관 조성

- 편리하면서도 자연성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농어촌의 생산공간, 생활공간, 자연공간을 유지하고 발전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개발사업

■ 농어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

- 농어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 지원
- 농어촌의 능동적 복지기반 강화

■ 농어촌의 특성을 살린 교육기반 확충과 교육 강화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 우수 공교육프로그램 확충 및 교원 확보
-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 쾌적하고 편리한 농어촌 생활공간 창조

- 농촌중심지 기능 강화와 지역활성화 촉진
- 농어촌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정주공간 조성
- 지속적인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 경쟁력 있는 농어촌산업 육성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 지역향토산업의 융·복합화 및 일자리 창출
- 지산지소 도농교류 체험기반 조성
- 주말전통시장의 명소화 및 지역 중심성 제고

■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향유하는 품격 있는 농어촌 조성

- 생활친화형 문화·여가인프라 확충
- 수요자 중심의 문화서비스 확대
- 다양한 지역문화의 창출 및 활성화

■ 흙·물·생명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환경과 녹색성장 기반 조성

- 농어촌 경관자원의 보전, 정비, 창출
- 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 영농공간 조성
- 에너지 순환형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 농어촌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고 협력적 개발을 강화

- 충남도 독자적 농촌지역리더 육성
- 농어촌 주민과 마을 리더 등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 농어촌지역 핵심리더 육성 및 체계적 관리
- 지역주도의 지역개발 체계 정착을 위해 자문컨설팅 지원 내실화

■ 충남형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조성

- 충남형 마을만들기 비전설정 및 추진기반 마련
- 충남형 마을만들기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표 II-3〉 농산어촌개발 분야의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농어민의 안정적 생활보장	농어촌형 사회안정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약 60만세대)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약 30만명) ·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매년 약 2천명) ·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20개소) ·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운영(80개소)
	보건·의료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형 농어촌서비스기준 설정·운영 · 농산어촌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 낙도·오지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255개소)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매년 약 11만 가구)
	취약계층 복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매년 1,500가구) ·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 ·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20개소) ·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매년 9천명)
	능동적 복지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 · 농어촌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매년 약 150명)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약 120개소)
농어촌 특성을 살린 교육기반 확충	농어촌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약 200개교)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매년 약 700개교) · 지역아동센터 IPTV 설치(185개소) · 기숙형 고교 육성 지원프로그램(10개교) ·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48개교)
	우수 공교육프로그램 확충 및 교원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영어 공교육프로그램 확충(매년 300개소) · 농어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지원(매년 2,300명) · 초등 우수교원 유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매년 13천명)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17천명) · 농업2대 이상 가업승계 학생 장학금(8천명) · 농어촌 고교생 기숙사이용료 절감(매년 9개교)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주도의 개발체계 정착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농산어촌개발(포괄보조)사업 지원 · 지역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정주계층별 선도거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마을 조성 및 기존마을 재개발(5개 지구) · 소생활권 종합정비(68개 권역) · 지역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20개 권역) · 소도읍육성사업(10개 소도읍)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3,500동)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174개 지구) · 농어촌도로 정비 ·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37개 마을)
경제활동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	향토산업의 융복합화와 일자리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복합산업 육성(40개소) · 향토음식자원화 사업(50개소) · 서규모 농업인 창업 및 소득확 지원
	도농교류 체험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체험 · 휴양기반 구축(160개소) · 산림휴양공간 조성(90개소) ·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50개소) · 도농교류활성화(농어촌축제) 지원(매년 3개소)
	주말전통시장의 명소화 및 지역중심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교류형 충남나눔장터(15개소) · 전통시장 홍보사업단 육성(15개소)
문화 여가 여건 향상	생활친화형 문화 · 여가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4개소) · 지방 테마과학관 건립 지원(5개소) ·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3개소) ·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15개소) ·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5개소)
	수요자 중심의 문화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매년 280개교) · 농어촌지역 문화예술 프로그램 연계 · 지방문화원 활동사업(17개 문화원) · 농어촌복합산업 육성(40개소)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 활용(400명)
	다양한 지역문화의 창출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옛길 스토리텔링 구축(6개소) · 농촌자원 문화마케팅 지원(매년 2건)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아름다운 환경과 녹색성장 기반 조성	농어촌 경관자원의 보전 정비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보전직불제 지속 추진 · 생태숲 조성사업(매년 1개소) · 농어촌 경관지구제 시범 운영(16개소)
	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 영농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243개소) · 소하천 정비사업 ·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5개소)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 가축분뇨 자원화, 에너지화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분뇨처리 지원(1,149개소) · 유기질비료(친환경비료) 공급 · 목재펠릿 사용 확대 · 친환경농업기반 구축(80개소)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3개 마을)
지역발전 역량강화	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지역리더 양성계획 수립 · 지역리더 교육프로그램 개발 · 지역리더 교육 이수자 풀(Pool) 구축 · 우수리더 마을개발 계획 수립 · 우수민간교육 협의체 구축
	지역발전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 협의회 구성 · 시·군단위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 지원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차원의 귀농·귀촌 지원센터 조성 · 농촌테마마을 육성사업 · 농촌체험관광 포털 사이트 활성화 · 충남 귀농인대회 개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충남형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형 마을만들기 비전설정 및 추진기반 마련 · 충남형 마을만들기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제 2 장

순환과 공생의 지역경제 육성

1. 경쟁력 있는 농·림·축·수산업 육성
2. 신성장동력산업 및 강소기업 육성
3. 서비스업의 지식기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1. 경쟁력 있는 농·림·축·수산업 육성

가. 현황과 문제점

농업

■ 지역농업 비중의 지속적 감소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농가수는 21.6%에서 19.0%로, 농림업취업인구는 23.5%에서 18.8%로, 농업면적은 29.0%에서 28.0%로 각각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지역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지역 농가인구수는 446천명에서 417천명으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농가인구수는 135천명에서 147천명으로 증가하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 전업농가가 감소하고 겸업농가가 증가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업농가는 100,727가구에서 92,562가구로 감소한 반면, 겸업농가는 62,470가구에서 65,966가구로 증가하였음

■ 농가의 경지규모 양극화 확대

- 충남의 경지규모별 농가수는 전체적인 농가수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지규모 0.5ha 미만의 농가와 3ha 이상 농가수가 증가하고 있어 영세농과 대규모 영농 농가가 양극적으로 증가함

■ 조미채소와 과실류 생산량 감소

- 2005년 기준 2009년 충남의 작물생산은 조미채소와 과실류에서 감소하고 나머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특용작물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임업

■ 임야 면적의 지속적인 감소

- 임야면적은 총 면적의 51.0%인 438,673ha로 연평균 -0.14% 감소추세이며, 국유림은 증가하였으나 사유림과 공유림의 감소가 확대됨

■ 임목지의 지속적인 감소

- 최근 활엽수림의 면적이 약간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인 임목지의 면적은 연평균 -0.40%의 감소함

■ 약용, 버섯 등의 임산물 생산량 증가

- 임산물 중 약용 생산량이 연평균 212.6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외 버섯, 산나물, 종실에서 생산량의 증가를 보임

축산업

■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 및 규모화 진행

- 가축 사육두수의 연평균 증감률은 닭, 한육우가 각각 17.61%, 11.37%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에 젓소, 돼지 등 사육두수가 증가함
- 전국대비 가축생산량은 닭이 2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돼지 21.0%, 젓소 18.7%, 한육우 13.8% 등의 순서로 나타남

수산업

■ 전국대비 충남의 어업가구 및 어가인구의 비중 증가

- 전국적으로 어업가구 수는 감소하나 충남은 연평균 1.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어가인구는 연평균 -0.0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국의 감소율 보다는 작게 나타남

■ 어가인구의 고령화 가속

- 65세이상 어가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8.21%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됨

■ 수산물 어획고의 감소 추세

- 수산물 어획고는 수량과 금액 모두 2006년 이후 감소추세로, 특히 연체동물과 해조류의 어획량 감소경향이 크게 나타남

나. 여건변화와 전망

농업

■ DDA, FTA 진전에 따른 지역 농업경쟁력 약화 전망

- 향후 수출농업 육성 및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요구됨

■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친환경농산물 수요 증가

- 친환경농산물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고려할 경우, 2015년에는 4조 3천 억원 규모의 시장형성이 전망되며, 개방화시대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생산 확대가 요구됨

■ 소비자의 선호 변화 및 식품안전성 강조

- 그린(green), 웰빙(well-being) 등 새로운 소비자 선호 부각, 안전한 농산물·농식품 수요증가에 대응한 생산안전제도가 확대될 것임

■ 농가인구 고령화 및 농림업취업자 감소 확대

- 이는 농업의 신기술 개발 및 농업 경영능력을 저해하며, 장기적으로는 농업의 재생산구조를 약화시킬 것임

■ 지역특화산업을 활용한 농어촌 산업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 증대

- 지역특화산업은 1·2·3차 산업 융·복합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창출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함

■ 농외소득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 증가

- 중장기적으로 호당 농가소득은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농외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임업

■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환경적 영향 확대 및 대응 시급

- 대기중 CO₂ 농도 증가 등 기후변화로 자연생태계의 영향이 확대될 것임
-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조림수종 적지가 달라지고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유휴토지 등 신규조림지 확보가 중요함

■ DDA/FTA 협상에 따른 임산물 개방 가속화

- DDA/FTA 협상에 따라 목재류,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감소가 예상됨

■ 안전한 먹거리 및 기능성 임산식품 수요 증가

- 단기소득임산물이 임업분야의 주 소득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신기술을 접목한 기능성 임산식품의 수요증대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이 예상됨

■ 웰빙문화와 5都2村 생활패턴 정착으로 산림·산촌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 산림·산촌이 갖는 생태적 기능과 임산물의 친환경 건강식품으로서의 상품가치를 이용한 도시민을 위한 체험·휴양이 활성화될 것임

축산업

■ 축산시장 개방에 따른 지역 축산물의 경쟁력 약화

- FTA체결로 지역의 한우, 양돈, 양계 등의 축산업의 약화가 전망됨

■ 안전축산물 및 고품질 축산물의 수요 증대

- 유전자조작, 광우병과동 등으로 안전축산물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이 강화될 것이며, 소득증가와 웰빙 생활양식 확대에 따라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임

■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활용 필요성 증대

- 대체에너지 확보를 통한 에너지안보 전략이 절실한 실정으로,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수산업

■ DDA, FTA 진전에 따른 수산업의 위축

- 수산보조금 감축과 관세인하로 지역수산업이 위축될 전망이다

■ 어업자원, 어업인력 감소와 해양오염 가중

- 해양오염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로 어장의 생산성저하가 우려되고 유능한 신규 어업인력의 감소 및 어업종사자의 고령화가 지속될 것임

■ 고품질 수산물의 수요 증가

- 식품안전, 웰빙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 및 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원료상태의 소비에서 일부가공 또는 전체가공 형태로 소비가 변화됨

다. 계획의 기본방향

농업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식품체계 구축

- 친환경 고품질의 농업을 확대하고 이를 지역순환 식품체계로 뒷받침하여 소비자에게는 안전·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부가가치를 높임
- 지역순환 농식품체계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안정화 도모함
-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등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지역소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함
- 생산·가공·유통·체험·문화가 융복합된 농어업 6차산업화를 육성하여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확충 및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함
-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 확대를 위해 수출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수출경영체의 신규시장 진출 또는 수출상품개발을 추진함
- 충남쌀의 고급화 및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쌀 및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다양한 농업 보험제도의 확대를 추진함
- 과수산업 유통구조 개선의 추진, 과수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저비용·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확충으로 과수산업 경쟁력을 제고

- 우수 원예브랜드 및 시·군별 특화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차별화·고급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함

임업**■ 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

- 새로운 임업시장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임업인 육성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임업경영기반을 구축함
- 지속적인 산림자원의 보호를 통한 산림의 가치를 제고하고 기후변화 대응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함
- 임업의 융·복합화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산촌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임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축산업**■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 양질조사료 확대 생산과 연계한 가축분뇨 자원화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을 육성
- 축종별 생산기반 정예화 및 명품브랜드 개발·육성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하고 축산물 위생안전시스템 선진화,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가공 시설 현대화로 축산물 위생안전 공급기반을 정립함
- 방역시스템 보완 및 인력확충으로 사전 예방중심의 상시방역체계를 구축

수산업**■ 어업경쟁력 강화 및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 친환경 고품질 어업 등 다양한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별 수산물 특화자원을 적극 육성함
- R&D 강화, 인력육성, 역량강화 등 지식·정보화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수산업을 육성
- 수산자원 및 수산생태계의 보전·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어항·어촌의 활성화 도모 및 어업인의 복지환경을 개선함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개발사업**농업****■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구축**

- 농식품체계 활성화
 - 농식품체계 교육 및 홍보(연간 3회), 농민장터 운영(시군별 1개소),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시군별 1개 마을)

- 녹색식생활 교육 확산,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추진
 - 식생활교육 관련 조례 제정, 식생활교육 지원, 학교텃밭 운영(100개교),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 지원, 권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시설급식의 조달체계 및 조달관행 개선
-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지원
 -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농사랑」 운영 지원, 직거래장터 운영, 농특산물 홍보·판촉 확대

■ 친환경농업 육성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8개소), 친환경 농업지구(200개소), 친환경 벼 재배단지, 유기채소 전문단지(25개소) 등을 조성
-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 지원
 - 도시학교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운동 전개, 친환경농산물 판매 지원
- 친환경농업 조직 및 리더 육성
 - 친환경농업 신규 인력 발굴(4,000명) 및 친환경농업 전문교육 확대, 친환경농업 생산자조직 육성(300개 단체) 및 운영 지원
- 친환경농업 실천지원 및 농업환경 부하 경감 지원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확대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 농자재 보급, 자가 미생물배양기(연500대) 지원, '월간친환경' 농업정보지 보급, 경관보전 직불제 실시,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유기질비료 및 맞춤형 비료 공급

■ 농어업 6차 산업화 활성화

- 농어촌 마을기업 육성
 - 식품산업 육성 업체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창업·육성 지원(100개소)
- 포탈, 충남 향토자원 콘텐츠 개발·육성
 - 도내 향토자원 One-Stop 검색 콘텐츠 개발 및 전자상거래 기능 강화
- 향토자원 발굴 및 육성
 - 향토자원 발굴, 향토자원 6차 산업화 촉진 및 마케팅 지원, 향토자원 산업화 인력 육성
- 농식품산업의 육성

- 농식품 문화 디자인 사업(50개소), 전통주 육성(30개소), 전통·발효식품 육성(30개소),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40개소)

■ 농수산물 국제경쟁력 강화

- 농수산물 수출기반 조성
 - 수출선도조직 육성(10개 조직)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400농가업체),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
- 농수산물 해외마케팅 강화
 - 해외 거점별 에이전트 육성, 해외시장 개척, 해외농업 개발

■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 충남쌀 고급화 및 브랜드 육성
 - 충남쌀 브랜드 육성, 쌀 건조보관시설(RPC 등) 지원, 충남명미 생산단지 조성(연 10개 단지), 충남쌀 695프로젝트(단백질함량 6.0이하, 완전미비율 95% 이상) 실천 경영체 육성(30단지)
- 벼 재배농가 생산비 절감 및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조성
 - 공동육묘장설치, 벼씨발아기 공급, 최적 경영체 육성, 쌀 소득보전직불 사업, 농작물 안정생산 보험료 지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및 행정운영비 지원
-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확충
 - 농작물 병해충 사전방제 실시, 농기계 임대 및 공급 사업, 논 토양 살리기 벗짚 환원사업 추진

■ 과수·원예·특작 품목의 경쟁력 강화

- 과수산업 유통 구조 개선
 - 과실전문 APC 건립(5개소), 산지 공동마케팅 및 산지·소비자 유통계열화 추진,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산지규모화
-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 에너지 절감시설 확대 및 GAP 및 친환경 재배체계 확립, 우량묘목 생산·공급, 무병묘목 공급지원 확충, 농기자재 지원
- 과실브랜드 육성 및 수출확대
 - 과실 브랜드 육성, 충남 과실브랜드 통합 마케팅
-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
 - 시설하우스 환경 개선 및 재배환경 생력화, 시설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설원예품질개선(10개소), 시설원예양액육묘시설, 고

- 품질화훼생산시설 등 지원, 화훼수출경영체 육성(10개소)
- 원예작물 브랜드 및 특화품목 육성
 -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3개소), 채소류 특화단지 조성(10개 단지),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가격예시제 및 직불제 도입), 지역특화품목 브랜드화를 위한 생산·유통·가공지원(5개 품목)
-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
 - 연작장애 해소 및 토양환경 개선, 채굴 수삼 전량검사 확대, 품질인증시스템 구축 및 유통, GAP 확대 및 내실화 추진, 기능성 인삼제품 개발, "GinsQ"를 통한 해외마케팅 추진,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및 마케팅·경영컨설팅 지원

임업

■ 임업의 기반확충 및 경쟁력 강화

- 임산물 시장잠재력 분석 및 가공 활성화
 - 소비자 욕구, 소비형태 등의 시장조사와 분석(36종), 새로운 생산·가공기술의 보급 확대
- 전문임업인 육성 및 산림경영컨설팅 제도 도입
 -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 지원, 전문임업인 실태 조사 및 육성(분야별 4~5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친환경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임산물 유통 지원 강화
 - 임업기계 장비, 펠릿보일러, 산림지리정보장비 등 보급, 산림작물의 규모화·집단지화 추진 및 새로운 소득원 발굴 지원, 유통 및 가공기반시설 현대화·규모화 추진

■ 산림자원의 보호

- 체계적·집중적 산림유역 관리
 - 권역을 중심으로 목재 및 임산물 생산기지를 육성
- 숲 가꾸기 사업 및 일관시스템 도입
 - 통합숲가꾸기사업, 바이오산물 수집단 및 산림자원조사단 운영, 산림자원(임산 바이오매스, 목재 등)의 활용과 임업기계화를 촉진
-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추진
 - 산불방지 경상·자본 지원, 임차헬기 운영, 산림병해충 방제, 천공기·기계톱 등의 장비를 구입하고 예찰조사원 운영
- 임도 및 사방사업 추진
- 산림생물자원 보전기반 구축

- 수목 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전기능 강화를 위한 수목원(6개소) 및 산림박물관(2개소) 조성, 자원화를 위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장 제공 지원하는 생태숲 조성(1개소), 소나무숲 등 생물다양성을 증진

■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

- 희망산촌만들기(500개소)
 - 친환경 임산물 및 웰빙 수요에 맞는 유망 산채작물을 보급, 귀농·귀촌 지원
- 산촌생태마을 조성(30개소)
- 산림휴양문화 공간 및 산림휴양단지 조성
 - 권역별 특화산림휴양단지 조성(1개소), 자연휴양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2개소),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등 지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2개소)
- 도시숲(10개소), 학교숲(10개소) 조성

축산업

■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업 육성

- 양질의 조사료 확대 생산
 - 사료작물용 종자대 및 임차료,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 가축분뇨자원화 및 축산환경 개선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지원, 아름다운농장만들기 지원
- 친환경 사육시스템 도입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실시, 친환경사육시설(群飼 System) 도입

■ 축산업 경쟁력 제고

- 축종별 사육기반 정예화
 - 축사시설 현대화, 한우 인공수정료 및 등록비 지원, 송아지생산 안정, 양돈농가 모돈 갱신(10천두/년) 및 장비 지원,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 자동급수시설 지원 등
- 명품브랜드 육성
 -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2개 브랜드), 육우 광역브랜드 육성(1개 브랜드)

■ 축산물 위생안전 공급기반 구축

- 축산물 위생안전시스템 선진화
 - 쇠고기 이력제 추진, 도축검사 지원, 도축장 실험장비 지원, HACCP 지도 지원
-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판매 시설지원, 도축장내 부분육가공시설 지원
- 유통가공시설 현대화

- 생축(육류)운송특장차 지원, 축산물 가공공장 저수탱크 지원

■ 사전예방 중심의 상시방역체계 구축

- 가축방역 확대 및 방역시스템 보완, 인력 확충
 -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소독시설, 장비, 약품 등 지원 확대
 - 소규모 방역취약농가 소독장비 지원

수산업

■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친환경 고품질화

- 지역특화 수산물 명품화 및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
 - 보령 명품바지락 육성, 서산 참굴양식 지원, 서천 김 클러스터 구축, 태안 해삼 특화단 구축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수산물 처리저장사업(1개소) 추진, 수산물 위판장 시설 지원(2개소), 해양수산물 복합공간 조성(2개소)
- 천일염 육성 지원, 연안 바다목장 조성
 -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건립(1개소), 바닥재 개선, 포장재 지원, 소규모 바다목장 및 해중림 조성

■ 미래 수산업 기반 강화

- 수산연구소 현대화 및 해양수산물 R&D 강화
 - 수산연구소시설 개·보수, 황복 대량 종묘 생산, 친환경기술 산업화 및 축제식 해삼 양식기술 개발 등
- 어촌인력 양성, 수산업경영인 및 전문 컨설팅 지원
 - 수산계고교 특성화 및 자영수산물 급식비 지원, 수산업경영인 정보제공 및 사기 진작, 유망양식품종 전문 컨설팅 지원
- 수산경영 전문 컨설팅 지원
 - 유망양식품종 전문 컨설팅 지원, 수산연구소·수산관리소 기술 지원

■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 어초·어장 관리
 - 연안어장에 인공어초시설을 설치하여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
- 유류피해지역 지원
 - 유류피해지역 조업·마을어장·채묘어장 환경 개선
- 금강 목장화
 - 금강 생태에 적합한 우량 수산종묘를 방류, 관리

■ 어항·어촌 활성화

- 어항 개발(7개항) 및 보수보강 지원(11개항)
- 어촌종합개발(5개 권역) 및 어촌관광마을 개발(10개 마을)
- 어선 등 재해보험 지원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

〈표 II-4〉 농림축수산업 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개발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식품체계 구축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체계 활성화 · 녹색식생활 교육 확산 ·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추진 ·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 친환경농업 유통·가공기반 구축 ·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 지원 · 친환경농업 조직 및 리더 육성 · 친환경농업 실천지원 · 농업환경 부하 경감지원
	농어업 6차 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마을기업 육성 · 포탈, 충남 향토자원 콘텐츠 개발·육성 · 향토자원 발굴 및 육성 · 농어업 6차 산업화 활성화 · 농식품산업 육성
	농수산물 국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수출기반 조성 · 농수산물 해외마케팅 강화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쌀 고급화 및 브랜드 육성 · 벼 재배농가 생산비 절감 ·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조성 ·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확충
	과수·원예·특작 품목의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수산업 유통구조 개선 ·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 과실브랜드 육성 및 수출확대 ·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 · 원예작물 브랜드 및 특화품목 육성 ·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임업경쟁력 강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	임업의 기반확충 및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물 시장잠재력 분석 및 가공 활성화 · 전문임업인 육성 및 산림경영 컨설팅 제도 도입 · 친환경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임산물 유통 지원강화
	산림자원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집중적 산림유역 관리 · 숲 가꾸기 일관시스템 도입 ·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방제 · 임도 및 사방 사업 · 산림생물자원 보전기반 구축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산촌 만들기 · 산촌생태마을 조성 · 산림휴양문화 공간 및 산림휴양단지 조성 · 도시·학교숲 조성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조사료 확대 생산 · 가축분뇨자원화 및 축산환경 개선 · 친환경 사육시스템 도입
	축산업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종별 사육기반 정예화 · 명품브랜드 육성
	축산물 위생안전 공급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위생안전시스템 선진화 ·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 유통가공시설 현대화
	사전예방 중심의 상시방역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방역 확대 및 방역시스템 보완 · 가축방역 인력 확충
어업경쟁력 강화 및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친환경 고품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 수산물 명품화 지원 · 천일염 육성 지원 ·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 · 연안 바다목장 조성
	미래 수산업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연구소 현대화 및 해양수산 R&D 강화 · 어촌인력양성 및 수산업경영인 지원 · 수산경영 전문 컨설팅 지원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초·어장 관리 · 유류피해지역 지원 ·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
	어항·어촌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 정비 및 개발 · 어촌종합개발 및 어촌관광 개발

2. 신성장동력산업 및 강소기업 육성

가. 현황과 문제점

■ 제조업의 산업비중 증가와 외연적 확대

- 도내 GRDP에 있어 제조업의 비중은 1990년 28.4%, 2000년 30.8%, 2009년 47.7%로 타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제조업의 비중이 급상승한 1998년 이후 최근 10년간 충남은 제조업체수 및 종사자수가 전국평균성장률의 2배 이상 큰 성장을 보이며, 2009년 현재 제조업에 있어 전국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의 약 11%를 점유함

■ IT기반 산업으로의 집적화 및 클러스터화 진행

- 최근 10년간 충남지역은 1차금속제조업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제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섬유, 의복, 펄프 등의 경박단소형 산업은 점차 감소하여 전체 산업구조가 전자정보기기 및 부품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변화됨
- 입지계수(LQ;상대적집적도)분석에 있어서도 비금속광물제품, 전자, 전기 등의 산업이 상대적으로 확대됨
- 충남의 산업집적화 확대는 수도권과 인접한 북부권을 중심으로 경부고속도로 및 서해안 고속도로 등 도로망을 따라 점차 서해안 및 내륙으로 확대되고 있음

■ 산업단지의 난개발 방지 및 기업의 수요 대응 산업단지 개발

- 2010년 3월 기준으로 충남의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5개소, 지방산업단지 41개소, 농공단지 86개소 등 총 134개소가 소재하고 있음
- 개별입지의 급속한 증가로 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발생됨. 향후 공업용지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며, 신규개발보다는 시설현대화 및 개별기업의 집적화·집단화 등의 대응 필요

나. 여건변화와 전망

■ 동아시아로의 경제권 이동과 환황해경제권의 부각

- 환황해경제권은 중국 3대 경제권역과 더불어 동북아의 주요 경제거점으로 급성장하고 있음

- 중국의 3대 경제권역의 산업적 특성은 우리나라 및 충남의 산업특성과 매우 유기적 연계를 가지고 있어 상호경쟁기능과 기능적인 연계 등의 산업적 연계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한 저탄소화 및 녹색성장의 중요성 대두

- 충남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석유화학, 철강, 화력발전 등이 집적화되어 있어 녹색성장을 위한 저탄소화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반도체,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부품소재기업이 소재하고 있어 녹색기반으로의 전환과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이 필요

■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의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경제의 세계화 및 지역화의 전개로 경쟁의 단위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임
-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광역경제권과 서해안 및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은 충남의 지역산업발전에 커다란 계기가 되고 있음
- 충남은 전자정보기기, 자동차관련 산업은 매우 발달해 있지만, 전반적으로 산업적 다양성이 부족하고 R&D역량 및 혁신역량도 다소 부족하여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 2013년부터 기존 광역권 선도산업과 각 시도 전략산업으로 양분된 지역산업정책을 선도전략산업으로 통합한 신지역산업발전정책이 추진될 예정

■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과 지역내 파급 극대화

-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덕R&D특구의 고급 연구개발 기능을 산업화함에 있어 충남지역은 다양한 산업용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지역으로의 유리한 입지여건을 갖춘
- 또한 내포신도시의 건설은 농업중심지역인 홍성·예산지역에 북부권 첨단산업의 확산을 촉진하게 될 것임

다. 계획의 기본방향

■ 충청남도 전략산업 및 주력 기간산업 육성과 클러스터화 추진

- 전략산업별 집적지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기관·기업지원기관의 유치와 동종·유사업종 중심으로 산업집적화를 추진함

- 생산단지와 교육, 문화 및 복지시설 등이 종합된 복합 클러스터로 육성
-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연구개발, 지식의 창출 및 공유 추진
- 자동차 및 철강산업 연계를 통한 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 신성장동력 육성 및 인접지역과 네트워크형 클러스터 구축

- 기존산업과의 연관이 높은 분야에서부터 출발하여 지역산업 여건 및 고용자원 규모를 고려한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함
- 전략산업과 녹색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의 녹색화 추진 및 녹색산업을 육성
-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과 연계한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협력을 강화
- 인접 시·도간 공동연구개발 지원 및 해외 관련 클러스터와의 공동교류 등을 통한 경제협력 추진, 공통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협력체계를 구축

■ 중소기업지원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기반 구축

- 충남형 강소기업 육성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
- 기업기술지원 및 산·학·연 연계지원을 위한 컨벤션산업의 육성을 통한 업무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창업과 R&D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도내 정착을 지원
- 대학과 산업현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기술의 상용화 및 기업이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 산업집적 촉진을 위한 생산기반 확대 및 시설현대화

- 충남의 지역산업 육성계획과 부합된 생산기반을 강화
- 도내 각 권역의 경제 및 산업 활동 특성과 여건에 부합되는 특화산업 단지 조성, 낙후산업집적지의 현대화 추진
- 산업화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수를 적절히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및 산업단지 조성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개발사업

1) 충남 전략산업 및 주력 기간산업의 육성과 클러스터화 추진

■ 전자정보기기 클러스터 구축

- 서해안을 중심으로 경기-전북과 연계하는 초광역메가클러스터 조성

- Flexible Electronics(유연전자)첨단 산업단지 조성, 차세대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테스트 베드 구축
- 천안·아산 등의 서북부권 지역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디스플레이 기술혁신 창출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 생산단지와 교육, 문화 및 복지시설 등이 종합된 복합클러스터 조성
- 부품·소재 장비산업 지원체계 구축과 디스플레이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
- 기업이용 활성화를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인증·평가지원을 확대
- 전자정보기기의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마련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 장기적으로 자유로운 공장 신·증설 및 기업유치를 통한 세계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Display특구를 지정

■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 자동차·부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자동차 및 관련 부품산업의 기반시설 확충과 R&D 기능을 강화
 -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지원을 위한 자동차부품산업 R&D집적화센터 활성화, 자동차 전장부품 내구성 향상 시스템 구축,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기반 구축, 자동차 샤시부품 내구성 향상 기반 구축 등을 통한 자동차 R&D 기능의 집중 육성(전장부품 분야의 특성화 추진)
- 경기-전북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완성차 및 부품산업 연계를 위한 자동차·부품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
 - 그린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 분야의 특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부품산업집적지 조성

■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 국제경쟁력을 갖춘 감성형 및 3D 등의 첨단문화산업 특화클러스터를 육성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영상미디어센터, 천안문화산업진흥지구 등의 사업화시설 조성
-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의 1인 창조기업 육성
- 교육아카데미, 창작영화제 등을 통한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및 고용 창출
 -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기업의 전문성 제고 및 창업 유도

■ 농축산 BIO산업 육성

- 연구개발 및 창업시설, 신제품 생산 등의 동물자원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동물의약품 R&D클러스터 구축, 농수축산물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 지역특화 바이오기술 개발사업을 통한 동물사료, 사료첨가제, 동물백신 등의 연구개발 지원
- BT기반의 IT융합 영상의료(측정)기기 및 첨단 의료기기 등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충청권 초광역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 바이오산업을 대전의 R&D, 충남과 충북의 생산기능을 결합한 바이오 관련 산업 집적지 조성 및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추진
-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 연구와 산업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생물산업 진흥센터 설치

■ 철강 및 친환경소재 산업 육성

- 당진 친환경교역형 철강산업 기업도시 기반 구축
- 연구개발기능 확대와 철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철강산업 공동R&D센터 및 철강전문대학원 설립
- 철강금속소재기반 구축 및 당진항과 충남내륙지역기반 연계도로 개설
- 신소재 기반의 지능형자동차, 그린카 등 차세대 자동차산업과 철강산업의 연계 확대를 위한 Test Bed형 실증센터 설치 및 전문산업단지 조성

■ 석유화학(정밀화학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 정밀화학소재산업 기반 구축 및 연계산업 공급망(대산임해산업단지 관리센터 및 정밀화학 R&D센터 설립) 확충
- 대산석유화학단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준산업단지 지정 또는 클러스터화 추진, 석유화학 대기업과 화학소재 중소기업간의 협력적 발전을 위한 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공동 R&BD기반 구축 및 기술개발 육성사업 추진
- 충남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고도화·고부가가치화를 추진을 위한 산업간 고도통합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2) 신성장동력 육성 및 네트워크형 산업클러스터 구축

■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과 연계한 네트워크형 산업클러스터 구축

-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의 육성
 - 충청권의 선도전략산업인 스마트 IT산업, 첨단융합기계부품산업, 메디-바이오 산업, 그린·나노시스템산업, U-Service산업을 육성

〈표 II-5〉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구분	선도산업	프로젝트
미래성장동력산업	의약바이오	· 차세대 의약
	차세대 에너지	· 태양광(부품중심), 이차전지, 나노융합소재(화학소재기반)
대표주력산업	NEW IT	· 무선통신융합, 반도체, 디스플레이
	융합기계부품	· 동력기반 기계부품

-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의 지역내 파급과 연계확대를 위한 네트워크형 산업클러스터 구축

■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산업의 융복합화 및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인증 시스템과 표준화지원을 위한 융복합지원센터 설립
- 기술융합산업에 대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구축 및 산·학·연 연구인력 네트워크 및 인력DB 구축
- IT산업의 발달로 인한 자동차 전장부품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IT융합산업 육성
- 항공관련 교육 및 연구시설, 해안자원을 연계한 항공레저 R&D단지 및 항공사이언스파크 조성을 통한 항공산업 기반 구축

■ 해양생물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

- 해양생물산업을 21세기 충남 첨단산업으로 육성 발전할 수 있는 해양생물기반 기능성 신소재 연구개발 지원
- 해양생물산업체 연계 및 지원을 위한 해양생물진흥센터 건립
 - 해양바이오 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컨설팅 및 지원, 산학연관의 R&D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서비스, 해양생물 산업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장비구축 운영
- 국내 해양소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 녹색산업 육성 및 산업의 녹색화 추진

- 리튬이온전지 부품소재 국산화 및 공급기반 구축
- 그린카, 그린에너지 등의 권역별 녹색산업클러스터 육성
- 녹색제품의 수출지원 및 표준화를 위한 시험인증기반 구축

-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술기반 조성
 - － 녹색산업 및 녹색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환경산업혁신기반 조성 및 녹색산업체의 유치, 녹색산업의 산업화 촉진, 환경 벤처창업 및 실용화 지원
-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기업의 저탄소화 시설현대화 지원

■ 인접시도간의 경제협력체계 구축

- 해외 연관 클러스터와의 교류 활성화와 국제협력을 위한 지역산업별 공동 국제협력 지원
- 인접시도(경기, 대전, 충북, 전북)간의 공동 연구개발 지원, 해외 클러스터와 연계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표 II-6〉 인접 시·도의 주요 전략(특화)산업

구 분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 메카트로닉스
경기도	자동차 및 부품, 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전자정보기기, 신재생에너지
전라북도	자동차 및 부품산업, 신재생에너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연계협력체계 구축

- 연구개발 중심의 사업화 기능지구 조성 및 거점지구와 연계 강화
 - － 기능지구내 R&D, 기술사업화 및 상업화를 위한 파일럿 생산시스템 구축
 - － 과학벨트와 연계한 전략형 미래성장동력 연구개발 지원
- 기초과학 및 첨단과학기술 분야와 산업과의 네트워크체계 구축
 - － 기초과학연구원, 거점·기능지구내 대학연구소, 해외 대학·기업·연구원과의 e-네트워크 체계 구축

■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구축

- 항공부품, 전자통신, 신소재, 복합무기 개발 등을 위한 국방산업산업단지 및 국방혁신단지 조성
- 국방복합기술 등의 연구개발기능 확충 및 국방과 민간기술 융합화를 위한 국방기술사업화센터 설립
- 국방과학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인접시도와의 공동추진체계 구축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

3)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기반 조성

■ 연구개발 중심의 집적지구 조성

- 연구개발 중심의 R&D집적지구 조성 및 신기술 및 지식 집약형 테크노폴리스 조성
- 연구, 컨벤션, 첨단R&D기능 중심의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
 - 수도권외 연구개발 기능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다국적 기업 및 연구소, 첨단 R&D기업, 금융들을 집적화

■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과학기술기반 확충

- 대학의 연구인력과 개발성과를 중소기업의 생산기능에 접목시켜 시제품을 개발하고, 공정·품질개선 등의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을 추진(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 지역혁신센터(RIC)의 운영 및 효율화
 - RIC의 공동장비활용으로 기업의 구입비용절감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대학과 기업간 공동기술연구개발, 장비구축 시험 및 생산 지원, 대학 및 기업 신기술에 대한 사업화 촉진
- 산학협력 영세기업 기술개발 지원
 - 기술 및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에 대한 생산현장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영세기업에 대한 산학협력 전문화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 창업보육업체의 도내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 충남형 강소기업 육성
 - 기술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작고 강한 강소기업 육성,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부품·소재, 장비생산업체 등 도내 유망·벤처기업 선정 지원
 - 자금, 기술(R&D), 우수인력, 국내·외 판로, 특허, 경영컨설팅 등 중앙과 연계한 Total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기능 강화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강화
 - 동반성장 지원·점검체계 구축 및 문화 확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 체결 및 지원, 「충청남도 동반성장협의회」 구성 운영

4) 산업집적 촉진을 위한 생산기반 확대

- 기업의 신규수요에 대처하고 낙후권역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공급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

- 산업단지를 생산, 기술 중심의 일터로 생각하는 관념을 탈피, 생산현장이 곧 정주환경이 될 수 있는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의 융·복합형 3세대 산업단지 조성

〈표 II-7〉 산업단지 조성계획

(단위: 천 m^2)

구 분	기 지정면적 (2011년 4/4분기 현재)	추가공급규모* (2011년~2020년)
충청남도	110,481 (145개단지)	6,954

* 분양면적 기준, 충청남도 산업입지 중장기기본계획, 충청남도, 2011.

- 무분별한 개별입지 확대를 지양하고, 계획적인 차원에서 산업집적을 통한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조성
- 업종간 연계 강화 및 산·학·연 협력 강화 등을 도모하여 클러스터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배치

〈그림 II-11〉 산업단지 현황도



〈표 II-8〉 제조업 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사업
전략산업 및 기간산업 육성	전략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전략산업 육성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스플레이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첨단문화산업, 농축산바이오산업 육성 ·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활용·특허·컨설팅 등 기술 및 정보지원체계 구축 - 차세대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테스트베드 구축 · 자동차 및 IT융합산업 진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자동차IT융합사업 진흥원설립 · 첨단문화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장비 활용 및 기술정보 지원 - 문화콘텐츠기반 1인 창조기업 육성 · 농축산바이오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기술인력중심 전문인력 양성 - R&D 및 마케팅 지원사업 - 충남해양생물산업진흥센터 설립
	주요 기간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및 신소재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전문대학원 설립 - 철강 R&D지원센터 설치 · 석유화학 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화학 R&D센터 설립 - 정밀화학소재 기반 구축
신성장동력 육성 및 네트워크형 산업클러스터 구축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권 5대 선도전략산업 육성(스마트 IT산업, 첨단융합 기계부품산업, 메디-바이오산업, 그린·나노시스템산업, U-Service 산업) · 충청권 선도산업(NEW-IT, 의약바이오산업) 육성 (2009~2012년)
	충청남도 신성장동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10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렉시블 전자소재산업 육성사업 - 그린수송산업 육성사업(2차 전지 포함) * 2017년까지 13,000억원
	광역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항해권 Display Mega Cluster 조성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 협력 사업(기능지구 조성) ·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

기업지원 기반조성	지원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 · 지역일자리 종합센터 설치 · 지역혁신센터(RIC)지원 및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지원
	투자유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기업 유치 지원(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 융합녹색 기술지대 조성-자유무역지대 지정 개발(평택 당진 내항지역)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 관리 · 외국인 투자지역 투자벨트 조성 및 지원 · 이전 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생산기반 확대 및 현대화	시설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농공)시설 현대화 지원(노후시설 개선) · 정유 · 석유화학간 고도통합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 농공단지 회생프로그램 추진
	산업집적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및 특성화 단지 조성(4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 천안인터테크노밸리, 아산제2테크노밸리, 항공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항공레저 R&D단지 조성, 자동차 부품소재 단지 및 모듈화 단지 조성, 플렉시블 첨단산업단지 등

3. 서비스업의 지식기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가. 현황과 문제점

■ 취약한 서비스산업 기반

- 2009년 현재 서비스업체는 119,415개소, 고용규모는 457,610명으로 전국대비 각각 4.0%, 3.4%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취약함

■ 소비자 서비스업 위주로 특화

- 2009년 업체 및 종사자수 기준으로 입지계수가 1보다 큰 업종은 전기·가스·수도, 하수폐기물, 건설, 숙박음식, 공공·행정·국방,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으로 이들 업종만이 타지역에 비해 특화되었음
- 반면, 업체 및 종사자수 기준으로 입지계수가 1보다 작은 업종은 운수, 출판·영상·방송, 부동산 및 임대,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 서비스업, 여가 관련서비스 등으로 이들 업종은 타지역에 비해 취약함

■ 기업지원 서비스업 기반 취약

- 2009년 현재 지역 내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전국대비 각각 3.2%, 2.2%로 소비자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임
- 기업지원 서비스업체의 규모도 전국평균에 비해 영세한 수준임

■ 취약한 사회적 서비스 기반

- 2010년 현재, 사회적기업은 전국적으로 292개소가 소재하고 있으나, 충남지역에는 단 5개소만이 운영 중임(아산 1개소, 천안 2개소, 연기 1개소, 금산 1개소)
- 가사·보육, 재활용 등 극히 제한적인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어,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범위 확대가 요구됨

나. 여건변화와 전망

■ 「경제의 서비스화」 가속화 및 신 서비스 수요증대

- 금융, 물류, 사업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가속화 되고 있음
- 기업지원 서비스는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므로 충남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

■ 사회 서비스 수요의 다양화·고급화 진전

-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양적증가가 예상되며, 소득증가로 인한 사회서비스 수요의 다양성도 높아질 것임
- 다만,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미흡하여 서비스 공급이 원활치 못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의 증가가 지속될 경우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계층이 사회안전망에서 이탈될 수 있음

다. 계획의 기본방향

■ 기업지원서비스의 확충을 통한 지역산업 생산성 제고

- 기업의 니즈(needs)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생산자 및 사업서비스 외에도 개별 기업간, 민간과 공공부문간의 협력 중개 지원 및 네트워킹 지원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술, 정보, 컨설팅, 인력, 교류활동 등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구축

■ 신산업 창조를 위한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육성

- 서비스 R&D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新 서비스산업 창출을 적극 도모
- 헬스케어(health care)를 포함한 의료서비스 및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를 구축
- 아울러 음식·숙박, 도소매 등 전통적 서비스 부문의 고부가가치화 및 도내 선도 제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사회 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및 산업화 도모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 사회 서비스 부문의 민간참여 확대 및 이를 통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기존 공공부문 주도에서 향후 시장중심의 사회 서비스 산업화로의 전환을 도모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환경 개선 및 경영혁신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을 확보
- 대규모점포 및 SSM 진입에 대응한 영세슈퍼·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자영업자의 창업부터 성공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개발사업

■ 기업지원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RASS시스템 구축

- Real service
 - 창업, 기술, 홍보·마케팅, 법률·회계, 특허 등 지원분야별 전문가 확보 및 맞춤형 상담기능을 확충
- After care
 - 투자유치 단계부터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애프터 케어(after care) 프로그램을 구비
- Single gateway
 - 기업지원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공급자간 상호연계를 위한 지원 상담과 중개기능을 담당할 원스톱 솔루션 플랫폼을 구축
- Single window
 - 비즈니스 링크를 구축하여 기업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

■ 新 서비스업 창출기반 조성

- 서비스 R&D 사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연구기능 확보
 - 도내 연구기관 산하에 「서비스 R&D 연구」기능을 도입하여 관련연구의 체계적 수행과 노하우를 확산
- 新 서비스업 지원을 위한 종합 플랫폼 구축
 - 서비스 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서비스 창출지원 네트워크(가칭)」를 구축

■ 사회 서비스 공급기반 및 사회적경제 육성

- 사회서비스 부문의 공급능력 확충
 - 사회서비스 인력양성을 모듈화 및 표준화시켜 양적·질적으로 관리
- 지역 밀착형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대상 사업의 지속 발굴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전환을 촉진

- 사회적기업 경영활동 지원 및 육성인프라 구축
 -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서비스 위탁 확대,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영세자영업 보호

-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추진
 - 시설이 노후화된 도내 전통시장 60개소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마케팅 교육 등의 실시로 상인의 경영마인드를 제고
- 전통시장 및 영세자영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
 - SSM 입점규제 조례 제정,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천안, 예산) 등을 통해 대규모 점포 및 SSM 진입에 따른 영세슈퍼·전통상인을 보호
- 자금지원 및 종합컨설팅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기반 도모
 - 컨설팅 지원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창업단계부터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

〈표 II-9〉 서비스업 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기업지원서비스 시스템(RASS) 구축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전문가 확보 및 맞춤형 상담기능 확충 • 애프터 케어(after care) 프로그램 구비 • 원스톱 솔루션 플랫폼 구축 • 온라인 처리시스템 구축
新 서비스업 창출기반 조성	육성기반 구축	• 서비스 R&D 연구센터 설립
	지원체계 구축	• 서비스 창출지원 네트워크 구축
사회 서비스 공급기반 및 사회적 경제 육성	공급기반 구축	•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기업육성	• 사회적기업 1,000개 육성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서비스 위탁 확대 •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전통시장활성화 및 영세자영업자 보호	시설·경영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현대화(60개소) • 경영마인드 제고(마케팅 교육 등)
	조례개정	• SSM 입점규제 조례 개정
	컨설팅 및 물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자영업자 컨설팅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천안, 예산)

제 3 장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매력적인 지역문화 창달

1.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문화기반 조성

2. 편리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특화자원 개발

1.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문화기반 조성

가. 현황과 문제점

■ 다양하고 풍부한 전통문화자원 보유

- 역사적으로 충남은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 등 2개의 문화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함
- 충남지역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06점, 시도지정문화재 723점, 등록문화재 34점 등 총 963점이 분포됨
-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 보물, 사적, 중요민속 등의 유·무형문화재는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내포문화권을 대표하는 예산, 서산, 홍성지역 등에도 다수의 문화재가 분포함

■ 문화권별 차별화된 개발과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배려

- 물리적인 개발이 완료 단계인 백제문화권은 문화콘텐츠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고 내포문화권은 문화권역의 확대를 통해 소외된 지역에 대한 문화적 정체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문화권형 정비사업과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연계개발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 보유

- 충남의 문화시설 규모는 총 240개소로서 전국의 6.4% 수준임
- 문화시설별 현황은 공공도서관 21.0%, 청소년수련시설 18.0%, 박물관 16.0% 공연장 15.0%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미술관은 박물관(39개)과 달리 5개소인 2.0%에 그치고 있어 미술관 전시시설 확충이 시급

■ 커뮤니티형 문화공간의 부족과 낮은 활용도

- 커뮤니티형 문화공간으로서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의 집(10개)이나 문화원(17개) 등이 있음(2010년 기준)
- 대표적인 문화예술시설인 문예회관은 총 15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문예회관은 활용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¹⁴⁾

14) 이러한 점에 있어서 금산다락원 생명의 집은 문예회관 구성에 시사점을 주고 있음. 8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중심으로 보건소, 노인의 집, 청소년의 집, 장애인의 집 등을 비롯한 복지 관련시설과 금산문화

■ 저조한 문예활동과 주민들의 문화향수 욕구 증대

- 2009년 현재 등록된 전국 2,440개 단체 중 45개(1.8%를 차지)의 공연단체가 활동하고 있음
- 문화예술단체와 활동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충남지역의 문예활동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저조한 실정임

■ 풍부한 문화콘텐츠 소재 및 첨단문화산업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

- 첨단문화산업 관련 창작소재 풍부, 국제규모의 향토축제 개최, 영상·음향기기 등의 하드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연계가 가능하고, 영상문화복합단지·영상애니메이션테마파크·영상미디어센터 등의 핵심플랫폼을 통한 장비구축 및 공간확보가 용이하며, 첨단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및 R&D기관이 분포되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함

나. 여건변화와 전망

■ 지역발전에 있어서 문화전략의 역할과 중요성 증대

- 1990년대 이후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각 지역들은 지역의 발전과 활성화 전략으로서 문화이미지전략을 채택
- 지역발전전략으로 문화전략적 관점에서 지역마케팅, 지역이미지 전략, 도시활성화 전략 등을 과감히 도입하고 있음

■ 지역의 자율성 증대와 창조적 문화예술 진흥 추진

- 지역이 주도하는 특색 있는 지역문화의 진흥과 문화향유의 기회균등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세종시 및 내포신도시건설에 따라 충남지역 문화발전의 새로운 기회 도래

- 세종시, 내포신도시건설을 계기로 단위문화시설 확충과 지원, 백제문화권 및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의 문화진흥사업은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게 될 것임

■ 지역발전, 복지, 생활환경에 있어 지역문화의 역할 증대

- 공급자 중심에서 향유자, 수요자 중심으로의 문화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임
- 향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계되는 문화환경 구축, 문화를 골고루

원, 스포츠센터를 집적화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며 지역의 중심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 조성 등으로 문화정책 대상의 확대가 기대됨

■ 산업고도화에 따른 문화콘텐츠 및 문화산업의 급속한 발전

- 문화콘텐츠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유발효과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큰 점을 감안할 때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충남도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

다. 계획의 기본방향

■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통한 개성있는 역사문화공간 조성

-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에 산재한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의 개발·보존·복원을 추진
-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공간 조성(박물관, 전시관, 향토사료관, 공연장 등)을 통한 지역문화 창달 및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
-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시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간의 문화 향유기회를 균등화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문화시설을 확충

■ 커뮤니티형 문화공간 확충과 문화네트워크 구축

- 문화, 경제, 생활이 어우러진 중심지역에 커뮤니티형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에 필요한 다양하고 품격 높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생활 밀착형 문화시설인 문화의 집, 문화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
 - 따라서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 특정 장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시설의 확충에 편중하는 것보다는 균등한 문화향수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문화시설을 파악하여 균형적으로 확충
- 지역별 문화공간과 세종시, 내포신도시의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교류 및 발전을 촉진
 - 세종시와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고품격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경우 충남도민의 문화향수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문화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문화향수 기회를 부여

■ 지역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

- 창조적인 지역문화활동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기금, 연계축제

개발을 추진

- 충남 문화예술 단체와 연계한 지역문화활동 촉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 특히, 미술·사진 관련단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충청남도 차원의 도립미술관, 종합문화시설 건립 등을 추진
- 지역주민들이 문예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체계를 구축
- 지역의 주요 문화제, 시설, 문화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문화예술활동 종합지원체계를 확립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개발사업

■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역사문화 정체성 확보

- 충남의 지정 및 미지정 문화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보존을 위한 연차적 발굴 및 정비사업을 추진
- 백제문화권(공주, 부여, 논산 등), 내포문화권(서산, 홍성, 예산, 태안, 당진 등), 기호유교문화지구(논산, 계룡, 금산 등)를 중심으로 한 개성 있는 역사문화환경을 조성
 - 공주과 부여는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및 문화재보호법 등에 근거하여 역사고도로 조성하고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육성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과 내포의 역사유산을 활용한 면천 역사문화도시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기호유교문화권 사업을 충남, 대전, 충북이 참여하는 광역 문화권형 사업으로 추진
- 유무형의 역사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적 유산이 남아있는 해미, 면천지역에 전통민속마을을 조성

■ 지역별 커뮤니티형 문화공간과 문화복지 기반시설 확충

- 도시의 공공공간을 지역주민의 생활, 경제, 활동의 핵심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교류·창조의 공간으로 육성
 - 4대강 사업과 연계한 문화가 흐르는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
 - 시군의 도시 중심가로, 광장, 소공원, 문화시설이 연계된 도시 공공문화공간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육성
 -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를 풀뿌리 문화공간으로 활용
 - 문화시설 확충보다는 규모가 작더라도 생활권 내 문화예술 활동 강화를 위한

문화의 집을 확충

- 미개원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확충하며 조성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통한 대상 선정
-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하여 문화적인 감성과 지성,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주민, NGO, 학교 등과의 협력모델 구축을 통하여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간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 문화예술공간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컨설팅 사업 추진
- 도내 지역별 문화기반시설별로 지역여건과 주민수요를 고려하여 잠재력 있는 문화공간을 특성화된 대표시설로 육성
- 전문 문화공간(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과 예술인, 단체 등을 연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

■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여건조성 및 지원

- 문화예술인과 문화향수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
 - 충남의 문화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등에 편중되어 있으며, 순수공연장은 문예회관이 전부임
 - 문화예술 장르 중에서 미술관련 문화예술단체가 많고 관심이 높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도민들에게 질 높은 미술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세계적인 규모의 미술관 건립을 추진
-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등의 계승발전 지원책을 마련하고, 문화와 산업을 연계하여 지식산업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
- 폐교 등을 활용한 도예촌, 문화문예촌, 문예전수관 등을 건립하여 창작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여건이 어려운 사립문화시설의 문예활동을 지원

■ 지역문화 기반의 문화콘텐츠 개발

- 충남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문화소재를 발굴하고, 문화콘텐츠화를 통한 지식문화산업 기반을 구축
-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관련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산업을 특화 육성

■ 찾아가는 문화예술서비스 강화

- 도시지역까지 거리가 멀고 소규모 인구가 산재해 있어 각종 서비스의

공급효율이 낮아 문화예술 향수기회가 거의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문화예술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정기적으로 제공

- 노인 등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서는 맞춤형의 찾아가는 문화예술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표 II-10〉 문화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개발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문화재단 설립 · 국립 예술단 활용 소외계층 공연지원 확대 ·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 지원 활성화 · 도립예술단/충남연정국악원 육성 (천안, 공주, 부여 등 3개 예술단) · 문화예술인 기념화사업 · 면천 두견주 전수회관 건립 · 근대건축유산을 활용한 문화거리 조성
역사·문화 자원의 체계적인 정비·복원	역사문화 자원 보존·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업 추진 · 도 지정문화재 주변지역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역사와 도시자원의 조화로운 개발 · 전통 역사문화센터 조성 (공주 공예공방촌, 부여백제기와 문화센터 등) · 지정·미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16개 시·군, 40개 국가지정문화재) · 전통사찰의 보수·정비(전통사찰 80개소) · 국립 태안 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
	개성 있는 역사문화 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부여 고도보존 사업 ·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 · 백제역사 아카데미 운영 · 내포문화권 역사·문화 관광자원 발굴 및 복원·정비사업 · 당진 면천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 · 충청 유교문화권 개발(충남, 대전, 충북 등)
커뮤니티 문화공간 확충과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내포신도시 1개소, 43,000㎡) · 충남도립 미술관 건립(내포신도시 1개소, 14,900㎡) · 충남도립 도서관 건립(도내 1개소, 9,000㎡) · 작은 도서관 건립 및 운영 · 이야기와 역사가 있는 충남문화길 조성 (충남 예길 및 솔바람길 등) · 지역문화시설 조성(당진시립박물관, 심훈문학관, 사료관, 과학관 등) ·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2. 편리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특화자원 개발

가. 현황과 문제점

■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기반구축은 미흡

- 충남은 국토의 중심에 있으며 자연공원, 관광지, 골프장, 온천, 관광농원, 자연휴양림 등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
- 온천지구는 온양, 도고, 덕산, 아산 등 16개소가 운영 또는 개발 중이고, 골프장은 11개소가 운영 중이고 2개소가 건설 중이며, 태안군에 골든베이 골프&리조트와 태안기업도시내 골프장 6개소가 조성중임
- 지정관광지는 2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태조산, 구드래관광지, 곰나루 3개소만이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 지정관광지의 대부분이 관광지 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대체로 개발이 지연되거나 재원부족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해수욕장은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에 총 49개소가 분포하며, 태안군과 보령시 소재 해수욕장의 이용객이 가장 많음
- 자연휴양림은 칠갑산, 안면도, 만수산, 성주산, 용봉산, 금강, 남이, 용연, 영인산 등 14개소와 수목원 및 식물원 14개소가 운영 중임

■ 관광거점도시 개발을 위한 관광지원시설 미흡

- 관광숙박시설은 관광호텔이 17개소, 가족호텔 1개소, 콘도미니엄 13개소가 있으며, 증가하는 관광숙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등이 건설 중에 있음. 향후 주5일 근무제의 정착에 따라 콘도미니엄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관광숙박시설은 아산시에 11개소가 집중 분포되어 지역적 편중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관광거점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고급 숙박시설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임
-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종합·전문휴양업으로는 천안시의 천안상록리조트와 천안종합휴양관광지가 운영 중이며, 아산시의 온천을 주제로 한 아산스파비스, 파라다이스 도고지점이 있고 금산 추부면에 위치한 서대산드림리조트가 전문휴양업으로 운영 중임
- 관광안내시설로는 천안시 관광안내소를 비롯하여 19개소(대전역 포함)의 상설안내소가 있으며 관광, 교통, 문화, 유적지 안내 등 서비스 제공

■ 풍부한 인문관광자원에 대한 관광상품화 미흡

- 시·군별로 다양한 농수산물에 있으나 관광상품화에는 미흡함

■ 지역특성의 문화관광축제를 관광자원으로 육성

- 2010년 현재 충남지역에는 93개의 문화관광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이 중 보령머드축제, 한산모시문화제, 금산인삼축제, 강경젓갈축제, 성웅이순신축제 등 5개 축제는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됨

나. 여건변화 및 전망

■ 광역교통망 개선과 대규모 프로젝트에 따른 관광수요 급변 예상

- 충남의 관광객은 향후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 백제·내포문화권 개발 등으로 크게 증대할 것임
- 중국 관광객의 증가로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할 전망임

■ 고령화 사회와 새로운 관광수요층으로 부상하는 시니어

- 사회활동에의 참여가 줄어드는 만큼 여가시간이 많이 늘어나기에 관광은 노인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본격적인 실버관광의 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하고 있으며, 관광시장의 핵심소비계층으로의 부상을 의미함

■ 휴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 여가와 휴양은 예방적 건강상품이라는 점에서 향후가치가 주목받음
- 특히 충남의 경우 천연의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태안의 휴양자원과 11개의 온천지구, 금산 인삼 등의 건강식품 등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 방문객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곳임

■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체험소비 확산

- 관광산업에 있어서 체험소비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벗어나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체험관광과 연관성이 있음
- 충남의 경우 선불교의 중심지로서 현재 갑사, 마곡사 등의 9곳에서 참선을 중심으로 한 템플스테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충남에는 8곳의 천주교 성지가 있어 이를 활용한 종교체험관광의 활성화가 요구됨

■ 관광홍보 수단의 다변화

- 관광홍보 수단에 있어 충남의 경우 크게 홈페이지와 관광안내소를 통

한 관광홍보를 주로 하고 있음

- 관광객들의 주요 정보획득 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여행전문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통한 홍보방안이 요구됨

■ 녹색관광의 관심 증대

-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녹색성장의 관심 증가에 따라 녹색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향후 길 관련 상품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녹색관광 상품의 개발이 필요

■ 고급형 문화관광수요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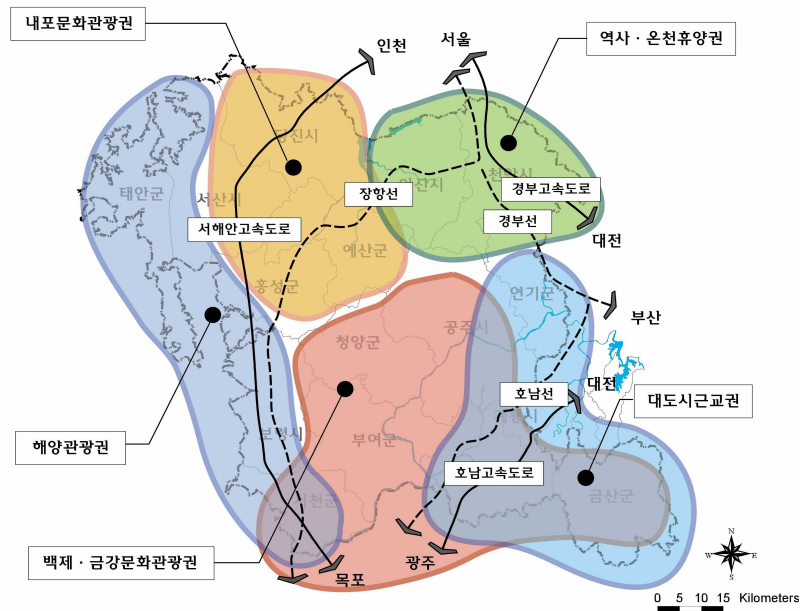
- 여가시간 증대,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관광객의 욕구가 테마추구형, 모험추구형, 스포츠·레저, 휴양, 자연친화형 등으로 다양화될 것임
-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시설중심의 관광에서 지적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추구형으로 관광형태가 전환될 것임.
- 또한 골프, 해양스포츠(요트, 스쿠버다이빙, 크루즈 등) 등의 고급레저 스포츠와 오페라, 뮤지컬 등 고급문화예술이 대중화되면서 지역에서도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다. 계획의 기본방향

■ 미래지향형 관광기반 구축과 관광거점 도시별 관광자원 개발

- 자원의 특성과 동질성, 관광객 이용성향 기준으로 내포문화권, 기호유교문화권을 포함하는 백제·금강문화권의 2대 문화권역과 역사·온천휴양권, 해양관광권, 대도시근교권 등 5대 관광권으로 구분하여 연계형 관광자원을 발굴·육성
- 새로이 건설되는 세종시와 내포신도시를 국제적 수준의 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
- 휴양과 웰빙 관광객을 위하여 온천이 집중한 도시에 온천·보양관광도시를 개발
- 백제문화권과 세종시를 연계하는 배후지역에 역사문화관광도시를 개발
- 환황해권 관광기능을 수용하는 서해안관광벨트 중심의 해양관광휴양거점 전진기지를 조성

〈그림 II-12〉 5대 관광권역



■ 관광명소의 발굴·육성과 상호 연계

- 해안과 내륙의 경관자원, 자연특이현상, 희귀한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생태명소관광지를 육성
- 충남의 다양한 역사자원, 생태자원과 체험·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테마관광중심지구를 개발
- 기존 농어촌 관광마을과 재래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농·산·어촌의 판매·가공관광을 결합하여 체험관광마을로서 녹색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제공하여, 도시·농촌간 교류·공생의 장으로 조성

■ 테마 관광벨트와 스토리가 있는 길사업 추진

- 관광자원의 분포특성과 테마를 연계하여 상호 네트워크형의 테마 관광벨트를 구축
- 친환경 관광으로 각광받고 있는 걷고 싶은 길 사업을 충남의 특색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길사업으로 추진

■ 미래 관광수요에 적합한 문화콘텐츠 상품의 제공

- 웰빙문화의 확산에 따라 건강을 주제로 한 차별화된 관광지 조성 및 먹거리 서비스 제공과 상품 개발
- 미래 관광수요를 고려한 해양·수변레포츠형 위락시설을 개발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

- 금강을 활용한 수변레포츠 시설 확충, 서해 바다를 활용한 바다낚시 공원 조성
- 한류 대중문화를 충남의 자원과 접목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

■ 첨단 관광마케팅 강화와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상품 육성

- 지역의 대표 문화관광축제를 세계적 축제로 집중 육성하고, 국제규모의 메가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
- 관광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인력을 육성하고, 관광서비스 시설을 질적으로 향상
- 제3세대 미디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첨단 IT기술과 SNS용 관광홍보 활동을 강화

라. 세부추진 시책 및 주요 개발 사업

■ 미래지향형 관광기반 구축과 관광거점 도시별 관광자원 개발

- Pine Coast 해양관광휴양 거점 조성
 - 보령, 태안, 서천의 해양관광권을 해양, 연안, 생태, 휴양 등의 해양휴양관광지역으로 개발
 - 보령, 태안, 홍성 일대를 서해안관광벨트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국제적 해양관광휴양벨트로 구축
 - 안면도국제관광지(지포지구 포함) 조성,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 태안관광레저기업도시 건설, 대천해수욕장 및 원산도관광지 개발
- 백제 고도 역사문화 관광도시의 개발
 - 공주와 부여, 논산, 청양 등을 거점으로 백제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한 백제 고도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개발하여 세종시의 배후 관광도시로 육성
 - 주요사업으로 공주부여강경 고도 옛모습되살리기 추진,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백제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 추진, 논산 백제군사박물관 주변 역사관광지 조성, 금강생태공원 조성, 금강변 휴양시설 확충 등을 추진
 - 백제·금강문화관광권을 백제역사문화자원, 금강 생태축과 연계한 문화역사생태관광지로 특화 발전
- 지정관광지 및 자연경관 명소관광지 육성
 - 기존 지정관광지, 해안관광도로, 관광미항, 마리너시설, 경관명소관광지 등을

- 대상으로 명소자원을 특화 개발
- 해안과 내륙의 경관자원, 자연특이현상, 희귀한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테마명소 관광지를 지정 육성
 - 기존 지정관광지 재정비 및 특화조성, 오서산·용봉산 산림휴양타운, 백제호 관광단지 등 지역의 자연환경에 맞는 명소관광지를 조성
 - 해안의 안흥·보령·홍원·남당·삼길포항 등 관광미항 건설, 해안도로·산악 경관명소 관광지 조성 등을 시범 육성

〈표 II-11〉 관광권역 설정 및 관광특화

구 분	범 위	거 점	부거점	개발방향
백제·금강문화 관광권	공주, 논산, 부여, 청양, 금산, 서천, 계룡	공주 부여	논산	백제역사문화자원과 금강 생태축을 연계한 문화·역사·생태관광
내포문화 관광권	서산, 당진, 홍성, 예산	예산·홍성 (내포신도시)	서산	내포문화권의 인물, 종교, 민속자원과 연안 관광중심의 역사문화·해양관광
해양관광권	보령, 태안, 서천	보령 태안	서천	안면·보령의 해양관광거점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연안, 생태, 휴양 등의 해양휴양관광
역사·온천 휴양권	천안, 아산	아산	천안	충절의 역사문화자원과 온천자원을 연계한 역사·문화·휴양관광
대도시 근교권	공주, 논산, 연기, 금산, 계룡	연기 (세종시)	계룡	대도시근교형 관광위락지역으로 세종시, 산악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휴양·도시·문화관광

주: 관광권역은 입지 및 자원특성에 따라 중복 설정

〈그림 II-13〉 관광거점도시의 위치와 상호 관계



■ 관광명소의 발굴·육성과 상호 연계

- 종교·인물·유물 등 역사테마 관광지 개발
 - 충남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수목적 관광상품으로 역사인물탐방, 불교문화탐방, 천주교성지순례 등 다양하게 개발
 - 역사자원 관광상품화를 위한 관광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제공
 - 조성되고 있는 한국최초 성경전래지 성역화사업, 침례교 최초선교지 성역화 사업, 사찰문화체험(템플스테이), 역사인물탐방, 봉선리유적 공원화 사업, 기벌포 문화거리 조성, 황도 관광지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태안 기름유출 주변지역을 환경관광중심지구로 개발하고, 서해안에서 생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고, 교육과 관광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
 - 국립·도립자연공원, 서해안의 갯벌, 강과 하천의 수변자원, 해안사구, 담수호와 산악계곡 등의 환경자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태교육 및 체험중심의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개발
 - 태안환경관광지구, 서산A·B지구 생태공원, 탐정호생태공원, 금강하구·유부도 생태공원, 신성리 갈대밭 체험장, 구)장항제련소 생태교육장, 청양 지천지구 및 칠갑산 토템 생태자원,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죽도 생태공원 조성 등 추진
- 농어촌 관광마을과 재래시장의 관광자원화
 - 농산어촌의 판매·가공·관광을 결합하여 체험관광마을로서 녹색관광상품을 개발
 - 농·산·어촌의 어메니티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제공하여 도시·농촌간 교류·공생의 장으로 조성
 - 농어촌 관광마을을 갯벌체험민박마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철새민박마을 등과 연계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 육성
 - 서해안 독살 체험프로그램 등 지역의 독특한 농어촌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 지역별로 특색 있는 시골장터를 특색관광시장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 읍면단위 시골장터를 지역특산물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하여 주말 관광시장으로 개발하고, 강경은 첫갈음식문화관광지구로 조성

■ 테마 관광벨트와 특색있는 길사업

- 서해안·역사문화·산악·금강생태 문화관광벨트 상품 개발
 - 지역적으로 분포된 자원의 특성에 따라 서해안문화관광, 역사문화체험, 산악건강체험, 금강생태문화관광벨트 등을 조성
 - 해안과 역사문화, 산악, 금강생태 등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테마자원간에 문화관

광벨트를 조성하여 관광코스로 개발

- 해양, 역사문화, 온천 자원은 청주공항과 평택·당진항을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상품을 제공하는 문화관광벨트로 개발
- 주요 사업으로는 서해안관광벨트 조성, 산악관광벨트 조성,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서해안 갯벌탐사 관광루트 조성, 금강변 생태관광벨트 건설 등을 추진

〈표 II-12〉 관광벨트별 개발방향

구 분	해 당 코 스	개 발 방 향
서해안문화 관광벨트	당진-서산-태안(태안환경관광지구/태안 해안국립공원)-홍성-보령-서천	해양자원과 내포문화권을 연계한 국제교류지대 형성
역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천안-아산-예산-홍성-청양-부여-공주	내포·백제문화와 온천자원 등을 연계한 역사체험휴양지대 형성
금강생태문화 관광벨트	서천-논산(강경)-부여-공주(금강)	백제문화권, 금강 연계 생태탐방 및 문화체험
산악·건강체험 관광벨트	예산(덕산, 가야산)-홍성(용봉산)-청양(칠갑산)-공주(계룡산)-금산(대둔산)	등산, 산악레포츠 등 산악체험 및 휴양

〈그림 II-14〉 문화관광 네트워크형 광역 관광벨트



• 충남의 특색있는 길 사업

- 금강역사문화길, 서산 아라메길, 태안 솔바람길·방재로길, 금산 인삼건강길, 당진버그네순례길 등 걷고 싶은 길 사업 추진
- 해안과 금강내륙으로 이어지는 생태자원, 철새도래지, 금강변 경관자원을 직접

- 경유할 수 있는 금강변 테마관광도로를 이용한 충남의 특색있는 길 사업을 추진
- 백제문화와 서해안 휴양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길과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는 길 사업 등을 통해 관광효과를 극대화
- 주요 사업으로 지천 100리길 조성, 내포문화숲길, 서산아라메길 조성 등 추진

■ 미래 관광수요에 적합한 문화콘텐츠 상품의 제공

- 가족·건강·체험관광형 웰빙관광상품 제공
 - 아산의 온천을 활용한 가족 건강문화 체험장을 조성하여 전세대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천건강문화 클러스터를 조성
 - 금산의 산림생태를 활용한 문화체험단지 및 지역의 인삼·약초를 활용한 체험단지를 조성
 - 예산의 슬로시티, 삽교호 생태습지공원을 관광자원화 하여 느낌의 여유를 찾는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유로운 쉼의 공간으로 제공
 - 기존의 농촌관광마을을 유기농 리조트로 조성하여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지역의 유기농 식품을 이용한 자기치유관광의 대상지로 상품화
 - 보령의 머드 등과 지역의 다이어트 음식을 결합하여 뷰티관광상품을 개발
- 해양·항공레포츠형 위락시설 개발과 연계 프로그램 구축
 - 해양수상레포츠를 위한 보령, 서천, 홍성, 당진 등에 마리너시설을 조성
 - 항공레저스포츠 기반시설로서 공주, 태안, 서산 레포츠용 경비행장 시설을 조성
 - 금강을 중심으로 한 수변레포츠 시설로 창벽레포츠단지 등을 조성하여 기반시설과 연계
- 한류 패키지 외국인 관광상품 개발
 - 관광상품 및 서비스, 관광관련 업소 등에 대해 인증제를 실시하여 외국관광객에 대한 신뢰도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 전담여행사 운영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
 - 청주공항과 연계하여 온천과 백제·내포·서해안 연계 관광패키지 상품 및 관광코스를 집중 개발

■ 첨단 관광마케팅 강화와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상품 육성

- 문화관광축제의 세계화와 메가이벤트의 정기 개최
 - 충남의 대표 축제인 공주·부여 백제문화제 통합 개최
 - 금산인삼제, 보령머드축제, 한산모시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강경젓갈축제, 흥타령축제, 당진 기지시줄다리기 등 충남의 지역문화제를 세계적 문화제로 육성
 - 세계 군문화 엑스포 개최, 서천 국제 생태환경엑스포 등을 추진하고, 이를 정기

개최하여 지속성 확보

• 관광서비스 및 지역 문화관광 인력 양성

- 급증하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음식, 쇼핑, 안내·해설 등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관광인력을 전략적으로 양성하고, 사업체 종사자들에게 대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제도를 활성화하여 지속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숲해설사, 생태해설사, 레포트지도사 등의 다양한 문화관광 인력을 단계별로 양성

• 소통과 공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다양화

- 홍보·관광안내정보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도권 대상 홍보마케팅을 집중 추진
- 충남관광에 대하여 모든 관광홍보물, 관광축제, 관광설명회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상품의 통합브랜드화를 추진
- 제3세대 미디어 환경에 맞는 SNS용 관광정보 개발로 U-관광도시, U-관광홍보, U-관광안내 등과 인터넷, 모바일 관광안내체계를 강화
- 모바일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콘텐츠개발 관련 관광벤처기업 육성 및 모바일 관광콘텐츠를 생산하는 고급인력을 육성

〈그림 II-15〉 관광개발 구상도



〈표 II-13〉 관광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개발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미래지향형 관광기반 구축과 관광거점 도시별 관광자원 개발	Pine Coast 해양관광휴양 거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면도국제관광지(3,815천㎡) ·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14,644천㎡) · 천수만 생태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127만㎡) · 원산도 Seven Islands 조성 · 만리포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백제 고도 역사문화 관광도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문화관광지 조성 ·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 · 논산 백제군사박물관 주변 역사관광지 조성
	지정관광지 및 자연경관 명소관광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지정관광지 재정비 및 특화조성 · 백제호 종합개발(부여, 2,975천㎡) · 관광미항 건설(안흥, 보령, 홍원, 남당, 삼길포항 등) · 칠갑호 관광지 개발
관광명소의 발굴·육성과 상호 연계	생태관광 기반조성과 체험·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환경관광지구 조성 · 신성리 생태관광지구 조성사업 · 유부도 동아시아 철새생태지구 조성 · 탐정호생태관광지구(논산 탐정, 52,892㎡) ·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예산 예당, 109,091㎡) · 신두사구 생태공원 조성 · 황새마을 조성사업 · 장항제련소 복합문화공간 조성 · 서천 Eco-Healing 및 Eco-Learning Complex 조성
	농어촌 관광마을 조성과 관광자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 영목항 어촌어항 관광단지 조성 · 어메니티 벨리 조성(장항선 폐선 활용)
테마 관광벨트와 특색있는 길사업 추진	테마 관광벨트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국충절 관광벨트화 사업 · 칠갑호-천장호간 종합관광 벨트 조성
	특색있는 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천 100리길 조성사업 · 내포문화숲길 조성 · 서산아라메길 조성 · 당진 버그네순례길 조성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관광수요에 적합한 문화콘텐츠 상품의 제공	가족·건강·체험관광형 웰빙 관광상품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 온천건강문화 클러스터 조성 ·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 · 인삼, 약초 체험단지 조성사업 · 대천해수욕장 머드랜드 조성 · 예산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 당진 wheel-sports를 통한 녹색관광
	해양수변레포츠형 위락시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 수변레포츠 시설 조성 · 와초 수상레저 스포츠단지 조성사업 · 청양 친환경 레포츠타운 조성 · 태안 바다낚시 공원조성사업 · 부여 백마강 수상관광 개척
	한류 패키지 외국인 관광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공항과 연계한 관광패키지 상품 개발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운영 및 인센티브 지급
첨단 관광마케팅 강화와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상품 육성	문화관광축제의 세계화와 메가이벤트의 정기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축제 세계적 육성(금산, 보령, 서천, 강경, 아산, 당진 등) · 세계 군문화 엑스포 개최(계룡) · 국제생태환경 엑스포 개최(서천)
	관광서비스 및 지역문화관광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안내소 운영 지원 · 충남관광 파트너십 구축
	소통과 공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대상 집중 홍보마케팅 · 소셜네트워크(SNS) 활용 맞춤형 홍보 · 중국 등 전략시장 대상 팸투어 · 국내외 관광홍보관 운영 · 해외홍보 마케팅 강화 · 옥외매체 이용 충남관광 홍보

제 4 장

사통팔달의 교통·정보 인프라 구축

1. 전방위 교류·교역 활성화를 위한 입체적 교통체계 구축
2. 생산·물류 신중심권 구현을 위한 물류·유통기반 강화
3. 디지털복지사회를 위한 유비쿼터스 충남 구현

1. 전방위 교류 · 교역 활성화를 위한 입체적 교통체계 구축

가. 현황과 문제점

도로

■ 도로망

- 충청남도의 고속국도는 남북축으로 5개 노선이 건설되어 운영 중이며, 동서축 연결을 위한 2개 노선이 건설 중에 있음
- 일반국도는 남북 10개 노선과 동서 6개 노선이 지역간 연결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동서간 연결노선이 부족함
- 지방도는 총 37개 노선(남북 26, 동서 11)으로 충청남도 전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으나, 내륙은 금북정맥 및 금남정맥으로 가로막혀 도로의 단절 및 연장이 길어지고, 차선수도 적어 통행이 원활하지 못함

■ 도로시설 현황

- 충남은 수도권과 영·호남지역의 가교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비율이 전국에 비해 높음
- 도로연장은 총 7,543km로 전국의 7.5%를 차지하고, 72.8%의 포장률로 전국 평균(76.1%)보다 낮은 실정임
- 1인당 또는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이 전국에 비해 1/2 수준이며, 도로 밀도에 비해 포장률이 낮아 실질적으로 도로의 확포장이 필요함

■ 교통량 및 애로구간 분석

- 충청남도의 고속도로 교통량은 경북축의 교통량을 주변의 신설고속도로에서 분담하고 있어, 경부 · 대전-통영간고속도로는 감소하고, 호남 · 서해안 · 천안-논산간고속도로가 증가함
- 기존의 수도권 관련 교통량과 서해안 관광 등 여가교통량의 증가로 충남과 경기를 잇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주변과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J.C 주변에서 주말과 공휴일 및 명절에는 극심한 정체가 발생함
- 서해안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고속도로의 개통은 호남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접속부의 상습 정체현상을 완화하였음
- 일반국도의 경우는 북부지역에는 산업 및 택지개발 등으로, 서해안은 관광 목적의 교통량 증가로 22개 구간(전체 구간의 33%)에서 애로구간이 발생하고 있음

- 국도 확·포장사업의 추진으로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00)」 수립 시보다 개선되었음

철도

■ 철도시설

- 철도노선은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등 총 7개 노선에 연장 268km가 건설되어 있으며, 총 45개 철도역이 있음
- 경부선, 호남선은 도내의 동북단과 동남단에 치우쳐 있어 통과수송 위주로 지역내 여객 및 물동량 수송에 대한 기여도는 떨어지고, 내륙지역의 철도여건이 미약하며,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미흡함

■ 철도수송

- 철도를 이용한 권역내의 총여객통행은 연평균 1.5%씩 감소하였으며, 화물은 연평균 0.8%씩 감소함.
- 다만 화물의 발송톤수는 0.7%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충남지역 제조업의 증가에 기인함
- 충청권의 철도 이용객 감소는 철도와 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자동차이용으로 교통수요가 이동하였기 때문임.

항만

■ 항만시설

- 충청남도에 지정된 무역항은 5개로, 항만시설은 접안능력이 빈약하고 컨테이너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고, 주요 취급화물은 유류임
- 평택·당진항의 경우, 주로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항이 주를 이루고 있어, 충남지역의 물동량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주요 산업지역과의 연결 교통망이 확충되고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항만의 확충이 필요함

나. 여건변화와 전망

1) 여건변화

■ 동북아 경제권의 중추 역할 수행 및 국제 교통량의 증대

- EU, NAFTA 등과 더불어 동북아 경제권의 성장(2020년, 전세계의 29% 차지)에 따라 국제교류 및 물동량의 증대에 대응한 국제적 교류 거점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확충이 요구됨

■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관광지 개발에 따라 인구증가 및 교류 확대

- 세종시(50만명), 내포신도시(10만명) 등 충남지역에 건설되는 신도시로의 인구 유입과 제조업체 증가로 교통량이 급증할 것임
- 안면도국제관광지, 태안기업도시와 백제·내포문화권 및 서해안관광벨트 개발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할 전망
- 호남고속철도 건설, 수도권 전철의 내포신도시 연장으로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의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

■ 개인교통수단의 증대

- 충청남도의 자동차 보급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함
- 세종시 건설 등 택지공급으로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율은 3%이상(경제성장률 하한치)의 수준을 유지할 것임

2) 교통수요 전망

■ 자동차보유대수의 전망

- 충청남도의 증가추세를 적용하면, 2020년의 자동차대수는 1,078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통시설의 필요성 대두

- 충남지역의 관광객수는 2020년에 126,815천명으로 약 3.5%에 가까운 연평균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당일관광은 2020년 73,679명으로 연평균 3.34%씩, 숙박관광객은 53,125명으로 연평균 3.23%씩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승용차 및 전세 버스에 의한 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관광객은 개인교통수단을 80%, 대중교통수단을 20%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철도망 확충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대규모 이동이 가능한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통해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내의 시내버스시스템을 관광투어형으로 개선하여 관광지들을 연결할 필요성이 큼

■ 교통량 전망

- 충남지역은 자체 통행량뿐만 아니라 세종시 건설에 따라 수도권 등 타 지역과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
- 충남지역의 도착통행량을 목적별로 구분하면 업무 36.77%, 귀가 25.47%, 여가 18.40% 순임. 업무, 귀가 및 여가 통행량은 고속교통망의 확충과 주5일근무제의 정착 및 경제성장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충남지역의 지역간 간선교통망의 확충이 필요함

■ 장래여객 및 화물수송량의 전망

- 충남지역의 장래 화물 물동량은 2021년에 2억 2,972만톤으로 4.20%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내 물동량보다 지역간 물동량이 1.2배 더 많아 지역간 교통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다. 계획의 기본방향

■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도로망 확충

- 수도권을 비롯한 주변 광역경제권과 충남이 속한 충청권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촉진할 수 있는 지역간 기간교통망을 조기에 추진
- 세종시 및 내포신도시의 건설과 연계하여 전국에서의 접근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미약했던 지역간의 연계교통망을 기능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으로 확충

■ 산업·관광개발과 지역교류 촉진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한 철도망 확충

- 지역산업 및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연계·지원하고, 지역간 물류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철도를 건설
- 국가기간교통망과 연계한 지역내 주요 물류거점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철도망을 구축

■ 국제 직교류 거점 구축을 위한 항만개발

- 환황해권의 경제성장을 비롯하여 대중국과의 교역확대 등 국제적인 여객 및 물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해양물류기지를 조성
- 세종시의 배후항만 및 서해안 관광벨트의 거점항만을 개발

■ 항공 교통시대를 선도할 근거리 항공의 실용화와 경비행장 건설

- 충청권의 국제공항과 연계하고, 관광과 접목시켜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 등 실용적인 항공교통시설을 확보

■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체계 정비 및 신교통수단 도입

-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및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는 노선선정 및 저감방안 강구 등 환경친화적 건설을 추진
- 충남의 지역거점, 산업,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교통여건 조성을 위한 신교통수단을 도입

라.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 개발사업

1) 지역발전에 기반이 되는 교통망 확충

■ 전국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동서축과 남북축의 고속도로망 건설

- 보령-공주간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내륙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동서축을 강화하고, 서해안의 지역발전을 촉진
- 세종시로의 접근을 지원하는 외곽순환교통망으로서 공주-청원간고속도로 건설
- 당진-대전간·서천-공주간고속도로 사업 완료에 따라 북부 및 남부해안권의 산업지대와 내포신도시 및 세종시와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망을 확충
- 태안(당진)-천안간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북부권의 산업기능을 지원하고 수도권 인접지역의 병목현상을 해소
- 중부내륙고속도로(평택~부여),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및 수도권으로부터의 신속한 이동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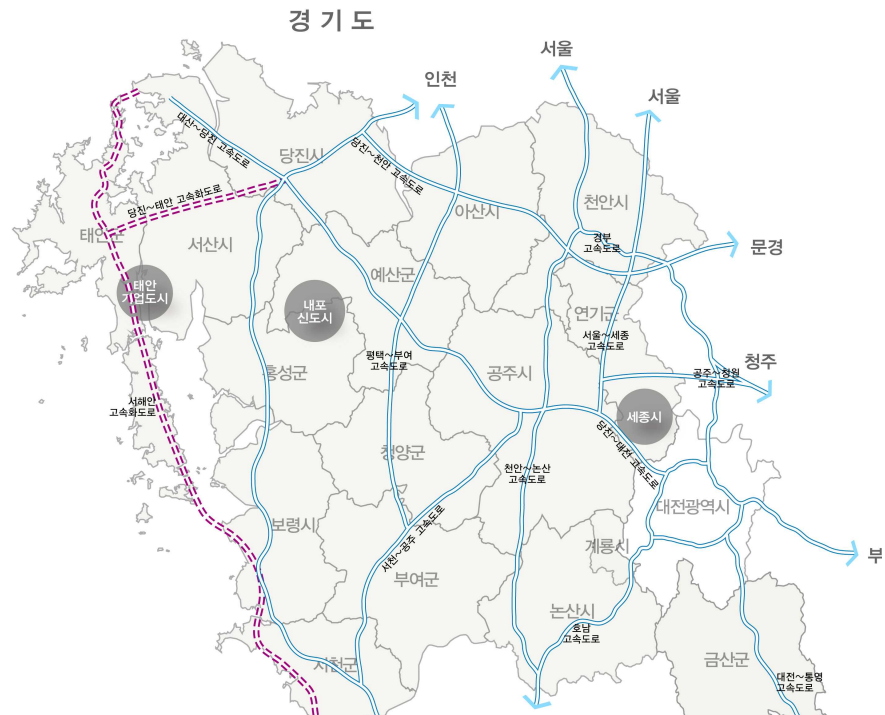
■ 내포시를 중심으로 도내 1시간 통행을 위한 고속화도로 건설

-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동서간 연결교통망, 백제문화권 및 내포문화권의 연계 강화를 위해 내포신도시~천안간고속화도로(천안, 아산지역), 내포문화연계도로(내포시~당진), 간월호관광도로(서산, 태안지역), 내포신도시~금산간고속화도로(논산, 금산지역)를 확충
- 충남의 남부지역과 주변도시간의 접근성 향상, 장항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서천-대전간고속화도로를 건설
- 내포신도시와 관련된 광역교통계획 등은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

〈표 II-14〉 고속도로 등 도로확포장 계획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고속도로	남북축 서해안고속도로, 평택-부여고속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
	동서축 당진-천안간고속도로(태안연장), 보령-공주간고속도로, 공주-청원간고속도로
	X축 당진-대전간고속도로(대산연장)

〈그림 II-16〉 고속도로 등 도로 확포장 계획



■ 지역간선도로망의 이용 극대화 및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접근성 제고

- 단기(2011-2015)적으로 충남의 지역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에 대한 확포장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 장기(2016-2020)적으로 미개통구간 확포장사업을 추진하여, 충남 전 지역의 체계적인 교통망을 구축
- 전체적으로는 시급도시 및 주요 읍면급 도시들의 도시교통 체증해소를 위하여 애로구간의 확포장 및 우회도로를 개설
- 내포신도시와 공주역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방도 및 시·군도는 국가지원지방도 및 국도로의 승격을 추진(지방도 603호의 국도 승격 검토)
- 대전광역시 및 세종시와 연결되는 주요 도로인 공주역간 순환도로는 주변 교통결절점(IC, 역, 터미널, 공항 등)과 연결하는 광역도로로 지정·추진 및 신교통시스템 도입을 검토

■ 지역문화·관광을 지원하는 연계도로망 구축

- 내포문화권-백제문화권, 서해안권-내륙권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서해안산업관광도로(당진~서천)를 정비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결된 도로를 정비

2) 산업·관광개발 촉진과 물류 효율화를 위한 철도망 확충

■ 경부, 호남고속철도의 건설로 전국적 광역고속교통체계 구축

- 북부지역은 경부고속철도(천안아산역)를 중심으로, 남부지역은 호남고속철도(공주역)를 중심으로, 서해안지역은 장항고속전철 운행으로 고속철도망을 구축

■ 4×3의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간 연계개발 촉진

- 남북4축 : 기존철도의 전철화 및 복선화 사업 추진
- 동서3축 : 장기계획 노선의 조기 완료 및 민자사업 추진
- 충청선·서해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서해산업선 철도를 천안(경부선)까지 연결하며, 천안-청주공항간 철도 건설을 착수
- 대산항인입철도 등 산업단지 밀집지역과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

■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금강관광경전철 건설

- 지역의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남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금강관광경전철(세종시~서천)을 단계적으로 건설

■ 대도시 및 역세권과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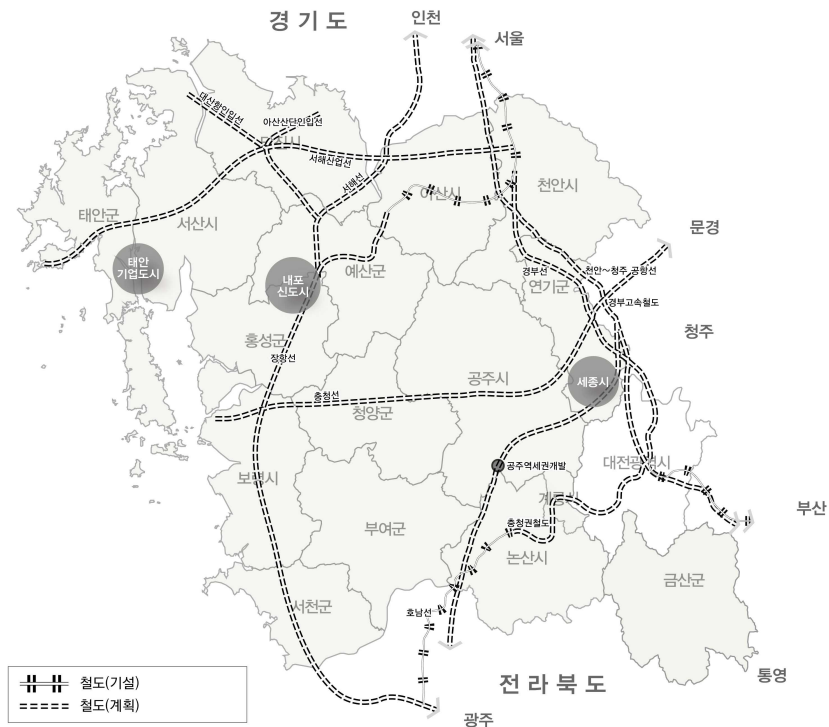
- 공주역과 세종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경전철과 세종시·대전광역시와 주변도시간 경전철을 건설
- 전철화사업 추진을 통해 수도권전철을 내포신도시와 청주공항까지 연장

〈표 II-15〉 철도계획

구 분		주요 내용
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천안아산역), 호남고속철도(공주역)
일반철도	남북축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서해선
	동서축(장기검토)	충청선, 서해산업선, 천안-문경선, 당진-대산항
전 철	경 전 철	금강관광경전철, 공주역-공주간, 기타경전철(천안-청주공항간, 대전-금산·계룡간, 세종시-조치원(청주)간)
	수도권전철	아산-내포시, 천안-청주공항 연장

※ 국가철도망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은 향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추진 계획

〈그림 II-17〉 철도계획



3) 국제 직교류 거점 구축을 위한 항만개발

■ 대중국 및 환황해권 교역거점으로서 5개 무역항 건설

- 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신항, 장항항을 대중국 산업교역의 중심항으로 육성
- 평택·당진항은 세종시 및 충남북부권에 조성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산업지원을 위한 중심항으로 육성하여 산업물동량을 처리
- 대산항은 동북아교역의 중심항으로서 충남내륙 및 해안권의 물동량 및 대규모 선박을 지원하는 무역항으로 육성
- 태안항은 화력발전소를 지원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의 급증하는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
- 보령신항은 전국 및 중국, 대북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적 크루즈어객항의 기능을 담당하는 미항(美港)으로 개발할 뿐만 아니라 환황해권의 거점항으로 무역기능을 강화
- 장항항은 장항국가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대 조성에 따른 남부권 및 대전권의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담당하는 거점항만으로 육성

■ 서해안관광과 수산업 및 지역산업을 지원하는 연안항 건설

- 대천항과 비인항, 안흥항 등을 확충하여 서해안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운 및 수산업을 지원하고, 여객항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내외 여객 및 물동량을 처리하는 중부권의 중심항으로 육성
- 지속적인 지역산업의 성장,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 및 태안해안국립공원 등 서해안 관광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안흥항을 연안항으로 지정하여 서해안지역의 발전을 도모

4) 항공 교통시대를 선도할 근거리 항공의 실용화와 경비행장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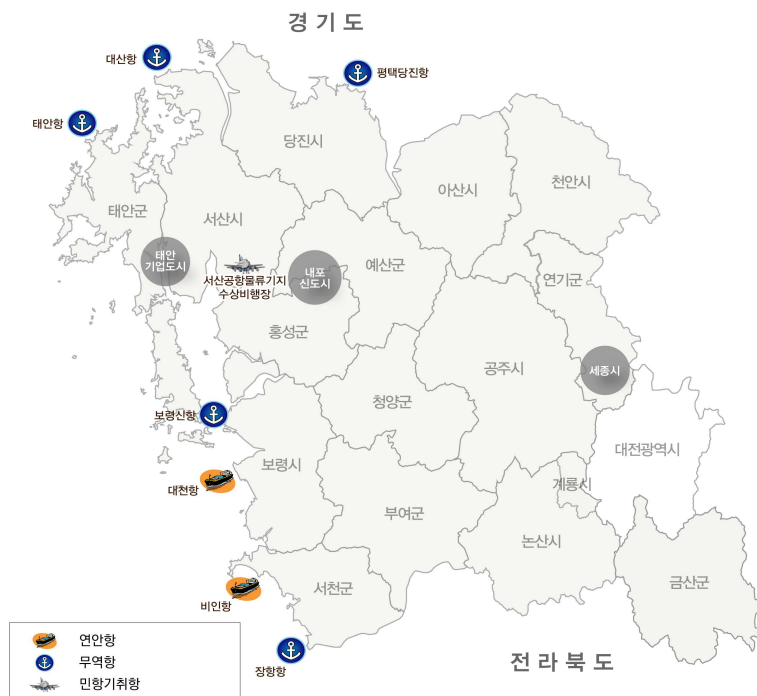
■ 서산비행장의 국제공항 보조기능 수행과 민항기 취항

- 단기적으로 태안기업도시 등 부정기 민항기 취항으로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국제공항의 보조기능 및 내포신도시의 관문공항으로 육성

〈표 II-16〉 항만, 민항기 및 경비행장 계획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항만	무역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보령신항, 장항항, 태안항
	연안항	대천항, 비인항
공항	서산비행장	민항기 취항
	수상·경비행장	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태안, 서산

〈그림 II-18〉 항만·공항 개발 계획도



- 공해를 최소화하는 연료 및 BIO연료(식물에서 추출한 기름 등)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교통수단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쾌적성을 유지

■ 농어촌지역의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정비 및 확충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농어촌교통수요를 원활히 수용하고, 배차시간노선을 유연화한 버스운송시스템을 도입하며, 다양한 보조교통수단을 장려

〈표 II-17〉 교통부문 세부 추진시책 및 개발사업

구 분		사업내용
도로	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부여고속도로(40km) · 안성~연기(세종시)간 고속도로(8km) · 서해안고속도로 6차로확장(66km) · 당진~천안간고속도로(태안연장 추가 검토)(103km) · 당진~대전간고속도로(대산연장)(24km) · 보령~공주간고속도로(45km) · 공주~청원간고속도로(21km)
	일반국도	· 12개 노선 확·포장
	지방도	· 26개 노선 확·포장
	국가지원지방도	· 4개 노선 확·포장
	광역도로	· 4개 노선 확·포장
철도	고속철도	· 호남고속철도(55.8km)
	일반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청주공항선(22km) · 충청선(보령~조치원)(89km) · 서해산업선(안흥~천안)(78km) · 서해선(화성(송산)~홍성)(43km) · 아산산단 인입철도(합덕~아산산단)(32.6km) · 대산항 인입철도(당진~대산항)(18.5km)
	전 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전철 연장(아산~내포, 천안~청주공항) · 금강관광경전철(세종~서천간, 105km) · 공주역~공주간 경전철(11km), 기타경전철(금산~대전, 논산·계룡~대전, 세종~조치원)
항만	무역항	· 평택·당진항(79선석), 대산항(44선석), 보령신항(7선석), 장항항(2선석), 태안항(3선석)
	연안항	· 대천항, 비인항
	어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어항 정비(남당항, 삼길포항, 홍원항, 안흥항) · 지방어항 정비(29개 항)
공항	공 항	· 서산비행장(민항기 취항)
	경비행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행장 6개소(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태안) · 수상비행장(서산)

2. 생산·물류 신중심권 구현을 위한 물류·유통기반 강화

가. 현황과 문제점

■ 물류기반시설 부족 및 도로 편중의 수송체계

- 1995년 이후 매년 평균 8.7%씩 증가하고 있음
- 도내 철도,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국가 기간교통망이 남북간 연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서간의 연결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동서간의 물동량 수송을 위한 철도망이 전무한 실정임

■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 미흡

- 물류업무 전반에 걸친 정보공유체계가 미흡하고, 물류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교통량을 유발하고 있음
- 물류표준화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물류활동의 기계화·자동화, 일관수송에 필요한 표준 파렛트 사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실정임

■ 도내 물류시설의 비효율적 운영 및 영세성

- 충남도의 주요 물류시설로는 연기군의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천안유통단지, 천안 및 아산의 화물터미널 등이 있으나 물류단지간 연계성 부족으로 기능이 저하됨
- 물류거점으로 활용 가능한 화물터미널 등이 환적·보관기능 보다는 알선과 대기를 위한 주차장기능을 수행중임
- 주요 물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류시설이 영세하여 시설의 대형화 및 현대화가 요구되며, 특히 산업단지와 연계된 물류단지의 확충이 시급

나. 여건변화와 전망

■ 동북아 3국(한국, 중국, 일본)간 교역 확대에 따른 물류여건 변화

-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간 교역 및 투자가 급증하여 역내 경제 의존도가 증대되고 있음
- 특히 대중국 교역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한·중국간의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동북아 경제권 부상에 따른 충청남도의 국제 물류 중심지로서 역할 증대

-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에 따른 평택·당진항 등 서해안권 항만의 중요성이 증대됨
- 환황해권 국제교류의 거점 및 동북아를 연결하는 국제교통의 중심지로써 국내외 교역량이 증가할 전망이며, 남북경제 교류활성화에 따른 북방교류의 역할이 증대될 것임

■ 항공수송 분담률 증대 및 물류네트워크의 효율화 추구

- 경박단소(輕薄短小)한 고부가가치 상품이 항공수송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대되는 가운데 항공화물터미널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
- 물류비 절감 및 교통량의 분배를 통한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해 종합정보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증대됨

다. 계획의 기본방향

■ 권역별·산업특성별 물류거점시설의 합리적 배치

- 산업특성별로 물류시설의 원활한 공급과 합리적 배치를 통해 물류비 절감과 지역 내 물류체계를 구축
- 충남을 권역별로 나누어 실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개발방식을 통한 고객 지향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유통단지를 건설

■ 효율적 물류시스템 구축

- 육상·항만물류의 정보화·표준화·고속화·자동화를 도모하여 비용절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물류정보 연계·통합시스템 구축을 모색
- 육상·해상·항공·철도부문을 포함하는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물류거점시설의 정보화 및 유기적 연계를 통한 운영효율을 극대화

■ 물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물류네트워크 구축

- 물류거점의 확충과 상호연계를 통한 기존 물류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는 물류네트워크를 구축
- 산업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지역 내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 경쟁력을 확보

■ 동북아 관문으로 물류·비즈니스 거점항만기능 확충

- 권역거점 및 지역항만을 확충하여 대중국 교역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환황해권 교역의 전진기지를 구축

- 기존 「동북아 물류중심화」 전략에서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형」 항만으로 전환

라. 세부추진시책 및 개발사업

■ 지역 내 물류권역 설정 및 Tri-port 체계 구축

- 기능적 측면의 물류권역 설정
 - 효율적인 물류유통을 위해 해양·항공·내륙 물류권역으로 구분
- 내륙·해양·항공물류기지를 입체적으로 연계한 Tri-port 기능 확충
 - 생산·물류 신중심권 구현을 위해 Tri-port 체계를 구축

■ 물류거점시설의 합리적 배치

- 권역별 육상·항만·항공물류기지 조성
 - 내륙화물 물동량 처리를 위한 중부권 내륙화물기지를 조기에 완공
 - 장항선 및 서해선철도,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평택·당진항 등을 연계하는 항만물류기지를 건설
 - 경박단소(輕薄短小)한 IT 관련제품 및 화훼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산 혹은 서산비행장에 항공물류기지를 조성
- 충남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통단지 건설
 - 연계물류거점 기지로서의 지역거점 유통단지를 건설
- 지역별 특산물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특화유통단지를 건설
 - 지역특산물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시설 및 시장이 소재한 지역은 제외

■ 효율적인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 육상·항만 물류정보화 방안
 - 항공화물터미널과 배후단지 통합정보망 구축, 일반부두 정보화 등 추진
 - 전용망 중심을 인터넷 기반으로 전환하여 정보비용 절감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고
- 물류정보 연계·통합시스템 구축
 - 항만·철도·내륙컨테이너기지(inland container depot, ICD) 등 물류 거점별·주체별로 연계
 - 금융망·해외물류망 연계를 통하여 수출입 물류 일괄처리 시스템을 구축

〈그림 II-20〉 지역 내 물류유통 계획도



■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 사업

- 공로화물, 철도, 무역 EDI와 연계하여 복합 및 일반화물터미널, 철도화물역, 공동집배송단지 등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
 - － 유통정보화(POS)시스템 구축, 지능형 교통시스템(ITS)과 연계한 공로화물 정보체계를 구축
- 물류 표준규격 미비 분야를 대상으로 물류표준화 사업
 - － 포장의 모듈화 추진, 수송용 표준 파렛트를 ‘국제표준화기구’ 기준으로 규격화

■ 물류유통단지 및 물류·유통단기간 체계적 물류네트워크 구축

- 천안권 물류·유통단지, 중부권내륙화물기지 등 도내 주요 물류·유통단기간 상호 연계기능을 강화
-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여 물류단기간 하드웨어적 연계기능을 강화
- 육상·해상의 개별정보망과 항만물류정보·통관·무역 등 유관 정보망이 연계된 물류정보망을 구축

■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기능 강화

- 권역 내 제조기업의 대중국 수출증가로 인한 물동량 확대에 대응

- 항만의 하역능력 확충, 주변 산업체의 항만이용 지원시설을 확충
- 선진 물류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 물류 인프라 확충으로 최적의 기업 입지여건 조성
 - 기존 인천, 부산, 광양권 등 물류중심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된 첨단산업항만(High-tech Industry Bay) 조성을 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
 - 생산 및 연구개발 기능, 항만물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
- “On-Dock 시스템”의 구축
 - 컨테이너 부두에서 하역·보관·운송의 일괄처리 시스템 구축,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LBS), 자동차 네비게이션 시스템(car navigation system, CNS), 모바일(mobile technology) 등의 연계 결합

〈표 II-18〉 물류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개발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물류유통시설의 합리적 배치	물류기지	· 보령신항물류기지(330천㎡) · 서산공항물류기지(165천㎡)
	화물기지	· 중부권화물기지(1개소 : 연기 동면, 479천㎡)
	거점유통단지	· 천안 유통단지(464천㎡) · 아산 유통단지(330천㎡) · 공주 유통단지(330천㎡) · 당진 유통단지(330천㎡) · 논산 유통단지(198천㎡) · 보령 유통단지(541천㎡) · 장항 유통단지(330천㎡)
	특산물유통단지	· 서산 수산물유통단지(165천㎡) · 홍성(남당) 수산물유통센터(2,645㎡) · 예산 거점산지유통센터(과수원예, 25,124㎡)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사업	· 통합정보망 구축 및 인터넷기반 정보화 · POS 및 ITS와 연계한 공로화물체계 구축 · 모듈화 및 규격화 · 전자무역 결제 및 인증시스템 구축 ·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500개소)
	물류정보연계·통합 시스템 구축	· 수출입물류 일괄처리시스템 구축 · 물류거점별·주체별 연계시스템 구축
	물류·유통단지간 체계적 물류망 구축	· 도내 주요 물류·유통단지 상호간 연계기능 강화
	물류단지간 하드웨어적 연계기능 강화	· 도로, 철도, 항만 등 SOC 확충
	물류네트워크 구축	· 개별정보망과 유관정보망 연계기능 강화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 기능강화	항만기능강화	· 첨단산업항만(High-tech Industry Bay) 기능 강화
	일괄처리시스템	· On-dock 시스템 도입

3. 디지털복지사회를 위한 유비쿼터스 충남 구현

가. 현황과 문제점

■ 정보통신인프라 및 활용기반이 매우 취약

- 충남의 인터넷 이용률은 68.4%로 전국 평균 77.2%에 비하여 비교적 낮으며, 이용률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매우 낮은 14위임
- 충남의 정보통신산업분야의 발전 수준은 상당히 낮으며, 특히 정보통신 서비스는 14위, 컴퓨터 관련 서비스는 13위 하위 수준임

■ IT 발전으로 인한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 심화

- 고령화사회의 디지털 소외현상과 디지털기술의 확산으로 인한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문제가 발생됨

■ 사이버 침해 및 인터넷 중독 등의 정보화 역기능 발생

-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 및 확산에 따라 사이버 침해와 인터넷 중독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u-충남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보화 사업의 추진 중임

- 정보공유 및 저소득층 정보 격차 해소 사업, u-충남 구현을 위한 u-City 조례안 제정, u-City 공모사업, u-농촌관광시범사업 등이 추진됨
- 또한 도민 서비스 질 향상 및 u-충남 실현을 위한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됨

나. 여건변화와 전망

■ 첨단 국토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통한 국토관리 선진화

- GIS,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시설 및 정보활용의 첨단 인텔리전트화가 추진될 것임

■ 공간을 매개로 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시대로 급변

-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디지털 서비스의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정부는 지식정보사회를 위한 기반을 마련
- 정보통신은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되는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급진전하며 사회전반에 지능화, 융합·복합화, 광대역화가 빠르게 확산될 것임

■ 정보화 촉진 시대에서 지식정보의 활용시대로 전환

- 인터넷 활용의 다양화, U-도시 정보화 확산 등 사회환경변화가 예상됨
- 방송·통신 융합(컨버전스), 지식정보화 등의 정보화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인터넷·PC를 보급한 정보화 촉진시대에서 정보의 활용시대로 전환될 것임

■ 스마트 보급 및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등 새로운 정보환경 적응력 요구

- 모바일 인터넷 환경 고도화 및 스마트 기기 보급 확산에 따른 국내의 정책의 다변화 및 관련 시장이 성장할 것임
- 각 분야에서 콘텐츠 활용 극대화를 통한 스마트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임

■ 국토의 유비쿼터스화 및 정보통신융합도시(U-City) 등 추진 중임

■ 그린 정보통신기술(ICT)과 국가정보화 패러다임 변화

■ 국가차원의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 침해에 관한 적극적 대응이 추진 중임

다. 계획의 기본방향

■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u-충남 추진

- 유비쿼터스 시대와 모바일 시장 성장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쟁력을 제고
- 유비쿼터스를 이용한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형 uIT-충남을 구현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u-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한 각종 시범모델과 서비스를 구현
- 지능정보기반의 신도시환경을 제공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구축의 발판을 마련

■ 정보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정보화 추진으로 u-녹색행정 구현

- 정보통신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도내 모든 지역이 고품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광대역통합망, U-센서 네트워크¹⁵⁾,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v6)¹⁶⁾ 등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통하여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도민생활의 편익을 증진

15) U-센서 네트워크(Ubiquitous Sensor Network)는 물품 등 관리할 사물에 아주 작은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이용하여 사물의 정보(Identification) 및 주변환경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 관리하는 것

16) 종전의 인터넷 프로토콜(IPv4)은 5~9억 개의 인터넷 주소를 제공하나, IPv6는 인터넷 통신 이외에 이동전화, 스마트 정보가전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128비트 차세대 프로토콜임

- 최신 모바일 기술과 행정업무의 접목을 통해 U-행정을 구현하고, 대민 서비스 품질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
- 3차원의 고차원 공간정보를 통해 업무향상 및 도민 생활 편의 도모
- 녹색정보화(Green Informatization)¹⁷⁾ 추진 및 민간부문으로 확산
 - 공공부문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및 친환경·저탄소 업무환경 조성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여 탄소배출 감축 및 녹색정보화 구현, 정보화 장비의 전력사용 절감을 위한 Green IT 시스템을 구축

■ IT 자원을 활용한 공공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체감형 정보사회 구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하고 지역간의 IT 기반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도시네트워크를 구성
- IT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예방 및 대응 가능한 공공의 보편적 사회안전망 구축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를 확대

■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통한 안전한 충남 구현

- 안전한 정보보호체계 확립
 - 정보보호기반 및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기술 등장에 따른 보안체계를 확립
-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을 확대하여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조성

라.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 개발사업

■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U-충남 구현

- 일자리창출 방안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발굴
 - 파워네티즌을 활용한 프로슈머 마케팅을 도입
 - IT 체험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형 uIT-충남 구현을 위한 IT 사이언스스퀘어를 건립
- 유비쿼터스 기반 U-City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지역경쟁력 향상
 - 유비쿼터스 기반의 u-산업을 육성
 - 저탄소 U-City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U-녹색도시를 위한 국가표준 탄소마일

17) 환경을 의미하는 녹색(Green)과 정보화(Informatization)의 합성어로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적극적인 IT 활용으로 국가 전반의 자원 및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정보화 패러다임

리지¹⁸⁾ 관리시스템을 도입·확산, 도민 홍보·교육사업 실시

■ Clean 전자정부 구현 및 u-그린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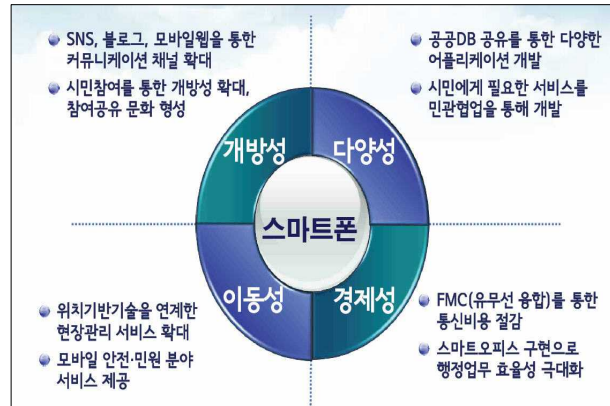
- 고효율 녹색 행정서비스 구현
 - 모바일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 도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uIT 기반의 CRM(Citizen Relationship Management) 도입
 - 사물지능통신(M2M, Machine-to-Machine or Machine-to-Man) 서비스 확충
- 녹색사회기반 구축
 - IT장비의 친환경 관리방안을 구축
 - 녹색정보화 실천방안 마련·교육을 통해 GreenIT 시스템환경을 구축
- 정보화 인프라 구축
 - 3차원 공간정보 고도화, 특화서비스(모바일 기반의 공간정보 활용 등) 개발, 공간정보서비스 기능 개선, 참여를 통한 스마트폰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구축

■ 도민 체감형 정보화 서비스 확대 추진

-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
 - 정보소외계층 정보서비스 지원 및 환경 개선
 - 가까운 도서관에 대출·반납이 가능하고, 예약도서 택배서비스도 가능한 최첨단 RFID 도서관리시스템 도입
- 체감형 도민안전 서비스 확대
 - 스마트 119 긴급구조 시스템 구축(119다매체 신고서비스와 연계 추진),
 - 도민 참여확대, 현장행정확산, 민관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모바일 기반 충남 M-행정 구축(모바일 홈페이지 및 콘텐츠 개발)
 - 지능형 재해재난 예방대응체계 구축 및 u-어린이 지킴이 서비스 등 도민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바일안전시스템을 구축

18) 탄소마일리지 제도는 전력, 가스, 수도 등 각종 에너지를 절감한 시민, 기업, 공공기관에게 절감분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제공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세금 및 공공요금 납부, 공공시설 이용, 기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림 Ⅱ-21〉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안전한 정보사회 구현

- 사이버침해에 따른 정보보호체계 대응 방안
 - 정보화 부작용을 최소화한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사이버 침해(해킹, 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개인정보보호강화 시스템 구축·운영, 신기술(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사업에 따른 보안성을 확보
-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사업
 - 정보체험관으로 IT를 매개로 건전한 정보문화를 교류
 -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사이버시티센터를 운영
 - u-클린 캠페인, 상담센터, 전문인력확보, 인터넷 중독 해소 교육, 선플 문화 확산, 선플 소셜네트워크 기자단(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사업 연계) 등 추진

〈표 II-19〉 유비쿼터스 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U-충남 구현	일자리 창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즈니스 발굴 · IT 사이언스스퀘어 건립
	유비쿼터스 기반 지역 경쟁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비쿼터스 기반의 U-산업 육성 · 저탄소 U-City 확대 추진 · 탄소마일리지 관리시스템 도입·확산 및 홍보
Clean 전자정부 구현 및 U-그린 인프라 구축	고효율 녹색 행정서비스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활용 업무처리시스템 · uIT 기반 CRM(Citizen Relationship Management) 도입 · 사물지능통신(M2M) 서비스 확충
	녹색사회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 IT 기반 시스템 환경 구축
	정보화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원 공간정보 고도화 사업 · 모바일 기반의 전략적 특화 서비스 개발 · 스마트폰 콘텐츠 서비스 구축
도민체감형 정보화 서비스 확대 추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소외계층 정보서비스 지원 및 환경 개선 · 정보 이용확대 기반 조성 · 최첨단 RFID 도서관리시스템 도입
	체감형 도민안전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119 긴급구조시스템 구축 · 모바일 기반 충남 M-행정 구축 · 모바일안전시스템 구축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안전한 정보사회 구현	정보보호체계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 고도화 · 개인정보보호강화 시스템 구축·운영 · 신기술 활용 사업에 따른 보완성 확보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시티센터 운영(도민정보화 교육) · 인터넷 중독해소 방안 · 선플 문화 확산

제 5 장

근심없는 주거·복지·평생교육 실현

1. 안정적인 에너지절약형 주거환경 조성
2. 지속적인 공공복지 · 의료서비스체계 구축 및 확대
3. 창의적 인적자원 육성 및 평생교육체계 강화

1. 안정적인 에너지절약형 주거환경 조성

가. 현황과 문제점

1) 현황과 문제점

■ 주택의 보급과 양적수준

- 2010년 현재 일반가구수 기준 충남의 주택보급률¹⁹⁾은 107%로 전국 주택보급률 101%보다 상회하고 있음

■ 주거유형과 점유형태

- 2005년에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았으나, 2010년에는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47.7%로 단독주택 45.3% 보다 높게 나타났음
- 2010년 현재 충남의 자가소유 비율은 전국평균인 54.2%보다 높은 61.0%임. 그러나 1990년 이후 충남의 자가율은 73.2%에서 61.0%로 하락하였으며, 전세·월세 등 임차가구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

■ 주거의 질과 주거복지 수준

- 2006년 현재 충남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12천 가구로 전국의 미달가구비율(23.1%)보다 낮은 19.1%를 보이고 있음
- 시·군별로는 홍성군이 22.5%로 가장 높으며 천안시, 계룡시, 서산시의 순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많이 분포함

나. 여건변화와 전망

■ 고령화 및 단독가구의 증가 등 사회 경제적 변화

- 인구 및 가구구조 등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대비한 주택정책이 필요
- 고령화에 따라 노인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기존주택의 시설을 보완하고, 신규 공급주택은 노인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

■ 양질의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대

- 공원녹지 및 문화시설 등 우수한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

19) 주택보급률은 주택수를 일반가구수로 나눈 값임. 일반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취침 및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인 가구 중 외국인 가구와 집단가구를 제외한 가구를 말함[일반가구수=보통가구수+(비혈연가구+1인가구)]. 한편, 본 계획의 주택보급률 산정에 사용된 주택수에는 빈집이 포함됨.

■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주택정비의 필요성 증대

- 전체 주택 중 1995~2004년 사이의 신축주택 비율이 38%로 전국의 39% 비해 낮은 편이며, 향후 주택정비의 필요성 증대할 것임

■ 주택수요의 전망

- 주택수요는 2000년까지 202천호의 주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수요 및 공급량에 따른 택지수요는 개발 용적률에 따라 2020년까지 약 15,229천㎡~25,375천㎡에 이를 것으로 전망

다. 계획의 기본방향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 인구고령화, 독신가구 증가, 주거욕구의 다양화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확대
- 귀농자 프로그램, 5도2촌 사업등과 연계하여 농어촌의 공가를 정비
- 노인거주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의 경우 행정·의료·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존 주거지를 일정 지역으로 집단화, 거점화 추진
-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적정한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가격의 급속한 상승을 억제하면서 주거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 지역 특성에 맞는 재개발, 리모델링 정책 추진을 위하여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방안을 모색

■ 주거복지정책의 강화

- 중산층 이상의 가구와 서민·빈곤계층의 주거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
-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체계를 구축

■ 주택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 도시지역의 노후화된 주거지는 도시재생·재정비 차원에서 정비
- 농촌지역에서는 오래된 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
- 생활서비스 제공과 어메니티 제고의 관점에서 농촌주거지를 정비

- 장기적인 지역의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주택수급 및 주거복지를 향상

■ 지역경제개발 차원의 개발방식 도입

- 주택정책을 단순한 주택공급정책이 아닌 경제개발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및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과 통합적으로 연계 추진
 - 단순한 주택개량 사업이 아니라 지역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고용과 소득향상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주택거버넌스의 구현

- 갈등관리를 통해 개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과 사업주체간 갈등최소화를 위해 주택 거버넌스체계를 구축
 - 주택개발 및 도시개발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하며, 공공기관 및 공익단체들과의 협의·협력 채널을 확보

라. 세부추진시책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 공급

- 다양한 주택유형 개발 및 주거단지 조성
 - 장애인 주택, 노인주택, 임대주택 등을 공급
 - 1인가구, 노인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의 공급 및 새로운 주택평면을 개발
- 도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친환경 전원주거단지를 조성
- 귀농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농촌 공가를 귀농인들에게 주택으로 공급
 - 기존 농촌주택의 공가관리를 위해 도시주민들에게 비투기적 목적의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구입·임대 기회를 확대
- 기존 주민들의 정착을 고려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등의 도시개발을 추진

■ 주거복지정책의 강화

-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위한 대책
 -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 임대주택 공급, 기존주택지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최저 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임대주택의 보조금 체계 개선,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근로자·서민전세 자금대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주거비 보조 등 수요 지원(주택바우처 제도))
- 노령화에 따른 노인주거복지 대책

- 권역별 고령친화적 주택단지 조성, 노인의 이동성 향상을 위해 무장애(barrier free) 주택을 확충, 세대간 통합형(generation mix) 주거단지를 조성

■ 주택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
-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와 연계하여 친인간적·친환경적으로 주거지를 정비

■ 지역경제개발 차원의 개발방식 도입

- 주택정책과 복지정책과의 연계, 주거복지차원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등의 종합적인 주거복지 시스템을 구축
- 지역차원에서의 커뮤니티 중심의 종합적인 재생사업을 추진

■ 주택거버넌스의 구현

- 주택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효과적인 집행체계를 구축
 - 충남도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이 시·군 현실에 맞게 집행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지원
 - 시·군 차원에서는 주택담당부서가 지역현실에 맞게 지역별 주거복지 지표 작성 및 주거복지 평가위원회를 구성
 - 세입자와 임대자간의 분쟁이나 신규주택개발업체와 주민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주택개발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참여체계를 구축

〈표 II-20〉 주거환경분야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주택유형 개발 및 주거단지 조성(다양한 연령층, 소득계층, 1인가구, 노인가구) • 친환경 전원주택단지 조성(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 전원주택마을 조성(아산시, 서천군, 청양군) • 농촌 공가 주택 활용 사업(귀농자 프로그램과 연계한 주택공급, 도시주민들에게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구입·임대 기회 확대)
주거복지정책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위한 대책(임대주택 및 기존주택지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보조 프로그램, 자금대출 등) • 노령화에 따른 노인주거복지 프로그램 연계(고령친화적 주택단지 조성, 복지프로그램과 연계, 무장애 주택확충)
주택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개량사업 • 지역차원의 주택정책 프로그램 개발
지역경제개발 차원의 개발방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정책·사회복지정책 및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과 통합 연계 • 지역차원에서의 커뮤니티 중심의 종합적인 재생사업 추진
주택거버넌스의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효과적인 집행체계 구축 • 주택개발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참여 체계 구축

2. 지속적인 공공복지·의료서비스체계 구축 및 확대

가. 현황과 문제점

사회복지

■ 2004년에 비해 노인·여성·장애인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아동·정신요양·부랑인복지시설은 변화가 없음

- 2009년 현재 충남지역의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총 236개이며, 생활인원은 8,756명임
- 유형별로는 노인복지시설 72.88%, 장애인복지시설 9.32%, 아동복지시설 7.62%, 정신요양시설 4.66%임, 시군별로는 시부에 59.7%, 군부에 40.3%에 분포하며, 천안, 공주, 논산 등 일부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

■ 국민기초생활보장

-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자수는 74,494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률은 3.7%를 차지하여 전국의 3.2%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이중 시설수급자 수는 4,885명으로 전체수급자의 6.6%를 점유하고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노인인구·장애인구·저소득 농어업인구 증가 등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이 증가 추세임

■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보육복지

- 충남도내에는 공설묘지 9개소 862천㎡와 사설공원묘지 8개소 2,779천㎡, 공동묘지 700개소에 44,094km²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매장능력은 163,995기 규모로서 향후 35년간 매장 능력을 보유
- 2009년 등록장애인은 125,206명으로 도내 전체인구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의 4.9%보다 높은 비중임
- 여성인력개발센터(천안, 보령, 논산) 3개소, 여성폭력상담소 32개소 운영 중, 국제결혼여성이민자는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8,003명이 거주
- 북한이탈주민은 581명(2010년)이며, 2008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음
- 도내 취학전 아동은 충남 총인구의 5.8%인 117,882명이며, 이중 42.2%는 1,323개소의 보육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보건·의료**■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 수요가 증가함**

- 충남의 의료기관수는 총 1,948개소로 전국의 3.5%, 병상수는 4.4%, 의료인력은 3.4%를 차지함
 - 충남지역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 4.1%와 비교해 보면 병상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의료인력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지역의료복지 수준 추이

- 2004~2009년 기간 동안 전국 병원수는 연평균 3.5% 증가한 반면 충남은 4.4% 증가함. 병상수는 동기간중 연평균 9.6%의 높은 증가를 보인 반면, 의료인력은 1.4% 감소함
- 의사 1인당 인구수는 전국이 2009년 현재 439명, 충남은 628명, 의료시설당 의사수는 전국 평균 2.0명인데 비해 충남은 1.7명으로 미흡
- 지역주민의 1차적 의료서비스 기관인 공공보건기관은 보건의료원 2개소(청양·태안군), 보건소 14개소, 보건지소 159개소, 보건진료소 230개가 분포

나. 여건변화와 전망**사회복지****■ 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

- 인구고령화를 가속화시켜 사회보장비지출(연금, 건강보험 등)의 증가로 재정수지 악화 등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복지를 위협할 것임
-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도농간 지역간 교육여건의 격차 심화,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소규모화가 심화될 것임
- 세대간 갈등심화, 노인부양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의 증대가 예상됨

■ 사회 양극화에 의한 신빈곤층의 증대

-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속에 근로빈곤층이 증가할 것임

■ 여성복지서비스 개선요구 증대

- 출산율저하와 경제활동참여율 증가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됨
- 이에 따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복지서비스 개선 요구가 증대할 것임

보건·의료

■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및 의료서비스 요구

-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전문병원, 특정질환 전문병원, 장애인전문병원 등 특정계층을 위한 전문의료기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임

■ 평생건강에 대한 국민요구 증대

-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최적의 건강수준을 유지·증진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평생건강에 대한 국민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다. 계획의 기본방향

사회복지

■ 가정·사회·정부가 참여하는 종합적 저출산대책 모색

- 사회·직장환경의 획기적 개선
 - 여성이 직장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영아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정착, 여성근로자의 파트타임 근무 및 탄력근무제를 활성화
- 보육시설 서비스의 개선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영아보육시설 활성화, 취학아동의 방과후 과정을 다양화, 기존의 민간보육시설 개선 및 영아보육시설 이용률을 제고
- 자녀 양육비용 경감대책의 강구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1인 가구에 대한 부담 강화

■ 다양한 사회복지욕구에 대응한 복지인프라 확충

- 복지시설의 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인증제도를 도입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급여를 확대
-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및 부랑인 복지시설은 광역생활권별로 배치하고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시설은 권역별·지역별로 배치
- 화장료의 급증에 대비한 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질적으로 고도화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복지체계 확립

- 노인복지시설은 교통 및 생활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조성하되,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조성하고,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

- 원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질적으로 관리
- 지역특성에 맞는 고령친화산업육성방안을 모색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차상위 계층, 장애인, 고령자 등의 자활 및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를 발굴
-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소득보장 강화 및 창업지원을 활성화
- 고령자들의 재교육과 평생교육시스템 정비를 통해 고령자들의 교양 확대, 노인창업 및 취업프로그램을 지원

보건·의료

■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지원 강화

-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만성질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방안을 모색
-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비하기 위한 건강관리체계를 구축

■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 최근 증가하는 환경성 질환(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예방
-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 보건관련 단체가 연계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

■ 의료시설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

- 고령화에 따라 의료시설 및 장비의 확충,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시·군별 인구 규모를 고려한 종합병원 유치, 병상수 및 의료인력 확충

■ 지역간·계층간 균형있는 지역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 생활권 단위에서 진료기관간 기능분담 및 협력체계를 구축
- 취약지역 중심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대 및 기능 강화, 의료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안내체계와 지원체계를 확립
- 공립노인요양병원 운영 등 노인의료복지 서비스수준을 제고
- 지방의료원 현대화 사업추진으로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 개발사업

사회복지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

- 건강한 임신출산 및 보육 지원
 -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 영유아 건강보호 및 여성건강 증진대책을 강구하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추진방안 강구(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부 철분제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 실시,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 확충, 저소득층 보육료 지급,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입양아동 양육비지원, 아동수당제도 도입 검토)
 - 저소득 출산가정, 출산친화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지방세 및 공공요금 감면, 출산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여성장애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임신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
 - 국내 입양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 강화방안 강구
- 국제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생활적응 및 정착지원, 다문화가족 차세대 지원, 지역사회 참여 및 다문화 환경조성 사업 추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응 및 정착 지원
- 저소득 아동복지 강화
 -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역사회아동에 대한 복지강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보호, 아동급식사업 지원,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사회계층별 사회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시설 확충

- 노인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신·증축, 노인복지회관 신·증축,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재가보호시설 등 확충
 - 노인복지주택, 노인휴양촌, 고령자 생활복지센터, 은퇴자 농장, 맞춤형 시니어타운 또는 마을 등을 조성
 - 노인그룹홈,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확충
- 장애인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확대,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추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운영,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 보육·아동, 청소년복지 및 문화시설 확충
 - 보육시설 신축 및 환경개선 등 기능 보강,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다양화, 저소득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등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아동·청소년 복지 및 문화시설 확충
- 선진 장묘기법의 도입 및 기존 장묘시설의 재정비
 - 화장시설, 납골시설, 산골장, 자연장 등 선진장사시설 조성, 추모공원 조성사업, 공동묘지 재정비,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

■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

- 재가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 운영, 무료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독거노인 월동비 지원
- 고용·노후 소득보장 강화, 기초노령연금지급,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쉼터 운영, 노인건강축제 개최
-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 고령친화기업 육성, 시니어클럽을 통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의 지속 추진, 저소득층 창업자금 융자,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충, 장애인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 이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일자리 및 취업연계망 확충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 직장의 보육시설 확충,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및 취업 지원,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그룹홈 신설 및 운영 지원, 피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여성의 인권 향상 대책 마련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농어민,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차등 경감, 장애인 소득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확대,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지급범위 확대, 저소득층 주거 지원 및 주거활용 지원, 고엽제·참전용사 지원 확대

보건·의료

■ 도민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시설 확충

-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 현대화 사업의 추진(천안, 공주, 서산, 홍성)
 -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중소병원간 전문인력·시설·장비 등의 공동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원격의료시스템 운영, 오자·도서 순회 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중소·지방의료원에 노인전문요양병동을 추가 설치
-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쾌적한 환경 제공

■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강화
 - 치매환자 관리 및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전담요원 배치, 치매검사 확대, 치매진단을 위한 조기검진 실시, 재가 치매환자 가정방문 및 진료서비스 제공

■ 질병예방 및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체계 구축

- 환경성 질환의 체계적 예방관리
 - 중부권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환경성 질환연구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 건강증진 시범보건소 운영, 보건소 금연클리닉 설치, 보건소 및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
-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의료혜택 제공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및 병원선 의료장비 현대화, 방문진료 확대, 시군 단위 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 장애아동 무료시술사업 추진, 난치병 장애아동 치료비 지원

■ 감염병 예방 및 만성·신종질환 관리강화

- 한센병, 결핵 등 만성병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순회이동 검진, 한센병 환자 정착촌 자립기반 조성 및 양로시설 운영 지원, 에이즈 환자 치료지원, SARS, 인플루엔자 등 신종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운영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 지역 정신보건사업 추진
 - 지역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 및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추진,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 재가정신질환자 관리

〈표 II-21〉 공공복지·의료분야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사업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15개소)
	노인복지시설	· 행복경로당 조성·운영 - 조성 및 시설 증개축(184개소), 무료 경로식당 운영(184개소), 정보화사업 추진(184개소) ·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88개소) · 노인복지시설 확충 - 노인종합복지관 건립(4개소) 및 여가프로그램 지원(17개소), 이동목욕차 및 빨래차(60대), 친고령화사업 성공적 추진(16개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38개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25개소) · 장애인 복지관 건립(4개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사회적응과 지역내 자립생활 프로그램 보급
	아동·여성 복지시설	· 아동시설 기능 보강(15개소) · 보육시설 기능 보강(90개소) · 모자보호시설 기능 보강(3개소) · 영유아무상보육 확대 -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 만5세아 무상보육 · 보육교사 처우 개선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확대 · 지역아동센터 지원 - 근무자 처우개선비 및 급식예산 우선편성, 환경개선 및 교구·교재비 지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부랑인 복지시설	· 부랑인시설 기능 보강(1개소)
	취약계층지원	·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 - 교육프로그램 지원, 친정부모 초청 또는 모국방문 지원(117가족, 351명)
	복지전달체계	· 충남복지재단 설립 · 복지거버넌스 구축 운영 · 복지통합상담콜센터 운영
보건·의료	환경의료시설 및 서비스	· 정신요양시설 기능 보강(5개소) ·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확대(16개소) · 환경성 질환예방 관리센터 운영(1개소) ·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 지방의료원시설 확충 및 의료장비현대화(4개소), 영유아무료예방접종 확대(80%),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신축(28개소), 우리마을주치의제 운영(213개소) ·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등(4개 의료원) · 심야시간대약품구입,도민편의 제공 - 시군별심야시간 약국운영(44개 약국)

3. 창의적 인적자원 육성 및 평생교육 강화

가. 현황과 문제점

■ 학교교육 시설

- 전국에 비해 학교수나 학생수가 높은 학교급은 대학교 이상으로 전문 인력 창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고급인력의 외부 유출로 지역사회발전이 저해됨
- 학교시설의 노후화, 교육기자재의 부족 등 다양한 교육여건의 문제를 안고 있어 교육시설의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함

■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학습시설

- 금산, 부여, 태안, 아산, 서산, 서천, 천안 등 7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음
- 평생교육기관으로 충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역평생학습관공공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문화원, 문화의 집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은 44개소가 운영 중임

■ 지역인적자원개발

- 전국의 직업훈련기관은 2011년 현재 15,776개소가 있으며, 충남지역은 642개로 전국의 4.1%를 차지하고 있음

■ 체육여가시설

- 경기장 및 등록체육시설은 총 55개소로 전국 905개소의 3.6%, 면적은 1,545천㎡로 전국 23,418천㎡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과 비교하여 체육시설당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공공체육시설은 서부지역에 20개소(60.6%)가 분포하여 지역간 시설분포 격차가 심하며 시·군 단위 운동장·체육관은 시설규모에 비해 예산 및 인력부족에 따른 유지관리 소홀로 시설물이 노후화 됨

나. 여건변화와 전망

■ 학교교육 여건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 필요

- 초등학교 학생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 이하임

■ 사교육 확대와 교육기회 불균형 발생

- 사교육시장의 증대로 인한 교육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평생학습 개념의 도입과 확산

-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발전, 고령화와 같은 사회의 변화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증대됨
- 교육청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평생학습으로 변화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업 참여 확대

- 자치단체의 교육관련 업무에 대한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교육관련 제도 및 전담부서 운영 증가

■ 직업창출과 연계한 교육사업 활성화

- 청년실업의 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형 교육사업이 확대되고 있음
- 종사원의 높은 이직률로 이직자 및 이직준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가 요구됨

■ 건강 및 자아실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 다양한 체육·레저활동 경향 등으로 건강한 삶과 자아실현 욕구충족을 위한 체육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다. 계획의 기본방향

■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 양극화 극복

- 교육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공교육을 적극 지원
- 지역 유관기관의 능동적 연계를 통한 지역교육 활성화를 도모

■ 지역주민의 평생을 책임지는 교육기회 제공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교육기반 구축
-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밀착형 교육서비스 지원
- 충청남도 평생교육 기반구축을 통한 행복한 충남교육 실현

■ 교육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 교육과 직업의 연계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생활체육 활성화

- 생활체육을 통한 여가문화 및 삶의 질 향상에 중점

라.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 개발사업

■ 공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 지역우수농산물 의무 무상급식, 2014년 전체 초등 및 중학생대상 실시(연차적 확대), 시군별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친환경 의무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
- 행복공감학교 육성지원 및 행복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
 - 혁신형 행복학교 모델을 개발하고 육성, 행복학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 의 교육관련 기관(아동센터, 민간공부방, 시민사회단체)의 교육기능 활성화, 학교교육과 차별화된 자치단체 교육통합지원센터를 운영
- 농어촌지역 교육지원 확대
 - 농어촌지역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 향상 맞춤형 교육 지원, 원어민배치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지원

■ 도민 평생교육 기회 확대

- 충청남도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 평생교육 진흥원 지정 운영
 - 시군 평생학습 센터 건립 지원(연 3개소)
- 도민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실시
 -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충남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전문계 고교 및 대학과 연계한 취업경쟁력 향상 교육 운영(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충남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국내 취업인턴십, 전문계 고교 해외인턴십, 기업-대학 연계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 대학과 전문대학의 기업문제해결 산학협력

- 지역 기업과 대학의 연계를 통한 문제해결형 프로그램 운영, 기업과 대학이 연계한 산학협력·융합 프로그램 운영

■ 체육시설 확충 및 보급 확대

- 공공체육시설 및 마을별 생활체육시설 확충

- 스포츠센터, 군민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농어민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역의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보, 기존 시설을 정비·확충하여 이용도를 제고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층별 생활체육 확대
 - 노인대학 등의 교육기관과 연계한 노인체육, 직장 산학관 대회, 지역스포츠클럽 및 동호인클럽의 활성화
 - 사회복지시설 등에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대회 등을 개최

〈표 II-22〉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공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학교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 행복공감학교 육성 지원 ·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 농어촌지역 교육지원 확대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
도민 평생교육 기회 확대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구축 사업(충남인재육성재단 설립) · 평생학습센터 건립지원(연 3개소)
	평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사업 · 충남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대학과 전문대학의 기업문제해결 산학협력융합	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계-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생활체육활성화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센터(3개소) · 실내체육관(1개소) · 군민체육센터(3개소) · 청소년 체육시설 · 강경 실내수영장 조성 ·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조성

제 6 장

안정적·창조적인 지역자원의 활용 및 관리

1. 친환경적 토지이용과 관리
2. 지역특성에 따른 매력적 지역경관 형성과 관리
3.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효율적 수요 관리
4. 친환경 에너지 · 지하자원 개발 및 관리

1. 친환경적 토지이용과 관리

가. 토지이용현황 및 특징

■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2009년 충남지역의 총면적은 8,629.22km²이며, 이 가운데 임야 52%, 농지 32%, 도시적 용지 7%로 전국 평균에 비하여 농업용 토지와 도시적 토지 비중이 높음
- 충남면적은 전국토의 8.6%인데 비하여, 농지는 13.1%이고 도시적 용지는 9.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차지하며 충남의 인구비중이 4%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인구당 도시적 용지규모는 거의 2배 정도 높음
- 도시적 용지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천안시, 아산시로 7% 내외를 차지하여 전국 도시적 용지 비중의 2배 정도가 높고, 농지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당진시, 서천군으로 각각 지역면적의 40% 내외를 차지

■ 토지이용구조의 변화

- 2000~2009년 기간 동안 충남지역의 도시적 용지는 499km²에서 620km²로 총 121km²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의 도시적 용지 증가분 1,210km²의 9.9%에 달하는 큰 규모임
- 도시적 용지수요가 증대한 것은 개발수요가 높은 천안·아산지역의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도시적 용지의 공급으로 충남지역의 농지 및 산지의 감소규모는 동기간 중 전국 농지 및 임야 감소분의 7.4% 및 10.7%를 차지하여 농지의 타용도 전용이 타 지역에 비하여 많음

■ 도시계획현황

- 용도지역 지정현황은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의 비율이 45.5%로 전국의 40.4%에 비하여 높은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2%로 전국평균보다 낮아 공적규제가 적고 개발가능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
- 2000~2009년 기간 동안 「국토계획법」 상 충남의 도시지역은 769km²에서 1,068km²로 총 299km²가 증가한 반면 관리지역은 3,144km²에서 3,086km²로 총 58km²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국의 도시지역 증가분 0.8%와 관리지역 감소분의 3.1%에 달하는 소규모이어서 과거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은 타 지역보다 심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

■ 충청남도 토지이용의 특징

- 충남 북부지역은 제조업체의 산발적 입지와 더불어 기존 도심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읍면지역은 무계획적 토지이용이 진행되고 있어 비도시지역 토지이용의 체계적 관리 요구됨
- 공주·연기지역에서는 세종시 배후도시로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담을 수 있는 신시가지 및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난개발, 연담화, 경관·환경훼손 등 부작용이 우려됨
- 고속도로 IC와 연결한 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아지며 접근성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도시적 토지이용 수요가 활발함
- 농촌지역은 부처별 다양한 농촌개발계획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장기적인 계획 없이 단년도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행정단위의 종합적인 공간계획(도시기본계획 등)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나. 여건변화와 수요전망

■ 친환경적 토지수요 증대

-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로 도시외곽의 저밀도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지·수변 등을 이용한 개발수요가 증대할 전망이다
- 사회구조 및 경제의 안정적 성장으로 도시적 생활방식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기반시설 조성 등 공공용지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농촌지역에서도 대지, 도로, 철도, 학교 등 도시적 토지이용의 증대가 예상됨

■ 온실가스 저감 위한 토지이용 대응과제 직면

- 정부는 대중교통 중심의 토지이용 및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도시 공간구조를 도로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중교통 역세권을 중심으로 집약적인 고밀·복합 토지이용의 체계를 유도하고 있음
- 최근에는 자동차의 이동수요 감소와 보행 활성화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약적인 토지이용형태가 등장하고 있는데, 국내의 도시보다 저밀로 개발되는 서구의 도시개발의 반성적 차원에서 대중교통 중심적 개발이나 압축적 도시개념이 확산됨

■ 계획적·효율적 도시용지 공급과 개발

- 세종시 및 내포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등의 대규모의 도시개발이 진행될 전망이며, 새로운 도시개발은 충남의 재정 부담 증가와 함께 토

지소유주와의 갈등도 야기될 수 있음

- 환황해권 중심지역으로서의 역할 증대에 따른 산업입지 수요의 증가로 공장용지, 공공용지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기업의 애로가 상당 수준 해소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가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될 전망임

■ 농지와 산지관리제도의 변화

- 침체된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시인의 농지소유 허용 등과 같은 농지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여가시간 증대로 농지에 대한 비농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등 산지의 공익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산림 유전자원의 보호 증식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따라서 농지구분체계의 정비, 산업으로서의 임업과 산지관리 등 농지와 산지를 공간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토지수요 전망

- 주택용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등 도시적 토지이용의 수급계획은 물론, 기타 농업용지 등을 포함하는 생산용 토지이용의 수급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 중에서 도시적 토지이용의 전망은 주거 및 상업용지 등 주택용지와 공장용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 국가적 공공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용지를 기초로 추정함
- 주거 및 상업용지 등 주택용지는 2020년까지 추가로 증가할 도시 인구를 감안하여 개발밀도를 적용하여 추정함
- 주택용지는 내포신도시와 주로 시급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서 공급될 것으로 판단되며, 세종시 지원 및 배후도시 역할로 인한 추가적인 토지수요와 주변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용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공장용지 수요는 앞장에서 제시한 산업용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2020년까지 산업단지를 74.9km² 규모로 추가 조성하되, 목표년도의 농업용지 수요는 산업단지 분양대상면적 40.6km²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면적(34.3km²)은 공공용지로 분류함

- 도로 등 기반시설용지를 감안한 공공용지는 기존 추세를 감안하여 목표연도까지 주택용지 수요(세종시를 제외하고 13.6km²)의 1.2배인 16.3km²가 추가로 필요하며, 여기에 세종시의 공공시설 용지 54.4km²와 산업단지의 공공용지 34.3km²를 더하여 2020년까지 충남의 공공용지는 총 105km²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전망됨
- 이 경우 충남지역의 도시적 용지는 2009년 현재 619.7km²에서 2020년 794.9km²로 176.1km²의 증가가 예상됨
- 이에 따라 도시적 용지의 토지는 2009년 7.2%에서 2020년 9.2%로 증가하는 반면, 농지와 임야는 각각 31.7% 및 51.5%에서 30.7%와 50.5%로의 비중감소가 예상됨

다. 계획의 기본방향

■ 친환경적·계획적 토지이용관리

- 도시계획 수립시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주거단지 개발, 친환경적인 도시용지의 공급 등 양질의 도시용지 공급 방안 마련
- 토지이용 실태와 환경분석을 통한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고, 환경친화적 개발지침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함
 - 개발할 지역은 철저한 개발계획을 통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대상지역으로 엄격히 관리
- 토지절약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심부 나대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등 내부충진식 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함
-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산업용지 및 산업단지를 계획적으로 공급하되, 수려한 자연경관과 자연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토지이용을 관리함

■ 저탄소 에너지 절약적인 토지이용구조 구축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자원 및 에너지 절약적이며, 재해에 안전하고 건강한 국토를 구현함
 -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친환경 녹색국토와 청정해양 국토를 구현
-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적이며 저탄소 에너지 절약적인 토지이용구조를 구축함
 - 저탄소 에너지 절약적인 도시계획을 통하여 하위 위계에서의 총통행거리(대·km)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지구의 토지이용을 집약할 수 있도록 공간

구조의 개편 계획을 수립함

- 대중교통 중심의 토지이용 및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 공간구조를 도로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중교통 역세권을 중심으로 집약적인 고밀·복합 토지이용의 체계를 유도

■ 토지이용의 공익성 강화

- 지역 차원에서 수행 가능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함
 - 도시계획에 따른 우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관리가 토지이용의 실제 상황에 부합되도록 토지이용관리원칙을 마련
 - 토지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와 부동산 정보체계를 정비
-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으로 부동산시장을 건실화함
 - 토지거래허가 토지의 철저한 사후이용실태 조사, 부동산거래 정상화와 가격안정을 위한 실거래심사 강화

■ 농지 및 산지의 계획적 관리

- 안정적 식량공급, 녹색경관 보전 등에 필요한 일정면적 이상의 농지·산지를 확보하고, 농업 및 임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전대상 농지 및 산지에 대한 계획적 이용규제체계를 강화함
- 안정적 식량공급, 녹색경관 보전 등에 필요한 일정면적 이상의 농지·산지를 확보하고, 농업 및 임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토를 넓게 활용하는 지혜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토지이용 관리
 - 활용가능한 산지의 적극적 이용으로 보다 국토를 다양하고 넓게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산지의 보존가치에 대한 인식변화를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승화
- 충남은 전체면적의 52% 이상이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의 부분적 개발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인 동시에, 생태계 보전이 필수적인 지역임. 산지개발로 인한 산림생태계나 산지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산지개발기준을 마련·시행함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 기후변화에 대응한 토지이용관리체계 확립

- 해양자원의 적극적 활용과 해양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연안을 관리함

- 연안의 보전 및 개선사업을 통한 연안기능을 증진하고 연안 르네상스 구상
- 대중교통은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기존의 교통 결절점과 연계된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필요한 교통량 발생을 최소화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도시외부와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며, 대중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혼합된 고밀도 토지이용계획을 구축
- 다양한 용도의 토지수요를 예측하여 용도간 상호관계를 고려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과 에너지 사용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를 도모함
- 집약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개발규모, 용도별 토지이용 비율 및 입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발사업 대상지의 적절한 밀도계획을 수립하여 공간을 배분하며, 집약적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
-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 따른 용도지역 체계 개편에 대응하여 관리지역 관리방안을 마련함

■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위한 통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연담도시권의 공동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도시용지를 공급하는 시·군 단위의 도시계획 방식에서 광역도시 및 도농통합차원의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설의 공동이용으로 경제성, 효율성 제고
- 부문별 토지이용계획을 통합한 합리적 토지이용을 관리함
 - 도시와 농촌, 도시와 도시간 기능연계 및 분담에 따른 토지이용 관리방안 모색
- 시·군의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정보 구축과 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구축 및 확산함

■ 신성장거점도시 주변지역 토지이용관리방안 마련

- 신성장거점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도시개발 및 관리체계를 구축함
 - 신성장거점도시 개발로 인해 주변 도시지역의 난개발 및 개별입지 공장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협의 및 관리방안을 모색
- 신성장거점도시와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용량에 따른 개발밀도를 관리함
 -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수용력에 따라 소규모 개발방식은 기반시설 연계개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추진
 - 신성장거점도시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신성장거점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서비스 및 시설을 유형화하여 관리

- 신성장거점도시와 주변지역간의 공간적·기능적인 성장경계선(Urban Growth Boundary)를 설정하여 개발의 방향과 축을 설정하고 개발의 규모와 시기 등을 조절함

■ 합리적인 토지이용 규제장치의 마련

- 환경친화적 개발관리와 함께 도로, 학교, 상하수도 등 각종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함
 - 지역내 산재한 공용청사, 공장, 학교 등의 이전적지를 민간이 개발할 경우 개발 이익환수 차원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
 - 개발가능토지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선시설비용의 공정한 분담방식을 통해 도시개발과정상의 애로요인을 해소
- 지가 안정을 위한 토지시장 관리의 과학화를 도모함
 - 공공용 토지의 비축, 내셔널트러스트 활성화, 부동산투자신탁 등의 적극적 활용
 - 용도지역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시장 관리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이용관리체제를 구축
- 정주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함
 - 지나친 토지이용규제내용을 검토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주는 요소를 해소

■ 보전대상 농지 및 산지에 대한 계획적 관리체계 강화

- 토지의 적성에 맞는 농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농지구분의 기초정보를 구축함
 - 적정농지 면적의 확보와 체계적·계획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우량농지를 제외한 농업진흥지역을 재조정하고, 농지의 전용이 지역의 경관과 환경을 훼손되지 않도록 전용허가 요건과 절차를 정비
- 산지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준보전산지 등의 산지전용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보전산지 관리에 활용함
 - 산지에 대한 개발수요는 가급적 준보전산지에서 충당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
 - 무허가 산지전용을 철저히 방지하고 녹지공간 확보와 공원시설, 등산로 등을 확충하여 녹색도시를 조성

〈표 II-23〉 토지이용 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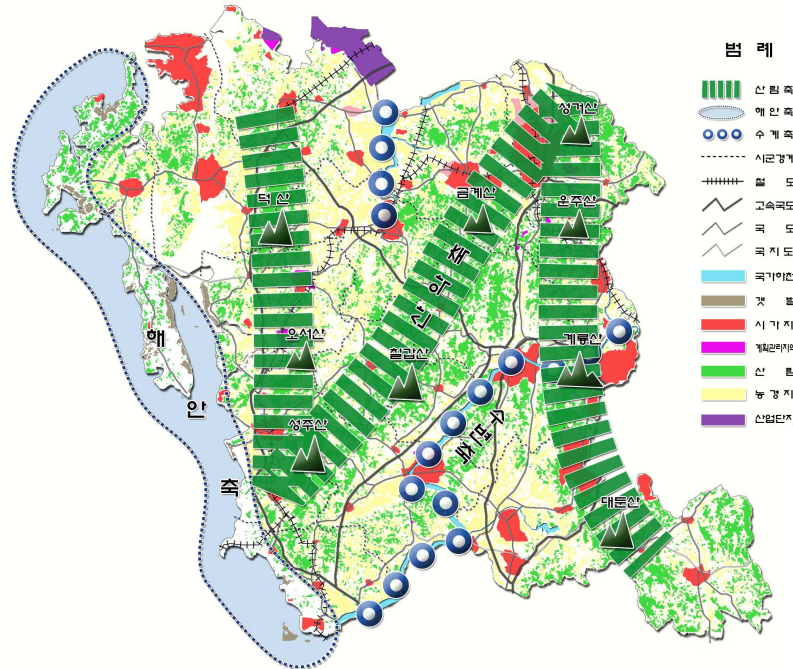
추진시책	사업유형	추진시책 및 개발사업
기후변화에 대응한 토지이용관리 체계 확립	토지이용 수요·공급의 적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자원의 유형화 및 체계화 · 해양자원의 적극적 활용과 해양관련 산업육성기반 구축 · 계획적 연안관리와 연안 르네상스 구상 · 관광개발거점의 토지수요와 입지배분계획 수립 · 주택·산업단지 리모델링, 도시재개발 등 토지수요 절감 및 수요관리정책
통합적 토지이용체계 구축	계획적 토지이용 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연담도시권의 성장관리 · 친환경적 토지개발기법 도입 확대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16개 시·군, 136개 지구) ·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16개 시·군)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신성장거점도시 주변지역 토지이용관리 방안 마련	난개발 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거점도시 주변지역 난개발 관리체계 구축 · 기반시설 용량에 따른 개발밀도 관리
토지이용 규제장치 마련	토지이용의 공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강화 · 지가 안정을 위한 토지시장 관리의 과학화
보전대상지의 계획적이용 규제체계 구축	농지 및 산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및 산지에 관한 기초정보 구축 · 산지전용 개발이익을 활용한 보전산지 관리

2. 지역특성에 따른 매력적 지역경관 형성과 관리

가. 현황과 문제점

■ 두드러지지 않지만 훼손되지 않은 다양한 경관을 보유

〈그림 II-22〉 충남의 경관구조와 특성



■ 도시화 및 개발행위의 증가로 인한 우수경관 훼손 가속화

- 우수경관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자연도가 높은 산림(칠갑산 일대)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과 갯벌이 서해안에 넓게 분포하지만, 이들 지역에는 개발압력 증가로 인한 각종 시설물과 건축물의 개별입지로 인하여 기존 자연지형과 녹지 및 산림이 훼손되고 있음
- 이러한 개발행위의 증가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미설치로 수질 및 토양환경 오염이 가중되며, 과도한 성·절토에 의한 지형 훼손, 양호한 산림벌목 등은 산사태 및 홍수 등의 직간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경관법 제정에 따른 체계적인 경관관리의 근거 마련

- 경관법 제정(2007.5.17)으로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충청남도 경관조례 제정(2009.12.30)으로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됨
- 중요한 경관자원이 복수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거나 경계부에 위치하여

단일 지자체에서 경관관리가 어려운 경우, 충청남도 경관계획의 초하여 경관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지만, 아직 충청남도는 경관기본계획은 미수립 상태임

- 기존의 다양한 경관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중복, 연계성 부족 등 비효율성의 문제가 대두되므로 이를 통합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나. 여건변화와 전망

■ 경관저해요인의 지속적인 증대

- 세종시 및 내포신도시의 건설에 따른 공간구조 재편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임
- 주5일 근무제의 시행, 광역교통망의 확충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은 새로운 관광지에 대한 개발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압력의 증가로 나타날 것임
- 경관 훼손에 대한 자각과 경관관리 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의 개발행위 증가는 필연적으로 경관훼손을 더욱 심화시킬 것임

■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경관에 대한 질적 욕구 상승

- 주민의 의식은 기반시설에 관련되는 실용적 요구로부터 점차 질적, 심미적, 정서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연환경 보호, 개성 있는 시가지 정비, 건축물의 수준 제고 등 생활공간의 질과 관련된 생태적, 심미적, 문화적 측면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경관을 역사적 유산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될 것임

■ 지역의 개성과 매력을 표출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 증대

- 획일화된 도시 경관을 극복하고자 살기 좋은 도시를 미래상으로 설정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지역의 개성과 매력을 표출하는 요소를 자연경관·역사경관·건축문화로 정하고, 이를 통한 마케팅 활동이 증가할 것임

다. 계획의 기본방향

■ 우수경관의 보전을 통한 충남만의 충남다운 경관 유지

- 경관적으로 우수한 산림, 계곡, 하천, 호수, 역사, 문화, 해안 등을 보전

- 산악경관은 녹지축 보호 및 녹지공간 확보, 주요 조망점 및 우수한 조망 보호
- 하천은 시각적 개방감 및 하천변 시가지 관리, 하천과 녹지공간을 연계하는 등 그 특성을 살린 계획을 수립
- 역사문화 경관자원은 문화재 보존 및 주변경관 개선, 디자인 모티브로 활용하고, 무형의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경관을 형성
- 생태적으로 우수한 경관지역은 개발보다는 보전을 우선시 하여, 절·성토 등 지형 변경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

■ 충남의 고유성을 살린 경관권역·축·거점을 설정하고, 품격있는 경관 형성

- 산악경관 및 해안경관 보호를 위한 권역 설정
 -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자연경관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조망 및 스카이라인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
- 하천·도로경관보호를 위한 축의 설정
 - 하천을 주민의 휴식·여가활동 장소로 조성하고, 연접지역은 중점적으로 관리
 - 주요 가로별 특성화를 추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
- 역사자원, 주진입부, 결절부의 거점 설정
 - 문화재와 주변지역을 일체화하여 관리하고, 주진입부 관문거점에 상징성 부여
 - 공공시설 및 시각적 결절부에 거점을 설정

■ 생활경관 조성을 위한 부문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적용

- 시가지 권역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및 적용
 - 일반 시가지는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경관관리를 체계화
- 공공복리를 위해 경관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적용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기본계획의 수립

-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기본계획 수립하여 충청남도 시·군 경관계획 수립 시 지침적 역할 수행
 -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 경관관리 및 행정의 지침적 역할 수행토록 하고 조화로운 경관, 고유하고 다양한 경관, 지속가능한 경관, 함께 가꾸는 경관을 지향하는 계획을 수립하되, 경관자원조사를 바탕으로 도내 모든 시·군이 활용 가능하도록 장소를 중심으로 기본적 가이드라인 제시

〈표 II-24〉 경관유형별 관리 방향

유형	관리목표	관리 방향
자연 경관	우수경관	· 자연형 해안, 하천 및 주요 호수, 산림녹지 및 구릉지, 바다, 강, 호수는 경관관리지구로 설정하고 적정개발 유도 ·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희귀식생, 8등급이상 수림, 보존 가치가 있는 구릉지 등)을 경관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기본권으로서 조망권이 고려된 도시계획 및 설계
	개발계획 수립시 경관 심의·유도	· 자연과 개발의 요구를 조화시킨 전원도시화 전략 채택, 충남의 녹지체계 관리 계획 수립 · 경관심의제 확대 등 개발계획 수립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제도 마련
	경관영향평가제도의 강화	·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이나 일정폭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건설 등 대규모 구조물 계획 시 경관영향평가심의제도를 의무화강화하고, 주변자연경관과의 변화를 예측하여 저감대책 및 조망점 확보방안 마련
평야 및 농촌 경관	농촌 풍경	· 전통경작지 및 취락 형태를 보전하고 자연형 농사법을 장려하여 관광자원화
	토속성·향토성 보존	· 농촌마을의 전통담장, 울타리, 마을길, 정자목 등에 대한 보존 · 농어촌정비계획시 기존 취락 규모와 조화있는 개발규모, 공간구조, 건축형태 및 색채계획 수립하여 경관적 동질성 제고 · 전통농경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축제 등의 문화 발굴 및 계승
도시 지역	개성있는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효율적 제도 운용	· 경관상 보존가치가 높은 곳을 경관지구로 지정 관리 · 자연환경 특성을 반영한 도시경관 특화계획 수립 운영 · 시범 경관지구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위한 연구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경관관리 지침 수립	· 각종 개발사업에 적용 가능한 경관지침을 마련하여 입체적인 도시계획 수립 · 도시외곽의 신시가지 확산이 기성시가지와 조화를 유도하는 경관지침 마련 · 도시간의 연담화를 방지하고 도시내부 건조공간과 녹지공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도시간, 도시내부 연계한 광역 녹지체계 수립
하천 경관	계획적 관리	· 하천수질관리 및 훼손된 연안 복구, 하천생태계의 복원을 통한 활력있는 자연경관 보존 · 친수공간으로서 공공의 접근성 및 레크레이션 기능 확대
	수변경관 조망권 보호	· 하천 주변의 고층아파트, 상업시설, 도로, 주차시설 등에 의한 경관훼손 방지 및 주민공원 확충 · 수변 조망을 위한 조망형 휴식공간 발굴 및 수변 경관 도로와 연계
	수변 탐방로 구상	· 금강을 비롯한 주요하천의 경관적 특징 및 주변 역사문화 생태 유산과 연계된 경관탐방로를 구축하여 교육장으로 활성화 · 수변 주변의 테마별 녹색교통망체계 구축
해안 경관	자연형 해안 절대보전	· 천혜의 자원을 간직한 갯벌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절대 보존(단, 집단시설지구 등 개발가능지 제외)
	서해안 관광권 형성	· 갯벌과 습지, 갈대밭 등을 활용한 생태 관광 활성화 · 휴양, 레저, 복합어촌마을 조성, 전통어촌생활 및 축제 자원화
	서해안 경관계획 수립	· 아산방조제부터 금강하구둑까지 해안 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체감할 수 있는 탐방로 구축 · 서해안의 테마별 경관자원을 고려한 해안 경관도로 조성
산림 및 녹지	산림생태경관 보전	· 산림생태 경관보전을 위한 광역녹지축 계획 실행 · 개발행위로부터 경관훼손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스카이라인 보전 및 개발전 우량수종 보호 대책 강화
	도시의 녹지 가시권 보호	· 도시의 주요 산림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고, 훼손된 곳을 복원 · 개발행위시 공원녹지 확보방안을 강화하고, 산림스카이 라인을 보호하는 단지계획 유도
	나무심기 운동 장려	· 민간단체, 주민, 개발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전개하는 나무심기 운동 전개
도로 경관	자연친화형 도로설계	· 도로의 노선계획시 성질도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및 경관차단 등에 대한 부정적 경관영향평가 및 저감대책 강화
	지역별 특색있는 도로경관정비	· 산림지역, 농촌지역, 수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산업지역에 따른 특색있는 경관창출 계획 수립 및 시행
	관광자원과 연계한 경관도로 조성	· 문화유적지, 관광지, 유원지 주변의 친환경도로를 조사하여 경관도로 조성

- 경관관리지역 중 특정경관계획대상지²⁰⁾에 대한 경관지침 제시
 -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고 경관심의제를 도입·확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행위 및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상세계획 수립을 의무화
- 지역의 개성과 매력을 표출하고, 정신적·문화적 측면의 질적 향상을 위해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 제시
 -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며, 일정수준의 통일성을 유도할 수 있고 건조물과 외부공간을 포함하되, 형태 및 외관, 색상·조경 등에 대한 조화성, 위계성, 변화성이 확보되는 지침으로 구체화
 - 지역의 매력을 표출하기 위해 건축물을 비롯한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환경색채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 건축물은 배치, 외관 및 형태, 옥외공간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토록 하며, 중점적으로 경관을 관리해야하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구(이하 경관관리지구)를 설정하여 통경축, 스카이라인, 조망 확보를 고려토록 함
 - 가로시설물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디자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적용
 - 옥외광고물은 불법간판 정비와 디자인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간판규격화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범도민 의식개혁운동으로 전개, 「간판정비 시범거리」지정을 통한 정비를 추진하고, 간판정비 시뮬레이션 결과사업효과를 건물주에게 제시하여 참여를 유도
 - 환경색채는 건축물,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의 색채 통일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개성과 매력을 표출토록 조성

■ 우수 경관형성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

- 충청남도는 개별법에 의해 행해지던 경관행정을 통합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경관전담부서를 설치·운영
- 경관심의기구, 경관자문기구, 계획추진기구, 디자인 자문기구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경관 추진체계 구축
- 경관관련 건축·건설행위에 대한 다단계의 실질적인 자문·심의 절차의 도입·운영을 강화
 -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조경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관코디네이터 제도 운영, 대형 건축물은 창작성, 야간경관, 색채디자인을 고려한 건축 심의 강화

■ 경관정책의 실현성 제고를 위한 경관사업 발굴 및 시행

20) 특정경관계획 대상지는 법정체계에서 경관자원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관지구(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와 계획적 개발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지구단위계획지역(제1종 지구단위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대상지역으로 함

- 경관법 제13조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의거하여 경관사업을 발굴 및 시행
- 경관관련 시책사업의 추진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사업, 지역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
- 경관사업은 특정경관계획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주변지구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경관유형별로 대표하는 사업을 선정
 - 경관사업은 금강변 경관형성사업, 서해안 생태탐방로 및 경관도로 조성, 야간경관조성사업, 충남 100경 가꾸기 사업, 건축물 관광코스 개발, 농어촌 빈집정비, 경관농업직불제의 확대 추진 등

〈표 II-25〉 경관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경관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본 틀 마련	경관관리 기본 틀 마련	· 경관기본계획 수립
	경관관리지역 중 보존대상지에 대한 지침	· 자연환경 우수지역을 경관관리지역 지정 · 전통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 제시
	경관관리지역 중 개선대상지에 대한 지침	·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산악 및 스카이라인 훼손에 대한 유도 지침 제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 및 지침 제시	· 건축물,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환경색채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우수경관 형성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	경관행정의 통합·효율화	· 경관행정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경관 행정 추진체계 정비	· 경관심의기구, 경관자문기구, 계획추진기구, 디자인 자문기구 등의 추진체 설치·운영
	자문 및 심의 절차의 강화	·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조경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참여하는 경관코디네이터 제도 운영 · 지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건축물 디자인 심사의 강화 · 대형 건축 프로젝트 추진시 건축물의 창작성, 야간경관, 색채 디자인을 고려한 건축심의 강화
관련정책 개발 및 시행	관련 정책 개발	· 경관심의시 인센티브 적용을 위해 재정확보·기획아이디어 구상 및 시행 ·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관협정 제도의 도입·운영
	경관관련 시책사업 추진	· 금강변 경관형성사업 · 서해안 생태탐방로 및 경관도로 조성사업 · 야간경관 조성사업(교량, 주요 도로) · 충남 100경 가꾸기 사업 · 건축물 관광코스 개발, 가로시설물 및 간판정비사업 · 농어촌 빈집정비(9,000동) · 경관농업직불제 확대 추진(16개 시·군)

3.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효율적 수요 관리

가. 현황과 문제점

- 충청남도의 수자원 부존량은 117.9억 m^3 /년으로 단위면적당 전국의 110% 수준으로 전국평균보다 수자원이 풍부한 편임
- 강수량 또한 비교적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강수의 계절적 편중으로 하천의 유량변동이 심하며, 수자원 이용가격이 실제 생산원가를 밑돌아 물사용량이 많음
- 또한, 수자원의 확보를 위해 신규 용수원 확보에 주력한 반면 효율적 수자원 운용을 위한 용수의 수요관리에는 소홀

■ 하천유역 현황

- 충청남도를 수계별로 구분하여 볼 때 공주, 논산, 연기, 청양, 부여, 서천 등 도내 절반 이상의 지역이 최대 수역권인 금강수계에 속하며, 아산, 예산 전역과 천안시 일부지역이 삽교호, 안성천수계에 속하며 비교적 수자원이 풍부한 편임
- 주요 수원은 하천인 금강, 삽교천, 안성천 등이 있고 담수시설인 대청다목적댐, 아산호, 삽교호, 대호, 서산A·B지역, 금강하구호 등이 있음

■ 담수호 현황

- 대부분 담수호의 유효저수량에 비해 생활용수, 관개용수 및 공업용수 등의 사용은 극히 미미한 실정임

■ 용수 현황

- 상수도보급률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 지속적인 시설 확충이 필요
 - 상수도 보급수준은 전국 평균인 94.8%에 못미치는 80.2%이며 1인당 급수량은 355.1L, 지방 및 광역상수도 시설용량은 635천 m^3 /일, 급수량은 527천 m^3 /일임
 - 시·군별 상수도 보급수준은 군지역이 77.3%로 시지역 84.0%와 격차를 보이며 1일1인당 급수량은 군지역이 330L로 시지역의 299L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군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충 및 유수율 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전국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인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공업용수는 자체개발 용수가 67.7%, 상수도가 32.2% 임
 - 전체 용수사용량의 67.7%인 194천 m^3 /일이 자체개발 용수이고 32.1%인 92천

- m³/일이 지방상수도이며 광역상수도는 0.39천m³/일로 0.14%에 불과한 실정

 - 기존의 광역시설로는 대청광역상수도(북부지역 생활·공업용수 공급), 금강광역상수도(남부지역 용수 공급), 보령댐광역상수도(서해안지역 용수 공급)가 있으며, 아산공업용수도 2단계, 대청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이 계획·건설중임
 - 일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대부분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총 65.4천m³/일의 지하수가 공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임
- 농업용수의 이용 특성상 여러 종류의 수리시설에서 공급하고, 충남지역의 농업용수 이용 경지면적은 연평균 1.6%의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리 안전답률은 76.5%임

나. 여건변화와 용수수요 전망

■ 수자원의 변화

-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피해, 수질악화, 지표수와 지하수의 부족 현상이 초래되어 가용수자원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음
-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불투수층의 증가는 하류에서의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비가 온 다음에는 하천의 건천화 및 지하수 수위 저하 등으로 도시내의 건전한 물순환을 왜곡시키는 근본 원인이 됨
-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유역 및 도시,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 회복,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저비용-저에너지 물 관련 시스템 개발, 물 부족에 대한 대비 및 물자급률 향상 등의 필요성이 증대됨

■ 물 수요량 증대

- 인구 및 경제성장, 도시화 등으로 물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대되는 물 수요량에 따른 수자원의 확보를 위해 신규 용수원 개발뿐만 아니라 수자원 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양질의 수자원에 대한 관심 증대

- 도시화 및 산업화, 인구증가 등에 따른 수질오염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 향상, 삶의 질적 수요 증대에 따라 양질의 물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량 확보뿐만 아니라 양질의 수자원 확보가 지역발전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

■ 용수수요 전망

- 용수수요 전망은 용수이용량의 과부족, 주요 하천별 수질상태, 수자원

의 이용실태, 하천정비 상황, 생활·공업·농업용수 이용의 수급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전망하였으며, 생활용수의 경우 세종시의 수요량을 별도로 예측

- 인구 및 산업성장에 관한 새로운 계획지표를 토대로 한 용수수요 전망에 따르면, 2020년 총 용수수요는 3,089.1백만 m^3 /년으로 전망됨
- 용수이용 차원에서, 생활용수는 2006년 457.8백만 m^3 /년에서 2020년 535.7백만 m^3 /년(17% 증가), 공업용수는 203.2백만 m^3 /년에서 272.0백만 m^3 /년(34% 증가), 농업용수는 2,394.7백만 m^3 /년에서 2,281.4백만 m^3 /년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상수도 보급률 전망

- 생활용수 수요증대에 따라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2020년까지 97%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8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충남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인 90.7%에 크게 못 미치는 69.4%에 불과하므로 2020년까지 92%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 및 광역상수도과 마을상수도를 확충하고, 자가급수 인구의 15%를 마을상수도로 대체해야 함
- 도심 외 지역의 소규모 면소재지와 리 단위의 인구밀집지역에는 마을상수도를 설치함으로써 소규모 마을상수도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

다. 계획의 기본방향

■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대체·보조수자원 개발을 통한 수자원 확보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물공급 및 가용수자원 확보를 위해 수요예측량에 따른 물공급 여건 조성, 비상시 용수공급 및 낙후지역의 대체·보조수자원 개발

■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전하고 안정된 물이용 및 지속적인 수요관리

- 물 수요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물절약종합대책 추진하고 지하수 보전관리 및 지표수와의 연계이용을 통한 안정된 물이용 체계 확립
- 침투, 식생, 저류를 이용한 빗물유출수 관리 및 중수도시설 활성화 등을 통한 수자원 재이용 체계 확립하고 빗물이용 및 불투수면 관리를 통한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 회복

라. 세부추진시책

■ 효율적인 물 수급을 위한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

-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 및 물관리기법을 확립하고, 통합관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
- 수자원 관리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 및 수계별 종합관리를 통한 수자원 공급 및 수요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20년단위로 수립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수정계획을 5년마다 수립
- 물 수요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물절약종합대책을 추진
 - 생활용수의 경우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의 지속적인 추진,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수도요금누진제 강화를 통한 물사용 절감 유도, 절수기기 설치, 노후관을 교체하여 누수율 제고, 중수도 설치
 - 공업용수의 경우 산업체에 대해 냉각탑, 계량기 검사, 누수 검사 및 보수를 통한 누수저감대책 강화, 산업체의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제도를 정비함
 - 농업용수의 경우 농업용수로의 구조물화 사업추진,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자동화물관리시스템(TM/TC) 사업을 추진함
 - 물절약 홍보 체계 구축 및 지역, 개인에게 물 절약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 각종 용수기기의 성능판정기준을 작성하고 등급제를 도입하며 절수기기 개발과 보급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

〈표 II-26〉 공급관리 전략과 수요관리 전략

관리주체	기간	공급관리 전략	수요관리 전략
용수공급자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수탐지 및 보수 •보조공급장치 •수압의 조절 •1인당 공급기준의 축소(비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두 부하요금 •자발적 수요 감축에 호소 •사용금지 및 배급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별 수자원 개발 •중수도 설치확대 •누수 감축계획 •수자원 연계이용, 담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부문별 물사용 절약계획 마련 •한계비용에 기초한 가격 책정 •정보의 공유 및 교육
용수수요자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및 관리과정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 비용 기술을 통한 절수 •생활습관과 행태의 변화를 통한 절수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및 관리과정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율적 기구 및 설비 •효율적 토지이용, 관개 개선

■ 지역별·용도별 안정적인 물공급체계 구축

- 생활용수 수요 예측에 따라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의 확대 및 지방상수

도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중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금강북부권 급수체계 구축, 금산무주권 광역상수도 사업 등을 통해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을 확대하여 총 451.7천 m^3 /일의 시설용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 신시가지 상수도시설 사업, 배수지 확장사업 등을 통하여 지방상수도를 확충

〈표 II-26〉 광역상수도 건설계획

광역상수도 시설명	급수지역	시설용량	비고
중부권	공주, 부여, 논산	163천 m^3 /일	정수장 2개소, 관로 99.4km
금강북부권	천안, 아산, 청양	254.7천 m^3 /일	가압장 2개소, 관로 45.34km
금산무주권	금산	34천 m^3 /일	정수장 1개소, 관로 56.5km
계		451.7천 m^3 /일	

- 비상시 용수공급이나 광역 및 지방상수도 개발이 어려운 낙후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물공급여건 조성
 - 해안 및 도서지역은 대규모 상수도 공급망을 통한 물공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마을상수도 시설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비상시 생활용수로 활용이 가능토록 담수호의 수질 개선 및 해수담수화 시설의 보급, 강변여과수 등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운영관리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및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암반 관정 개발 등을 통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서북부권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등의 개발증대로 공업용수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응한 공업용수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 농업용수 공급용으로만 전용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등의 수리시설 정비와 활용을 통해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로의 이용효율성을 제고

■ 과학적인 지하수 이용 및 보전

- 지하수 부존량 기초조사 및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문지질도 구축 사업 등을 포함한 기초조사 사업을 추진
- 이 때, 광역지하수 조사와 정밀지하수 조사로 구분하여 수문지질도를 작성하고, 광역지하수 조사는 권역별 지하수 수위, 수질조사 및 지표 수문조사 등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며, 정밀지하수 조사는 지역단위로 지하수 부존량, 개발가능량, 수위 및 수질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하수 개발시 실패공을 줄이고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에 활용
- 지하수의 부존현황, 개발가능량, 이용실태, 오염상태 등 관련정보를

GIS 데이터베이스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하관정에 대한 합리적인 보존대책 수립하고, 행정기관과의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능력 배양과 적극적인 활용으로 지하수관리의 선진화 도모

- 지하수오염 예방대책 사업 전개를 위해 매년 100공씩 2020년까지 지하수 폐공 찾기 및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폐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며, 지하수 폐공 등에 대하여 개발자 원상복구 의무화 및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징수, 2020년까지 지하수 보조관 측망 및 수질측정망 설치·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연계한 지하수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표수와 연계하여 지하수를 보조수원 또는 비상용수로 활용하며, 지하수 고갈과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전계획을 매 10년 단위로 수립하여 합리적인 지하수관리를 도모하고, 시·군별 지하수 기초자료 조사 등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

■ 물순환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수자원 재이용

- 침투 및 식생을 이용한 빗물유출수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빗물유출수가 지하로 침투하기 쉽도록 불투수 포장을 단계별로 제거하거나 침투도랑, 침투포장, 침투통, 우물 등 다양한 시설 설치 등 도시 및 하천하류의 우수 침투율을 개선하여 물순환의 건전성 회복
- 식생여과대 및 수로에 식생을 조성하여 부유물을 제거하고 홍수도달시간을 지체시키는 동시효과를 거양하고, 수계별로 산지 및 수변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숲 조성사업으로 물저장(녹색댐) 및 정수기능을 극대화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물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및 물의 재이용 관리를 통하여 기존의 한정된 수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버리는 물을 현지에서 재이용하는 저에너지 시스템 도입 등 장래의 물 부족에 선제적인 대응기반 마련
- 저류를 이용한 빗물유출수 관리를 위해 빗물저류시설을 지역 외(인공 및 자연조정지), 지역 내(학교운동장 및 근린공원) 일정면적 이상의 건물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설치 후 생활용, 청소용, 조경용, 화장실용 및 농업용 등으로의 상용화하는 방안을 마련
- 또한, 저류시설 설치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도시지역의 홍수방지를 위한 우수 저류 및 보수기능 향상과 연계하여 추진
- 물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중수도시설 활성화를 위해 물을 많이 사용

하는 건축물의 중수도시설 설치 의무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고도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

〈표 II-27〉 수자원 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종합적인 수자원관리	수자원이용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종합정보시스템 구축(1식) ·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수립(1회/5년)
	물절약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절약종합대책사업 추진(수도요금 현실화, 절수기기개발 및 설치, 노후관 교체 등)
안정적 물공급 체계 구축	상수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용량 : 163천^m³/일(공주, 부여, 논산) · 금강북부권 급수체계 조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설용량: 254.7천^m³/일(천안, 아산, 청양) · 금산무주권 광역상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용량 : 34천^m³/일(금산) ·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아산 영인·인주 외, 18.3천^m³/일, L=549.5km) · 신시가지 상수도시설 사업(아산 배방, 10천^m³/일) · 배수지 확장 사업(천안남부·아산용화, 71천^m³/일) · 전주권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증설사업(서천, 관로증설 7.41km)
	낙후지역 물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77개소, 89천톤/일) · 암반관정 개발(907개 지구) ·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2,072개소 : 마을 951개소, 소규모 1,121개소)
	공업용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설치(천안4지방산업단지 외) · 둔포전자정보집적화단지 공업용수시설설치 사업(25천^m³/일)
지하수 이용 및 보전	지하수 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기초조사사업(9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문지질도 구축사업, 광역지하수 조사, 정밀지하수 조사 · 지하수 공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1식)
	지하수 오염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공원상복구사업(100공/매년) · 지하수 보조관측망 및 수질측정망 운영(16개 시·군)
	지하수 보전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하수관리계획 수립(1회/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활용, 암반지하수 개발·이용, 지하수 고갈·오염 방지 등 ·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16개 시·군, 1회/10년)
수자원 재이용	빗물 유출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 빗물 유출수 이용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투수 포장 단계별 제거, 침투도랑, 침투포장, 침투통 등 설치, 식생여과대 및 수로에 식생 조성,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
	중수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수도시설개발 및 보급(16개 시·군) · 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관로 11.5km, 가압시설 3대) - 공주(관로 6.1km), 당진(관로 4.5km) ·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사업(16개 시·군)

4. 친환경 에너지 · 지하자원 개발 및 관리

가. 현황과 문제점

에너지

■ 지속적인 에너지 이용 증가추세

- 충남지역의 에너지원별 이용을 보면, 석탄은 유류 가격의 상승에 따라 증가, 석유류는 안정화, 전력, 도시가스, 기타가스 등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국 전력공급기지로서의 시설용량 과다

- 충남지역의 발전시설용량은 2009년말 현재 서천, 보령, 당진, 태안, GSEPS 등 총 15,762MW임
- 충남지역의 총 발전시설용량(15,762MW)은 전국(73,470MW) 대비 21.5%를 차지하나 사용량은 30,431GWh로 전국(454,317GWh) 대비 6.7%를 차지함

■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체계

- 충청남도의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 및 이용시스템 분석, 전망진단은 있으나 에너지수요 절감 성과는 기대보다 낮음
- 기존의 에너지 정책은 공급중심으로 치우쳐 수요관리 및 절약기반기술이 미흡한 상황임
- 미활용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이용확대가 필요하나 환경보전과 상충하는 관계로 미흡한 상황임

광물자원

■ 주요 광물자원의 생산 현황

- 주요 생산광물은 규석, 고령토, 석회석, 장석 등이며, 소량의 사금이 생산되고 있음
- 전국대비 생산 점유비중은 규석 3.0%, 고령토 1.9%, 석회석 0.36%를 차지하나, 장석은 전국 1위, 규사는 전국 1, 2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음

■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생산활동은 증가

- 충청남도의 광물자원은 전국대비 산업생산 비중과 광물의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2차 산업 중 광업의 비중은 전국대비 사업체 수 0.9%, 종사자수 0.5%, 생산액 0.7%, 주요생산비 0.9%, 부가가치

0.7%를 차지하고 있음

- 2008년 현재 광업관련 사업체수와 평균종사자수는 각각 연평균 13.8%, 8.6%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액 증가율보다 주요생산 비중가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증가율이 낮은 편임

■ 환경규제에 따른 생산조건 제약

- 규사와 장석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광물자원이지는 하나 조업허가와 관련하여 주민 민원에 따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폐금속광산의 토양오염 가중

- 충남지역에 산재된 폐금속광산 중 오염 우려 광산 23개소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12개 광산지역 주변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함

나. 여건변화와 전망

에너지

■ 고유가시대에 따른 지역경제 부담 가중

- 국제 유가의 급등에 따른 지역경제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고 있음

■ 국제 환경레짐(regime)의 제도화와 국가단위 책임 강화

-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에 따라 화력발전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대외적 규제의 강화가 예상됨

■ 신재생에너지 수요의 지속적 증가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쾌적하고 청정한 대기질 요구수준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
-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RPS)가 2012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조력발전 등 대용량 개발사업은 환경영향으로 인한 갈등을 유발할 것임
- 환경부하가 적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

광물자원

■ 광물자원의 수요전망

- 고령토·석회석·규석 등의 내수감소, 장석·규사의 산업수요증가, 희토류 금속류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상됨

■ 환경보호와 자원생산의 상충

- 중국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규사 등 원자재 수출을 규제하고 있어 국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의 개발여건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

- 국내수요가 증가하는 광물자원의 개발 및 이용확대가 필요하나 환경보전과 상충하는 관계로 미흡한 상황임. 특히 규사는 광물공급의 경쟁력이 있으나 대부분 해사채취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수산업 및 해양환경 분야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조업규제가 예상됨

다. 계획의 기본방향

에너지

■ 에너지 수요에 근거한 공급기반 시설 구축

- 1차에너지 중 도시가스, LNG, LPG 등 가스류 수요가 급증하므로 이에 따른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산업구조 개편

■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

- 화력발전의 증설 등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탄력적으로 대응 운용
-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확대를 위해 경제적 지원방안을 확대

■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한 생태적 효율성 증진

-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으로 수요관리 기반강화
-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수요관리 프로그램의 정착

광물자원

■ 광물자원 개발의 생태적 효율성 증대

- 안정적인 광물자원 확보·이용의 생태적 효율성 증진, 합리적 개발관리
- 광물자원 개발 시 장기적 영향 및 전과정 평가를 통한 지역자원 개발의 지속성 확보에 중점

■ 광물자원 생산의 고부가가치화

- 경쟁력이 있는 광물자원의 생산, 유통, 가공시설을 정비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육성

■ 지역특성을 고려한 광물자원의 개발

- 광물자원 부존량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경쟁력이 낮은 광물은 가급적 억제하며 매장량이 풍부하고 경쟁력 있는 장석과 규사 중심 개발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강화

■ 광해방지 및 오염토양 환경복원의 추진

- 광물자원의 개발에 따른 훼손지역 최소화와 오염토양 환경복원사업 병

행 추진하며 폐광산 주변지역은 토석 유실방지와 안정화시설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복원 추진

라. 세부추진시책

에너지

■ 환경부하가 적은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

- 1차 에너지 가운데 연평균 수요증가율이 도시가스 20.7%, 기타 프로판 및 부탄가스 14.8%로 이에 따른 공급능력을 확충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버스, 트럭 등 배출가스의 환경부하가 큰 교통수단에 대해 압축천연가스(CNG) 공급시설을 확충
- 도서지역 등 전력공급이 불리한 지역의 자체 에너지 공급시설 확충을 위해 내연발전 설비추가 등 공급기반을 강화

■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에너지 위기 극복

-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여 대체 에너지 자원을 개발
- 대체에너지 자원발굴로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폐기물 소각시설에 에너지 회수시설,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강화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
 - 고유가시대에 대비하고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풍력, 소수력, 태양광발전 등 대체에너지 개발 사업 추진,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차원에서 탄소경제 체제를 수소경제 체제로 점차 변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수소에너지 시범단지 조성
-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 신재생에너지 테마공원은 관광지와의 연계 조성하여 지역경쟁력 및 성장거점 확보
-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이용을 통한 생태적 효율성 증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RPS)의 확대
- 전력에너지 수요증가에 따라 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온배수 등 환경영향 광역화·누적화에 대한 종합적 환경관리 대응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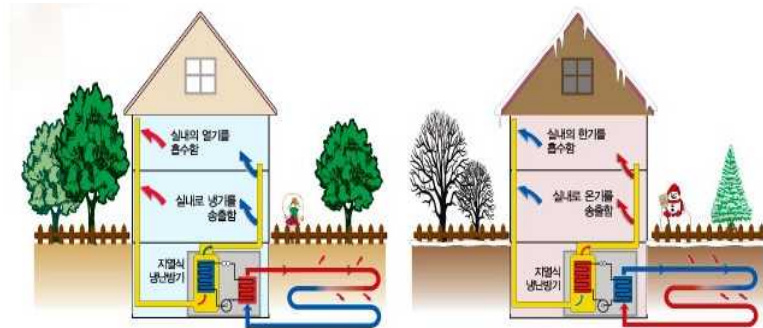
■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을 통한 수요관리 정착

-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기반 조성
- 고유가시대 에너지 위기에 사전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수요관리를 추진
- 에너지 이용의 생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에너지절약기업(ESCO) 육성
-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도입을 통한 에너지 이용효율의 최적화 추진

■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고려한 지역·도시계획 수립

- 환경친화적인 에너지구조의 구축
 -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보급 확대, 근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한 환경친화적, 분산형 발전설비의 강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과 연계
-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적용
 -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단지 개발 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우선 고려할 경우 마을공동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그린빌리지 사업 지원, 에너지비용 절감·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그림 II-23〉 충청남도의 지열 냉난방 시스템 개요도



광물자원

■ 광물자원 생산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경쟁력 있는 장석과 규사 등에 대해 생산, 유통, 가공의 체계적 개발 및 육성으로 지역특화 산업 육성
- 부가가치 창출성이 높은 수요처 개발로 새로운 시장개척
- 반도체 관련 원료광물의 수요 증가에 대비 개발계획 수립

■ 광물자원 부존량 조사를 통한 개발여건 관리

- 광물자원의 개발 및 이용의 생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존량 조사를 통해 매장량과 생산량이 낮은 광종은 개발 억제
- 장석, 규사 등 주요 광물 채취지역에 대한 환경성평가와 환경복원으로 지속가능한 자원개발 추진

■ 광해 방지사업의 지속추진

- 기존의 휴폐광에 대한 광해방지 사업으로 환경복원 사업 추진
 - 광해물질의 지속적인 유출로 생태적 안정성을 훼손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환경보건 차원에서 유해요소를 제거하고 생태적 안정성을 확보
- 휴폐광지역 주변지역 오염농경지에 대한 토양개량 사업 지속적 추진

- 광미(鑛尾) 유실방지 위한 옹벽설치공사 및 우수침투방지 추진, 중금속 용출방지를 위한 지하수 차단 및 퇴적오염물 제거, 갯내수 처리를 위한 소택지(沼澤池)에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을 식재, 오염수로의 준설사업 병행 추진

■ 광물자원 개발에 따른 토양관리계획 추진

- 광물자원 개발지역 종합관리를 위한 토양관리계획 수립
- 금속제련 및 광물 채굴지역 종합관리 추진

〈표 II-28〉 에너지 및 지하자원 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사업
에너지 개발	도시가스 공급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금산, 논산 등 6,166세대) • 도시형버스 압축천연가스 공급시설(천안, 아산)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열 급탕(32개소) • 목질계 바이오 그린홈 보급(우드펠렛 보일러 5,000기) •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건설(10개소) • 지열냉난방(유리온실 25개소, 아파트 200개 동) • 그린홈 보급(12,000가구) • 그린빌리지 조성(16개소)
	신재생에너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발전(380kw) • 풍력발전(4지역, 16,450kw) • 연료전지발전(RPS 연계사업 추진 4개소) • 축산바이오가스발전소 보급(10기) • 지열발전(RPS 연계사업 추진) • 소수력발전(금강사업 연계 4개소)
	신재생에너지 타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형 신재생에너지 타운 사업(도청이전신도시, 행복도시 등 2개소) • 신재생에너지 테마공원 조성(서천, 중부발전 1개소)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에너지 시범단지 조성(1식)
광물자원 개발 및 관리	대체산업 활성화, 관광개발, 기반시설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광지역 진흥사업(보령 1식)
	폐광지역 안전관리 모니터링 및 오염토양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광산 오염토양 복원(12개소)
	광물자원 부존량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물자원 개발 가능량 조사(1식)
	토양관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오염조사 관리 및 복원계획(1식)

제 7 장

지속가능한 자연 및 생활환경 조성

1. 지역생태망 구축과 자연환경 보전·관리
2. 대기질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
3.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물관리
4.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기반 구축 및 지원
5. 재해에 강한 안전충남 조성

1. 지역생태망 구축과 자연환경 보전·관리

가. 현황과 문제점

■ 도시화로 인한 식재면적의 감소

- 시가화건조지역(대지, 공장, 학교, 주차장, 주유소, 창고, 도로, 철도 포함)은 7.1%(610.0km²)이며, 임야는 51.8%(4,453.7km²), 농지(논·밭·과수원)는 31.1%(2,676.8km²)로서 산림 및 농업지역이 주를 이룸²¹⁾
- 식재면적은 도시확장, 도로개설, 임목벌채 등의 개발행위 증가로 인해 329.1km²의 식재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단절로 인한 산림생태축 연계성 감소

- 생태망의 연결성이 결여될 경우 생태공간이 고립됨으로써 생태공간 내부 서식종 뿐 아니라 생태공간 자체가 소멸되는 위험을 초래함
- 특히, 충남 서북부지역의 개발사업, 도로·철도의 개설, 과수원 등으로의 산림전용에 따라 산림이 단절되거나 그 규모가 축소되었음
- 2008년 환경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광역생태축에서 충남지역 산림생태축의 중요 단절구역으로 총 12개를 제시한 바 있으며, 도내²²⁾ 자체 조사에 의해 14개의 중요 산림생태축 단절구역을 제시한바 있음

■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연결 및 복원방안 미흡

- 단절구역 각각에 대한 복원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연결방안 및 생태계 복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 도로에 의한 단절구역에 생태통로가 설치되어 있어도 로드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태통로를 설치할 경우 로드킬에 의해 주로 희생되는 야생동물의 행태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산림, 공원, 사구, 습지 등 자연환경 훼손우려 증가

- 충청남도는 타도에 비해 공원지정 면적이 좁고 공원이용을 위한 접근성도 좋지 않아 도민의 공원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도내에 우리나라 해안사구 133개 중 약 32%인 42개소가 분포하지만,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21) 국토해양부, 지목별 국토이용현황(2008년 기준)

22) 충청남도,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연구(2차년도), 2008

■ 하천 및 연안의 환경오염 증가에 따른 어류 종다양성 감소

- 하천 하류지역 및 호소수의 수질이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이며, 천안·아산·당진 등 수도권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개별공장이 난립함에 따라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강 하구 방조제 및 댐의 인위적인 환경부하와 담수의 다량 유입으로 주변해역의 염분 및 해양환경 변화는 해양 생물자원의 변화를 초래함
- 연안역 수질의 변화,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 연안어장에 의한 자가오염, 해양 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편모조류 및 유독종에 의한 적조가 급증함
- 서해안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연안환경의 변화가 해양생물의 서식처 및 산란장을 변화시키면서 회유어종 유입의 감소와 함께 종수, 개체수, 생체량, 종다양성 등의 감소를 유발하였음²³⁾

■ 생물종 다양성의 지속적 감소

- 도내 야생동식물은 총 4,032종으로 식물이 1,841종, 곤충류 702종, 조류 243종, 무척추동물 214종, 어류 196종, 포유류 41종, 양서·파충류 30종의 순으로 서식하고 있음
- 특히 포유류는 한반도에 분포하는 포유류 123종에²⁴⁾ 크게 미치지 못하며 청설모, 다람쥐를 제외하고 정체·감소추세임
- 멸종위기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증식을 위해서는 서식지 관리와 보호구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유해야생동물 급증, 농림수산물의 피해 증가에 따른 야생동물 서식지에 대한 관리대책이 요구됨

나. 여건변화와 전망

■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자연환경의 보전 및 모니터링 필요성 증대

- 최근 들어 생태네트워크를 도입한 자연환경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1, 2차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 연구」를 통해 유도된 광역생태네트워크가 실질적인 생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절구간에 대한 연결방안 마련이 필요함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축 구축을 위한 생물서식공간 및 단절

23) 충청남도, 충남장기발전비전21, 1997, pp. 813-837

24) 환경부, 국내생물종 문헌 조사연구, 1996

구간 연계 필요성 증대

- 야생동물보호정책 강화로 야생동물의 개체 수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그 서식지와 이동통로 등의 정비를 통한 서식환경 개선이 요구됨
- 도시 확장, 도로 건설, 산림 훼손 등에 의해 생태계 단절 증가와 서식·보유종의 개체수 감소가 예상됨. 특히, 전국 광역생태네트워크를 고려하여 중요단절구간을 선정하고 개별 복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관리구역을 중심으로 한 사업개발을 통해 핵심지역과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사업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지침서가 필요함

■ 종다양성 확보 및 보전 필요성 증대

- 산업 구조가 바뀌고 생태계의 역할과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생물자원의 직접적인 가치 또한 증대함
-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연자원의 보전 등 다양한 이익을 아우르는 생태관광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광자원으로서의 생물종 확보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다. 계획의 기본방향**■ 환경과 조화된 지역발전을 위한 입체적인 자연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 산-하천-연안을 잇는 광역생태축을 중심으로 도전체 자연환경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마련함
- 자연환경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지리정보의 체계화 및 정보화시킴

■ 산-하천-연안을 잇는 광역생태축 보전 및 생태통로 복원사업 추진

- 금남·금북정맥의 주능선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근거하여 생태적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보전사업을 강화시킴
- 생태축-생태축, 생태축-생태거점, 생태거점-생태거점 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생태통로를 복원함
- 생물의 유전적 우수성과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 생태거점의 보전·복원 사업을 추진함

■ 자원으로로서의 생물종 다양성증진

- 생물자원 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직접적인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증식 복원하며 구조관리 센터 및 시스템을 구축함
- 생물다양성의 근간인 농경생태계 관리 및 복원을 위해 해충천적을 복원 하며 이를 통해 농경생태계의 가장 큰 위협요인인 농약사용량을 줄임
- 4계절무논, 미꾸라지 방류 등 다양화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통해 조류 및 이와 연계된 자연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종의 다양성을 확보함

라. 세부추진시책

■ 환경과 조화된 지역발전을 위한 입체적인 자연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 1992년 「리우선언」에서의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 권고에 따라, 충남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을 추진함
- 도내 자연자원의 분포와 변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환경과 조화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자 2.5m 이내의 공간해상도를 가진 위성영상을 정사보정하여 매년 토지이용 급변화지역을 중심으로 갱신 구축함
 - 도시, 도로, 공장 등 개발사업의 면적변화와 산림, 농경지, 습지 등 자연환경의 면적변화 등 도내 환경자원의 변동을 5년 주기로 정기적 모니터링
- 각 시군별 「환경보전종합계획」과 「야생동·식물보호 세부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며, 이에 근거하여 야생동·식물 조사자료를 DB화 하고 환경자료(자연자원, 야생동·식물, 각종 생태계 조사 등)를 기반으로 ‘충남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정보를 입체적으로 관리함
- 노령 유희인력을 활용한 실버환경감시단을 시군별로 조직함

■ 산-하천-연안을 잇는 광역생태축 보전 추진

- 금남(금산군 대둔산~부여군 부소산)·금북(천안시 엽돈재~태안군 안흥진)정맥을 중심으로 산-하천-연안을 잇는 충남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종합적인 환경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생태적인 건전성을 평가하여 다양한 야생동식물이 서식·이동할 수 있는 기반환경을 조성함
- 야생동물의 원활한 서식과 이동, 종다양성 회복, 자연에너지활용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단위 생태지도(biotop map)를 제작함
- 단절된 산림생태계를 연결하여 원활한 이동경로를 확보함
 - 로드킬(road-kill)을 모니터링하여 적정 유형의 생태이동통로 설치, 금남정맥과 금북정맥에 자연형 호안정비사업(지천 16km구간) 추진, 장항선 폐철로구간과 주변부지에 연결녹지기능을 부여하고 녹도(greenway)로서의 활용계획 수립

- 천수만(서산), 금강(서천), 태안생태(태안)와 향후 생태적으로 우수한 3개 지역을 추가로 생물서식공간, 연구·조사공간, 관찰·체험공간, 학습공간을 포함하는 생태공원으로 지정함
- 연안과 내륙의 습지에 대해 생물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습지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연안침식과 갯벌보호를 위해 훼손 또는 훼손 우려되는 지역을 설정, 자연석과 염생식물 등 자연식생 회복을 유도함
 - 반딧불이 보호구역 지정, 연안습지보호구역 지정 등과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 지역의 생태계 모니터링 및 복원사업의 지속적 추진
- 도시의 환경오염 및 쾌적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바람길(wind-road, white-network)을 배려한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을 수립함
 - 도시 내에서 자연과의 공생을 통한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생태 및 녹지 환경을 조성, 청정환경을 적절히 조절·활용하여 생태시범도시 조성

■ 자원으로서의 생물종 확보

-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의 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지정하고,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정 및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함
- 2006년부터 수행 중인 3개 시·군(서산, 홍성, 서천) 철새도래지 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주요 철새도래지인 서천, 서산 등에 추가적인 생물다양성계약을 추진하여 먹이 자원과 서식·은신처 보호강화하고, 철새도래지를 고려한 철새연구센터 건립
 - 무논조성, 벼짚존치 등 기존의 방법과 함께 4계절무논, 미꾸라지 방류 등 다양화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통해 먹이·서식처를 제공하고 종의 다양성을 높임
-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1개소)를 건립하여 야생동물 중보존 시설을 구비하고 야생동물 위치 추적, 멸종위기종 복원·증식, 질병 및 서식지 연구의 업무를 지원함

〈표 II-29〉 자연환경보전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사업
자연환경 관리시스템구 축	환경원격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성영상촬영(해상도: 2.5m 이내, 정사영상) 자연자원변동조사(1회/5년)
	자연환경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1회/5년) 야생동·식물보호 세부계획 수립(1회/5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당산저수지)
	환경정보망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동·식물 실태조사 및 DB 구축(1식) 충남 환경정보시스템 구축(1식) 시군 생태지도 제작 비오톱지도 갱신
지역생태네트 워크구축	광역생태축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조사(1식) 로드킬(road-kill) 조사(지방도 37개 노선) 생태통로 설치(20개소) 시군 세부녹지계획 수립 연안정비(90개 지구)
	생태공원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생태체험장 조성(서산 창리) 야생동물원 건립(청양) 고북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탐조코스 개발(천수만 간월호 일대100km) 금강생태공원 조성(서천하구둑~신성리) 산림생태체험단지 조성 삼선산 수목원 조성 가로림만 생태공원 조성 신성리생태공원 조성 생태공원 조성(3개소 추가 지정)
	생태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습지복원사업(3개소) 간월호주변 서식지 복원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
	생태도시(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학교 건립 새(bird)마을 조성 바람길지도 제작(3개시군) 생태마을 조성((9개소) 생태도시시범사업(1개소)
	연구기반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환경보전상징화사업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 국립생태원 건립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사업
생물다양성 증진	야생동식물 증식 및 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동물증식방사구역 조성(1개소) · 야생동물규조/관리/진료센터 운영(1개소)
	농경생태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충 천적 복원 · 친환경농약개발 및 지원
	철새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서천, 예산, 당진 등 7개소 · 철새연구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내에 1개소 건립

2. 대기질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

가.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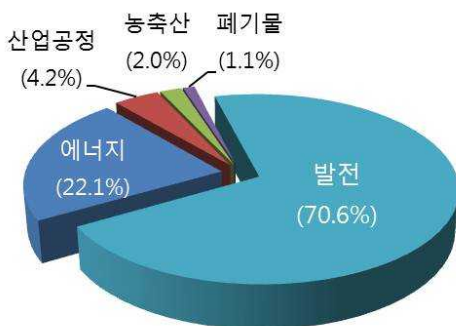
■ 비교적 양호한 대기질 유지

- 도내 대기질 현황을 대기질지수(AQI)로 나타낸 지표는 10~100 범위로 대부분 좋음~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2009년 측정지역의 평균치는 아황산가스(SO₂) 0.004ppm, 이산화질소(NO₂) 0.017ppm, 미세먼지(PM₁₀) 47 μ g/m³로 환경기준치 이내임
- 산업단지의 미세먼지(PM₁₀)농도의 경우 과거 장기기준 수준을 초과하는 해가 많았으며, 최근 줄어들긴 하였으나 환경기준치에 근접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 분석

- 충남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05년 기준, 발전부문을 포함할 경우 83백만CO₂t으로 우리나라 총 배출량(5.9억CO₂t)의 14% 차지하여 전국 2위(1위 경기도, 92백만 CO₂t)에 위치함
- 부문별로 보면, 화력발전이 배출량의 71%인 59백만CO₂t을 배출하여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차순위가 에너지부문으로 22%인 18백만 CO₂t의 온실가스를 배출함
- 발전부문을 제외할 경우, 충남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05년 기준, 34백만CO₂t으로 우리나라 총 배출량(5.9억CO₂t)의 5.8%를 차지하여 전국 6위의 배출량을 나타냄

〈그림 II-24〉 온실가스 배출현황
(발전부문 포함)



〈그림 II-25〉 온실가스의 부문별 배출(발전부문 제외)



* 간접소비 전력 포함

■ 충남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20년 BAU 대비 30% 감축(발전부문 제외)을 목표로 함
 - 감축량으로 보면 2020년 BAU 46,656 천CO₂t 대비 13,997 천CO₂t 감축, 2005년 배출량 34,114 천CO₂t 대비 4.26% 감축
- 부문별로는 에너지 부문 8.5%, 폐기물 부문 31.5%, 농·축산 부문 19.5%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나. 여건변화와 전망**■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 증가 전망**

- 수도권에 인접한 서북부권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조성, 발전시설 증설 등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 증가 전망

■ 대기관리와 에너지사용량 연계 통합관리 추세

-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에너지사용량 목표제도 도입 등 연계 추세
-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결과에 따른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

다. 계획의 기본방향**■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 대기오염 저감대책 수립 추진
-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 추진

■ 대기오염 관리체계 구축

-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시스템도입
- 대기관리 정보시스템의 상시 가동
- 대기오염 예·경보제도 정착
- 대기오염 총량관리 제도 도입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개발사업**■ 대기질 악화 우려 중점지역에 대한 대기질 조사 및 관리방안 도출**

- 대기질 악화가 우려되는 중점지역 11개소에 대한 대기질 조사
 - 화력발전소 4개소, 석유화학 및 철강단지 2개소, 도심권 5개소에 대해 측정 및 예측 결과 분석으로 관리방안 도출

■ 오염원별, 지역별 대기오염 저감대책 수립·추진

- 선 및 면 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저감대책
 - 고속도로 등 교통량이 많은 주요도로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를 위한 원격 감시측정기 도입
 - 차세대 인공지능 도로·차량제어체계(ITS) 도입으로 교통소통을 향상시켜 도심권의 국지적 대기오염물질 축적감소
 - 도로변 대기오염물질 정화수종 식재로 생태녹화사업 동시 추구(생태 보전축을 잇는 충남 그린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연계)
 - 인체에 위해한 2차 대기오염물질 생성억제 및 대기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천연가스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을 추진
- 주요 대기오염 배출원이 많은 서해연안 및 산업단지 등에 대한 배출원 관리로 오염물질 저감

■ 온실가스 저감 및 관리방안

- 주요 배출시설별 연료사용량 DB구축을 통한 에너지 효율 증대
 - 저탄소연료로의 전환계획 추진
- 녹색생활 실천 및 친환경도시환경 조성
 -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도입, 고효율 기기 보급, 녹색생활 실천 및 그린기술 도입, 산업체 목표관리제 도입에 따른 대응책 및 지원대책 마련, 바이오에너지 사업추진, 대체 에너지 재배생산 전략
- 기후보호도시(CCP) 등 국제적 환경관리 표준자치단체로 위상 정립
 -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기오염 저감 및 환경감시 계획 실천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책으로 배출권거래제도 정립
 - 연간 에너지사용량 규모를 고려한 단계적 적용, 대형 배출시설에 대해 에너지 사용량 목표관리제도 도입과 병행 추진

■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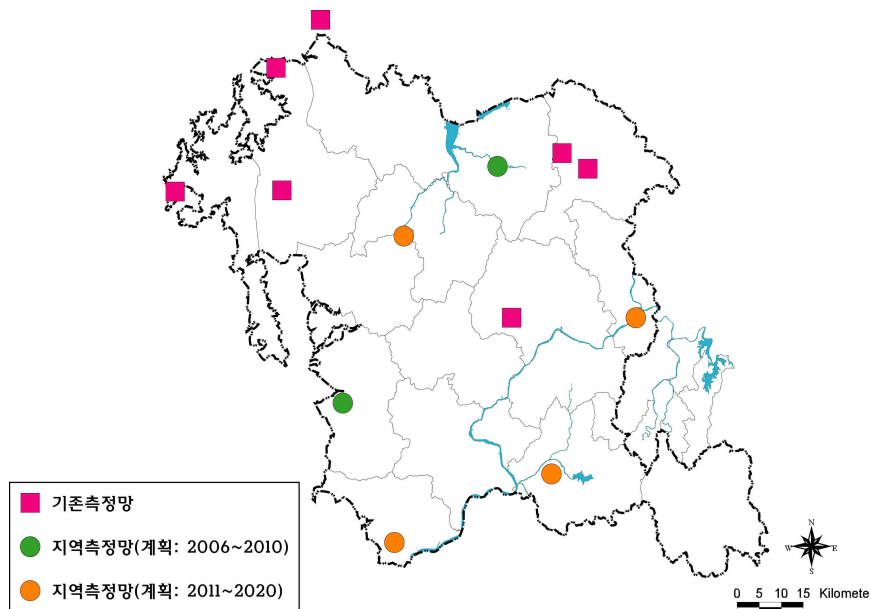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시스템 도입
 -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굴뚝감시 원격시스템(TMS) 구축, 오염물질 종류별 발생량, 배출량을 목록화하여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른 총량규제나 배출권거래제의 기초자료로 활용

■ 대기오염물질 증가에 대응한 대기오염 예·경보제 정착

- 대기오염 예·경보체계를 내실화 정착

- 오염원별 배출자료, 대기오염 모니터링 체계 구축, 황사의 발생빈도, 농도가 증가하고 건강 및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사전 예경보체제 구축 강화
- 대기오염 예보제 도입은 대기관리 지리정보시스템(Air-GIS) 등과 연계한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시스템 도입 등 환경관리 기반 정립
- 황사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농도증가에 대비하여 대기질 측정망의 증설을 통한 사전모니터링 기반 구축

〈그림 II-26〉 대기질 측정망 확충계획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제로 배출시설관리 of 경제적 유인 적용
 - 화력발전소, 석유화학, 철강산업 등 에너지 다소비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총량관리제 도입
 - 청정연료인 저유황유와 LNG로 연료 전환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VA) 체결의 강화
 - 자발적 오염저감을 위한 선행행동(early action)에 대한 경제적 유인 인정제도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로 경제적 유인(KCER) 지급
- 이웃 광역자치단체간의 대기환경 협력체계 구축
 - 수도권, 충청권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의 집합적 관리 및 통합적 운영체계 모색
 - 충청권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운영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산업입지의 재조정 및 신규입지에 대한 대기질 환경용량 평가제도 도입

〈표 II-30〉 대기질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분야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대기오염 저감대책 수립추진	대기질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중점지역(11개소) · 대기오염 우심 예상지역(화력, 유화, 철강 등) 중점조사
	오염원 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전배출원 목록관리 DB 구축(1식) · 온실가스 배출관리시스템 도입(1식)
	자동차 공해 저감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가스 차량 도입(시지역 1,500대) · 제작차의 저공해화, 전기차 인프라 구축 ·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 인공지능 도로차량제어시스템(ITS) 도입 ·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
대기오염 물질 배출 관리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MS 관리시스템 구축(1~3종, 370개소) · 배출부과금제도 개선 · 종합관리망 운영(1식)
대기오염 예경보제 정착	측정망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측정망 확충(20개소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홍성, 연기, 서천, 논산, 태안, 당진) · 소음자동측정망 설치(4개소 : 천안, 아산, 홍성, 연기) · 황사경보운영체제 구축(1식) · 오존경보시스템 가동(시지역)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	제도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원 목록 작성 · 에너지사용량 목표제도 도입 · 연료전환(저황유, LNG 등) 유도 ·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제도 도입
	자발적 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경제적 유인 지급(KCER)
	광역협력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및 충청권 통합적 운영체제 구축 · 충청권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 운영

3.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물관리

가. 현황과 문제점

■ 공공수역 현황

- 하천은 국가하천 9개소 267km, 지방하천 537개소 2,733km, 소하천 2,396개소 3,406km으로 구성됨
- 호소는 946개소(담수호 8, 저수지 222, 소류지 716)임

■ 수질현황

- 하천의 경우 천안, 아산을 포함한 삼교호수계, 안성천 수계 및 서해수계를 중심으로 수질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호소의 경우 유역면적이 넓은 호소를 중심으로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서해연안보다 동해 및 남해연안의 수질이 비교적 양호하고, 서해를 접하고 있는 충남연안은 북쪽에 위치한 인천연안과 남쪽에 위치한 군산연안의 수질보다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 수질관리시설

-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생활하수의 처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2009년 기준 전국 하수처리인구율(하수도보급률)은 89.4%이지만, 충청남도는 63.5%로 저조한 실정임
- 2009년말 기준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41개소이고, 마을단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80개소로 시설용량은 총 611,941m³/일임
-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 처리시설은 총 18개소이며, 시설용량은 1,627m³/일임. 대부분 처리 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재처리함
- 2008년 기준, 산업단지(국가, 지방, 농공단지) 지정 현황은 총 121개소이며, 1개소 1업체인 오·폐수처리시설을 포함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현황은 총 36개소(국가지방 13, 농공 23)로 시설용량은 210,370m³/일이며, 오·폐수발생량에 비하여 대부분 시설용량이 과잉으로 설치됨. 나머지 지구는 개별 처리하거나 단지조성 중에 있음
- 비교적 소규모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수거처리하기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총 6개소로 시설용량은 1,130kL/일이며, 축산분뇨 처리대상량에 비하여 시설수가 부족한 편임

나. 여건변화와 전망

■ 물관리 여건 전망

- 경제발전보다 환경보전을 중요시하는 환경우선주의적 사고가 지배적임
- 환경기초시설 설치 증가로 생활하수의 배출부하량은 점진적 감소추세로의 전환이 예상되나, 국지적으로 축산 사육두수와 산업생산의 증가로 축산분뇨 및 산업폐수의 집중화 현상이 증대되고 있음
- 유역관리 중심의 정책 도입과 수질총량관리제 실현으로 배출시설에 대한 사후농도규제에서 총량기준에 의한 예방적 환경관리로 전환됨
- 금강수질 관리를 위한 유역내 자치단체간 협력 필요성과 삼교천 등 서북부연안지역에 대한 수질관리대책이 요구됨
- 도심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될 것임
- 서해연안지역의 공단밀집 등 개발압력 증가로 육상기인에 의한 연안오염 가속 및 갯벌 감소가 우려됨

■ 수질 및 수질관리시설 전망

- 하천의 유량은 강수조건에 따라 수질농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주요하천의 수질은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나빠지고 있음
- 담수량에 비해 유역면적이 넓거나, 체류시간이 긴 대형호소를 중심으로 수질이 나빠지고 있어 호소특성별 유역의 오염원관리 대책과 체류시간 단축 등 호소 내부 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점진적으로 악화될 것임
- 5년간(2001~2005년)을 기초로 연안의 수질을 전망할 때, CODMn, TN, Chlorophyll-a 항목 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TP와 SS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연안오염은 대부분 육상오염물질에 기인하므로 연안영향지역의 육상오염물질 관리가 집중되어야 함
- 생활하수발생량은 인구 및 상수도 사용량과 직결되며, 2005년 기준 602,299m³/일에서 1인 약 350L/일 상수도사용량을 가정할 때 2020년에는 875,000m³/일로 증가할 전망이다
 - 현재 약 62%의 하수처리인구율을 85%로 상향시키기 위하여 도심지역 중심으로 부족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및 증설이 필요하고, 노후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량사업도 함께 수반되어야 함
 - 도심 외지역의 소규모 면소재지와 마을단위의 인구밀집 지역에는 50~500m³/일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마을단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수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 수세화율 증가,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으로 분뇨처리 시설용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시·군당 1개소 수준에서 장래에는 약 2,000m³/일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처리 개념의 연계처리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시설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나 단위 시설용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산업단지(국가, 지방,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총 36개 시설(용량 : 210,370m³/일)이 운영 중이나 개별처리 하는 산업단지와 신규 조성중인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향후 추가적으로 산업단지 지정을 고려한다면 약 100개 시설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수질오염원 중 가축분뇨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나, 그간 처리공법의 개발이 미흡하고, 인근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 7개소(시설용량: 1,130kL/일)를 운영하고 있음. 향후 축산분뇨 처리기술 발전과 함께 점진적으로 시설 수 및 처리용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다. 계획의 기본방향

■ 물환경 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환경정의 실현

- 권역단위의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추진 및 생태민감지역 오염물질 관리 강화
- 물환경 모니터링체계 선진화
- 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질관리시설체계 구축
- 환경용량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 유역중심의 미래지향적인 물환경 관리체계 구축

- 유역 단위별로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수자원 공급과 하수처리의 통합·연계관리 등 물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 수질총량관리제 시행 및 확대 실시
- 하천유형별 지천(소하천 포함) 관리 추진
- 호소별 특성을 고려한 물환경 대책 마련
- 연안 및 하구지역의 오염예방·관리

■ 도민의 건강과 생태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물환경 정책 추진

- 훼손된 도심하천 생태기능 회복과 하천 배후습지와 유수지의 보전 및 복원 시행
- 생태하천복원을 통한 수생태 건강성 회복
- 자원화된 축산분뇨와 연계하는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으로 전환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개발사업

■ 유역 중심의 물환경 관리체계 정착

- 수계중심적인 권역단위의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추진
 - 중권역 기본계획에 따라 매 5년마다 소권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배출부하량, 수질오염도, 용수목적, 수생태 복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
- 상수원보호구역 및 생태민감지역 오염물질 관리 강화
- 인체 건강성과 생태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유역평가기법 도입
- 물환경 모니터링체계 선진화
 - 새로운 권역구분, 수질환경기준과 물환경정책에 따른 측정망 재편
 - 측정지점, 측정항목, 측정시기 및 횟수, 측정방법 등에 대한 전면 검토를 통해 국가, 충남도 및 각 시·군의 측정망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수질총량관리제의 단위유역 등을 고려하여 유량 측정망을 연계 운영하고, 물환경 정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측정망을 정비
 - 배출시설과 정수장, 자동측정망을 연계한 통합 모니터링 및 감시체제 구축
 - 수생태계 측정망을 구축, 생태적 보전이 시급한 지역에 대한 생태손상도 평가, 수생태 복원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물환경 모니터링의 다원화
- 물통합관리 체계 정착
 - 충남 물통합관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지표수, 지하수, 수생태 모니터링 DB 구축 사업 추진
 - 물통합관리 로드맵 작성 및 중점관리대상지역 관리 추진
- 수질총량관리제 정착 및 확대
 - 금강수계의 수질총량관리제도가 정착(충남면적의 44.6%, 3,845.5km²)되도록 함. 제2차('11~'15) 및 제3차('16~'20)계획기간 동안 공공수역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유지
 - 삽교호수계(충남면적의 19.4%, 1,668km²)의 수질총량관리제도 실시 및 서해수

계 도입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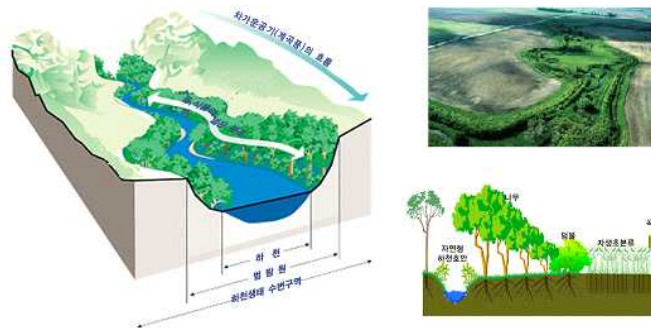
- 하천유형별 지천 및 소하천 관리 추진
 - 기존 소하천 정비 후의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괄된 소하천 정비기법보다는 지역의 문화적, 지형적 여건과 배경에 걸맞는 소하천 정비 추진(하천의 특성을 잘 아는 현지주민, 실무자, 전문가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
 - 충남의 지천 및 소하천을 하천유형별(도시형, 평지농촌형, 산지형)로 분류하여 유역기초조사, 수질유량측정, 하천자연성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응하는 유형별 하천관리 및 기본적인 복원 전략 수립

■ 생태하천복원을 통한 수생태 건강성 회복

- 생태민감 지역 생물서식 상태 및 주변 환경조사
 - 물의 흐름을 막는 보·저수지·댐 현황, 하천변 개발현황, 직선화, 모래·자갈 등 골재채취 실태, 취배수현황 등 조사
 - 수변에 산재해 있는 소, 여울, 습지 분포, 수변식생, 수변토지이용 조사 등
 - 관련기관 간에 수생태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조사분석 기반 조성
- 수생태 건강성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수생태 건강성에 대한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도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하천별 수생태지도 작성
 - 생태 하천복원, 하천 배후습지, 수변녹지 조성 등 수생태계 건강성 복원을 통합하는 기본계획 수립
 - 시가지 지역에 위치한 하천과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오염하천에 우선 반영하여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
 -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운영중인 지침을 하나의 하천관리 지침으로 통합·운영
 - 하천 경작지 점용허가 연장 불허 및 신규 점용허가 금지를 검토
 - 수생태 복원방법에 대한 타당성조사·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 마련
 - 금강 수변지역 양안 1km내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태적 가치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 하천 배후습지 보전 및 복원
 - 기존 하천 배후습지 및 유수지에 대한 개발훼손 방지대책 마련
 - 하천 배후습지와 유수지를 습지보호지역·생태계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 금강 및 삽교천 주변과 주요하천의 제내지(농경지 등)를 수변생태벨트(Riverine Ecobelt) 조성

- 복원시 정화와 수원함양 등이 우수하고 지역에 적합한 자생수종 식재

〈그림 II-27〉 수변생태벨트 조성 모범사례



자료 : 환경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2006.

- 훼손된 도심하천 생태기능 회복과 복원 시행
 - 생물서식 상태 모니터링 및 주변 환경조사, 수질환경기준에 의한 평가와 종합적인 안정성 지표개발, 도심주변 하천 수변생태벨트 조성 및 도심하천 정화사업, 도심하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유량확보 시책 강구 및 수생태 안정성 복원사업

■ 호소별 특성을 고려한 물환경 대책 마련

- 호소의 용도, 주요 오염원, 생태적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관리대상 호소를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호소보전대책 수립
 - 상수원 호소, 농업용 호소 등 호소의 이용목적에 따라 목표수질 설정, 규제 차등화, 호소의 주요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원별 특성에 맞는 수질보전대책 수립, 생태적으로 중요 호소는 우선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별도대책 강구
- 이용목적 상실호소의 활용 다원화
 - 휴경, 경작지의 감소 등 조성 목적을 상실한 농업용 저수지는 농림부와 협의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상수원수, 공업용수, 하천 유지용수 공급 등으로 이용목적 다원화 방안 검토
 - 하류부 수질개선을 위한 농업용저수지의 하천유지용수 공급방안 마련
- 호소별 사전 오염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
 - 상수원 호소 영향권역내 오염물질 관리 강화, 상수원호소 상류부 하천부지 경작지 관리 강화
 - 오염물질이 집적되는 호소 전이대에 수질개선 저류조(pre-dam)를 설치하여 수위 안정 및 오염물질을 제거, 상류부 생태계의 안정화 및 호소 상류하천의 수질개선 도모
 - 친환경적 호소 관리 및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낚시제한 지역 확대
 - 수위변동이 심하여 생태적으로 사막화된 호안부에 수초재배지를 조성하여 오염

물질 제거 및 생태공간 창출

- 대형담수호 기능·규모의 적정성 재검토(금강호, 삽교호, 간월호, 부남호 등)

■ 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질관리시설 체계 구축

- 자원화된 축산분뇨와 연계하는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으로 전환
 - 비료사용량을 합한 가축양분총량과 농경지 면적을 감안하여 지역 내 양분 허용량을 산정관리 하는 읍면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 확보된 농경지의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초과량에 해당하는 사육두수 조정명령 또는 농경지 추가확보 증명제 등 도입 검토
 - 축분퇴비의 펠릿화 시설 설치 지원 검토 및 액비 살포기술 개발
 - 자원화되지 않은 지역과 가축분뇨 다량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추진
 -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도심 및 주변 지역, 하천 주변지역, 생태민감지역 등)
- 수질관리 시설투자 합리화 및 운영관리체계 구축
 - 하수관거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하수관거 누수에 의한 토양·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하수처리장의 적정 유입유량을 유지
 - 지자체 또는 단위유역별로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등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 하수처리시설 부족지역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시설 지속 확충 및 하수이송효율 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 본격 시행
 - ※ 읍면 단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100호 이상 밀집지역의 마을단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로 하수처리인구를 85%이상 달성('20년까지)
 - 하수처리시설이 입지하기 어려운 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염원(음식·숙박업소·목욕장업소·종교시설) 등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개별 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효율 향상 및 노후시설 연차적 개선 추진('10~)
 - 환경기초시설의 유역관리 기반 구축
- 산업체 폐수관리시스템 선진화
 - 산업폐수 특성 및 최적 처리기술, 인접 하천·호소의 용수 목적, 오염총량제 등을 고려한 업종별 또는 개별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 고농도 및 다량의 유기물질 발생업소 집중관리하고, 유역 물환경을 고려한 탄력적 허가제도 개선
 - 현장감시 중심의 지도·점검을 원격실시간 감시체계(TMS)로 전환
 -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환경감시제도 활성화

-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되 업종별·유역별로 차등화 검토

■ 비점오염물질 관리 강화

- 환경용량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 도심지역(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 도로변, 주차장), 공단지역, 축산시설 밀집지역 등 토지이용 형태별로 충남의 특성에 맞도록 집중적인 관리대책 마련
 - 신규사업과 기존 지역·시설에 대한 차등화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 도입방안 강구
 - 발생경로에 따른 비점오염원 저감 및 처리대책을 수립하고 환경용량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강구
 - ※ 비점오염 발생 및 배출 경로에 따라 ①발생단계 사전예방대책, ②하천유입 전 차단·저감대책, ③공공수역 유입 후 저감·처리대책 등을 수립·추진
- 초기 강우시 비점화된 수질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출을 억제하거나 비점오염물질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관리
 - 도심지역: 하수관거의 수밀화, 나대지에 식생조성, 단지개발 지역 초기강우 저류지 설치 및 완충지대 설치
 - 농업지역: 환경친화적 경작실시, 농약비료의 사용량 및 살포횟수를 감소
 - 축산지역: 축산분뇨·축사관리 철저, 강우가 축사내로 유입되지 않고 우회되도록 방지턱, 도랑 등을 조성하고 하류지대에 식생여과대, 저류지 등의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 또한 방류수로에 수생식물(미나리, 부들 등) 등 수생식물 식재
 - 공장지역: 사업장의 원료·생산품 보관 철저 및 안전사용 준수, 건설공사장의 철저한 관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무 부과
- 비점오염물질이 용수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
 - 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 도로변, 주차장 등 토지이용 형태별로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 비점오염원의 영향이 큰 대표적인 소하천을 최적 관리모델 대상지역으로 선정, 저감시설 집중 설치 추진

■ 연안 및 하구지역의 오염예방·관리

- 연안 및 해양오염 방지를 통한 수산업의 생산성 유지
- 연안관리계획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시행방법

정립

- 연안해역 통합환경관리 체계 조기 정착
 - 연안 및 하구환경의 '통합적 연안관리' 강화 및 수질환경관리의 협력체계 구축
 - 「연안관리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연안통합관리의 실효성 제고
 - ※ 연안에 영향을 미치는 배후 육지부에 용도지역제 도입을 검토·추진하여, 연안공간의 조화로운 이용체계 구축, 해양환경개선사업 연안통합관리체계 마련
 - 연안해역 오염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확대를 위한 관련법령의 정비 건의
 - 지방자치단체의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시행
 - ※ 보전지역 지정을 통한 연안환경생태계 보호,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오염 부하 적정관리,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등 선계획 후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
- 연안 수질개선 및 사전예방대책 강구
 - 수질악화 해역을 특별 관리해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청정해역을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관리
 - 연안개발사업 시행시 대체생태계 조성을 법제화하고,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의무화
 - 연안관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갯벌보호 대상지역의 지정 및 연안습지 관리
- 반폐쇄성 수역 등의 육상기인 오염관리 강화
 - 연안환경의 수질총량관리제를 위한 타당성 조사
 - 반폐쇄성 연안수계 하수처리율 향상 우선 추진
 - 토지이용 관리, 산업단지양식장 등의 해양수질오염방지, 해양폐기물 투기 방지
 - 연안 중소하천의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하천정비사업 추진
- 연안오염물질 배출저감 및 처리
 - 유류유출사고 등에 의한 해양생태계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해상안전 체계를 강화
 - 해양폐기물 집하장 확대 설치하여 해상에 무단 투기되는 페어망·페어구 등 어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집중 수거
 - 연안지역의 폐기물 및 퇴적물에 대한 지속적인 준설 실시

〈표 II-31〉 물환경분야의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사업
유역중심의 물환경 관리정책 추진	유역통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권역별 기본계획 수립(2008~2015) · 유역별 통합물관리체계 구축계획 수립 및 시행 · 수질측정망 통합운영관리 및 정비
	수질총량관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수계(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3,845km²) · 삽교호수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668km²)
	소하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형 소하천정비 추진 · 하천유형별(도시형, 평지농촌형, 산지형) 하천관리 및 복원전략계획 수립
자연형 하천복원을 통한 물생태 건강성 회복	생태하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하천조성사업(도내 일원, 기정 56.6km, 미정 50km)
	하천 배후습지 보전 및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 및 삽교천 주변과 주요하천의 제내지 수변생태벨트(Riverine Ecobelt) 조성 · 도심관류 하천 생태적 집중 복원 · 수질환경 우수마을 선정 육성
호소별 특성을 고려한 물환경 대책 마련	호소수질측정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보완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대상 호소 선정 · 이용목적 상실횡소의 활용 다원화 · 호소별 물환경관리방안 마련 · 낚시제한 호소지정 확대
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물질관리시설 체계 구축	공공하수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하수처리시설(16개 시·군, 130천m³/일(127.7천m³/일)) · 하수관거정비(16개 시·군, 1,000km(900km)) · 소규모(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16개 시·군) ·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114개소)
	가축분뇨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12개소) ·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시스템으로 전환 · 읍·면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 축분퇴비의 펠릿화시설 설치
	폐수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21개소)
	분뇨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뇨처리시설공사(17개소)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 관리강화	비점오염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점오염물질처리시설 설치(15개소) · 도심지역의 비점오염원 중점관리지역 지정 · 생태민감지역의 비점오염원 중점관리지역 지정
연안 및 하구지역의 오염예방·관리	연안통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시행 · 연안환경관리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 갯벌보호구역 지정 및 연안습지 관리 · 대형담수호 기능 및 규모의 적정성 검토
	연안오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유출사고 등 해상안전체계 강화 · 침체어망 인양(서해연안, 13,983톤) · 양식어장 정화(서해연안, 80,550천m²) · 항포구쓰레기 수거 (서해연안, 12,630톤)

4.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기반 구축 및 지원

가. 현황과 문제점

■ 폐기물 발생배출 특성의 안정화

-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은 증가 후 안정추세를 유지함
- 사업장폐기물은 경제 활성화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하수처리율 향상에 따라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함
- 처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

■ 폐기물로부터의 에너지 및 자원 회수 기반시설이 필요

- 폐기물의 단순한 처리 방식인 소각, 매립에 의존하고 있음
-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으로 물질순환 경제 체제로의 변화가 요구됨
- 폐기물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함

■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민이 상존함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계획 수립의 어려움이 여전함
- 폐기물 부적 처리는 도민의 삶의 질 하락 및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저해요소로 작용함

나. 여건변화와 전망

■ 폐기물에 대한 인식변화와 입지 갈등

-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하여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폐기물에 대한 도민의 인식이 변화됨
- 그러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환경악화 및 재산상의 가치 하락 우려되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처리기술의 정립이 필요함

■ 폐기물 발생량의 지속적인 증가

- 지속적인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내포신도시와 세종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라 인구증가와 산업활성화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발생배출의 증가가 예상됨

■ 폐기물 안전처리 기준 강화

- 폐기물의 안전처리 기준 강화 및 하폐수 슬러지의 해양투기의 금지 등 국제 환경레짐의 강화 추세에 있음

다. 계획의 기본방향

■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와 안전처리

-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로 환경부하 경감
-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회수시설, 에너지 및 자원회수시설을 통해 자원으로 회수하여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 불연성 폐기물 등 경제적·기술적으로 처리가 곤란한 것은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처분하여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관리
- 중간처리 및 안전한 처분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갈등 해소

- 주민참여형 제도의 정착과 경제적 유인보상책 제공

■ 폐자원의 에너지화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동력원으로 활용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거점 확보 및 보급 확산
 - －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 기존 소각로의 여열 회수 및 음폐수 혼합소각 등 운영의 다양화,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가스 에너지화로 생태산업 사업과 병행 추진,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개발사업

■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재활용 기반조성을 위한 관리·수거체계 정비

- 폐기물 발생단계부터 감량시책
 - － 도심 폐기물 배출지역, 사업장별 감량목표 설정(감량 달성지역 인센티브 제공), 환경친화적 공정개발 및 재활용 가능한 제품산업 집중 육성, 특정산업의 배출물을 타 산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복합산업 구조인 생태산업단지 클러스터 형성
- 폐기물 수거체계의 정착과 재활용 기반 조성
 - － 지역별 관리체계에 맞는 분리수거체계 정착, 재활용 생활화를 위한 「환경교육센터」를 생태환경 체험교육장과 연계 운영, 신산업단지 조성지역 인근에 재활용단지 에코타운 조성으로 환경자원 순환의 기반 구축

■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관리기반 확충 및 정비

- 음식쓰레기 처리 및 관리시설 기술개발
 - 식생활 개선 등을 통한 음식쓰레기 발생량·수분함유량 최소화 정책
 - 지역단위별 가축사료 수요량에 적합한 수거체계도 작성
 - 남은 음식쓰레기 퇴비화 및 연료화를 위한 기술 개발
- 폐기물 중간처리의 활성화
 - 선별, 압축, 파쇄 등 중간처리를 통한 폐기물관리의 효율성 및 안전성 기여
 - 유기성 폐기물의 사료화 및 연료화(RDF) 실현
 -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 및 열분해로 감량화 및 무해화 도모
- 폐기물관리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시설 확충으로 매립량 최소화
 - 광역 자원순환단지 시설은 사업성 보장을 전제로 하는 민자유치 사업(BTL 등) 추진 등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추진
 - 내포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광역기반시설은 지역간 각 기능의 상호 공여와 분담 분업화(intravation)로 규모의 경제성 도모
 - 기존 비위생 매립시설은 안정화 적정공법으로 재정비하여 토양환경 복원과 지하수 오염방지

■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추진 기반 구축

- 비용효과적인 폐기물 종합처리를 위한 에너지화를 통해 탄소배출권 확보 추진
-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 추진
 - 폐비닐 재생유 생산, 해양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농촌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 및 부유쓰레기 처리와 병행한 우드펠릿 생산

■ 폐기물 안전처리 기준 강화에 따른 하·폐수 슬러지 처리 기반시설의 구축

- 2012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2011년까지 슬러지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재원조달 대책 추진
- 하·폐수 슬러지로 인한 2차 오염의 예방
 - 직매립금지 정책의 기조에 따라 다양한 중간처리와 재활용방법 적용
 - 하·폐수슬러지의 발생량이 적은 지역은 기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혼합소각

■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갈등 해소 및 계획관리

- 신도시 건설 및 공공시설의 입지시 자원회수시설을 사전 입지시설 계획단계에 반영, 사후입지에 따른 민원제기와 및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
 - － 폐기물 수거·운반·선별·처리에 대한 최신기술(state-of-the art technology)의 적용으로 원천적인 주민불신 해소
-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와 관련한 환경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 구조의 제도화
-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관리 계획 수립 추진으로 환경거버넌스 구축

〈표 II-32〉 폐기물 분야의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사업
폐기물 적정관리체계 확립	폐기물의 발생 및 수거관리체계	· 폐비닐, 농약별 수거비 지원(16개 시군)
		· 공공재활용센터 지원(16개 시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1개 시군)
	재활용 기반 조성	·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11개소)
		· 재활용단지 에코타운 조성(1개소)
폐자원 에너지화	폐기물처리 및 광역자원순환 단지 조성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공공시설(7개소)
		· 소각시설 설치 및 에너지 회수시설 개선 (9개소, 시설용량 : 725톤/일) · 권역별 광역자원화시설 설치운영(7개 권역)
하폐수 슬러지 처리 기반시설 설치	기반시설 설치	· 매립시설 설치 및 기존매립지 정비(매립지 11개소, 비위생매립지 3개소)
		· 8개 분야 45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고형연료(RDF) 9, 전용보일러 1 － 소각열 회수 10 － 바이오가스 12,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3 － 우드펠릿생산 8, 폐비닐재생유회수 1 － 해양폐기물처리시설 1
하폐수 슬러지 처리 기반시설 설치	기반시설 설치	· 폐기물 에너지타운 조성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및 권역별 광역화추진 (7개 시군, 260톤/일)

5. 재해에 강한 안전충남 조성

가. 현황과 문제점

1) 자연재해 현황 및 대응실태

■ 상대적으로 많은 대설·폭풍설에 의한 피해

- 전국적으로는 태풍과 호우 피해(86.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충남은 대설과 폭풍설(78.9%)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함
- 자연재해 원인별 피해액은 대설이 총 피해액의 48.9%로 가장 많고, 폭풍설이 30.0%, 호우가 15.7%를 차지함

■ 지역특성에 따른 시·군간 상이한 자연재해

- 최근 10년간 부여, 공주, 논산, 부여 등이 타 시·군에 비해 피해가 큼

■ 자연재해 방지대책 현황

- 도내에는 49개소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41개소는 침수위험지구이며 8개소는 유실위험지구로 지정
- 도내 국가하천은 9개로 개수율 97%, 지방1급 하천은 11개로 개수율 92%, 지방2급 하천은 526개에 달하며 개수율은 84%인 반면, 소하천의 경우 2,396개소에 달하나 개수율은 33%에 불과함
- 수해상습지구 관리로 38개 지구(하천 연장 135km)에 대해 2,241억원 투자,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으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73개 지구 323.5km의 하천연장에 대하여 2,278억원 투입 예정

2) 인위재난 현황 및 대응실태

■ 화재, 도로교통 등 생활관련 재난 증가

- 2009년 발생한 재난은 17,097건으로 2006년 이후 증가추세이며, 인명피해 16,950명(사망 518, 부상 16,432), 재산피해 35,298백만원 발생
- 재난유형별로는 도로교통에 의한 재난이 8,682건 70.46%(12,974명), 화재는 2,979건 17.42%(1,370명)를 차지

■ 인위재난대책 현황

- 도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2011년 현재 전체 4,799개소로 시설물 952

개소, 건축물 3,772개소임. 이 중 중점관리 대상시설이 4,724개소이며 재난위험시설이 75개소임

- 충남 내 인위재난을 대응·관리하는 소방관서는 13개소, 안전센터 59개소, 구조대 18개소가 설치되어 소방공무원 1,803명으로 운영됨

나. 여건변화와 전망

■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 발생위험 증가

- 재해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기존 방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는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비한 전방위 지역방재시스템 구축 필요

■ 대단위 개발사업과 도시화로 인한 재해위험성 증가

- 금강 유역의 세종시 건설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하천 유역의 재해위험성을 가중시킴

■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건(Hebei Spirit), 미 멕시코만 기름유출 등으로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

■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재해대응기능의 향상

-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공위성, 이동통신 및 GIS 시스템을 활용한 방재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임

다. 계획의 기본방향

■ 위험지구 정비 및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확충

-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수해 등에 취약한 지방하천정비, 소하천정비 등을 통해 위험지구를 지속적으로 정비
 -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수해상습지구와 같은 위험지역에서의 대규모 토지이용 및 지역개발을 방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엄격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 4대강(금강)사업과 연계하여 치수 및 방재기능 강화
- 도시기반시설의 재해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원녹지, 도로공간 등 오픈스페이스와 교통시설, 라이프 라인 등 도시기능 유지시설 정비 강화
 - 기존 도시방재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통해 신규 방재시설의 안전성을 제고

■ 사전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적·선제적 방재위기관리시스템 구축

- 첨단정보통신기술을 방재분야에 응용하여 재난·재해예측 및 발생시 체계적인 위기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해발생의 통합적·체계적 관리
-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 구축과 연계한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 － 사·군 재난관리시스템 : 사·군 현장 대응 중심체계로 재난관리시스템 체계를 개편하고 표준행동절차(SOP)기반에 의한 선진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 － 풍수해보험 업무지원시스템 : 풍수해로 인한 사유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제도와 연계한 정보시스템 구축

■ 도민 친화적 안전안심 생활환경 조성

- 안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 도시(마을) 만들기’ 정책 강화
- 도시형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지도를 작성하여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
 - － 사전대피체제를 구축하고, 무장애설계기법 등을 활용하여 재해약자를 배려한 생활공간 창출,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사후유지관리를 강화,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분야에서 방어적 디자인을 통한 도시설계기준(CPTED) 적용

라. 세부추진시책

■ 구조적 재해대책 강화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완료(60개 지구)되거나 2011년 현재 시행중인 21개 지구, 그리고 계획중인 29개 지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
- 구제역으로 인한 침출수 우려지역,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한발취약지역, 지진발생지역 등 자연재해 상습지역은 토지이용의 재조정을 통하여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최소화
 - － 수해상습지 26개 지구 개선(총 77개 지구), 하도준설 73개 지구 정비(329km), 3,348km 2,377개소 소하천정비(완료 579km)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농경지 침수 및 구제역으로 인한 침출수 문제를 대비하는 구조적 재해대책 강화
- 해안·하천·지천 등은 홍수예방 등 방재기능을 확보하는 동시에 생태하천 정비사업(36개 지구, L=165km) 추진 및 친환경적인 수변공간 조성

■ 비구조적인 재해대책 강화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에 방재계획내용을 강화하고, 선제적 방

재능력 강화를 위하여 재해분석도를 통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방재 도시계획체계 확립

- 도시에 잠재하고 있는 재해요인의 안전도를 높이는 도시방재계획을 수립, 재해 위험의 정기적 진단, 특별위험구역에 대해 도시계획적으로 대응
- 홍수위험이 높은 지역의 대단위 도시개발의 재해가능성 예측 및 방재시설의 설치 의무화, 산지는 유역별 산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과도한 산지개발 억제, 위험물 분산수용과 방재완충지대 설정
- 자치단체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대비와 재해 위험지구 정비
- 도시형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지도를 작성하여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
 - 재해피해도, 재해예상위험도, 주민대피도 등 재해지도 작성 및 재난관리 대상 시설의 정기적 점검 및 DB화, 신속한 주민대피 및 피해 최소화 방향 제시
- 풍수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풍수해보험제도 확대
 - 주택 또는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 관리할 필요가 있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대책 강구
 -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포신도시, 세종시의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시설 관리, 재난예방을 위한 정기·수시·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실시, 도시기반 시설의 체계적 관리·정비,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

■ 안전안심 인프라 구축

- 각종 자연재해 및 인위재난을 통합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충남 재난(재해)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 통합 재난(재해) 상황실 운영,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인적재난사고 특성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유형별·특성별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 등
- 건강하고 안정된 산림자원을 유지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통합시스템 구축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산불방지 통합시스템 구축, 헬기 및 정예화된 진화요원에 의한 초동진화 체계 강화, 조직적인 산불통합지휘체계 구축, 진화장비의 과학화·현대화(산불진화차량, 무인감시카메라, 임차 헬기 등)
- 도민친화적 방재 관련 시설물을 확충하여 방재의식 제고 및 선제적 지역방재력 강화

- 안전관리연구센터, 종합방재센터, 재난안전체험관 등 확충과 콘텐츠 개발
- 구조·구급, 소방장비·차량, 신설 소방관서 등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
 - 인구밀집·위험지역 중심으로 소방관서 신설 및 인력보강, 소방장비의 현대화(특수소방차량 확보, 현장활동 정보지원 DB구축 등), 노후 소방청사 정비, 의용소방대 확대, 중소형 항공기, 헬기를 이용한 환자 긴급수송체계 및 재난구조체계 구축

■ 안전안심 도시만들기(U-Safe City) 추진

- 안전안심 도시(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 사회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심구역 설정,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의 생활도로 정비사업 및 도민 안심주택 만들기 사업 추진,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안전도시만들기 사업 추진
-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조성, 물순환형 수변도시조성, 하천 분류 및 지류 정비

〈표 II-33〉 방재분야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위험지구 정비 및 사전예방 강화	구조적인 재해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관리(110지구) · 지방하천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해상습지 개선(77개 지구),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73개 지구) · 소하천정비(2,377개소) · 생태하천정비사업 등
	비구조적 인 재해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도시계획체계 확립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도시형 재난 대응 종합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지도 작성 · 풍수해보험 제도 확대 ·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안전안심 생활환경 조성	안전안심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재난(재해)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재난(재해)상황실 구축, 충남 재난특성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재난 대응역량 고도화 · 방재 관련 시설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연구센터(1식), 종합방재센터 설치(1식),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천안) ·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차량, 구조·구급·소방 장비 확충, 신설 소방관서·노후 소방청사 신축
	안전안심 도시(마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안심 도시(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안심구역 지정, 안심지킴이 제도 도입, 도민안심주택 만들기, 안전 생활도로 정비 등 · 안전안심 도시(마을)만들기 조례제정_ 예, 홍성군

제 III 편

계획의 집행과 관리

제1장 행정계획

제2장 재정계획

제3장 투자계획 및 집행방안

제1장

행정계획

1. 미래지향적 자치역량 확보

2. 지역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협력적 지역개발

3. 국제교류 및 국제통상의 활성화

1. 미래지향적 자치역량 확보

가.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의 자생적 발전 계기 마련과 행정서비스의 개선

- 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경영마인드를 토대로 창의성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려는 분위기 확산

■ 중앙정부의 통제와 행정수요 대응능력 저하

- 미흡한 분권화 수준과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경직성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나. 여건변화와 전망

■ 지방분권에 따른 권한 및 자율성 증대

- 효율성 지향의 사고 전환과 지방행정체제의 변화 요구

■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기능 재편 요구

- 세계화의 흐름은 지방단위의 경제영역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신장

■ 시민사회의 성장과 자치행정의 민주성 요구

- NGO나 시민단체 등을 통한 자치행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참여 요구

■ 경쟁원리의 도입과 시장성의 강화

-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 있어서 민영화, 민간위탁, 제3섹터방식 뿐 아니라 보다 수익자부담원칙의 다양한 공급방식을 모색

■ 지방행정 수요구조의 변화

- 지방행정이 단순히 주민에 대한 복지 및 대민서비스의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할 수행

다. 계획의 기본방향

■ 미래 행정수요에 부응한 체감형 고객감동 행정 실현

-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신속적으로 대처하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고객지향적 참여행정체제로 조직 강화
- 행정의 성과와 결과가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도민들에게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분석
- 도정 정보에 대한 공개 확대로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부조리를 제거하고 도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 마련

■ 지방행정의 경영성과 향상과 효율성 제고

- 충남의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법령의 정비와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여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민간부분과 상호보완과 파트너십 하에서 민간부분을 적극 유도하며, 향후에는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로부터 다양한 공급제도를 모색
-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장기적·계획적 접근과 투자를 통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 공무원 양성의 기반 조성
-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도정운영의 성과와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의 정착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 참여기제의 제도화 및 정책평가

- 도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우수사례를 전파하며 제도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 주민참여기제를 제도화하고 활성화시킴
- 지역 전문가들이 지방정책결정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 및 감시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도정 발전과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함
 - 이를 위해 위원회 운영의 대응성을 강화하고 관·학·정·책·연·구·팀 구성 및 정책모니터단을 적극 운영하며 정책참여 유인수단을 강화함
- 수요자 중심행정의 실천을 위해 민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
 -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의 구체적 보완으로 객관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행정서

비스에 대한 기존의 단순비교에서 탈피하여 시책 품질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표로 우수사례의 전달과 확산에 초점을 맞춘 평가시스템 도입

■ 인사운영의 합리화와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공무원 육성

-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기반 조성으로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 이를 위해 지방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승진·전보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며 다면평가제도 등의 개선
- 교육훈련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로 공무원의 능력개발
 - 전문성과 창의적인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와 프로그램 개발

■ 도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경영행정 추진

- 충남의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법령의 정비와 제·개정을 위한 논리개발
 - 현실과 부적합한 법령을 발굴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입안 초기부터 입법동향 관리 및 법령 추진상황 보고를 정례화 하며 언론매체, 설명회 등을 통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확산
-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기능 및 민간운영으로 시설이용이 활성화 되는 기능, 비영리단체에 재정보조 등으로 관리가 효율적인 기능 등을 중심으로 추진대상을 확대
 - 객관적이고 투명한 계약방법으로 능력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 민간위탁사업의 사후관리 강화로 수탁기관의 책임성 제고
- 도정운영의 성과향상과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의 정착
 - 성과와 보상이 연계된 실시간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학습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조직의 성과와 고객만족 제고

〈표 III-1〉 행정계획 분야의 세부추진시책

추진시책	시책유형	세부시책
참여기제의 제도화 및 정책평가	도민참여 제도화	· 주민참여 정책과 방법의 제도화 · 주민참여프로그램개발 및 우수사례 전파
	지역전문가의 정책참여 강화	· 위원회 및 관·학연구팀 구성 · 정책모니터단 운영 및 정책참여 유인수단 개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 민원수요 증가 분야 선정 품질평가 확대 실시 ·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보완 · 우수사례의 전달과 확산에 중점을 둔 평가시스템 구축
인사운영의 합리화와 창의적 공무원 육성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기반 조성	· 인사위원회의 기능강화 · 승진·전보인사의 예고제를 통한 객관성 확보 · 다면평가제 개선
	교육훈련의 계획적·체계적 투자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와 프로 그램 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행정 추진	법령의 정비	· 현실과 부적합한 법령의 정비와 제·개정 · 입법동향 및 법령 추진상황 보고 정례화
	민간위탁 확대	· 객관적이고 투명한 계약방법 개발 · 민간위탁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성과관리제 도입	· 성과와 보상이 연계된 실시간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조직구성원의 핵심역량 개발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2. 지역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협력적 지역개발

가. 현황 및 문제점

■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미흡

- 협력사업의 경우 창립된 이후 협력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 머무를 가능성이 큼

■ 협력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이견 발생

- 협력안전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견해차가 발생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협력·제휴 추진

- 지역간 협력·제휴가 행정기관, 민간단체,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나. 여건변화와 전망

■ 지역개발이 집권·단절형 사회에서 분권·네트워크형 사회로 변화

- 지역간 상호협력 및 역할분담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공동 R&D, 인프라, 예산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역행정체제 필요성

-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지역간 공동대처가 요구되는 광역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

■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구체적 가시화

- 인접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수요가 급속하게 증대함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가 가시화

다. 계획의 기본방향

■ 인근 기초자치단체간 협력사업 확대

- 도내 시-군간, 인근 광역자치단체의 시-군과 다원적 협력체 구축을 통

해 지역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충청권 광역발전을 위한 공동관리운영체계 구축

- 5+2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발굴과 국책사업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 충청권 차원에서 공동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민관협력 경영전략 모색

- 행정서비스의 생산·공급주체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인식하고 주민을 단순히 행정서비스의 소비자로서만이 아니라 생산자적 지위로 인식함으로써 참여기회 제공과 경제적 효과를 향상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개발사업

■ 협력기반의 조성

- 세종시 주변 사·도와 연계발전을 모색하고, 충청권행정협의회 및 충남-전북교류협력회의를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간 공식적 협력은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식적 협의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협의체별로 나누어져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민간부문의 정보교류, 공동연구 등 활발한 교류 추진
- 지역주민이나 공무원들은 자치단체 홍보매체, 지역언론매체 등을 통해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방안의 모색과, 그간의 협력사업의 추진경과나 성과 등에 대해서도 워크숍, 세미나, 언론매체 발표 등을 통해 홍보

■ 협력제도의 정비

- 지방자치단체가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공동의 목표로 인식되는 특정기능에 맞추어 기능적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간 자발성 증진
- 지방자치단체간 다양한 형태의 지속적 협력사업으로 상호간 신뢰를 형성하고, 시설의 공동운영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공동시설 운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소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시설 운영 시범사업 추진
-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필요한 재정 확보하는 장치 마련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기금의 용도는 주민간 협력, 문화·학술·스포츠분야 등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

〈표 III-2〉 지역간 협력개발 분야의 세부추진시책

추진시책	시책유형	세부시책
협력기반의 조성 및 확충	협력제도 강화	· 자치단체간 협력에 대한 제도적 강화
	협약체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민간부문과의 교류 확대
	협력에 대한 홍보	· 홍보매체 등을 통한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추진경과 및 성과 홍보
협력제도의 정비 및 보완	기능적 협의체 구성	· 공동의 목표로 인식되는 사업과 기능에 대한 협의체 구성
	공동시설 운영	· 공동시설운영에 대한 수요조사 · 공동시설운영 시범사업 추진
	협력기금 마련	· 법률이나 조례제정을 통한 재정 확보 ·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기금 활용방안 마련

3. 국제교류 및 국제통상의 활성화

가. 현황과 문제점

■ 지방행정 변화와 국제교류

- 국제교류는 기존의 종속적인 관계를 벗어나 상호의존(inter-dependency)의 대등한 관계로 발전

■ 지역별, 분야별로 편중된 국제교류

- 자매결연 자치 단체가 미국, 일본, 중국 등에 편중되어 있음

■ 미비한 국제교류·통상전문 인력

- 지방행정에서도 국제교류·통상 전문가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국제교류 및 통상전문인력은 미비한 실정임

나. 여건변화와 전망

■ 국제교류협력의 증대

- 민간차원에서의 경제·문화·체육·인적교류 및 상징사업 등 다양한 국제교류가 증대되고 있음

■ 지속적인 수출신장

- 충남의 수출은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해 많이 감소하였으나, 2010년 수출액은 540억불로 전년대비 37.1%의 고성장을 달성

다. 계획의 기본방향

■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지방이 국제교류의 한 주체로 등장함에 따라 지방외교와 국제교류를 추진할 조직, 인력, 기반시설 등 기반여건을 확충함

■ 생산적 국제교류 확대

- 민간주도의 교류활동 다양화

- 기존의 기관장이나 직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유지 방문 중심의 소수 엘리트 중심의 자매결연 활동으로부터 주민, 민간단체 및 비정부기구(NGO) 등이 참여하는 국제교류로 전환함
- 지역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로 민간 교류단체를 발굴·지원하고, 내실화를 위해 사전 교류단계부터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

■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제고

-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능동적이고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견수출기업 육성
-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지원책 강구
- 해외 우수바이어, 기업 등 해외시장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체계 구축

■ 충남의 투자유치역량 강화

- 도 전략산업 중심의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의 신활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기반 인재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이전(유치)기업과 도내 대학(전문계고), 연구소간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별 클러스터를 활성화하여 기술발전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 타시도보다 친비즈니스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투자유치 경쟁력 제고

라. 세무추진시책

■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국제통상 전담공무원 전문화 및 육성
 - 국제통상 환경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각종 통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역의 수출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을 육성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계(係)수준의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순환보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국제전문공무원”으로 양성
 - 국제통상 전담공무원 전문화를 위해 국제통상 관련 위탁교육, 해외연수 기회 확대, 자매지역간 국제교류 연구과정 등의 전문과정 교육을 확대
- 지역브랜드의 육성
 - 세계시장 지명도가 떨어지는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지역브

랜드를 육성

■ 생산적 국제교류협력 확대

- 자매 우호단체와의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민간차원의 교류사업을 지원
- 외국 지자체 공무원의 한국 이해를 증대하기 위해 K2H(Korean Heart to Heart) 사업을 추진
- 환황해권시대를 대비하여 중화권 교류를 추진하며, 기타 지역 해외교포와의 유대를 증진
-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구축
 - 세계 각국의 자치단체와 국제기구들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협력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주요 국제기구(World bank, Clrae, IULA, CEMR 등)와 적극적인 국제교류 협력관계를 형성

■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 대중국 수출지원 강화
 - 도내 중소기업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해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내 중소기업의 고부부가치화를 통한 구조전환과 통상지원 추진
- 영세수출기업의 중견기업화 지원
 - 수출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수출이 신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통상지원 활동을 강화
- 농수산물 및 인삼제품 수출지원
 - 농수산물 수출을 전략 수출품목으로 육성하려는 농식품부 및 지식경제부의 정책을 활용하여 충남의 농수산물 및 인삼 수출을 지원

■ 외국자본 투자유치 확대

-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기반구축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매력적인 투자환경(교통 및 통신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노동력 공급, 공업용수, 산업폐기물 처리, 직업교육훈련 등)을 조성
 - 기업유치 및 현장애로 전담제 운영

〈표 III-3〉 국제교류 및 국제통상 분야의 세부추진시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국제통상 전담공무원 전문화 및 육성	· 기초지자체에 전담조직 구성 · 전문과정 교육 확대
	지역브랜드 육성	· 지역 중소기업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도, 시군의 브랜드를 육성
생산적 국제교류협력 확대	인적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자매 우호단체와의 상호 교류 확대 · 민간교류사업 지원 · K2H(Korean Heart to Heart) 사업 확대 · 지역 해외교포와의 유대 강화 ·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한민족 정신문화 허브」 조성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지역기업의 수출 지원	· 대중국 수출지원 강화 · 영세수출기업의 중견기업화 지원
	지역특산물 수출 지원	· 농수산물 및 인삼제출 수출지원
외국자본 투자유치 확대	외자유치 기반 확대	·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기반구축

제 2 장

재정계획

1. 재정계획

가. 현황과 문제점

■ 재정규모의 지속적 확대

- 2010년 충남²⁵⁾ 본청의 당초예산 총계기준 재정규모는 3조 9,235억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함
- 회계별 구성은 일반회계 3조 3,427억원(85.2%), 특별회계 5,808억원(14.8%)으로 이루어짐²⁶⁾
- 순계기준²⁷⁾ 2010년 충남의 당초예산은 예산총계(3조 9,235억원)에서 중복계산분(2,304억원)²⁸⁾을 제외한 3조 6,931억원임

〈표 III-4〉 2010년 충남의 회계별 재정규모(당초예산)

(단위 : 억원, %)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0 예산(A)	39,235	33,427	5,808
증감액(A-B)	594	1,047	-453
증감율	1.5	3.2	-7.2
2009당초(B)	38,641	32,380	6,261
2009최종예산	42,189	35,887	6,302

자료: 충남 도청 홈페이지(2010.9.2) 자료를 기초로 재구성.

- 2009년 총 재정규모, 동종단체(도) 평균보다 1조 3,823억원 작음
 - 충남의 2009년 자체수입, 의존재원, 채무액은 광역도 평균보다 각각 1조 1,170억원, 7,001억원, 2,523억원이 적음

〈표 III-5〉 2009년 충남과 광역도의 재정규모 비교(결산 총계기준)

(단위 : 억원, %)

	재정규모	자체수입	의존재원	채무	공유재산
충남	44,124	10,904	24,173	8,641	27,170
도 평균	57,947	22,074	31,174	11,164	105,748

자료: 2010년 충청남도 지방재정공시(2010.8).

25) 이하 충남의 재정 및 예산이라 함은 시군을 제외한 본청 기준을 의미하고 시군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시군 포함이라고 명시함.

26) 기금은 3,178억원이며,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4조 2,413억원임.

27) 순계기준은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함.

28) 중복 계산된 내부거래(2,304억원)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은 전출입금 1,031억원, 융자금수입지출 400억원, 융자금회수 및 상환 43억원, 예탁/예수금상환 29억원 등임(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참조).

- 2010년 1인당 일반회계 재정규모, 동종단체(도) 평균보다 높으며 인구수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Ⅲ-6〉 2010년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현황(일반회계 당초예산 총계기준)

(단위 : 천)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1,511	1,491	1,415	1,672	4,583	709
최 고 (단체명)	1,511 서울본청	1,553 부산본청	3,936 제주도본청	4,960 강원삼척시	14,010 충남홍성군	2,074 인천중구
최 저 (단체명)	-	1,359 대전본청	887 경기도본청	648 충남계룡시	1,843 대구달성군	503 대전서구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지표 1인당세출예산액.

- 최근 5년간 충남 재정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는 연평균 11.2% 증가함
 - 충남 재정규모(당초예산 총계기준)의 연도별 변동은 2005년 2조 5,236억원에서 2009년에는 3조 8,641억원으로 연평균 11.2% 증가하였음

〈표 Ⅲ-7〉 충남 재정규모의 연도별 추이(당초예산 총계기준)

(단위 : 억원, %)

연도	금액	증감률	연평균증감률
2005	25,236	-	11.2
2006	27,614	9.4	
2007	31,799	15.2	
2008	35,499	11.6	
2009	38,641	8.9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현황 지방예산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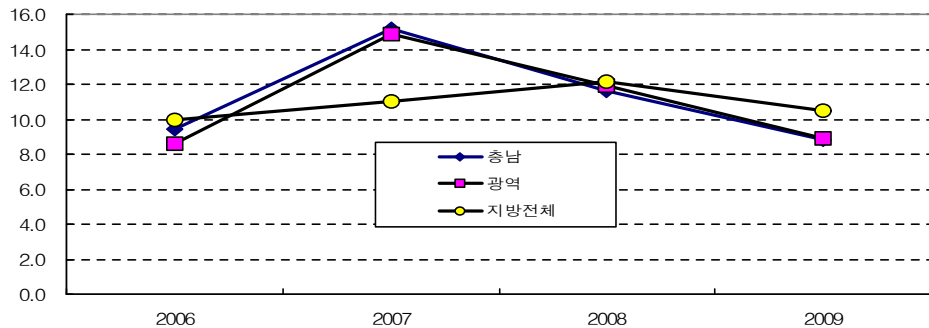
〈표 Ⅲ-8〉 광역자치단체(시/도) 재정규모의 연도별 추이(당초예산 총계기준)

(단위 : 억원, %)

연도	금액	증감률	연평균증감률
2005	560,977	-	11.0
2006	608,962	8.6	
2007	699,785	14.9	
2008	783,259	11.9	
2009	853,019	8.9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현황 지방예산규모.

〈그림 III-1〉 충남 및 지자체 지방재정규모의 연도별 변동률(%)



■ 일반회계 세입의 자체재원 비중의 저하

- 2010년 충남 당초예산 총계기준 일반회계 세입은 3조 3,427억원으로 이 중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8.0%,²⁹⁾ 의존재원의 비중은 72.0%임
- 자체재원의 핵심이 되는 지방세의 비중은 23.5%에 그치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55.1%에 달함

〈표 III-9〉 2010년 충남 일반회계 세입의 자원별 구조

(단위: 억원, %)

		금액	비중
자체재원	지방세	7,850	23.5
	세외수입	1,526	4.5
	소계	9,366	28.0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5,651	16.9
	국고보조금	18,410	55.1
	지방채*	0	0.0
	소계	24,061	72.0
합계		33,427	100.0

주: * 2010년 당초예산 총계기준 일반회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음.

자료: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도의 일반회계 예산.

- 2009년도 결산공시 기준 살림살이(일반회계+특별회계) 중 자체재원의 비중은 24.7%로 동종 지자체(도)의 자체재원 비중평균인 38.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충남의 전체 살림살이 대비 자체재원의 비중은 2008년 29.8% 이후 3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자체재원의 확충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29) 뒤에서 언급되는 행정안전부의 시도 단위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자체재원의 비중과 재정자립도는 일치하지 않음

〈표 III-10〉 충남과 동종 지자체(도 본청)의 살림규모 대비 자체재원 비중 비교

(단위: 억원, %)

	충남				동종 지자체 평균(광역시 본청)			
	살림규모 (A)	자체재원 (B)	자체재원비중 (B/A)	의존재원	살림규모 (A)	자체재원 (B)	자체재원비중 (B/A)	의존재원
2007	35,825	11,579	32.3	17,022	48,966	19,997	40.8	19,771
2008	39,141	11,669	29.8	19,365	51,926	22,612	43.5	25,983
2009	44,124	10,904	24.7	24,173	57,947	22,074	38.1	31,174

* 살림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금액을 의미하며, 재정공시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자료: 충남 도청의 재정공시(2010.9) 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 주민의 지방세 부담액³⁰⁾ 도 평균 이하

- 충남의 2010년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38만 5천원 수준으로 동종 자치단체(도) 평균인 45만 2천원보다 6만 7천원이 낮음

〈표 III-11〉 자치단체 유형별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1,136	761	452	442	391	126
최 고 (단체명)	1,136 서울본청	927 인천본청	841 제주도본청	753 경기광주시	1,357 충북진천군	923 서울중구
최 저 (단체명)	-	650 광주본청	275 전남본청	76 충남계룡시	134 충북단양군	33 부산북구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지표.

- 충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세 수납비율은 최하 92.5%에서 최대 94.7%이며, 지방세 징수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표 III-12〉 충남의 지방세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실제 수납액 (B)	B/A	미 수 납 액		
					계 (A-B)	불 납 결손액	미수납 이월액
2009	750,385	874,747	809,513	92.5%	65,234	10,346	54,888
2008	826,000	859,269	804,481	93.6%	54,788	7,412	47,376
2007	780,000	834,926	781,174	93.6%	53,752	9,200	44,552
2006	750,000	839,825	787,104	93.7%	52,720	11,202	41,519
2005	696,000	785,544	744,118	94.7%	41,426	3,847	37,579

30) 2010년 지방세액을 2009년 12월 31일 기준 인구로서 나누어 산출함.

자료: 각 년도 충청남도 재정공시(2005-2010).

■ 세외수입액의 감소

- 2010년 충남의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외수입액은 전년도에 비해 15.4% 감소한 1,516억원으로 편성됨
- 2010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중은 각각 21.9%, 78.1%로 임시적 세외수입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 2010년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한 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및 잉여금 수입이 전년대비 각각 31.7%, 31.3% 감소했기 때문임

〈표 III-13〉 충남 세외수입의 구성항목별 비중

(단위: 백만원, %)

		2009		2010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경상적 세외수입	소계	29,927	16.7	33,166	21.9	10.8
	재산임대수입	767	0.4	767	0.5	0.0
	사용료수입	4,051	2.3	5,188	3.4	28.1
	수수료수입	3,477	1.9	3,666	2.4	5.4
	사업수입	1,748	1.0	1,934	1.3	10.6
	징수교부금수입	4,705	2.6	6,376	4.2	35.5
	이자수입	15,176	8.5	15,232	10.0	0.4
임시적 세외수입	소계	149,252	83.3	118,441	78.1	-20.6
	재산매각수입	45,200	25.2	30,873	20.4	-31.7
	잉여금	80,000	44.6	55,000	36.3	-31.3
	전입금	3,762	2.1	7,695	5.1	104.5
	융자금원금수입	5,000	2.8	5,000	3.3	0.0
	부담금	14,028	7.8	18,813	12.4	34.1
	잡수입	761	0.4	560	0.4	-26.4
합계		179,179	100.0	151,607	100.0	-15.4

자료: 충남 2010년 당초예산 세입예산서를 기초로 작성.

■ 재정자립도³¹⁾ 하락

-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2007년 30.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에는 24.0%까지 떨어졌으며, 전국 지자체 평균인 52.2%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2010년 동중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광역도 평균 재정자립도인 31.6%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임

31) 자치단체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을 의미하며, 행정안전부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방교육세를 제외하여 전국 평균 및 시도평균은 순계 기준으로, 자치단체평균은 총계기준으로 작성함.

〈표 III-14〉 지자체 유형별 재정자립도 현황(2010년)

(단위: %)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균	83.4	56.3	31.6	40.0	18.0	35.4
최고 (단체명)	83.4 서울본청	70.0 인천본청	59.3 경기도본청	67.4 경기성남시	48.6 울산울주군	82.9 서울중구
최저 (단체명)	-	43.2 광주본청	11.5 전남본청	9.3 전북남원시	8.6 전남고흥군	11.4 부산서구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지표 재정자립도.

-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44.2%에서 2007년에 소폭 상승하였으나 2008년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10년에는 41.9%까지 하락하였으며 전체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75.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또한 2010년 동종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광역도 평균 재정자립도인 46.0%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임

〈표 III-15〉 지자체 유형별 재정자주도 현황(2010년)

(단위: %)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균	84.2	70.0	46.0	69.1	62.2	57.9
최고 (단체명)	84.2 서울본청	76.7 인천본청	61.4 경기도본청	91.6 경기과천시	72.9 강원홍천군	89.3 서울강남구
최저 (단체명)	-	65.2 광주본청	30.2 전남본청	52.2 전남목포시	48.0 전남신안군	30.8 부산북구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 세출예산의 집중화

- 2010년 충남의 기능별 세출(일반회계) 중에서 사회복지분야의 비중은 22.7%이며, 금액은 전년대비 5.5% 증가한 7,601억원임
- 농림해양수산 18.9%, 환경보호 9.8%, 일반공공행정 7.4%, 국토 및 지역개발 6.7%, 교육 6.2% 등으로 세출 비중이 높음
- 2010년에 크게 증가한 세출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41.3%(1,735억원) 증가했고, 보건 분야도 15.9%(641억원) 증가함
- 반면, 수송 및 교통(-9.7%), 일반공공행정(-10.3%), 국토 및 지역개발(-2.6%) 등의 분야는 전년대비 세출예산이 감소함

〈표 III-16〉 충남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조(일반회계 기준)

(단위: 억원, %)

	2009		201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감율
합 계	32,380	100.0	33,427	100.0	3.2
일반공공행정	2,740	8.5	2,459	7.4	-10.3
공공질서 및 안전	1,228	3.8	1,735	5.2	41.3
교육	2,173	6.7	2,086	6.2	-4.0
문화 및 관광	1,537	4.7	1,534	4.6	-0.2
환경보호	3,086	9.5	3,284	9.8	6.4
사회복지	7,203	22.2	7,601	22.7	5.5
보건	553	1.7	641	1.9	15.9
농림해양수산	6,090	18.8	6,322	18.9	3.8
산업·중소기업	989	3.1	1,003	3.0	1.4
수송 및 교통	1,686	5.2	1,523	4.6	-9.7
국토 및 지역개발	2,303	7.1	2,243	6.7	-2.6
과학기술	267	0.8	259	0.8	-3.0
예비비	336	1.0	331	1.0	-1.5
기타	2,187	6.8	2,403	7.2	9.9

주: 당초예산 총계기준.

자료: 충남도청 홈페이지(2010.9).

- 2010년 행정안전부의 통계를 기준(일반회계+특별회계)으로³²⁾, 세출의 기능별 규모와 비중을 검토한 결과, 충남의 사회복지 비중은 25.5%로도 전체³³⁾ 평균 25.3%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
- 농림해양수산(16.1%), 국토 및 지역개발(8.8%) 분야의 비중은 도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으나, 일반공공행정(11.5%), 수송 및 교통(4.0%), 교육(5.4%) 분야의 지출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농림해양수산 18.9%, 환경보호 9.8%, 일반공공행정 7.4%, 국토 및 지역개발 6.7%, 교육 6.2% 등으로 세출 비중이 높음

32) 본 연구는 세출의 기능별 비중은 기본적으로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나, 현재 재정고 지방예산 세출통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금액만 나와 부득이 이 통계를 활용하여 분야별 지출비중을 도출함.

33)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도를 의미함.

〈표 III-17〉 2010년 세출의 기능별 규모와 비중 비교(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단위: 억원, %)

	충남		도 전체		전국 지자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일반공공행정	4,510	11.5	81,660	17.9	218,419	11.9
공공질서 및 안전	1,735	4.4	13,394	2.9	28,646	1.6
교육	2,115	5.4	28,748	6.3	84,238	4.6
문화및관광	1,552	4.0	22,682	5.0	91,543	5.0
환경보호	3,284	8.4	31,915	7.0	191,867	10.5
사회복지	9,990	25.5	115,693	25.3	420,533	23.0
보건	641	1.6	5,296	1.2	29,179	1.6
농림해양수산	6,321	16.1	53,919	11.8	140,809	7.7
산업/중소기업	1,003	2.6	10,556	2.3	37,509	2.0
수송 및 교통	1,565	4.0	33,017	7.2	201,953	11.0
국토 및 지역개발	3,448	8.8	25,848	5.7	168,335	9.2
과학기술	259	0.7	3,652	0.8	4,560	0.2
예비비	330	0.8	3,888	0.9	21,964	1.2
기타	2,474	6.3	27,108	5.9	192,700	10.5
합계	39,227	100.0	457,376	100.0	1,832,255	100.0

주: 당초예산 총계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임.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세출예산통계를 기초로 작성.

나. 계획의 기본방향

■ 재정건전성 확보와 신규전략사업을 위한 자원 확보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지속적 증대를 위한 방안 강구
- 순세계 잉여금의 지방채무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한 통합·정비를 지속 추진
- 기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통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민선5기 충남 도정의 신규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 선택과 집종의 원리에 입각한 전략적 자원배분

- 부족한 자원 제약 하에서 예산운영 성과를 극대화하여 도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교육·문화 등 충남 도정의 역점과제 위주로 가용재원의 집중적인 배분이 요구됨

- 충남 도정의 역점과제를 다른 자치단체에 앞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한편 그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유도함

■ 성과예산제도 등 재정성과관리제도 활용을 통한 재정효율성 향상

- 산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 어떠한 산출물을 생산하고 어떠한 성과를 성취하였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
- 성과 평가, 외부기관 지적 등 환류정보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며, 성과평가결과, 우수 사업은 증액하고 미흡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조정
- 사업 및 예산 편성 이전에 투자의 타당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내외부의 심사를 강화하여 재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민간 협력적 재정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구현

- 도민이 지역의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의 실현과 동시에 그동안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도민참여형 재정모니터링시스템의 제도화와 충실한 운영을 통하여 재정운용과정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통제를 유도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함

■ 도의 기능 및 행정서비스 공급방식의 재조정

-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도의 행정기능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민간 이양 사업 및 민관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이들 사업을 시민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협력과 참여 속에서 공동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예산을 재편성함
- 또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도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군간의 기능분담 재조정과 함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도의 전략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광역적 단위(도 혹은 몇 개 시군의 연합)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과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복

투자를 회피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다.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개발사업

■ 지방세 확충

- 지방세 체납은 제도적 측면에서 납세자의 윤리적 요인까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체납 요인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체납 개선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방세 체납의 가장 큰 문제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금액 및 횟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해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는 강제징수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해가는 실효성 있는 지방세 체납개선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예를 들면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관허사업의 인·허가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그리고 재산 압류·공매처분 등 지방세 체납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여 지방세 납부를 압박하는 강제징수 방법을 체계화하고 실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체납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손처분³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즉 결손처분 기준을 충족하는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이외의 징수 가능한 체납세를 대상으로 체납처분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체납 업무를 전담하는 상시적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체납 지방세의 징수 실적에 따라 금전적 인센티브와 함께 인사고과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와 업무에 대한 적극성을 진작시킬 필요가 있음
- 체납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 체납 부서 근무자는 장기 보직을 원칙으로 하여 체납 관련 법규 및 재산 압류·공매 처분 등에 정통하도록 하며 전담 부서 신설 초기에는 외부의 민간 전문 인력 채용을 고려할 수 있음
- 사전에 체납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민의 납세의식 제고, 납부고지서의 전자 송달 및 납부 방식의 전산화 등 납부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34)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이 행하는 행정처분.

■ 세외수입 확충 및 민간자금의 활용

- 민원행정은 주로 시·군 사무인 관계로 도의 입장에서는 사용료나 수수료 수입의 확충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다만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용료와 수수료 요금은 특정 편익과 비용의 연계 및 비용부담의 공평성의 관점에서 도의 현실화를 포함한 요금 체계의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경상세외수입의 경우 징수율이 동종 자치단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세외수입의 체납 관리 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충남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사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수익사업으로 연계함으로써 입장료 수입이나 사업 수입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임대 수입을 올리거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망됨
- 민간영역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영역의 활력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점에서 민간자금의 유치가 강조되고 있음
 - 주요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제도³⁵⁾, BTL방식³⁶⁾, 지정관리자제도 등을 참고하여 민간의 자금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근까지는 주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나 공공시설 관련 토건사업에 민간자금을 유치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업 대상을 복지·교육·문화 사업으로 확대하여 지역 기업 등으로부터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생산에 대한 민간 투자 및 참여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한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기업 및 시민단체 등 민간 영역이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35) PFI제도란 공공시설 등 사회자본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자금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간주도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기법임.

36) BTL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민간은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Transfer), 대신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여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공공시설 건축방식임.

■ 세출구조조정

- 경상경비 절감방안
 - 인력운영비 : 조직 구조조정 및 신규증원 최소화, 정원대비 현원 결원을 일정 비율 유지
 - 기본경비 : 불필요한 국내외 출장 최소화를 통한 해외·국내여비 절감, 시정간행물·유사홍보물 통폐합, 홈페이지 활용 사이버 홍보 활성화, 에너지 절약 및 사무용품·우편요금 등 절약, 관용차량 운영 정밀진단을 통한 차량유지비 절감
- 사업비 절감방안
 - 예산편성 :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투자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의 체계적 심사, 계약심사 기법의 적용, 각종 사업추진에 실효성이 낮은 연구용역 최소화,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마을회관, 체육관·운동시설 등 공동활용), 공기단축을 위한 집중투자를 통해 실질 총사업비 절감, 재정사업 자율평가, 총사업비 관리제도 등을 통한 세출구조조정, 민간위탁사업 확대 및 민간참여 활성화 유도
 - 예산배정 : 사업진척도 및 사업물량 재조사 등을 통한 배정유보·감배정
 - 계약 : 계약심사 전담부서의 설치나 외부 전문 심사기관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한 원가심사 강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적용, 유사사업 통합 발주, 계속비 계약제도 등 적용
 - 사업집행 : 설계변경, 신기술·신공법 도입 등을 통한 절감,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용도로 목적외 사용금지, 옥외행사 최소화, 교육원 등 자체시설 활용을 통한 행사경비 절감, 각종 지역축제, 체육대회 등에 대한 민간보조금 절감, 조직내의 전문인력 활용으로 설계비·연구개발비 절감
 - 사후관리 : 사업 성과관리 결과를 활용한 세출구조조정 (차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집행잔액 등의 임의적 활용 제한
-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비
 - 재정사업의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서비스 체감도를 제고하고 예산누수를 예방
 - 복지부분의 통합관리망 확충, 부정 의료수급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복지급여의 부정·중복 수급을 방지
 - 농업부문에서 개별 농가단위 직접보조에서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접보조 방식으로 전환
- 성과정보의 활용
 - 성과평가, 외부기관 지적 등 환류정보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
 - 예산낭비신고센터, 여론조사 및 자체 심의기구 등을 적극 활용

- 국회 · 감사원 · 언론 · 시민단체 등에서 지적된 사업 중 성과가 낮거나 예산낭비사례로 판정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
- 연례반복적 집행부진 사업은 이월예상액을 포함하여 집행가능한 예산현액 수준으로 사업비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표 III-18〉 세부추진시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지방세 확충	지방세 체납 개선 및 신세원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징수 방법의 단계적 적용 · 결손처분의 적극적 활용 · 체납 전담부서 운영 및 인센티브 반영 · 주민의 인식전환 노력 · 지속적 부존자원을 대상으로 세원발굴 노력
	관리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율의 현실화 및 요금체계의 개선 · 세외수입의 체납관리체계 개선
세외수입 확충 및 민간자금 활용	수익사업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의 문화관광사업과 수익사업을 연계 · 공유재산 활용 임대수입 확충
	민간자금 사업대상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자금 유치영역 확대 · 민관협력체제 구축
세출구조조정	경상경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운영비 일정비율 유지 · 기본경비의 절약
	사업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및 전과정의 체계적 관리
	전달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사업 전달체계 정비 · 복지급여체계 개선 · 농업부문의 간접보조 방식 전환
	성과정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류정보 활용 · 자체심의기구 활성화

제 3 장

투자계획 및 집행방안

제3장 투자계획 및 집행방안

가. 투자사업계획

■ 투자 대상사업의 선정

-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광역권개발계획 등 중앙정부 추진·지원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
- 도 전체의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군 경계를 넘어서 개발과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선정
- 시·군이 요청한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도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도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 선정
- 낙후 시·군의 사업추진을 지원하여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 단계별 사업추진 원칙

- 각 단계별 사업추진 원칙은 상위계획·관련계획의 부문별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계획목표 달성도, 지역개발 파급효과 등이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표 III-19〉 단계별 사업추진 원칙

단계	사업기간	대상사업 선정기준
1단계	2011~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조기 완공되어야 할 기반사업 · 기반사업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한 사업 ·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국가사업 등 단계별 개발계획이 제시된 사업 · 투자자본의 규모가 작고, 회수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사업 · 민간자본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활용이 가능한 사업
2단계	2016~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본의 규모가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인 대규모 사업으로 기초조사, 기본투자가 필요한 사업 · 장기간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 · 차후 지속적인 개발 및 선행사업 등에 의해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

■ 총투자규모 및 투자비 분담

- 계획기간(2012~2020년) 동안 사업추진에 필요한 총 투자소요액은 약 67조 3,217억원으로 산정
- 부문별 투자분담내역에서는 산업경제부문이 24.6%로 가장 높고, 교통·정보인프라부문 24.0%, 지역개발 및 농어촌부문이 23.2%, 환경·방재부문 11.9%, 문화관광부문 11.0%, 지역자원개발부문 4.0%, 생활복지부문 1.3%임
- 재원별 투자내역은 국비가 25조 3,859억원으로 37.7%를 차지하며, 지방비는 10조 9,709억원으로 16.3%, 민자 등 기타가 30조 9,645억원으로 46.0%임
- 계획단계별 투자내역은 2012~2015년 45.3%, 2016~2020년 54.7%임

〈표 III-20〉 총투자사업내역

(단위: 억 원)

구 분	계획기간 투자금액	단계별 투자계획(2012~2015)				2016- 2020	재원별 투자계획		
		2012	2013	2014	2015		국비	지방비	기타
총 계	673,217	77,222	75,216	78,319	74,401	368,059	253,859	109,709	309,649
도시·농촌	156,517	14,343	11,692	10,977	9,526	109,979	4,523	6,298	145,696
산업·경제	165,664	23,303	24,598	25,175	23,077	69,511	34,033	41,633	89,998
문화·관광	74,345	6,409	8,181	8,361	8,534	42,860	14,319	18,722	41,304
교통·정보	161,228	12,629	14,111	17,441	20,772	96,275	144,900	7,143	9,185
복지·교육	8,767	1,917	2,087	2,382	334	2,047	2,189	4,694	1,884
지역자원	26,680	8,760	5,486	4,796	2,280	5,358	7,887	4,210	14,583
환경·방재	80,016	9,861	9,061	9,187	9,878	42,029	46,008	27,009	6,999

■ 재원조달 기본방향

-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시설의 재원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과 자치단체의 재원조달에 의해 추진
 - 개발계획이 수립된 대규모 개발사업(세종시, 내포신도시, 기업도시 등)과 연계된 사회간접시설의 재원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확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국가 계획 수정계획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협력)
- 민자 선호사업인 관광사업, 지역개발사업 중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민자외자 등을 유치하여 재원조달
- 낙후 농어촌지역 정비사업,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축·수산업 및 제조업 육성사업, 지역정보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은 관계 부처별 재정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재원 확보
- 주민의 욕구가 큰 문화·체육 기반시설은 BTL(Build Transfer Lease)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간투자법에 의한 44개 공공시설에 대하여 확대·추진
 - 기초 서비스제공을 위해 건설·운영해야 하는 국·공립시설
 - 시설이용료 수입으로는 민간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 민간의 창의성 활용으로 사업편익 증진과 비용이 절감되는 시설 등

■ 재원조달 방안

- 중앙정부 의존재원 확보
 -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련 재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논리 개발
 - 중앙정부의 재정운용 기조와 연동하는 지방재정운용
 - Matching Fun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정운용 시행
 - 대규모 사회간접시설과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연계사업과 개발비용의 분담 등을 통해 적시에 재원확보 유도
- 자체재원 확충을 통한 투자재원 조달
 -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신세원의 적극적 발굴 및 체납 지방세의 적극적인 징수를 통한 재원조달
 - 사용료, 수수료 등의 세외수입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 추진
 -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방채를 활성화하여 투자사업의 현재 비용 부담자와 미래 수혜자의 비용 편익의 분담

- 내포신도시 건설 및 세종시 건설에 의한 인구 유입 및 부동산 확대에 지방세수 확충이 예상
- 이러한 조세채권을 기반으로 한 지방채 발행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수단으로 활용 가능
- 민자유치
 - 민자 투자수요가 예상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위한 유인책 제공
 - 민자수요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기업도시 등 민간에게 유리한 투자유인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투자유치
- 기타 재원조달 방안
 - 충남개발공사를 활용한 자산유동화증권(ABS)에 의한 재원 조달

나. 투자사업 재원조달 및 추진체계 구축

■ 재원조달 방안

- 효율적인 도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재정 및 예산과 연계하여 세부 부문별 실천계획 수립
- 재원투자계획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투자사업 시행
- 재원운용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 일부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추구로 인한 소외가 발생하여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고려
- 중앙정부 재정 지원사업, 도 자체 사업, 도와 시·군 합작사업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투자사업 추진
- 부문별 계획 중 도 발전을 전략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선정,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집중 투자

■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화

- 국내외 민자, 외자유치, 중앙정부의 예산확보, 도 종합계획의 지속적·실천적 추진, 여건변화에 따른 도 종합계획의 재정비 등을 전담할 기획조정 기능을 포함한 전담 추진체계 구축
- 투자사업에서 민간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인 충남개발공사를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행자로 활용

제 IV 편

시·군별 발전방향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1. 천안시 :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천안

가. 기본목표

- 활발한 산업활동, 역동적인 경제도시
- 차별없는 균형발전, 안전하고 건강한 쾌적도시
- 맞춤형 복지 · 교육 · 문화, 시민만족도시

나. 발전방향

- 활발한 산업활동을 통한 역동적 경제도시 기반 강화
 - 각종 산업단지 조성 및 연계발전전략 등을 통해 지역경제기반을 확충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연구성과와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
- 지역 균형발전,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기반 조성
 - 산·구도심간, 북부 및 남동부생활권간, 도시와 농촌간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중부권 핵심도시 성장동력 기반 확보
 - 시민 건강 100세 추구에 부응하는 한의학 Hub 보건시스템 구축, WHO 국제 안전 · 건강 도시 육성사업 추진
-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환경 조성
 - 그린카페트 사업, 걷고싶은 거리 조성, 환경친화적 시민공원 조성 등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
 - 온실가스 감축,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 등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 고품격 맞춤 복지 · 교육 · 문화관광 도시 실현
 - 글로벌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 천안시민대학 운영 및 국제화교육특구사업 확대 추진 등 시민들의 평생학습 지원을 통한 고품격 교육도시 육성
 - 문화관광과 연계된 스포츠특별시 천안 만들기를 위한 각종 스포츠 시설 확충 및 호국충절관광벨트 조성, 천안흥타령 축제의 세계화 등을 통한 특화된 문화관광 기반 확대
-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천안' 시정목표 실현
 - 정주여건 개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정책 등 종합 마스터 플랜 체계적으로 추진

2. 공주시 : 기업하기 좋은 5都2村 주말 · 관광 · SMART CITY

가. 기본 목표

- 고속 ·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고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5도2촌 주말 · 관광도시
- 지속가능성, 능률성, 쾌적성, 첨단성이 확보된 녹색 SMART CITY

나. 발전방향

- 고속 · 광역교통망 활용 지역발전 견인
 -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세권 개발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고속도로 IC연접지역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견인
- 세종시와 상호 보완적 기능을 유지하는 네트워크 도시체계 강화
 - MICE 산업 등 세종시의 행정보완기능 육성으로 도시성장기반 확충
 - 세종시의 역사성을 보완하는 국제관광 중심지로 육성
-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5도2촌 주말도시 기반 강화
 - 5도2촌 주말도시 특구사업 추진 농촌 활력 및 자립경영 유도
 - 역사문화, 자연경관을 활용한 복합체험형 레저관광지 육성
- 금강주변 친수공간 개발을 통한 수상레저 · 관광 강화
 - 친수구역 특별법 시행에 따른 주거, 상업, 문화, 관광, 레저 등 친수구역 개발
 - 금강수계를 중심으로 수상레저 시설, 뱃길 복원, 생태공원, 자전거 도로 등 친수공간 확충
-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관광 · 교육 창조지역 육성
 - 부존자원 활용 성장동력화 및 역사 문화장소 마케팅
 - 교육도시 특성을 이용한 한민족 교육특구 사업 추진
 -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유발 및 고도재생 디자인 창조지역 육성
- 지속발전이 가능한 녹색 SMART CITY 조성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배출 억제로 에너지절약 실천 및 기후변화 대응
 - 자전거 교통수단 활성화 녹색교통체계 확립

3. 보령시 : 산 · 들 · 바다가 어우러진 관광과 휴양의 글로벌 보양도시

가. 기본 목표

- 역사와 테마가 살아 숨 쉬는 매력적인 관광·문화도시
- 기업과 일자리가 모여드는 풍요로운 자족도시
- 사람과 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 녹색 창조도시

나. 발전방향

- 해양 및 산악관광 자원을 활용한 4계절 전천후 관광·휴양도시, 문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 내륙지역은 휴식과 휴양기능, 해안권은 위락과 레포츠형 관광지로 중점개발, 상호연계 및 벨트화
 - 외연도 가고싶은 섬, 원산도 Seven Islands 조성 등 특색있는 섬 관광지 조성
 - 문화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문화공간(구 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어린이도서관 등) 확충
-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 및 신규 산업·물류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국도77호(보령~안면도 연륙교)건설, 국도 확포장, 보령신항 건설 추진
 - 신규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노력 전개, 해양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양레포츠, 자동차 부품 등 지역 핵심·전략산업 고도화
- 경쟁력 있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촌 건설 기반강화 및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조성
 - 만세보령 브랜드 관리를 통한 고품질의 특산물 육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유통센터 건립, 농수산업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 농산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편의·복지시설 확충, 특성과 개성을 갖춘 테마마을 육성
 -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 홈 확대,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안심 도시 창조, 따뜻한 복지사회 실현

4. 아산시 : 서해안시대 성장을 견인하는 세계속의 녹색 첨단도시

가. 기본 목표

-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녹색첨단산업도시
- 삶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 온천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나. 발전방향

- IT융복합산업 기반의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글로벌 허브(Global Hub) 구축
 -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및 부품R&D 확충을 통한 아산크리스탈밸리 조성
 - 자동차~IT융복합산업집적지 조성을 통한 융복합산업 기반 확대
- 광역 접근성 확대를 통한 서해안의 네트워크 중심지 조성
 - 철도, 항만, 항공, 도로 등의 입체적 선진교통망 구축
 - 수도권, 세종시, 내포신도시 등의 주요성장거점과 연계협력체계 구축
 - 첨단물류 및 국제업무 중심의 글로벌 경제자유구역 조성
- 주민이 행복한 교육복지 환경 조성
 - 명문학교 및 평생학습도시 육성을 통한 교육도시기반 조성
 - 문화융합타운,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통한 시민의 복지기반 확충
- 신도시 및 구도심에 대한 환경친화적 도시성장기반 확충
 - 에너지절약형 지능형 아산신도시 개발을 통한 첨단복합도시 조성
 - 구도심의 도시환경정비 및 환경친화적 도시발전 인프라 확충
- 역사문화자원 기반의 관광산업 육성 및 농촌의 도시연계성 확대
 - 휴양과 레저의 4대 테마관광단지(온천보양테마, 아산호·삼교호 해양테마, 영인산 복합레저테마, 민속마을·광덕산 전통테마) 조성
 - 농촌 관광농업 기반조성 및 생산적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
 - 농산물 유통혁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제고

5. 서산시 : 내포문화·해양생태자원·신산업이 어우러진 황해관문 도시

가. 기본 목표

- 대중국교역 및 황해경제권 교류의 중심지
- 서해안시대 임해산업의 중심지
-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휴양지 및 친환경 도시

나. 발전방향

- 대중국 등 황해경제권 교두보 확보를 위한 광역 교통·물류 거점 육성
 - 대산항 확장, 서산비행장 민항기 취항을 통한 대중국 및 국제교류 거점화
 - 고속도로(대전~당진~대산) 건설, 산업철도(인주~서산~안흥) 건설, 주요 국도 및 지방도의 4차선 확장 등으로 수도권 및 중부권 대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광역교통망 구축
-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산업 육성
 - 석유정밀화학산업과 첨단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클러스터화
 - 황해경제자유구역, 서산바이오웰빙특구 등 특구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 서산6쪽마늘, 서산생강, 서산우리한우 등 우수 농특산물 명품화
- 삶의 여유와 볼거리가 있는 매력적인 관광·휴양도시 육성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 등 내포문화의 관광자원화
 - 서산A·B지구 담수자원 등을 통한 생태자원의 학습·관광자원화
 - 중국 간 국제쾌속선 항로 등을 통한 매력 있는 크루즈관광 육성
- 고품격 문화·교육 환경 및 쾌적한 도시주거 공간 조성
 - 내포문화박물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전통이 숨 쉬는 문화도시 육성
 - 유망 대학교, 명문 고등학교, 고품격 평생학습대학 등을 통한 고품격 교육도시 육성
 - 천수만·가로림만 등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전원도시 육성
 - 자연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고 도시민의 전원생활 유도를 위한 정주환경 조성

6. 논산시 : 활력있는 경제도시, 자연과 문화가 하나되고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행복 도시

가. 기본 목표

- 자연과 문화 유적이 조화로운 관광 도시
-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
-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논산

나. 발전방향

- 활력있는 경제 도시
 - 기존산업·농공단지 활성화 및 신규 공단 조성과 종합 유통단지 조성으로 기업 유치
 - 에스민 브랜드를 활용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 소득 증대 도모
 - 전통시장, 강경 젓갈시장 활성화 등 도심 상권강화 시책 추진
-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 체험도시
 - 돈암서원 등 유교 문화권, 대백제문화권 문화유적 정비 및 개발
 - 탐정호, 양촌 휴양림, 대둔산 등 자연 관광 인프라를 이용한 관광 활성화
 - 국방문화 및 딸기 등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체험사업의 메카 재탄생
- 행복한 교육·복지 도시
 - 다양한 교육환경 여건 제공으로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 구축
 -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보건복지 수혜수준 제고
 - 도심 내 공원 및 체육 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 누구나 살고 싶은 친절하고 쾌적한 도시
 - 체계적 재난관리로 안전하고 편안한 살기 좋은 도시
 - 도시·농촌 주거환경개선,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쾌적한 도시
 -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교육으로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조성
- 성과 중심의 자치 역량 강화 도시
 - 시정업무의 성과 지표 개발 및 시스템 구축
 - 행정역량 강화 제고와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책임 행정 구현

7. 계룡시 :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있는 명품도시

가. 기본 목표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전원생태도시
- 미래를 선도하는 품격 높은 교육문화 도시
- 국가안보와 국방과학을 선도하는 국방특화도시

나. 발전방향

- 도시공간구조 및 도시성장축 정비
 - 연속적 녹지축 형성 및 관리, 대실도시개발 및 정주생활권과 역세권개발을 포함 도시 개발축 설정, 동서 간선도로 건설
- 생활권 설정 및 거점 특화개발
 - 금암지구 중심생활권 및 생활권별 특화추진,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금암지구 중심의 방사환상형 교통축 구축
-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지연(地緣)산업 인프라 구축
 -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확대, 고부가가치의 2,3차 가공 농산품생산 확대 등 우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신도안)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 쾌적한 녹색자연환경의 보전과 녹지축 형성으로 생태도시 조성
 - 푸른숲(녹지벨트), 깨끗한 공기(대기벨트), 맑은 물(물벨트)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환경도시 건설, 두계천 생태네트워크 구축, 자연체험 교육시설 조성
-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교육문화도시 구현
 - 청정 도시경관 관광자원화, 민군화합 및 체험형 군문화 특화, 평생학습도시 수준의 교육환경 제공 등 수준높은 교육인프라 구축, 유동리 복합문화체육단지 조성
- 특화된 국방도시 조성
 - 민군화합타운(軍복지센터), 제대군인촌 조성, 계룡제1산업단지 및 제1농공단지를 연계한 국방산업단지 육성, 차별화된 ‘국방특구’ 조성
 - 군문화체험 밀리터리 공원 조성, 계룡대와 연계 통일탑, 솟을추, 암용추, 천황봉을 잇는 안보관광 자원 개발

8. 당진시 : 동북아 물류 및 임해형 신산업 중심도시

가. 기본목표

- 역동적인 수출 지향적 임해신산업지대
- 환황해경제권을 주도하는 물류·유통 중심도시
- 지속가능한 체험형 휴양 및 여가의 중심지

나. 발전방향

- 인구 50만의 자족도시 건설
 - 2030 당진시 비전 기본계획 50만 인구의 자생도시 완성
 - 대중국을 겨냥한 환황해권 중심도시 도약
- 대 중국 교역관문 신산업도시로 육성
 - 환황해경제권에 대비한 대 중국 전진기지 및 임해형신산업단지 육성
 -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및 산학연계를 통한 인력, 기술력 확보 및 생산력의 증대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또는 자유무역지대 조성
- 고도화된 정보·물류거점도시로 조성
 - 당진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유통시설 컨테이너 기지 조성
 - 당진항 공용부두 추가건설, 항만운영지원센터 건립, 신평-내항간 항만진입도로 건설을 통한 국제적인 교역 기반 구축
 - 서해선 복선전철, 아산산단 인입철도, 서해산업철도, 대산항 인입철도 조기 완공
- 친환경 도농복합형 Eco-city 건설
 -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건설
 - 산업단지의 환경정비·오염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 자연환경을 고려한 정주공간 및 지역기능 배분
 - 공원 및 녹지체계의 구축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도시공간 조성
- 선진화된 근교농업지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 유기농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전문기술인력 육성·발굴 및 지원
 -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여성 친화적 도시환경 기반조성
 - 자연경관 및 무공해농산물 생산, 가공산업 육성 및 수요자 중심 유통시스템 구축
- 해양 및 내륙관광휴양 중심지 육성
 - 내륙·해양 관광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장기적 개발·보전계획 수립
 - 삽교호 관광지·왜목마을 및 한진·장고항, 도비도, 난지도 등 항·포구와 관광지를 해양 휴양 및 여가지대로 조성
 - 삽교호 주변 서해휴먼투어랜드 조성 및 대불대학교 연계 해양 테마 레저산업 육성
 - 천주교 및 불교자원, 면천읍성 복원 및 필경사 확충, 합덕제 테마공원 조성 등을 통한 역사문화관광 추진
 - 지역 특산물과 연계된 그린투어리즘 추진

9. 금산군 : 자연과 생명산업이 공존하는 활력 있는 전원도시

가. 기본 목표

- 금산인삼과 약초산업 활성화로 웰빙산업도시
- 아름다운 자연과 균형적 개발이 조화된 쾌적환경도시
- 다양한 문화가치가 충족되는 문화관광도시

나. 발전방향

- 인삼·약초 등의 건강·웰빙산업 육성으로 지역산업구조의 다각화
 - 인삼·약초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향후 건강·요양산업과 웰빙산업 등의 연관산업의 집적·발전을 유도
 - 인삼과 약초부문의 가공산업 활성화 및 건강투어리즘에 기반한 산업구조의 다각화 도모
- 친환경 농산물 및 지역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내발적 농업패러다임 구축
 -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 및 특화작목 확대 육성을 통한 소득 증대 도모
 - 금산 들깨잎 등 시설채소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농특산물의 고급화 및 고브랜드화, 품질안정과 포장의 과학화·고급화를 통해 안정적인 근교농업 육성
 - 건강관련식품산업을 특화시키고 개발하며 기능성 전통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식품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벤처농업 및 생명농업을 육성
- 경관·생태·환경자원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
 - 난개발, 환경훼손, 자원의 낭비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어메니티 자원의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자산인 경관, 생태, 환경자원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증진
 - 계획적인 도시민 유치와 농촌마을공간의 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농촌공간구조의 창출 및 난개발 문제 해결
-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품격 높은 문화·관광 개발
 - 품격 높은 문화기반 시설 확충 및 주민의 문화수준의 향상
 - 문화·역사자원, 휴양림과 금강 등의 자연경관자원 연계 및 다양한 수요층을 겨냥한 관광산업 활성화

10. 연기군 :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세계명품 도시 세종시

가. 기본 목표

- 국가균형발전 선도하는 복합형 행정·자족도시
- 쾌적한 친환경도시
- 중부권 거점도시로써 품격높은 문화·정보도시

나. 발전 방향

- 시민중심의 조화로운 민주도시 조성
 - 도시기능을 분산배치한 민주적 도시공간 구조를 조성
 -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 높은 주거·복지·교육환경을 조성
 - 개방적 배치를 통한 편리하고 친근한 행정·연구기관의 조성 및 운영
- 편리한 교통·정보환경 조성
 - 전국 어디서나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구성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어디나 갈 수 있는 도시교통환경을 조성
 -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정보·통신망을 조성
- 환경이 보전되는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는 생태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
 -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문화도시 창출
 - 자연과 인공이 어울리는 도시경관을 조성
 - 삶을 풍요롭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
 - 아름답고 친근감이 있는 건축문화를 창출
 - 지역의 전통문화 역사를 보전하고 계승하여 정체성이 있는 도시를 건설
- 재해에 안전한 도시체계 구축
 -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호체계를 구축
 -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으로 관리

11. 부여군 :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古都 Greenomics 부여

가. 기본 목표

- 700년 대백제의 전통과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백제문화관광지역
- 깨끗한 정주환경으로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세종시, 내포시 배후 휴양지역
- 자연과 사람, 환경과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친환경 청정농업지역

나. 발전방향

- 1400년전 대백제의 전통문화예술 육성 및 시설기반 확충
 -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 및 부여 고도보존사업 추진
 - 백제문화단지(사비왕궁)를 통한 백제문화의 우수성 세계화
 - 고도보존특별법을 활용한 역사문화자원 보존정비 및 정주환경개선
- 세계역사도시로서 국제적 문화관광지역으로 입체적 광역교통망 구축
 - 내륙(충북,세종시)과 서해안(부여,보령)을 연결하는 철도망 연장 구축
 - 세종시와 금강권역(세종시~공주~부여~서천) 연결하는 금강권 경전철 건설
 - 내포시~청양~부여를 연결하는 국도29호선 확포장 종단 교통망 확충
- 첨단농업기반 구축 및 농촌복합생활공간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 친환경 고품질의 굿뜨래 비즈니스 농업 6차산업화
 - 지역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 백마강변 어메니티 자원을 이용한 농촌소득기반 확충
- 농촌과 도시가 소통하는 전원적인 녹색여가 복합공간도시 조성
 - 3려(여유, 여가, 여행)가 있는 세종시 배후도시 구축
 - 살고 싶은 녹색전원마을 조성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시니어 계층 유치
 - 구도심지는 옛 사비성 복원을 통해 역사문화중심지로서, 신시가지는 행정, 경제의 신도시로서의 역할 확충
-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재창조되는 금강과 하나 되는 부여
 -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인 친수구역 활용
 - 금강살리기 사업 효과를 활용한 천혜의 백마강 둔치 관광기반
 - 금강을 활용한 수상레저, 유람선운행 등 백마강 수상관광 활성화
 - 금강중심의 인접시군과 상생발전을 위한 범금강권 공통 발전전략 추진

12. 서천군 : 세계최고의 생태도시! 어메니티 서천

가. 기본목표

- 전통산업과 생태산업이 결합된 신산업 창출지대
- 전통문화와 고품질 생태관광의 생태융합관광도시
- 누구나 골고루 함께 삶을 향유하는 가치균형(Value Balance)창출도시

나. 발전방향

-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 대안사업의 친환경적 파생가치 극대화 및 생태환경 복원과 조성
 - 지역내 생태환경 중심 가치관 확산과 생태환경 전문 지역리더 및 단체 육성
- 친환경 농수산업과 생태산업 육성
 - 친환경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명품화, 유통경쟁력 강화
 - 대안사업 연계한 생태산업 육성을 위한 SOC 구축 및 생태산업 육성
- 전통문화 계승과 고품질 관광 진흥
 - 전통 역사문화 자원의 개발·보전 및 육성으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
 -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와 중장기적 체육진흥 및 시설 확충
 - 우수한 생태자원에 기반한 차별화된 고품질의 관광산업 아이템 개발
-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
 - 지역특화산업 및 주민참여형 도농 균형개발로 정주여건 향상 및 삶의 질 향상
 - 지역내 인구와 자원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고 유입을 촉진
-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과 보건복지의 실현
 - 전반적 교육시설 및 여건의 개선으로 도시간 및 지역내 교육격차 해소
 - 노령화 및 양극화 등 사회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 사회복지체계 구축
 - 세부화되고 다양화된 복지서비스 요구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13. 청양군 : 충남의 중심, 청정자연생태낙원

가. 기본목표

- 도시적 편리함과 전원적 쾌적함이 조화된 전원도시
- 미래형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이 연계된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
- 청정한 자연생태자원에 기반한 매력 있는 관광·휴양도시

나. 발전방향

- 세종시, 내포신도시와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기반 구축
 - 내포신도시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도시민의 5도2촌 정주의 최적지가 될 수 있는 맞춤형 정주공간을 조성
 - 청양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을 통한 중심시가지 활력증진을 도모
- 지역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 육성
 - 단순 생산중심의 관행농업에서 탈피하여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이 연계된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업 실현
 - 청양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축산바이오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고추·구기자 등 향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개선된 접근성을 활용한 IC 연접부 복합개발(Smart IC) 추진
-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그린투어의 메카로 육성
 - 체험형 주말 가족농원 조성과 농촌체험마을 확대를 통한 “그린컴(Green-Come) 청양” 활성화
- 칠갑산·지천 중심의 문화관광 활성화
 - 칠갑산과 지천을 활용한 산악관광 및 생태관광 벨트를 구축하고 가족중심의 체험관광 기반 시설 조성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지역 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복지시설 확충
 -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유출 억제

14. 홍성군 : 충남의 자랑, 서해안시대의 신중심 홍성

가. 기본 목표

-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환황해권 거점도시
-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지방행정중심도시
- 자긍심과 개성이 풍부한 역사·문화·복지도시

나. 발전방향

- 충남도청 이전과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기반 구축
 - 충남도청 이전과 연계한 공간구조 재편 및 지역발전축 설정
 - 도청이전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간선교통망 및 기존도시와의 연계 도로망의 지속적 확충
- 환경친화적인 도농복합형 정주기반 조성
 - 차별화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존도시의 재생과 신도시의 균형적 개발 추진
 - 활기찬 농촌만들기를 위한 농촌의 복합공간화 및 테마공간 조성
 - 지속적인 농어촌 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특색있는 농어촌 건설
- 혁신주도형 지역경제 기반 구축
 - 단순 생산중심의 관행농업에서 탈피하여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이 연계된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업 실현
 - 도청이전신도시라는 위상에 부합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육성
- 지역정체성을 제고하는 문화·관광산업 육성
 - 내포문화 중심지로서의 위상강화를 위한 홍주성 등 체계적인 정비·보존
 - 궁리-어사-남당 해양관광벨트 구축, 용봉산·오서산 체류형 관광명소 개발 등을 통한 관광지로서의 대외 인지도 제고
-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복지환경 조성
 - 지속적인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생활환경 조성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생산적 사회복지 기반 확충

15. 예산군 :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

가. 기본목표

- 첨단산업과 농산업을 공존하는 조화로운 청정도시
-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지는 내포문화 중심의 슬로시티
-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하는 자족도시

나. 발전방향

-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 고부가가치 IT 및 자동차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적기 공급과 기업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을 집중 육성
 - 농업 경영구조의 변화를 통한 경쟁력을 증진
 - 친환경 농업생태산업단지 조성, 친환경 브랜드 개발 및 유통시스템의 합리화
- 슬로시티(Slow City) 조성으로 1,200만명 관광객 유치
 - 내포보부상촌,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등 체험과 체류형 관광기반을 확충
 - 황새마을 및 덕산온천(보양온천),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휴양관광도시 건설
- 예산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융·복합서비스기반 구축
 -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을 통한 선진형 문화복지기반 구축과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지역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내포신도시와 상생기반을 구축
 - 성장촉진지역 및 신발전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내포신도시와 공동협력사업(연계도로망 설치, 상생협력사업 추진 등)을 추진
- 원도심 활성화 개발과 부도심 육성전략을 동시에 추진
 - 예산읍 공동화현상 방지를 위한 도심활성화 특화사업을 추진
 - 예산읍 중심의 일극 공간구조를 삼교읍(서해선 복선전철 삼교역세권), 덕산면(신도시 배후 관광·휴양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다핵심공간구조로 개편
-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과 고속도로 IC연접부의 계획적 관리
 -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과 기존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특화전략사업을 추진

16. 태안군 : 아름다운 휴양도시, 희망 태안!

가. 기본목표

- 서해안의 청정하고 아름다운 해양형 국제관광 거점 휴양 도시
-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족형 복합도시
- 지역의 자연 및 전통자원을 활용한 건강도시 및 치유관광 중심 도시

나. 발전방향

- 서해안 최고의 아름다운 휴양도시로 해양관광 견인
 - 해수욕장과 항구, 섬을 연계한 관광휴양벨트 조성
 - 독살·사구·자염·염전 등 전통자원의 발굴·육성을 통한 테마관광지 육성
 - 생선 및 어패류 등 풍부한 해산물을 활용한 seafood 특화 관광지 조성
 - 해양스포츠 및 항공해양스포츠 등 동적스포츠 체험형 관광지 육성
- 자족형 복합도시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자족형 명품도시 조성
 - 국내외 접근성을 강화 및 관광기반 강화를 위한 도로망,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 태안군 주변 서산·홍성·보령 등 관광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광역관광권 형성
- 산업고도화로 지역 전략산업과 향토산업의 육성
 - 태안군 농수산물의 유망품목 발굴과 바다목장 등 기르는 농어업의 특성화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을 통한 농어촌체험마을의 경영 및 마케팅능력 향상
 - 태안종합에너지특구를 중심으로 한 청정에너지 생산기지 조성 및 일자리 창출
 - 마늘, 생강, 화훼(허브 등) 등을 활용한 향토산업 및 관광형 6차산업 육성
- 지역내 자연 및 전통자원을 활용한 건강 및 치유관광 활성화
 - 솔향길길 활성화 및 생태탐방로 조성을 통한 사색과 치유의 휴양지 조성
 - 화훼, 허브, 생강, 송림, 갯벌, 해수탕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건강 및 치유관광 거점 육성
 - 주 5일 교육 등으로 청소년 및 가족단위 5도 2촌형 체험 학습에 대응

부 록

1. 원계획과 수정계획과의 비교
2. 종합계획도
3. 투자사업 총괄표

1. 원계획과 수정계획과의 비교

구 분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계획의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05 - 2020)의 지역적 실천을 위한 지역종합발전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등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발전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과 시책수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 - 2020)의 지역적 실천을 위한 지역종합발전계획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내포신도시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지역발전 전략과 시책 마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와의 연계발전 모색
계획의 기조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계획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균형 있는 지역발전 •함께 하는 복지사회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역동적인 산업경제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균형 있는 지역발전 •내실있는 산업경제 •함께하는 교육·복지 •활력있는 농·어촌 •매력적인 문화·환경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고 싶은 도시·농촌 정주기반 조성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산업 육성 •특색 있는 지역문화와 매력 있는 관광 진흥 •신속하고 편리한 인프라 구축 •더불어 누리는 생활·복지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자원의 개발 및 관리 •깨끗하고 안전한 푸른충남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기좋은 도시·농촌 생활환경 조성 •순환과 공생의 지역경제 육성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매력적인 지역문화 창달 •사통팔달의 교통·정보 인프라 구축 •근심없는 주거·복지·평생교육 실현 •안정적·창조적인 지역자원의 활용 및 관리 •지속가능한 자연 및 생활환경 조성
주요 계획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연도('20년) 계획인구 : 2,500천명 •1인당 GRDP : 39,588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연도('20년) 계획인구 : 2,400천명(연기군제외) •1인당 GRDP : 52,411천원

구 분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공 간 구 조	지역 발전축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田” 자 형의 개발축 유지 • 동서2축과 남북2축을 설정하여 개방형 통합국토축(역π 형)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주변의 광역시·도와의 연계성 제고 및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 형의 2축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田” 자 형의 개발축 수용
	개발 경영권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개발경영권의 설정·운영 원칙을 계승하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시·군간 광역적 연계체계의 재편 필요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백제권”을 “내륙권”으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개발경영권의 설정·운영 원칙을 수용하되,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시·군간 광역적 연계체계의 재편 필요성을 반영하여 내륙권(중앙과 지방의 중추행정도시 연계권)을 설정
	생활권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형 도시체계의 형성을 전제로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에 따라 생활권의 구성을 조정 • 개발경영권과의 일관성 유지, 기존 생활권체계, 생활권 내부의 지역간 기능적 연계성 및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확보, 지역생활권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형 도시체계의 형성을 전제로 하되, 세종시와 내포신도시를 중요한 거점으로 고려

구 분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도시 및 농어 촌	도시 개발 및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신도시 및 신시가지 개발 및 관리 지역특성을 활용한 전문기능도시 육성 중소도시 중심시가지 활력증진 네트워크 도시체계의 강화 참여와 협력의 도시계획·개발 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를 고려 광역도시권 성장관리와 네트워크 도시체계 강화 지역발전의 혁신거점 육성과 지역별 특성화 발전 건인 지역특성을 살린 중소도시 재생과 문화도시 육성 참여와 협력의 도시계획·개발체계 구축
	농산어 촌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지역개발을 별도의 부문으로 분리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정비를 비롯한 소득, 교육, 의료, 복지, 인적자원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지역개발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 주도의 발전과 농어민의 복지강화에 역점 농어업인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 경쟁력 있는 농어촌산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농어촌환경·경관 조성
산업 및 기술 의 경쟁 력 강화	농·림·축·수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물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방안 및 농업경영에 초점 생산 위주의 농림축산업에서 생산, 유통이 결합된 복합산업으로서의 농림축산업 육성 농산업클러스터 및 벤처농기업 육성,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농림축산업 육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및 시장지향적 농림축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등 지역자원순환형 발전에 초점 농업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식품체계 구축 임업 : 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 축산업 :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의 육성 수산업 : 어업경쟁력 강화 및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의 지식기반화 추세에 반영 산업클러스터 접근방법에 기반한 산업경쟁력 강화 산업의 다양화, 고도화, 전문화에 대응한 권역별(지역별), 산업별 산업용지 공급 전략산업의 성숙화에 따른 신전략산업의 육성 기업지원기반 강화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외부의존형 발전전략에서 내발적 발전 전략을 반영 녹색산업 육성을 추가적으로 반영 충청남도 전략산업 및 주력 기간산업 육성과 클러스터화 추진 신성장동력 육성 및 인접지역과 네트워크형 클러스터 구축 중소기업지원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기반 구축 산업집적 촉진을 위한 생산기반 확대 및 시설현대화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기반조성 지역내 신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한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략화 지속가능한 유통서비스업의 육성 자금의 효율적 중개 및 배분을 통한 지역금융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령화시대 의료·사회서비스 등을 반영 기업지원서비스의 확충을 통한 지역산업 생산성 제고 신산업 창조를 위한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육성 사회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및 산업화 도모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구 분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문화 · 관광	문화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뮤니티형 문화공간 확충과 문화네트워크 구축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고품격 문화인프라 구축과 지원체계 구축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통한 개성 있는 역사문화공간 조성 커뮤니티형 문화공간 확충과 문화네트워크 구축 지역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
	관광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도시, 도청이전신도시와 연계한 배후관광지 개발 서해안관광벨트와 백제·내포문화권 관광특정지역 개발 문화컨텐츠 관광상품 개발과 인접지역 협력적 관광개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강유역개발에 따른 관광요인 반영 미래지향형 관광기반 구축과 관광거점 도시별 관광자원 개발 관광명소의 발굴육성과 상호 연계 테마 관광벨트와 스토리가 있는 길사업 추진 미래 관광수요에 적합한 문화컨텐츠 상품의 제공 첨단 관광마케팅 강화와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상품 육성
교통· 물류 및 정보인프라	교통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간선도로망 확충 및 정비 산업물류 지원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철도망 확충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 항만 개발 군비행장의 지역중심공항으로 활용 및 관광레저형 경비행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도로망 확충 산업·관광개발과 지역교류 촉진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한 철도망 확충 국제 직교류 거점 구축을 위한 항만개발 항공 교통시대를 선도할 근거리 항공의 실용화와 경비행장 건설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체계 정비 및 신교통수단 도입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율적 물류시스템 구축 권역별·산업특성별 물류거점시설의 합리적 배치 물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물류네트워크 구축 동북아 관문으로 물류·비즈니스 거점항만 기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아 물류중심화전략에서 고부가가치 화물창출형으로 전환 권역별·산업특성별 물류거점시설의 합리적 배치 효율적 물류시스템 구축 물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물류네트워크 구축 동북아 관문으로 물류·비즈니스 거점항만 기능 확충
	정보통신 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U-농촌건설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사업 추진 행정혁신 및 u-인프라 구축 유비쿼터스 기반의 u-산업 육성 u-City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GIS, 스마트폰 활용 유비쿼터스 행정요소 반영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u-충남 추진 정보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정보화 추진으로 u-녹색행정 구현 IT 자원을 활용한 공공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체감형 정보사회 구현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통한 안전한 충남 구현

구 분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생활 확충 및 복지 환경	주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복지정책의 강화 •주택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다양한 주택공급의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전략과 통합 •주택거버넌스의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정책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주택정책 추진 •주거복지정책의 강화 •주택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개발 차원의 개발방식 도입 •주택거버넌스의 구현
	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시책의 종합적 추진 •사회계층별 사회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시설 확충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사회·정부가 참여하는 종합적 저출산대책 모색 •다양한 사회복지욕구에 대응한 복지인프라 확충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복지체계 확립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사회안전망 구축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민건강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시설 확충 •건강한 임신출산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질병예방 및 건강계층을 위한 건강관리체계 구축 •전염병 예방을 및 만성·신종질환 관리강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지원 강화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의료시설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 •지역간·계층간 균형있는 지역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인적자원 및 평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등 오지·낙후지역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지역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전문인력 및 미래지향적 청소년 육성 •평생학습사회의 실현 및 평생학습도시건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체육활동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 양극화 극복 •지역주민의 평생을 책임지는 교육기회 제공 •교육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생활체육을 위한 기반구축 및 체육활동 활성화
지역 자원의 개발 과 관리	토지이용 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적 토지이용 관리 강화 •합리적인 토지이용 규제장치 마련 •산지 및 농지의 체계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적·계획적 토지이용관리 •저탄소 에너지 절약적인 토지이용구조 구축 •토지이용의 공익성 강화 •농지 및 산지의 계획적 관리
	경관의 형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 마련 및 행정체계 구축 •경관정책의 실현성 제고를 위한 관련정책 개발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경관의 보전을 통한 충남만의 충남다운 경관 유지 •충남의 고유성을 살린 경관권역·축거점을 설정하고, 품격있는 경관 형성 •생활경관 조성을 위한 부문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적용
	수자원 확보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된 물공급 및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적극적인 수요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대체·보조수자원 개발을 통한 수자원 확보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전하고 안정된 물이용 및 지속적인 수요관리
	에너지 및 지하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에너지 이용의 생태적 효율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탄소·녹색에너지 요인을 반영 •에너지 수요에 근거한 공급기반 시설 구축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확보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한 생태적 효율성 증진

구 분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환경의 보전· 관리	자연환경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단위 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에 따른 생물다양성 강화사업 추진 •생태네트워크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과 조화된 지역발전을 위한 입체적인 자연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산-하천-연안을 잇는 광역생태축 보전 및 생태통로 복원사업 추진 •자원으로서의 생물종 다양성증진
	대기질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오염 배출관리시스템 도입 및 예경보체계 구축 •인접 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도입 •국제환경협약 발효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및 관리방안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대책에 역점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대기오염 관리체계 구축
	물환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강수계 및 삽교호수계 등 유역특성별 물환경통합관리방안 강조 •축산분뇨 관리방안 및 수질관리 시설 설치방안 제시 •연안 및 하구지역의 오염예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환경 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환경정의 실현 •유역중심의 미래지향적인 물환경 관리체계 구축 •도민의 건강과 생태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물환경 정책 추진
	순환형 환경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발생단계부터 감량시책 및 재활용기반 조성 •폐기물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하폐수 슬러지 처리기반 구축 및 재생에너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화 안전처리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갈등 해소 •폐자원의 에너지화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동력원으로 활용
	안전 및 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재해관리수단의 활용(구조적 재해대책과 비구조적인 재해대책의 조화)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의 통합관리를 위한 종합적 재해관리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지구 정비 및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확충 •사전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적·선제적 방재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도민 친화적 안전안심 생활환경 조성
계획의 집행과 관리	행정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기제의 제도화 및 정책평가의 확대 •인사운영의 합리화와 창의적 공무원 육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행정의 지속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행정수요에 부응한 체감형 고객감동 행정 실현 •지방행정의 경영성과 향상과 효율성 제고
	지역간협 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단체간 협력기반의 조성 및 협력제도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 기초자치단체간 협력사업 확대 •충청권 광역발전을 위한 공동관리운영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경영전략 모색
	국제 교류 및 통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생산적 국제교류 확대 •통상교류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생산적 국제교류 확대 •통상교류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2.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종합계획도



- 고속도로(기설)
- 고속도로(계획)
- 고속화도로(기설)
- 고속화도로(계획)
- ≡≡≡≡≡ 철도(기설)
- 철도(계획)

- ⚙ 국가산업단지(기존 및 계획)
- ⚙ 일반산업단지(기존)
- ⚙ 일반산업단지(계획)

- 🚢 연안항
- ⚓ 무역항
- ✈ 민항기취항

■ 계획수립참여자

- 단 장 :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박진도
- 연구책임 :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태규
- 실무총괄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오용준
- 실 무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최흥기

부문	연구자
사람중심의 혁신적 도시개발 및 정비	오용준
활력 있는 농산어촌 육성	조영재, 유학렬
경쟁력 있는 농·림·축·수산업 육성	조영재, 유학렬
신성장동력산업 및 강소기업 육성	백운성
서비스업의 지식기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신동호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문화기반 조성	박철희
편리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특화자원 개발	김경태
전방위 교류·교역 활성화를 위한 입체적 교통체계 구축	조봉운
생산·물류 신중심권 구현을 위한 물류·유통기반 강화	조봉운
디지털복지사회를 위한 유비쿼터스 충남 구현	윤정미
안정적인 에너지 절약형 주거환경 조성	임형빈, 임준홍
지속적인 공공복지·의료 서비스체계 구축 및 확대	송두범
창의적 인적자원 육성 및 평생교육체계 강화	최병학
친환경적 토지이용과 관리	오용준
지역특성을 따른 매력적 지역경관 형성과 관리	한상욱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효율적 수요관리	오혜정
친환경 에너지·지하자원 개발 및 관리	정종관
지역생태망 구축과 자연환경 보전·관리	정옥식, 사공정희
대기질 관리와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구축	이인희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물관리	오혜정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기반 구축 및 지원	정종관
재해에 강한 안전충남 조성	임준홍, 최병학